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

2025.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1

Ⅱ. 2025년 시행계획 ····· 6

1.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7
2. 과제 및 예산 규모 현황 ····· 11
3.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 14
4.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 ····· 33
5. 주요과제 추진일정 ····· 34

Ⅲ. 중앙행정기관별 2025년 시행계획 ····· 36

1) 교육부 ····· 3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9
3) 외교통상부 ····· 88
4) 법무부 ····· 97
5) 행정안전부 ····· 380
6) 문화체육관광부 ····· 393
7) 농림축산식품부 ····· 427
8) 산업통상자원부 ····· 452
9) 보건복지부 ····· 466
10) 고용노동부 ····· 478
11) 여성가족부 ····· 506
12) 국토교통부 ····· 524
13) 해양수산부 ····· 535
14) 중소벤처기업부 ····· 554
15) 방송통신위원회 ····· 567
16) 통계청 ····· 583
17) 경찰청 ····· 598
18) 해양경찰청 ····· 618
19) 국세청 ····· 628
20) 질병청 ····· 639
21) 재외동포청 ····· 648

Ⅰ. 2025년 시행계획 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수립 대상기관 및 정책

4. 2024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비전 및 정책목표

1 추진배경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

○ '23.12.27.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확정

☑ **비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 **5대 정책목표**

❶ **【경 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❷ **【안 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❸ **【통 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❹ **【인 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❺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정책목표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23. 12. 27.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확정

☐ ’24. 7. 31.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 ’24. 8. ~ 1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시행계획 제출

☐ ’24. 11. ~ 12.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종합

☐ ’25. 1. 13. ~ 1. 17. 제35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서면회의) 개최

☐ ’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대면회의) 개최

3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및 정책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21개 기관(14부·1위원회·6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 19개 위원부처 중 추진과제가 없는 기재부, 국조실은 제외하고, 해경청, 국세청, 질병청, 재외동포청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가 있어 대상기관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 17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 **대상 정책**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외국인정책*

*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 이주 제외)을 의미

□ **주요 정책 대상** ('24년 12월 말 기준)

○ **체류외국인 약 265만 명**

- **(단기체류 약 61만 명)** 친지방문, 관광, 사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 약 204만 명)** 취업, 유학 등 90일 초과 장기 거주 및 결혼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은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적취득자 약 32만 명**

- 외국인 중 귀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

4 2024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 **(체류외국인)** '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5,122만 명) 대비 약 5.2%에 해당 (출처: 법무부·행안부)

※ ('21년) 196만 명(3.8%) → ('22년) 225만 명(4.4%) → ('23년) 251만 명(4.9%) → ('24년 12월) 265만 명(5.2%)

-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는 397,522명,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율 15.0%

- **(난민)** '94년~'24년 12월 말까지 난민신청 122,095건 중 94,391건 심사 종결

※ 난민인정 1,544명, 인도적 체류 2,696명 등 4,240명에게 국내체류 허용

❖ **(국적취득자)** '24년 1월 ~ 12월까지 귀화자(11,009명), 국적회복자(3,607명) 등 총 14,616명 (출처: 법무부)

※ '91년~'24년 12월까지 총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약 32만 명

❖ **(외래관광객)** '24년 1월 ~ 11월까지 외래관광객*은 1,510만 명이며, 전년 동월 999만 명 대비 약 51.1% 증가 (출처: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 총외국인입국 – (외교+동거+~~거주~~+군인+영주) + 재외국민입국자수 + 승무원

❖ **(외국인투자액)** '24년 3분기 기준, 외국인투자액은 178억 달러 (출처: 산업부)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책목표	중점과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③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①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②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 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Ⅱ. 2025년 시행계획

1.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2.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3.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4.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

5. 주요과제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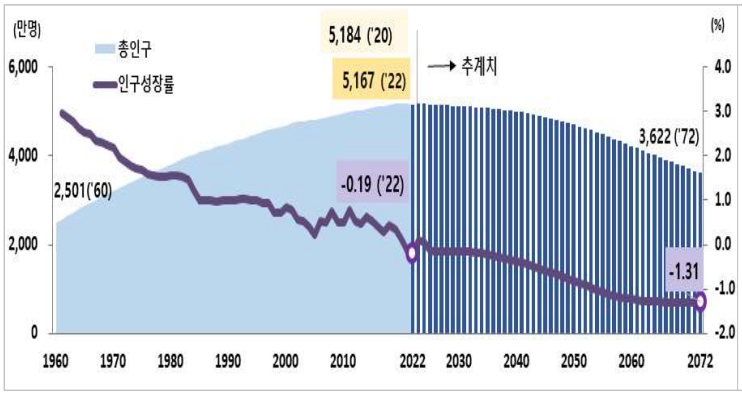
1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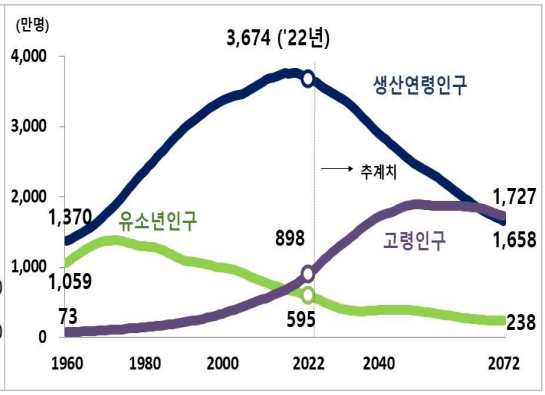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되어 **산업계 인력 부족 현상 지속** 및 인력수급 불균형 초래

※ '72년 총인구는 3,622만 명,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1,658만 명으로 감소, 고령인구는 1,727만 명으로 증가 예상 (통계청)

【총인구 1960~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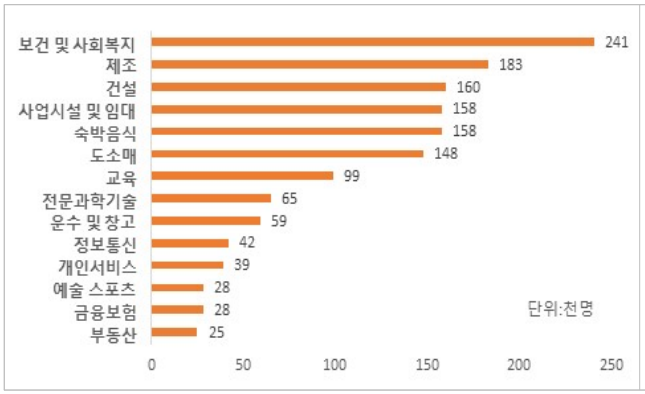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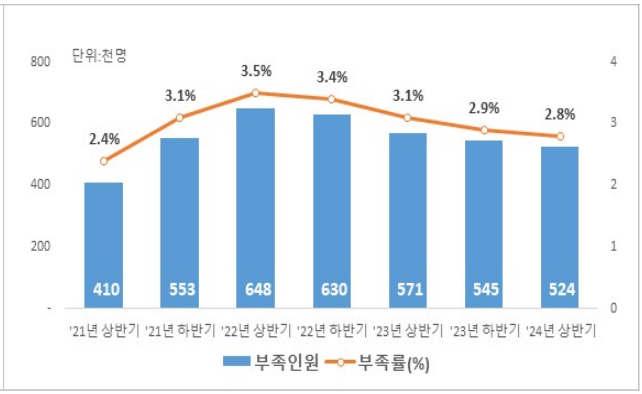
○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특히 고령인구 증가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서 인력 수요 급증** 예상

※ '24년 4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은 52.4만 명(인력 부족률 2.8%)**이며, 구인 인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많음 (고용부, '24.6.)

【산업별 구인 인원('24.1분기)】



【연도별 부족 인원 현황】



□ 지역소멸 위기

○ 지역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지역소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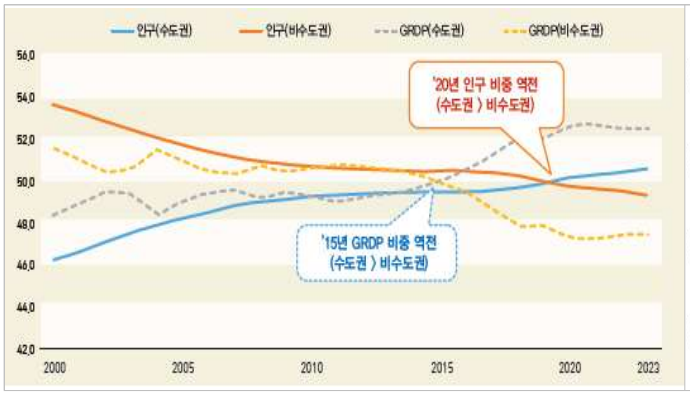
※ **'15년 GRDP 비중 역전**(수도권 〉 비수도권), **'20년 인구 비중 역전**(수도권 〉 비수도권)

※ '23년 118개(52%) 시·군·구 소멸위험 ⇒ '47년 **229개 모든 시·군·구 소멸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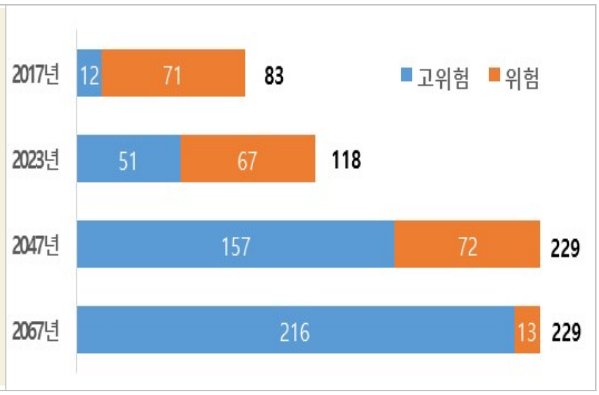
-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이민정책**에 대한 **지자체 요구* 대폭 증가**

* 지역특화형 비자의 지자체 추천권 확대 요구, 광역형 비자 도입 제안 등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 분포】(통계청)



【지역소멸위험 전망】(감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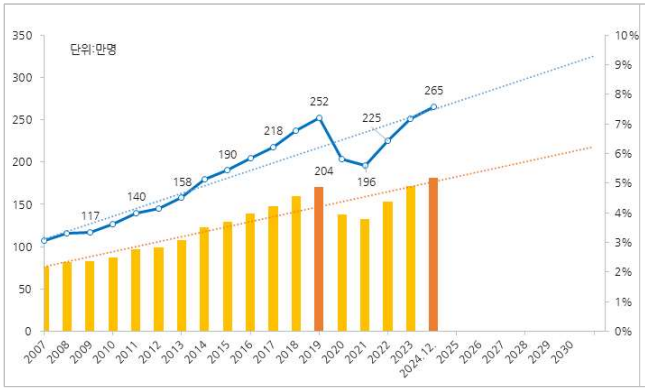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 증가 및 체류유형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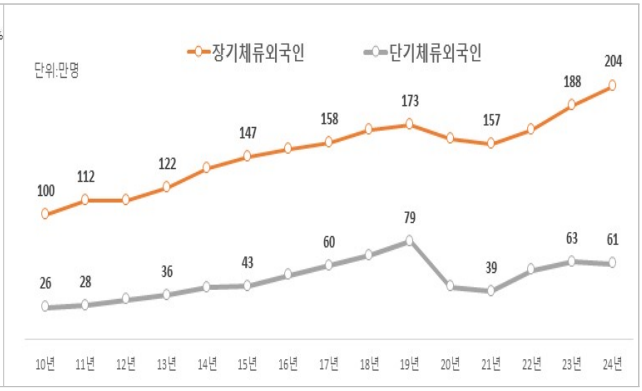
○ 국내 체류외국인은 '24년 12월 265만 명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체류외국인* 또한 지속적 증가** 추세

* '10년(100만 명) → '24년 12월(204만 명) 2배 이상 증가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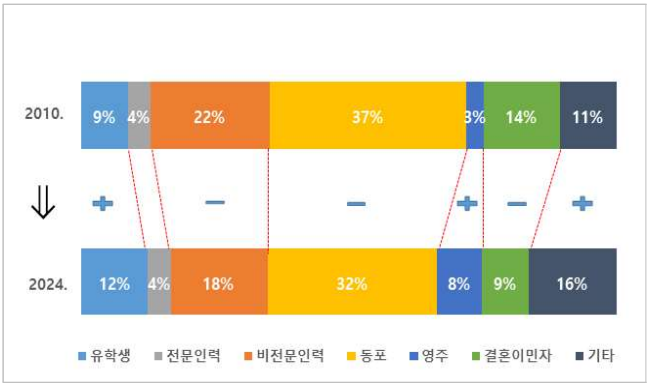
【장·단기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결혼이민자·비전문인력·동포의 비중이 감소**하고, **유학생·영주 자격의 비중이 증가**하며 체류외국인 구성 다변화

-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영주자 5배(3.3만 명→17.1만 명), 유학생 2.9배(8.7만 명→25.5만 명), 전문인력 2배(4.2만 명→8.6만 명) 증가

【장기체류자 유형별 구성비】



【2010년 대비 체류자격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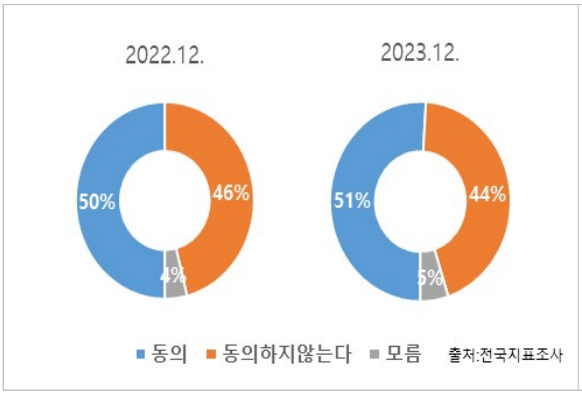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24년	증가율(%)
장기체류외국인	1,002,742	2,042,017	104
유학생	86,947	255,335	193
전문인력	42,550	85,955	102
비전문인력	223,824	369,352	65
동포	366,626	645,482	76
영주	33,468	170,884	411
결혼이민자	141,654	179,617	27
기타	107,673	335,392	211

□ 국민 인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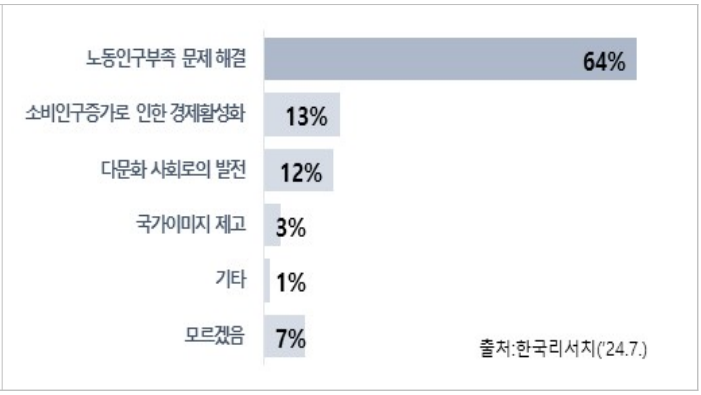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민 활성화 및 이민정책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이 비슷한 상황**에서 **동의하는 의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 **이민정책 도입**으로 이주민이 증가했을 때 **노동력 부족 해결에 도움** 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의견(64%)이 높게 나타남

【이민 활성화에 대한 의견】



【이민정책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이점】



□ 추진방향

>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 정책목표 성과 달성
>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新) 출입국 · 이민정책 추진
> ➢ 정부 부처 및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인재 유치**

- **새로운 비자 신설 및 취업규제 완화**를 통해 선제적인 해외 우수 인재 확보, **우수 유학생과 전문인력에 대한 정착지원 강화**

※ Top-Tier 비자 신설, 졸업 유학생 취업 범위 확대, 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 허용 등

○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 지역특화비자 대상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 계절근로제도 지원체계 강화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불법체류자 감축**

- 외국인관련 범죄,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및 **불법체류자 감축 노력 지속**

○ **정주형 이민자 증가·체류유형 다변화에 따른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및 내·외국인 갈등 완화를 위해 **사회통합정책 지속 확대**

○ **이민행정 선진화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인력수급 불균형과 이민정책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력 도입관리 및 환류 시스템 마련**

2 과제 및 예산 규모 현황

□ 총괄 현황

○ (총괄) 전체 추진과제 1,504개, 총 예산 약 6,967억 원

- 전년도 예산(6,643억 원) 대비 약 324억 원 증가(4.9% ↑)
- 전년도 추진과제(1,438개) 대비 과제 수 66개 증가(4.6% ↑)

○ (중앙행정기관) 전체 추진과제 157개, 총 예산 약 3,667억 원

- 전년도 예산(3,317억 원) 대비 약 350억 원 증가(10.6% ↑)

○ (지방자치단체) 전체 추진과제 1,347개, 총 예산 약 3,299억 원

- 전년도 예산(3,326억 원) 대비 약 27억 원 감소(0.8% ↓)

(단위 : 개, 백만원)

'25년 /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합 계	**1,504**	**696,663**	**157**	**366,715**	**1,347**	**329,948**
1. 【경 제】	235	280,098	53	221,580	182	58,518
2. 【안 전】	43	17,483	29	16,632	14	851
3. 【통 합】	1,037	328,381	35	103,050	1,002	225,331
4. 【인 권】	127	60,369	21	19,063	106	41,306
5. 【협력/인프라】	62	10,332	19	6,390	43	3,942

□ 중앙행정기관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 \ 연도	2025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57**	**366,715**
교육부	10	147,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38,817
외교부	1	0
법무부	88	33,900
행정안전부	3	34
문화체육관광부	7	24,861
농림축산식품부	6	5,217
산업통상자원부	3	977
보건복지부	1	4,385
고용노동부	8	2,022
여성가족부	4	77,124
국토교통부	2	0
해양수산부	3	11,971
중소벤처기업부	3	12,705
방송통신위원회	3	1,595
통계청	1	2,585
경찰청	4	1,449
해양경찰청	1	0
국세청	2	0
질병관리청	1	0
재외동포청	5	1,349

□ 지방자치단체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 \ 연도	2025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347**	**329,948**
서 울 특 별 시	98	48,202
부 산 광 역 시	47	10,140
대 구 광 역 시	80	9,729
인 천 광 역 시	34	23,878
광 주 광 역 시	66	13,933
대 전 광 역 시	56	12,942
울 산 광 역 시	58	7,677
세 종 특 별 자 치 시	21	806
경 기 도	212	76,072
강 원 특 별 자 치 도	70	13,293
충 청 북 도	97	10,425
충 청 남 도	134	17,918
전 북 특 별 자 치 도	77	23,714
전 라 남 도	129	19,169
경 상 북 도	71	11,237
경 상 남 도	71	27,01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6	3,797

3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과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추진방향>

-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 추진**
- **우수인재·전문인력·투자자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가.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 인구구조 변동과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노동시장 수급 전망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간 도입규모를 산정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추진 (법무부)

<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

▪ **도입 규모(총량) 산출 방향**

❶ 수요·공급 규모 분석 ▸ ❷ 외국인 유입 영향분석 ▸ ❸ 도입 규모 예비적 산출 ▸ ❹ 의견수렴 (관계부처·전문가) 도입 규모 최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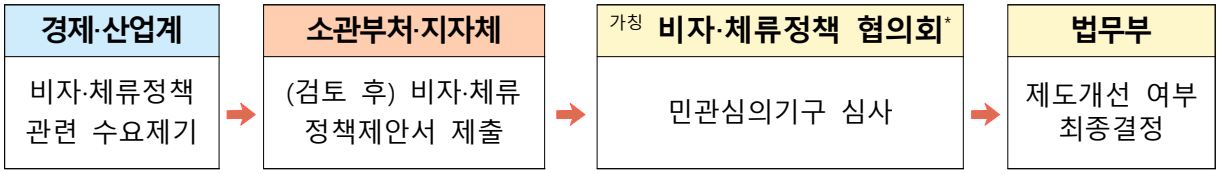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추진 방향**

분야별 실태조사 및 부족규모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 취업비자 규모 산정(단기) → 지역·업종 임금 분석 등 분석모델 고도화 추진(중기) → 전체 비자 적정 규모 도출(장기)

○ 산업현장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송출국 현지에서 직종별 전공 및 한국어 교과 과정 운영을 통한 외국인력 선발 지속 (고용부)

○ 경제·산업계 등 민간 및 관계부처의 비자 수요 반영을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도입 및 제도화 (법무부)

<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개요 >



*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과 경제분야 등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외국인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체계 지원 (법무부)

나.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 우수·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

○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전략적·체계적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를 장기(3년, 10년) 초청·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과기부)

※ 해외 우수 연구자 115명 유치, SCI(E)급 논문 618건, 등록 특허 15건('24.2. 기준)

○ AI·항공우주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Top-Tier 비자」 신설 및 이공계 우수인재 정착 확대 (법무부, 산업부, 과기부)

○ 베트남 소프트웨어(SW) 인재를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국내·현지 진출 스타트업 취업 매칭 지원 (중기부)

○ 한국전 UN 참전국 및 주요 경제협력국 등 우호국 청년에게 국내 문화 체험·취업 등 기회를 부여하여 지한(知韓) 그룹 양성을 위한 「청년드림비자」 신설 (법무부)

□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

○ 숙련근로자 공급부족에 따른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법무부)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 신설 및 점진적 확대 지속 추진 (법무부, 산업부, 고용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 전환실적 1,781명('22년) → 12,035명('23년) → 13,391명('24년 12월)

○ 한국어 능력(3급 상당)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졸업 유학생의 구직·인턴 기간 확대 및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법무부)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운영 및 졸업(예정)자 대상 기량 검증을 통한 기술인력 선발 (산업부)

□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 요양보호사 해외 도입방안 마련 및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의 안정적 시범운영 지원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 성실·숙련 계절근로자 비자 우대,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속 (법무부, 농식품부)

○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방안 지속 검토·추진 (고용부, 농식품부, 법무부)

○ 가족 단위의 안정적 체류와 국내 정주 유도를 위해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에게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한 장기 체류자격 전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법무부)

☐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지속 추진,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4차년도) 구축 (교육부)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지역소재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의 채용수요 대응을 위해 권역별 소규모 상담회 추진 (교육부, 산업부)

※ 2024년 채용박람회 참가 규모 : 약 100개 기업, 외국인 유학생 약 2,000명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 (교육부)

○ ‘25년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사업 추진계획 수립, ‘25년도 학부 장학생 및 상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교육부)

※ ‘25년 선발 규모(장·단기) : 2,480명(장기학위 1,900명, 단기교환학생 580명)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센터(국립국제교육원 내) 운영,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적응·정주 지원을 위한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교육부)

☐ 창업·투자이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 외국인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정착 및 성장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 체계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K-스카우터) 지속 (중기부)

○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시행 (법무부, 중기부)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평가	⇨	③ 추천	⇨	④ 비자신청	⇨	⑤ 최종발급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성·혁신성 평가		특별비자 추천서 발급		출입국사무소, 재외공관 방문		법무부
K-스타트업 포털, GSC 홈피		**민간위원회**		**중기부**		**추천대상자 (외국인)**		

다.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 인구감소지역(89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역특화비자를 인구유입이 시급한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으로 확대 (법무부)

※ '24년 66개 광역·기초지자체에 총 3,291명 배정 / 1,736명 추천('24.12. 기준)

○ 농촌지역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70개소→90개소),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농식품부)

○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가칭)「지역이민특별법」 제정 추진 (법무부)

※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수행

○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체류' 정책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광역 비자」 시범운영 (법무부)

< 광역 비자 운영(안) >

도입 및 운영				평가 및 환류
① 법무부	② 광역지자체	③ 법무부 ✚ 심의위원회	④ 법무부 ✚ 광역지자체	법무부 ✚ 심의위원회
• 광역형 비자 요건 마련	• 계획 제출 ※ 추진절차, 안전관리, 사회통합 방안 등 포함	•**(법무부)** 계획 검토 후 심의위원회 상정 • **(위원회)** 시행 여부 등 결정	• 제도 시행 -**(지자체)** 추천 -**(법무부)** 비자발급	•**(법무부)** 광역형 비자성과 검토 •**(위원회)** 시행지속 여부 등 결정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비자정책 수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광역형 비자' 제도 운영 계획안 접수 및 제도 시행 여부 결정

○ 외국인정책 심의과정에서 지자체 대표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법무부)

○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간 교류·협업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인정책 실무담당자 교육(워크숍) 실시 (법무부, 행안부)

○ 중앙부처・지자체・농어가・계절근로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전담 업무 플랫폼 구축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라.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K-Pop 콘서트, 한류테마 관광코스, 한류특집관 운영,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확대 (문체부)

○ 크루즈 해외 거점 지사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크루즈 상품 개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문체부, 해수부)

○ 국내 장기 체류하며 K-컬처(K-Pop, 안무, 모델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 신설 추진 (법무부, 문체부)

○ 의료관광 유치기관 평가・인증제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확대 및 의료통역 지원 강화, 의료관광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웰니스관광 행사 개최 등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복지부, 법무부, 문체부)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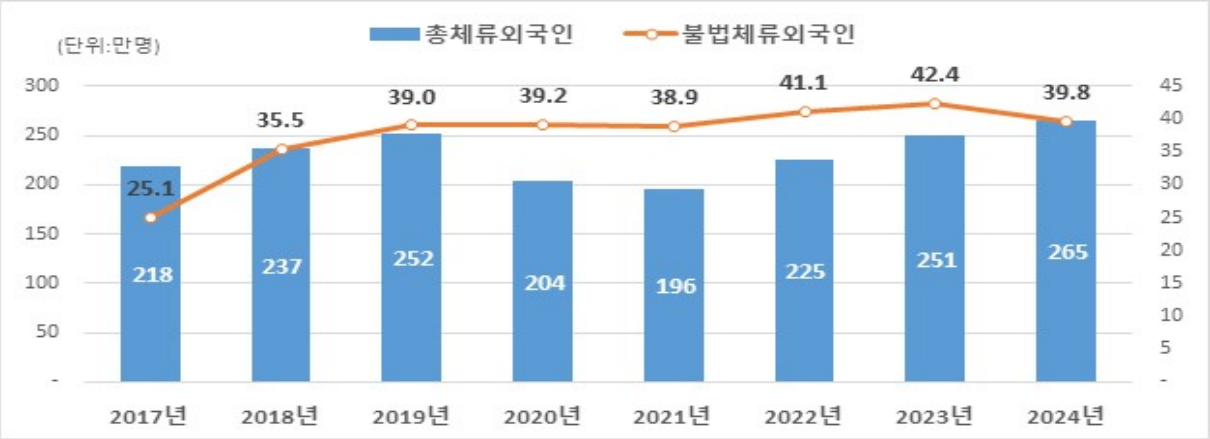
- **다부처 협력을 통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가.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불법체류 관리체계 고도화

○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 및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법무부)

▪ 연도별 총 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정부합동단속 2회 실시 총 45,442명 적발, '24년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 ~ '25.1.30.) 운영하여 21,042명 출국

☐ 다부처 분야별 차별화된 책임 강화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대상 기초노동질서 등 준수를 위한 현장 근로감독 실시 (고용부)

○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민·관 이행점검 협의회 운영,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 등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 (해수부)

○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 강화 및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한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찰청)

○ 건설업 외국인력정책 설명회를 통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지원 (국토부)

○ 국민 안전위협 불법체류 외국인, 민생 침해, 체류질서 문란 행위자 등에 대한 범정부 단속체계 구축 (법무부, 경찰청, 해경청)

□ **불법체류 단속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

○ 기획조사 분야별 전문조사관 양성,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관리 규정 마련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 (법무부)

○ 효과적인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위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근거 마련 지속 추진 (법무부)

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 외국인 체납자의 출국정지 제도 강화를 통한 징수권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및 자진납부 유도 외국어 안내문 제작·배포 (국세청)

○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민원서식에 반영하여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없이도 국적 관련 신고·신청 처리 (법무부)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 지속 실시 (국토부)

○ 체류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실시 및 자율방범대 등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지원 (경찰청)

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 전자입국신고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입국 심사장 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제출을 위한 전자 입력기기 도입 (법무부)

○ 외국인 단체관광객 등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수행 (법무부)

※ 통계 시스템 개선, 비상시스템 구축, 공용어 중심의 다국어 서비스 확대 등

○ 부두 접안 선박 및 내·외항 정박 선박의 직접 승선검색 업무 수행 확대를 위한 신규 법무부 감시정 건조 추진 (법무부)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 보안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 전국항만 합동 보안 세미나 개최 및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 점검 (해수부, 해경청)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추진방향>

- **사회통합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정책 체계화**
- **국민과 이민자 간 소통 증진, 문화 다양성 확대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민자 역량 강화**

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 참여자의 학습 의욕과 교육효과 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일부 유료화 시행 (법무부)

※ 국익기여자 및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는 교육비용 면제, 교육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용 50% 감경

○ 결혼이민자, 외국인력, 동포, 유학생 등 체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확대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335개) 및 대학연계과정(10개 대학) 확대 추진

○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를 위해 CBT(Computer Based Test) 주말평가 확대 시행 및 평가장 추가 설치 추진 (법무부)

○ 지역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 (법무부)

※ 조선업종 등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8,866명 참여('24.12. 기준)

○ 이민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1시간) 및 범죄예방교육(1시간) 신설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법무부)

나.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를 통한 연령별 맞춤형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및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 홍보 (여가부)

○ '세계인의 날(5.20.)' 기념식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세계인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 등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법무부)

○ 이민자멘토단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특강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법무부)

○ '문화다양성의 날(5.21.)',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운영 및 기념행사 개최 등 문화다양성 정책 지속 추진 (문체부)

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 이민자 자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 실시 (고용부)

○ 외국인근로자 대상 이주의 전 단계를 고려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한국어 교재(입문·기초·심화) 개발 지속 (문체부)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안) >

구분		단계	
입문		입국 준비 단계	
기초(초급)	기초 1	입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	생활 한국어 학습 단계
	기초 2		근로 현장 한국어 학습 단계
심화(중급)	심화 1	정착 이후 장기 체류를 위한 단계	직군별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
	심화 2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 등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가부)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

□ 이민자 기초생활 적응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내방, 전화상담 및 3자 통역 등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고용부)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교육 실시, FM 라디오 방송 제작을 통한 한국문화·생활·재난정보 등 제공 (방통위)

○ 체류자격별 복지 기준 설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를 활용한 복지정책 소관부처 의견수렴 (법무부)

□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영유아기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기초학습 지원,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 지속 추진 (여가부)

○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유·초·중등) 지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 등 성장 지원 (교육부)

라.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 경제적 자립과 기여를 위한 동포 체류제도 개선

○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 해소, 방문취업 신규 부여 중단 등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는 방안 마련 (법무부)

○ 관계부처 회의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 체류 특성 분석을 통해 동포 자격 통합시 취업 범위 재설계 (법무부)

○ 수도권에 밀집한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동포 및 배우자의 취업범위 확대 (법무부)

※ 지역특화동포(F-4-R) 230명, 지역동포가족(F-3-2R) 116명 자격 변경('24.12. 기준)

□ 동포의 사회적응 및 국민과의 유대감 증진

○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 추진 (법무부)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학술포럼 및 간담회 개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 (재외동포청)

○ 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기준 재정비 추진 (법무부)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수행 및 맞춤형 적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보급 (재외동포청)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추진방향>

-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이민자 차별 방지 및 대상별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이민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고용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 점검 (고용부)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홍보 및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고용부)

○ 외국인 대상 국민재난안전포털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운영, 외국인용 재난·안전 모바일 앱(Emergency Ready App)을 통한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행안부)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통해 이민자 등에 대한 편견·차별적 방송 관련 심의 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공유 지속 (방통위)

□ 인도적 차원의 법 집행 인프라 확대

○ 보호외국인의 이동권과 소통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전문 보호소를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 운영 (법무부)

○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신설 및 독립적 보호 통제 기구(외국인 보호위원회) 설치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

나.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 미등록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기본권과 법적 보호를 위해 재발의('24.10.)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논의 협조 (법무부)

○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청소년 범죄예방교육 강화, 위기 청소년 선도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지원 (경찰청)

○ 폭력피해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을 통한 보호·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

○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을 위한 직무 관련 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및 소속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법무부)

※ 美 국무부 「2024 인신매매 보고서」상 인신매매 대응 '1등급' 분류('24.6.)

다.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 균형 잡힌 난민정책 추진

○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

※ 「난민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24.9.) 법사위 심사 중

○ 해외 입법사례 검토 등을 통해 난민심사 절차 개선, 국제적 기준과 국익을 고려한 난민처우 지원제도 개선 (법무부)

○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제공 확대 등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및 주제별 난민지위 심사 안내서 발간 등 심사 전문성 제고 (법무부)

○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기관 교류·협력 강화 (법무부)

○ 난민의 국내 정착 현황조사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내 정착에 관한 정책개발 (법무부)

□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 재정착 난민 수용사업 건강검진 절차 개선, 성장 가능성 높은 난민 발굴을 위한 대안적 난민수용 방안 검토 (법무부)

< 재정착 난민제도 등 추진 절차 >

	계획	심의	선발	사전교육	입국/정착지원
재정착 난민제도	•수용계획 수립 •UNHCR 등과 협의	•수용대상, 규모 등 결정	•UNHCR 등 추천 •현지심사/ 선발 •건강검진	•사전교육 실시 •여행증명서 발급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거, 취업, 교육 등 지원
학생난민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참여기관 발굴 및 선정		•UNHCR 등 추천 •현지심사/ 선발 •건강검진	•사전교육 실시	•후원 기관에서 교육, 주거 등 지원

○ 글로벌난민포럼(GRF) 공약 이행 점검, 재정착 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등 난민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한-UNHCR 인사교류 지속 (법무부, 외교부)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추진방향>

- **범정부적 이민정책 추진체계 강화**
- **이민 관련 민간 협력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가.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강화

○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면 개정 또는 '(가칭)이민정책 기본법' 제정 지속 추진 (법무부)

○ 이민정책 관련 안건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정부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실질적 운영 활성화 (법무부)

나.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 지자체 대상 의견수렴, 법적 근거(재한외국인법, 지방자치법, 조례 등) 마련 등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논의 (법무부)

※ '이민행정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활용

○ 「이민법(개론)」을 출입국관리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도록 인사혁신처 업무협의 지속 (법무부)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포럼·간담회 개최 및 연구 결과 정책화 지원* 등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법무부)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등

○ 중장기 국가·지역단위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중점·기본 연구과제 수행 등 이민정책 연구 강화 (법무부)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법무부)

다.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 온라인 기반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출입국 민원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재구축하는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법무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시각화 자료 제공 (법무부)

○ 「인구총조사(상주외국인통계 관련)」,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국제인구이동통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등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생산·제공 (통계청)

라.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 GCM 목표의 자발적 이행력 확보, 주기적 점검을 위한 내부 협의체 운영 및 이행점검 회의 대응 강화 (법무부)

< GCM 개요 >

◦ **(명칭)**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

◦ **(성격)**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력 체계** (국제이주의 효과적 관리 및 이주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최초 합의문**)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산하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회의 참석 등 국제이주 관련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법무부)

❍ ICAO, UNHCR, IOM 등 이민 관련 다자 국제회의 및 지역 안보 워크숍 참여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 체제 구축, 해외 이민정책 담당자 교류 확대 (법무부, 외교부)

❍ KOICA 연구용역(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와 개발(M&D)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마련 (법무부, 외교부)

※ ODA(공적개발원조) 활용, 해외 보건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검토

❍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법무부 제안 ODA 사업* 선정 및 본사업 추진 (법무부, 외교부)

*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4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 현황

체류주기	사 업 현 황
단기체류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K-컬처 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속,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 외국인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분석 제공 등
장기체류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맞춤형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 정비 등

체류자격		사 업 현 황
D계열	유학생 (D-2, D-4)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실태조사 실시,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지원, 「K-컬처 비자」 신설 등
	투자자 (D-7~D-9)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등 국내 기술창업 지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등
E계열	전문인력 (E-1~E-6)	첨단산업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Top-Tier 비자」 신설,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등
	특정활동 (E-7)	「광역형 비자」 시범 운영, 해외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과 국내 스타트업 취업 연계,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 지속 등
	단순노무인력 (E-8~E-10)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인력난 심화 업종 비전문인력 활용 지속 추진, 계절근로 전담 플랫폼 구축, 외국인력상담센터 강화, 농업 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 논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등
F계열	결혼이민자 등 (F-2, F-6)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대상 농업교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역특화비자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 재정착 난민 수용사업 지속 등
	다문화 가족 (F-1, F-3)	전문인력 배우자 가사·육아 등 비전문 취업 허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논의 협조 등
	외국국적동포 (F-4)	재외동포 자격 단계적 통합 추진, 동포 및 배우자 취업활동 범위 확대,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법제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등
	영주자격자 (F-5)	이공계 우수인재 정착 확대
G계열	난민 등 (G-1)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난민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국가정황 보고서 번역·감수 사업 지속, 「난민법」 개정 추진, 난민관련 국제기구 참여 등

5 주요과제 추진일정

중 점 과 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식 운영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연계 확대	송출국 현지 훈련 및 인력 선발(연중)	민간수요를 반영한 「비자 제안제」도입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한국유학종합 시스템 운영(연중)	단순노무 외국인력 활용 방안 지속 검토(연중)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개최	'25년도 뿌리산업 양성대학 평가
1-3. 지역기반의 이민 정책 체계 구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개최(2~3분기)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2~4분기)	'25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 점검
1-4. 이민정책과 국가 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코리아그랜드 세일 개최 / 크루즈 마케팅	크루즈 박람회 / 의료·웰니스 관광행사 개최	전자여행 허가제(K-ETA) 고도화(2차) 사업 수행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2.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불체감축계획 수립 / 특별단속지역 지정	정부합동단속 실시(연중)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정부합동단속 실시(연중)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법령 개정안 제출	「국적법」 개정 예정	온라인 국적설명회 개최	외국인범죄 예방교실(연중) / 협력단체 협업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신조 감시정 건조 용역 계약 추진	전자입국신고서 활용을 위한 전자입력기기 도입 관련 입찰 / 시스템 구축(2~4분기)		신조 법무부 감시정 건조
3.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체류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추진(연중)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연중)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중 점 과 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중도입국자녀 신상정보 제공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추진	결혼이민자 교육 워크숍 및 결과보고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재외동포 정착 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시행	동포자격 활동범위 확대 추진	동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차별규정 폐지 방안 마련
4.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등 지속 실시 및 홍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정규-특집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연중)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지원	인신매매 방지 등 직원교육 및 소속기관 간담회(분기별)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실태 점검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난민위원회 개최(연중)	난민처우 협의회 개최	난민전담 공무원 워크숍	재정착난민 등 정착실태 점검
5.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 체계 구축	외국인정책 위원회 개최	국조실 주관 위원회 관련 회의 참석	실무분과 위원회 개최(분기별)	'26년 계절근로 배정 심사협의회
5-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난민전문 통역인 위촉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연중)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사업 보고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예산 신청	「'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4년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우리동네 방문객 현황 공개
5-4.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이민관련 ODA 사업 착수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이민과 개발 정책화 방향 검토	유엔난민기구 교류 및 재정 기여(연중)

Ⅲ. 중앙행정기관별 2025년 시행계획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교육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40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41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5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48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2-4-①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48

1-2-4-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51

1-2-4-③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53

1-2-4-④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59

1-2-4-⑤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지원 강화 ····· 62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3-2-2-④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67

3-3-3-①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70

3-3-3-②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72

3-3-3-③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74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2-1-③ 세계시민교육 제고 ····· 76

교 육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10	100%	133,086	147,724	11.0%
1. 경 제	5	50%	116,556	131,397	12.7%
2. 안 전					
3. 통 합	4	40%	15,600	15,600	0.0%
4. 인 권	1	10%	930	727	△21.8%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지원**
- **다문화·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

주요 내용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지속 추진
  -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4차년도) 등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선발・관리
  - '25년 선발규모(장기+단기) : 2,480명 (장기학위 1,900명, 단기(교환학생) 580명)
- '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등
- 다문화・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초·중등) 컨설팅 추진,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지원, 대학(원)생 멘토링 참여
-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0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5)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4)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10개	101,696	133,086	147,724	11%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5)	94,094	116,556	131,397	12.7%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1,620	1,384	833	△39.8%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75	80	80	-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241 -	241 -	261 -	8.3% -	 비예산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92,061	114,726	130,096	13.4%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97 -	125 -	127 -	1.6% -	 비예산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4)	68,340	102,660	15,600	0.0%	
3-3-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20,530	29,020	-	-	특교 총액지원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20,530	29,020	-	-	특교 총액지원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20,530	29,020	-	-	특교 총액지원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6,750	15,600	15,600	-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852	930	727	△21.8%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852	930	727	△21.8%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24년 208,962명**으로 ’23년(18.1만명)대비 **14.9% 증가**하여 ’27년 30만 유치*를 위한 **단계별 목표 수준에 안착,** 지역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 중으로 유학생 수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23.8.16.)

** 유학생 수 : (’21)152,281명 → (’22)166,892명 → (’23)181,842명 → (’24)208,962명

○ 이주배경 학생 수는 13년째 증가하여 19만명(’ 24년 기준)을 돌파함에 따라, **맞춤형 교육지원**을 내실화하고, 전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유학생 유치 지원>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한국유학박람회**를 **확대 운영**

- 온라인 테마형 박람회 운영(4회), 국가별 온·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운영(18회)

○ 글로벌 인재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과 국내 유망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 연계 기회 제공**

※ 참가 규모: 약 100개 사, 외국인 유학생 약 2,000명

○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편 관련 대학 관계자 공청회(2회 /’24.7.22., 7.25) 및 의견수렴(’24.7.23.~8.2.)을 통해 4주기 기본계획 발표(’24.8.28.)

○ 17개 시·도 지역 수요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한 워크숍 추진(’24.3월)

○ **GKS 신규 선발인원 확대** : (’23년) 2,456명 → (’ 24년) 2,902명 (+446명 증)

- 이공계 장학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첨단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 지원 강화**

※ 이공계 신규 선발 장학생수 : ’23년 559명 → ‘24년 920명(+361명)

○ 장학금 정보, 국내대학 학사 운영, 취업 및 비자 등 상담 추진

※ 상담 언어(7개)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인도네시아어·러시아어·몽골어·우즈벡어

<이주배경 · 다문화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24.2월)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 운영(('23) 212교 →('24) 223교)을 통해 이주배경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 학교급 전환기(유→초, 초→중) 및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초기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과정 운영

<세계시민교육 강화>

○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역량 강화 지원

- **(교사 연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및 **연구회** 활동 **지원·운영, 지역별** 세계시민교육 **특강** 실시

※ ('24.) 제10기 중앙선도교사(66명) 연수 실시(1.17~19., 2.16., 8.8.~9.), 시도교육청 선도교사(620명) 대상 전달 연수 실시

- 고등교육기관(대학)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및 사례 확산

※ 학부과정 8개교 및 대학원과정 5개교 등 총 13개교 강좌지원(455명 수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유학생 유치단계 입학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음

- 학업단계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GKS **장학생 선발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 유학 지원**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중이 확대**되고, 특히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지속적인 증가**함에 따라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 노력** 필요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의 소속 학교 **관리자 및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세계시민교육과 선도교사 사업**에 대한 **이해** 필요

○ 개선방안

- 유학생 **유치단계 장벽**을 낮추되 **지역 정주 인재를 육성**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 개편방안 발표**
- RISE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 K-MOOC를 통해 유학생 대상 한국어·한국이해 강좌 제공 및 해외 학습자 수요 등을 반영한 신규 강좌 개발 추진
- **GKS 장학생**의 성공적인 학위취득을 위한 **한국어 능력향상 지원** 및 **동문회 지원 확대**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 강화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통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 및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 **학교관리자 세미나** 및 **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개최로 **세계시민교육 이해 증진**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학교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촉진**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

○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등 한국유학 정보 제공 및 국내 대학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 사용 확대

※ 참가 기관 모집, 참가자 사전 접수, 박람회 온라인 홍보, 결과 보고 및 집계 등

○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TF)'를 구성, **지역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을 **수립**토록 지원

※ 17개 시·도 해외인재 유치·양성 워크숍(성과공유회) 추진

○ '25년도 GKS 사업 추진계획 수립, '25년도 학부 장학생 및 상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 '25년 선발규모(장기+단기) : 2,480명 (장기학위 1,900명, 단기(교환학생) 580명)

□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교육지원 강화**

○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등 실태조사 기반 컨설팅 실시

○ 2025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추진계획 수립

□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및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및 지역선도교사 활동** 지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 內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지역별 해외대학 유치 전략 수립 지원 컨설팅 ■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강화대학 선정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교육부)	■ '25년도 학부 장학생 및 상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발굴·컨설팅(연중), K-MOOC 강좌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 지정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지정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별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지원 계획 수립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2025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추진계획 수립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1차) 실시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글로컬대학 및 거점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 지원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교육부)	■ '25년도 대학원 장학생 선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발굴·컨설팅(연중), K-MOOC 강좌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지원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개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공고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 (GKS) 운영(교육부)	■ 하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발굴·컨설팅(연중), K-MOOC 강좌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한국어학급 등 현장방문 및 컨설팅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2차) 실시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결과 분석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17개 시·도 해외인재 유치·양성 워크숍(성과공유회) 추진 ■2025년 인증(서면, 현장) 심사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교육부)	■GKS 수학대학 담당자 워크숍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발굴·컨설팅(연중), K-MOOC 강좌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 성과 보고회 개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성과 보고회 개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한국어학급 등 현장방문 및 컨설팅 ■한국어 교육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성과 보고회 및 워크숍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유학 수요층 확대**를 위해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한국유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과제 내용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 국가별 박람회(온·오프 연계), 테마형 박람회(온라인)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박람회 운영,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 제공,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등),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온라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운영('11)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한국유학박람회 개최('15)

○ 온라인 기반 한국유학박람회 확대 · 개편 운영('20)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ISP 수립('21)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추진('22)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추진('23)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3.8.)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3차년도 사업추진('2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사업 시행(국립국제교육원)

2. ’24년도 추진 실적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한국유학박람회를 확대 운영

○ **온라인 테마형 박람회 운영**(4회), 국가별 **온·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운영**(18회)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유학생 유치-입학(학업)-취업·정주 등** 유학 단계별로 필요한 **한국유학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를 포함한 원스톱 한국유학 서비스 실시

○ AI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상담 중심 한국유학 홍보를 위한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3차년도*** **구축 사업** 추진(~’25.4.)

* AI 상담 챗봇 개발, 영어 기반 다국어 자동번역 기능 도입, 반응형 웹 페이지 개발 등

3. ’25년도 추진계획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지속 추진

○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등 한국유학 정보 제공 및 국내 대학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 사용 확대

○ 국가별 성공적인 한국유학박람회 운영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

* 참가 기관 모집, 참가자 사전 접수, 박람회 온라인 홍보, 결과 보고 및 집계 등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4차년도 운영**

○ 시스템 3단계 구축(’24.5.~’25.4.)을 바탕으로 안정화(’25년/연구용역* 예정) 및 고도화(’25년/ISP 수립 예정) 작업 추진*

* 용역 건명: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유학생 지원 환경 조성

□ 소요예산 : 총 83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620	1,384	833	△39.8	
-국 비	▪일반회계	1,620	1,384	833	△39.8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483백만원),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35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	7,749	8,109	온라인 자동집계
'24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	8,524		온라인 자동집계
'25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	8,524		온라인 자동집계

5. 담당자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 당 자	8급 김지나	이 메 일	jnkim20@korea.kr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우수인력 유출 방지 및 글로벌 인재 활용도 제고

○ 글로벌 인재 채용수요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기업 발전전략 실현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졸업 후 국내취업 연계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년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주관, 10.4.~10.5.)

○ '11년~'23년 국립국제교육원-KOTRA(산업부) 공동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24년 국립국제교육원-KOTRA(산업부) 공동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8.27.~8.28.)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공동주관)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업시행(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24년도 추진 실적

□ **2024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8.27.~8.28./COEX)

○ 글로벌 인재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과 국내 유망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 연계 기회 제공

※ 참가 규모: 약 100개 사, 외국인 유학생 약 2,000명

○ 취업 선배 멘토링 및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역량 강화 지원

3. ’25년도 추진계획

□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3분기) 기본계획 수립, 행사 홍보 및 준비, 채용박람회 개최

○ (4분기) 결과 분석

□ 소요예산 : <u>총 80백만원</u>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5	80	80	0.0	
-국 비	▪ 일반회계	75	80	80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등 행사 개최(2회×4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참가 유학생 수 /참가 업체 수	1,000/ 100	2,377/ 97	결과보고
’24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신청자 수	1,000/ 100	-	결과보고
’25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신청자 수	2,000/ 100	-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 당 자	8급 김지나	이 메 일	jnkim20@korea.kr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수준**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 도모

○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정착형 인재 유치·양성**

□ 과제 내용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인증을 부여**

- 인증대학에는 외국인학생 입국 시 출입국심사 완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수학대학 선정 등 지원

○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 인증과는 별개로** 매년 전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한 대학 지정**

- 부실한 정도에 따라 컨설팅, 모집제한 권고*로 단계별 제재조치

*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에 대한 비자발급 시 제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업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RISE 체계에서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의체를 구성, 유치-학업-취업·정주를 지원하는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토록 컨설팅 지원

- 지자체별 특화산업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매뉴판 개발·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11.5.)

○ '11년도 인증제 시범도입 및 결과 발표('11.5~12)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1주기 시행('12~'15)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주기 시행('16~'19)

※ 1주기 평가대상은 학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2주기 평가대상은 학부 외에 어학연수,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

○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0.2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유학생 감소 등을 반영, 코로나19 영향 지표(불법체류율, 어학 요건 등)를 조정하여 평가 시행('20년, '21년)

- 대학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년도 계획이 아닌 안정적인 3주기 보완방안('22~'24)* 마련('22.9월)

* 코로나19 영향 지표 재검토(예 : 불법체류율 산식 조정, 대학 자체 언어능력 검증 인정 등)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 발표('24.2월)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23.8.16.)

○ ‘교육국제화특구 3기(’23~‘27년) 육성종합계획’ 수립(’23.9월)

○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지원’ 컨설팅 실시 및 워크숍 개최(’23.11~12월)

○ RISE 시범지역 중심 수요 맞춤형 ‘해외인재유치 전략’ 수립 지원 컨설팅(’24.1~5월)

□ 추진체계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추진주체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신청제한여부 검토 → 정량지표 검토		국제화지원지표 심의(자체점검보고서)		현장 확인 (필요시)		위원회 최종심의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추진주체 :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 추진절차 :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지자체, 교육부 컨설팅) → 지역-대학-기업 협의체(TF) 구성 → 지역 산업특화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2. ’24년도 추진 실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편**

○ 4주기 **개편방안(시안) 마련**(’24.7.17.)

○ 대학 관계자 대상 **공청회**(2회/’24.7.22., 7.25) 및 **의견수렴**(’24.7.23.~8.2.)

○ 4주기 개편방안(시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검토회의(’24.8.5.)

○ 4주기 개편방안 수립 및 발표(’24.8.28.)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컨설팅 실적, 워크숍 실적, 취업박람회 실적 전략 마련

○ RISE 지역 ‘해외인재 유치 전략’ 수립지원 컨설팅 1차~3차 추진('24.1~5월)

○ 17개 시·도 지역 수요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한 워크숍 추진('24.3월)

○ 글로컬대학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컨설팅(강원대 등 14개 대학)('24.5월)

○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24.6월)

○ 경북·전남·부산·충북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24.하반기)

3. ’25년도 추진계획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1분기)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강화대학 선정

○ (3분기)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공고

○ (4분기) 2025년 인증(서면, 현장) 심사

□ 소요예산 : **총 261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41	241	261	8.3	
-국 비	▪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41	241	261	8.3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61백만원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TF)'를 구성, **지역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을 **수립**토록 지원

○ (1분기) 지역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수립 지원 컨설팅

○ (2분기) 글로컬대학 및 거점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 지원

○ (3분기)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 (4분기) 17개 시·도 해외인재 유치·양성 워크숍(성과공유회)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수	100개교	134교	인증평가 결과
'2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수	100개교	-	인증평가 결과
'25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수	100개교	-	인증평가 결과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	-	-
'24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 구축	협의체 구축 수(개)	3	5	RISE 시범지역(7개)
'25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 구축	협의체 구축 수(개)	5		RISE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

5. 담당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6
담 당 자	5급 제유진	이 메 일	cheerupje@korea.kr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소관부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9
담 당 자	4급 강현	이 메 일	kangh@korea.kr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 인재를 선발·초청하여 국내 학위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친한·지한 인재 양성

□ 과제 내용

구분	세부프로그램	장학기간	지원내역
장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	한국어연수 1년 + 학위과정 2~6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항공료, 어학연수비, 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단기	우수 교환학생 지원	4개월	항공료, 학업장려금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67년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시작

○ '05년'Study Korea Project'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역점사업 지정

○ '09년 한-아세안 정상회담시 Global Korea Scholarship 추진 발표

○ '10년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프로그램 재정비 및 신규 사업 신설 등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국가 브랜드화(化)

○ '12~'23년 제2~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24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사업 확대 및 개편 계획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장학생 추천(재외공관, 대학) → 장학생 선발(국립국제교육원) → 장학생 수학(대학)

2. ’24년도 추진 실적

□ GKS 신규 선발인원 확대 : (’23년) 2,456명 → (’24년) 2,902명 (+446명 증)

※ (’23년) 장기 1,334명, 단기 1,122명 → (’24년) 장기 2,322명, 단기 580명

□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사업규모 확대

○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확대*를 통해 지방대 교육 국제화 및 지역균형 발전 기여

* 지역대학 : ’23년, 671명(50.3%) → ’24년, 1,469명(63.3%) (+798명, +13%P)

○ 이공계 장학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첨단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 지원 강화

※ 이공계 신규 선발 장학생수 : ’23년 559명 → ‘24년 920명(+361명)

○ 전쟁, 내란 등 재난 상황에 있는 국가 학생을 위한 ‘국제재건인재’ 트랙을 신설하여 ODA 사업 취지 구현

□ 사업관리 내실화를 통한 GKS 장학생 성장 지원

○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한 학업장려금 가산 지급 제도*를 신설하여 한국 생활 조기 적응 및 학위 취득 성공률 제고

* TOPIK 5급 이상 취득하여 한국어연수 1학기 이상 면제 받은 경우 연 학업장려금의 최대 20% 1년간 가산 지급, TOPIK 말하기평가 5급 이상 취득시 1회 30만원 가산 등

○ 졸업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장학기간 종료전에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학사지침을 개정(’24.3월)하여 유학생의 국내 정주율 제고 기여

3. ’25년도 추진계획

□ GKS 장학생 선발・관리

○ (1분기) ’25년도 GKS 사업 추진계획 수립, ’25년도 학부 장학생 및 상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 ‘25년 선발규모(장기+단기) : 2,480명 (장기학위 1,900명, 단기(교환학생) 580명)

○ (2분기) ’25년도 대학원 장학생 선발

○ (3분기) 하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 (4분기) GKS 수학대학 담당자 워크숍 등

□ 소요예산 : 총 130,09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2,061	114,726	130,096	13.4	
-국 비	▪ 일반회계	92,061	114,726	130,096	13.4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장기) 학위과정 지원 127,529백만원 / (단기) 교환학생 지원 2,567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3%	98.4%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24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4%	-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25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4%	-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 (학위과정 관리인원-학위과정 중도포기 인원) / 학위과정 관리인원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전화번호	044-203-6772 (02-3668-1368)
담 당 자	행정사무관 강성화 (교육연구사 윤두성)	이 메 일	strongh11@korea.kr (yds419@korea.kr)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 · 적응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국내 다국적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유학에 대한 만족도 및 한국 유학 성공률 제고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학업과 생활 적응을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센터(국립국제교육원 내) 연중 운영

- 한국생활, 국내대학 학업 등 각종 고충에 대한 다국어 상담 진행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권역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K-MOOC 등) 보급, 입학 초기 이중언어 교육 병행, 국내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유학생의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지원

* 대학 한국어교육 시설 또는 지자체 평생학습시설 등을 한국어센터로 지정·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 「Study Korea Project」('04.11) 및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수립('08)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개설('10)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23.8.)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수립(23.8.16.)

○ RISE 시범지역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배포(24.4.)

□ 추진체계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 계획수립(국립국제교육원) → 사업 시행(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추진주체 : 대학, 자치단체

○ 추진절차 :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교육부) → 시도별 한국어 센터 지정·운영지원(대학·지자체)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고충 등 상담

○ 장학금 정보, 국내대학 학사 운영, 취업 및 비자 등 상담 추진

※ 상담 언어(7개) : 한국어・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러시아어·몽골어·우즈벡어

※ 상담 실적('24.7월 말 기준) : 2,805건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시・도별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계획 수립(24.하.)

○ 지역대학・교육기관 대상 한국어센터 공모(24.하.)

○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정착 및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K-MOOC 강좌 신규 선정

※ (주요 강좌) '유학생 한국내 논문작성 지원', '한국생활 이거 하나면 완전정복' 등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장학금, 학사, 한국 생활, 취업 등 다양한 주제의 유학생 상담 제공

○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재한 유학생회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한국 유학생활 정보 제공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취업 희망자 증가에 따라 취업 정보제공 확대

□ 소요예산 : 총 12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7)	(125)	(127)	1.6	
-국 비	▪ 일반회계	97	125	127	1.6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우수 한국어 교육기관을 한국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발굴・컨설팅

- 지역 내 다른 한국어 교육시설 등과 프로그램 공동제작·공유, 시설 공동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운영

※ 운영 주관기관 선정, 예산지원, 교육 프로그램 편성, 수강인원, 강사선발 등

○ 유학생의 한국이해 및 한국어·한국학 분야 강좌 수요에 대응하여 K-MOOC를 통해 강좌 제공

※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및 초청연구자 대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한국학중앙연구원)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학습, 적응지원 강화	다국어 상담 제공 언어	개수(개)	7	7	결과보고
'24	학습, 적응지원 강화	상담 건수	개수(건)	4,200	2,805	결과보고 ('24.7월 말 기준)
'25	학습, 적응지원 강화	상담 건수	개수(건)	4,200		결과보고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	-	-	-	-
'24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	1건	1건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배포(4월)
'25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시·도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계획 수립	3곳		RISE 시범지역(7개)

5. 담당자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 당 자	8급 김지나	이 메 일	jnkim20@korea.kr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소관부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9
담 당 자	4급 강현	이 메 일	kangh@korea.kr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여 학교 내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이주배경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 과제 내용

○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의 확산 및 실생활 중심의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교원 연수 실시

○ 교육과정 등에 다양한 다문화교육 요소*를 반영하여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존중, 협력성, 세계시민의식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14~'18년) 및 정책학교('19년~)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 ('21) 277교 → ('22) 287교 → ('23) 317교

○ 다문화교육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운영('15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다양한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15년)

*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존중, 협력성, 세계시민의식 등

○ 다문화, 다양성 존중 등을 포함한 교수학습자료 개발('16~'18년)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수립('23.9월)

□ 추진체계

<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 추진주체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KERIS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교원 연수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 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 결과보고

2. '24년도 추진실적

○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4.2월)

○ 학교 전체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우수 교육모델 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확대 추진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 지정

○ (3~4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 (4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 성과 보고회 개최

□ 소요예산 : 유·초·중·고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특별교부금)은 총액지원으로 정책학교 운영 예산을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학교 구성원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350	-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25	학교 구성원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	-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 24년도 실적은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24.9.1. 기준)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534
담 당 자	5급 조재현	이 메 일	present5@korea.kr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주배경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 및 기초학습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통합적 성장 지원

□ 과제 내용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을 확대하여 다문화유아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개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도입·운영('15년~)

○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보급('20.8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 결과보고

2. '24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 운영(('23) 212교 →('24) 223교)을 통해 이주배경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 모든 유아에게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4.2월)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지정

○ (3~4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 (4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성과 보고회 개최

□ 소요예산 : 유·초·중·고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특별교부금)은 총액지원으로 정책학교 운영 예산을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맞춤형 다문화 유아 교육 지원	다문화유아 발달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수	220	223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25	맞춤형 다문화 유아 교육 지원	다문화유아 발달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수	230	-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534
담 당 자	5급 조재현	이 메 일	present5@korea.kr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 과제 내용

○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한국어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 역량을 측정하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예비학교 도입('12~'19년) 후 한국어학급으로 확대('19년~) 운영

○ 한국어(KSL) 교육과정 도입('12년) 및 개정('17.9월)

○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여 중도입국·외국인자녀에게 학교 편·입학 등 자료 안내('17년~)

○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운영('19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법무부 협업), 시·도교육청, 학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한국어학급 설치·운영 → 결과보고

2. '24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학급 확대 및 온라인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추진

○ 학교급 전환기(유→초, 초→중) 및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초기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과정 운영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시도교육청별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지원 계획 수립

○ (3~4분기) 한국어학급 등 현장방문 및 컨설팅

○ (4분기) 한국어 교육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 소요예산 : 유·초·중·고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특별교부금)은 총액지원으로 정책학교 운영 예산을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학급 운영 수	530	-	시도교육청 결과보고서
'25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학급 운영 수	-	-	시도교육청 결과보고서

* 24년도 실적은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24.9.1. 기준)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534
담 당 자	5급 조재현	이 메 일	present5@korea.kr

3-3-3-3	학업 · 진로 ·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해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습 및 언어교육, 학교생활 적응 등 지원

□ 과제 내용

○ 국내 대학(원)생과 다문화·탈북학생을 매칭하여 기초·한국어 학습, 이중언어 역량 강화, 진로·진학 상담 등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교·사대생 멘토링 사업 도입('09년) 후 참여대학('11년, +모든 대학) 및 지원대상('12년, +탈북학생)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멘토·멘티 모집 및 매칭 → 결과보고

2. '24년도 추진 실적

○ 전문성을 갖춘 우수 멘토 확보를 위해 참여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 다문화·탈북학생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2025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추진계획 수립

○ (1~4분기)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 소요예산 : **총 15,600백만 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5,600	15,600	0	
-국 비	▪일반회계		15,600	15,600	0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토링 확대	멘토링 참여대학 수	80	-	멘토링 결과 보고서
'25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토링 확대	멘토링 참여대학 수	100	-	멘토링 결과 보고서

* 24년도 실적은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24.9.1. 기준)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534
담 당 자	5급 조재현	이 메 일	present5@korea.kr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및 지속적 확산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자유,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 양성 교육

□ 과제 내용

○ 유네스코 등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공유,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속 실시하여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기반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및 「인천선언문*」 채택(’ 15.5월)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기회 증진」을 글로벌 교육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GCED) 확산 반영

○ 유엔 개발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15.9월)

※ 세부목표 4.7에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증진’ 반영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지원(’ 15년~계속)

○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문’ 개정(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 23.1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시·도 교육청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교육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시도교육청)

2. ’24년도 추진 실적

□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확산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실시 및 교사연구회(중앙 및 시도) 운영·지원(688명, 연중)

- 중앙선도교사 연수 2회(1월,8월), 학교관리자 세미나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4월)

○ 세계시민 교육 고등교육 강좌 개설 지원(총 13개교, 13개 강좌)

○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 개최(7/15-19)

○ 제9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9/4-5,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 (주제) 세계시민교육으로 그려보는 다자주의 회복과 평화

○ 세계시민 · 국제기구 체험관 체험 지원(연중)

○ ‘세계시민과 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12월)

3. ’25년도 추진계획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및 활동(연중)

※ 중앙선도교사 1차연수(1분기) → 시도선도교사 전달연수(2분기) → 중앙선도교사 2차연수(3분기) → 성과공유 워크숍(4분기)

○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조직 · 운영 및 시도연구회 지원(연중)

○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지원(2분기)

□ 소요예산 : 총 72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52	930	727	△21.8	
-국 비	▪ 일반회계	852	930	727	△21.8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25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0교	11교	3년 간 개설 지원교 평균(9.33)의 올림 값
'24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0교	13교	3년 간 개설 지원교 평균값(10)
'25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2교	-	3년 간 개설 지원교 평균(11.33)의 올림 값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2
담 당 자	교육연구사 최기영	이 메 일	choishw@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82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83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84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85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2-[1]-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1	100%	31,817	38,817	22.0%
1. 경 제	1	100%	31,817	38,817	22.0%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전략적인 유치 기반 마련, 유입·정착 지원 체계화

주요 내용

- 국내 연구기관의 박사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장기(3년, 10년) 초청・유치 지원

  - (Brain Pool) 연간 인건비 최대 3억 원까지 장기(3년) 지원
  - (Brain Pool^{+}) 인건비·체재비·연구비 등 연간 최대 6억 원까지 10년간 지원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등 핵심분야 연구자 정규직 영입 지원

※ '24년 성과 : 해외 우수 연구자 115명 선발, SCI(E)급 논문 618건, 등록 특허 15건 등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책적 필요와 기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지원유형 도입 검토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1개	38,329	31,817	38,817	22.0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1개)	38,329	31,817	38,817	22.0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활용	38,329	31,817	38,817	22.0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학령인구 감소,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심화 우려*,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필요성 증대

* 이공계 입학정원(총 15.0만명, 일반 4년제) 중 의대 정원은 2.04% → 3.05% 수준으로 확대

- 과학기술인재의 양적 부족 대비 및 기술혁신을 가속화 할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 우수 연구자 115명을 유치 수요가 있는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으로 신규 초빙·유치하여 논문, 등록특허 등 우수한 성과 도출

·'24년 성과 : SCI(E)급 논문 618건, 등록특허 15건 등 ('24.2월 집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현장 수요에 따른 인재 유치 방안 필요

- 연구현장 수요 따른 적절한 인재유치를 위해 기관 유치수요와 연계되는 기관 단위 유치 유형의 도입 필요성 검토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기관 단위 유치 유형 도입 검토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책적 필요와 기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지원유형 도입 검토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공고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선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입국지원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 초청·유치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 과제 내용

○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전략적・체계적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를 장기 초청・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 (Brain Pool) 연간 인건비(최대 3억원)·체재비·연구비 등 12개월~3년간 지원
- (Brain Pool+) 인건비·체재비·연구비 등 연간 최대 6억원까지 10년 간 지원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등 핵심분야 연구자 정규직 영입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994. 2.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 사업 착수

○ 2015. 3.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KRF)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0. 1.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Plus(Brain Pool^{+}) 사업 신설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 추진절차 : 과제공모 →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운영 및 관리

3. ’25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계 획
1/4분기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공고
2/4분기	▪ 신규과제 선정
3/4분기	▪ 신규과제 입국 지원
4/4분기	▪ 성과교류회 개최

□ 소요예산 : 총 38,81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8,329	31,817	38,817	22.0	
-국 비	▪ 일반회계	38,329	31,817	38,817	22.0	
-지방비						
-기 타						

□ 산출내역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 38,817만원

- 계속과제 지원을 위한 26,442백만원, 신규과제 선발을 위한 12,375백만원

■ (계속, BP) 194과제 × 평균 97.95백만원 = 19,002백만원

■ (계속, BP+) 14과제 × 평균 531.4백만원 = 7,440백만원

■ (신규, BP) 63과제 × 100백만원 × 6/12개월 + 52과제 × 300백만원 × 6/12개월 = 10,950백만원

■ (신규, BP+) 5과제× 570백만원 × 6/12개월 = 1,425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명 수	127	183	매년 신규 유치인원 산출
'24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명 수	88	115 (예정)	매년 신규 유치인원 산출
'25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명 수	120	-	매년 신규 유치인원 산출

※ 실제 유치 과제 수는 선정 상황에 따라, 예산 기준 목표치와 다를 수 있음

5. 담당자

소관부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전화번호	044-202-4832
담 당 자	5급 윤태량	이 메 일	dbsxofid@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외교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91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92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93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94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3.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4-3-2-2 난민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94

외 교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1	10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국가 간 외교관계를 고려한 외국인정책 추진과제 협조**

주요 내용

- UNHCR과의 협력 포함, 난민 분야 국제협력 체계 참여

  - 난민분야 국제회의 참석 및 한-UNHCR 인사 교류

  - 난민 글로벌 콤펙트(Global Compact on Refugee*) 우리측 공약 이행 지속('25년 對 UNHCR 기여금 제공, 난민·수용국 대상 인도적 지원)

  * 글로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로 2018년 말 유엔총회 계기 채택, 4년 주기 글로벌 난민포럼을 통해 각국의 공약 발표 및 이행 점검

- 외국인정책 관련 협조과제 지원

  - 재외공관 사증정밀심사 강화, 주한 공관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 강화,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 등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1개				00.0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00.0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00.0	비예산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 분쟁 격화로 인해 국제피난민 수는 지속 증가하여 ’24년말 기준 1.2억명 이상으로 추정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글로벌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참여

- UNHCR에 대한 분담금 확대 (’23년 3.8백만불 → ’24년 18백만불)

- UNHCR과의 고위급 교류 확대 및 각종 난민분야 국제회의 참석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UNHCR과의 협력을 포함, 난민 분야 국제 협력 체계 참여 지속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유엔난민기구 교류 및 재정 기여 지속(상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유엔난민기구 교류 및 재정 기여 지속(상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유엔난민기구 교류 및 재정 기여 지속(상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유엔난민기구 교류 및 재정 기여 지속(상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글로벌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 체계 참여

□ 과제 내용

○ 유엔난민기구(UNHCR) 회의 등 난민 관련 주요 국제협의 참여

○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약 발굴 및 이행

* 글로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로 2018말 유엔총회 계기 채택 / 4년 주기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을 통해 각 국의 공약 발표 및 이행 점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1월 신규과제 수록 이래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외교부, 법무부 등

○ 추진절차 : 사안별로 별도 또는 협업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난민 분야 국제 회의·협의 참여

○ 한-UNHCR 인적 교류

- UNHCR 최고대표 면담(2.27, 7.4) 및 방한(협의 중)(11월)
- UNHCR 부최고대표 면담(4.19, 9.26)
- UNHCR 최고대표보 면담(4.16) 및 방한(4.3-5)

- UNHCR 신임 한국대표 임명 및 면담(8.17)

○ 난민 분야 회의 참여

- UNHCR 제92-92차 상임이사회(3, 6, 9월), 제74차 집행이사회(10월) 참석

- 아프간 난민 지원 해법(Solution Strategy for Afghan Refugee)* 핵심그룹 회의 참석(4, 6, 10월)

* 아프간 난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11년 UNHCR 및 아프간·수용국 주도로 설립 / 우리측은 '20.10월 출범한 동 해법 핵심그룹 참석 중

- 제79차 유엔 총회 계기 UNHCR 최고대표 상호대화(11.6)

□ 난민 글로벌 콤팩트 관련 우리측 공약 이행

○ 2024년 對 UNHCR 비지정기여* 확대('23년 3.8백만불 → '24년 1.8천백만불)

* 국제기구가 난민위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나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제공하는 기여

○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수단 등 난민 및 수용국 대상 인도적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지속

3. '25년도 추진계획

□ 난민 분야 국제회의 참석 및 한-UNHCR 인사 교류 지속

○ 제93-94차 상임위원회(3, 6, 9월), 제76차 집행이사회(10월) 참석

○ 제4차 한-UNHCR 정책협의회 개최(미정)

○ 아프간 난민 지원 해법 핵심그룹 회의 참석(수시)

○ 여타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내 난민 분야 회의(수시)

□ 난민 글로벌 콤팩트 우리측 공약 이행 지속

○ '25년 對UNHCR 기여금 제공(1분기)

○ 난민·수용국 대상 인도적지원 지속(상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산출내역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 분야 국제협력체계 참여	국제사회의 난민 분야 규범·협력 논의 과정 참여	난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4	7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1	7	정량/횟수
'24	난민 분야 국제협력체계 참여	국제사회의 난민 분야 규범·협력 논의 과정 참여	난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4	8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1	8	정량/횟수
'25	난민 분야 국제협력체계 참여	국제사회의 난민 분야 규범·협력 논의 과정 참여	난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4	-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4	-	정량/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	전화번호	02-2100-7254
담 당 자	5급 이송현	이 메 일	sonhlee19@mofa.go.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법 무 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103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106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113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119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1-1-①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도입 ····· 119

1-1-1-②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 122

1-1-1-③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124

1-1-1-④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127

1-1-1-⑤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지원 ····· 129

1-1-2-①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 131

1-1-3-① 해외기술인재트랙 구축 ····· 133

1-1-3-② 국내유학인재트랙 구축 ····· 135

1-1-3-③ 숙련기능인재트랙 구축 ····· 137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1-① [국내체류]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 139

1-2-1-③ [글로벌최상위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 141

1-2-1-④ [글로벌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 143

1-2-1-⑥ 가칭청년드림비자 신설 추진 ····· 145

1-2-2-①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 147

1-2-2-②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149

1-2-2-③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 151

1-2-3-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153

1-2-3-②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156

1-2-3-④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158

1-2-4-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161

1-2-5-②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 163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1-①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 165

1-3-1-②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전담기관 설치 ····· 167

1-3-1-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169

1-3-2-①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 171
1-3-2-②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174
1-3-2-③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177
1-3-2-④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 181
1-3-3-②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183
1-3-3-③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 186
1-3-3-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 188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1-③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190
1-4-1-④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 193
1-4-1-⑤ 방한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195
1-4-2-①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 197
1-4-2-②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 199
1-4-2-③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201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1-①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203
2-1-1-②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205
2-1-2-①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207
2-1-2-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209
2-1-3-①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 211
2-1-3-②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 213
2-1-3-③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 216
2-1-3-④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18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1-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선 ····· 220
2-2-1-④ 귀화 면접시험 개선 ····· 222
2-2-1-⑤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225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1-①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228
2-3-1-②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시스템 고도화 · 231
2-3-1-③ 안전 위해(危害)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 234
2-3-2-①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236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3-1-1-①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 239
3-1-1-②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 241
3-1-2-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 243
3-1-2-②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 246
3-1-2-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 248
3-1-2-④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251
3-1-2-⑤ 입국전 사회통합교육 제공 [신규] ····· 254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3-2-1-①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256
3-2-1-②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258
3-2-1-③ 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 262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2-④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 265
3-3-3-②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267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3-4-1-①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 269
3-4-1-②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 271
3-4-1-③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 273
3-4-2-①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 275
3-4-2-②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 278
3-4-2-③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 279
3-4-2-④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신규] ····· 281
3-4-3-①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 283
3-4-3-②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 285
3-4-3-③ 국내 정주 희망 동포를 위한 해외 홍보 강화 [신규] ····· 287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2-①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 289
4-1-2-②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291
4-1-2-③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 293
4-2.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1-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295
4-2-2-②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297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4-3-1-①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300

4-3-1-②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304
4-3-1-③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306
4-3-1-④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309
4-3-2-①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 313
4-3-2-② 난민의 처우 개선 ····· 315
4-3-3-①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 317
4-3-3-②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321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5-1-1-①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 ····· 323
5-1-1-②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 325
5-1-2-①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328
5-1-2-②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331
5-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5-2-1-①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 333
5-2-1-②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 336
5-2-1-③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 338
5-2-2-①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340
5-2-2-②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342
5-2-2-③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345
5-2-2-④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 349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5-3-1-①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구축 ····· 351
5-3-1-②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 354
5-3-1-③ 모바일 외국인증록증 발급 ····· 356
5-3-1-④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359
5-3-2-①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 361
5-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5-4-1-①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363
5-4-1-②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365
5-4-1-③ 유엔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 369
5-4-1-④ 다자간 국제협력 체제 유지 ····· 371
5-4-2-① 이민과 개발(Migration & Development)의 정책화 ····· 375
5-4-2-②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 377

법 무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88	100%	27,373	33,900	23.8%
1. 경 제	26	29.5%	1,842	4,400	138.8%
2. 안 전	14	15.9%	2,917	5,572	91.0%
3. 통 합	18	20.5%	12,375	15,823	27.9%
4. 인 권	13	14.8%	2,686	4,300	60.1%
5. 협 력 / 인프라	17	19.3%	7,553	3,805	△49.6%

※ 재정 비 소요 과제 수 : 67개

추진 방향

- **우수인재 유치 및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확대 및 인권보호 강화**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첨단분야 해외 인재「Top-Tier」비자 신설,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비자 제안제」도입, 지역특화 비자 대상지역 확대,「광역형 비자」시범운영 등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 고도화, 감시정 건조 등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확대,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동포 체류자격 통합, 동포 취업 범위 재설계 등
-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신설,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논의,「난민법」개정 추진 등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구축 등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88개 ※ 종료과제, 통합과제 제외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6)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4)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8)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3)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7)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106개	43,617.9	27,372.6	33,900	23.8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7)	8,502.3	1,842.3	4,400.3	138.8	
1-1-1-1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도입	80	836	836	0.0	과제명변경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1-1-1-3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8,079	492		△100	종료('24)
1-1-1-4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1-1-1-5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 지원					신규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1-1-3-1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					종료('23)
1-1-3-2	국내유학인재 트랙 구축					종료('24)
1-1-3-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1-2-1-1	[국내체류]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50				종료('23)
1-2-1-3	[글로벌최상위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1-2-1-4	[글로벌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종료('23)
1-2-1-6	청년드림비자 신설 추진					신규
1-2-2-1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종료('23)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1-2-2-3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300	100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368	100	
1-2-5-2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종료('24)
1-3-1-1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1-3-1-2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전담기관 설치					

1-3-1-5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					신규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48.3	48.3	38.3	△20.7	
1-3-2-4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110	2,502	2,174.5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종료('24)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245	356	356	0.0	
1-4-1-4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종료('23)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종료('23)
1-4-2-1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1-4-2-2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종료('24)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5)	761.0	2,917	5,572	91.0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2-1-3-1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2-1-3-2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2-1-3-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2-1-3-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2-2-1-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2-2-1-4	귀화 면접시험 개선	596	596	596	0.0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2.97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	162	2,093	876	△58.1	(23-1-1)에 포함
2-3-1-3	안전 위해(危害)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종료('24)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228	4,100	1,698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19)	11,556	12,375	15,823	27.9	
3-1-1-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신규)			'27년 추진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90	662		△100	'27년 추진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10,096	10,439	13,594	30.2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1,059	964	1,919	99.1	
3-1-2-5	입국전 사회통합 교육 제공					신규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311	310	310	0.0	
3-2-1-3	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신규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3-4-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1-3-1-1)통합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과제명변경
3-4-2-2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 체류 안내 강화					종료('23)

3-4-2-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3-4-2-4	국내 체류 동포 실태 조사	-	-	미정		신규
3-4-3-1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3-4-3-2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3-4-3-3	국내 정주 희망 동포를 위한 해외 홍보 강화					신규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3)	19,613.6	2,685.6	4,299.6	60.1	
4-1-2-1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과제명변경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18,707	1,764	652	△63.0	
4-1-2-3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신규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213.6	213.6	213.6	0.0	
4-3-1-2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38	38	38	0.0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192	210	3,058	1,456.2	
4-3-2-1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40		△100	
4-3-2-2	난민의 처우 개선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463	420	338	△19.5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22)	3,184	7,552.7	3,805.1	△49.6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91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5-1-2-2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113	113	113	0.0	
5-2-1-2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40		△100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2,268	2,562	3,455	34.9	
5-2-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5-3-1-1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구축					
5-3-1-2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5-3-1-1)통합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4,602		△100	종료('24)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481				종료('23)
5-3-2-1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일시 중단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13	16.7	18.1	8.4	
5-4-1-3	유엔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5-4-1-4)통합
5-4-1-4	다자간 국제협력 체제 유지	218	219	219	0.0	
5-4-2-1	이민과 개발(M&D)의 정책화					
5-4-2-2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국내 출입국자 수 증가

○ '24년 12월 기준 **국내 출입국자는 8,150,223명**으로 전년 동월(6,967,551명) 대비 **약 17.0% 증가,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동월(1,069,607명) 보다 약 22.5% 증가하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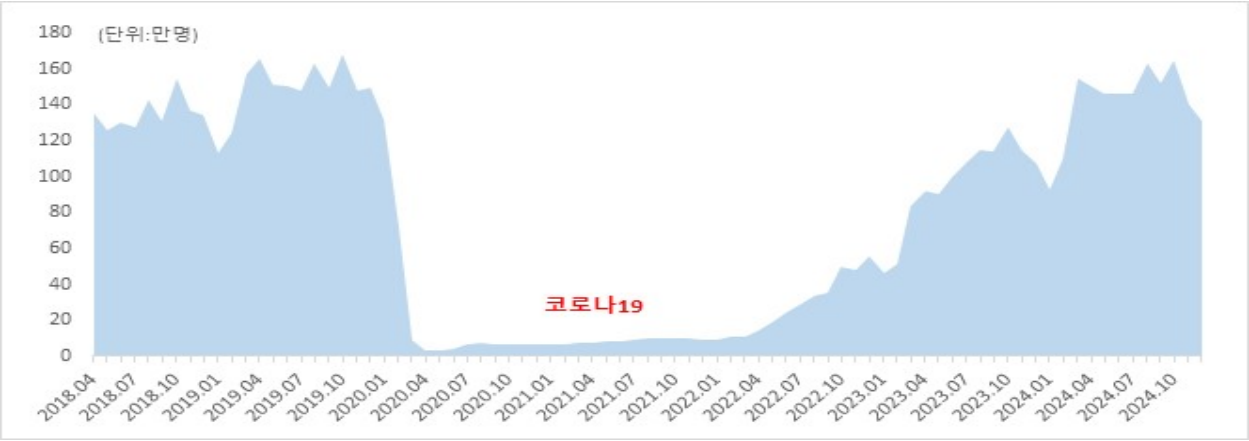
* 외국인 입국자 수 ('19.12.) 1,490,735명 → **('24.12.) 1,310,466명**

【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누계) 】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입국자	44,544,745	46,770,129	7,529,423	2,242,365	9,699,030	34,168,188	45,815,006
출국자	44,363,675	46,777,964	7,172,408	2,317,328	9,715,198	33,953,470	45,407,921
총 계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19,414,228	68,121,658	91,222,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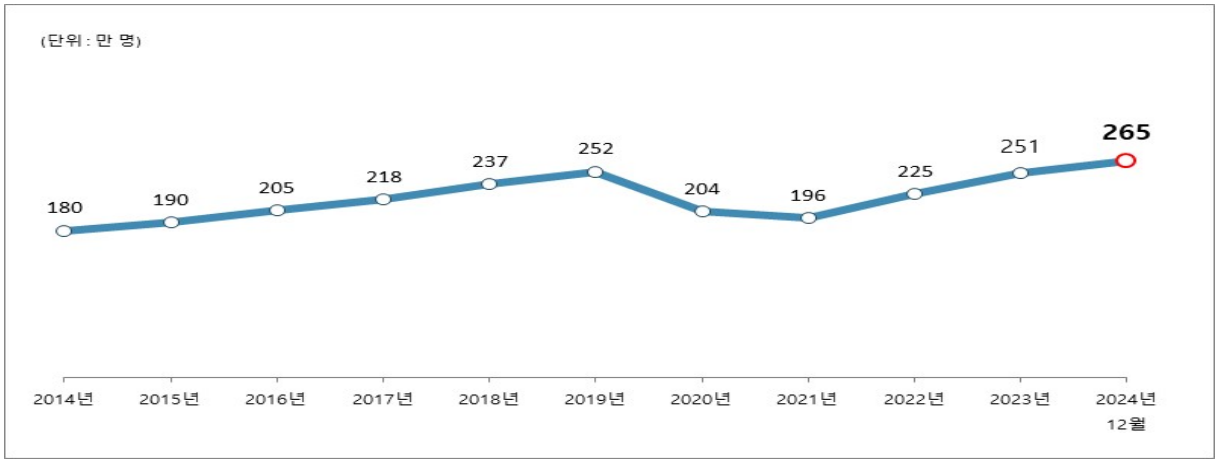
【 외국인 입국자 현황 】



☐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년 12월 기준 약 2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향후 5년 내 300만 명 초과 예상**

【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 이민정책 관련 지자체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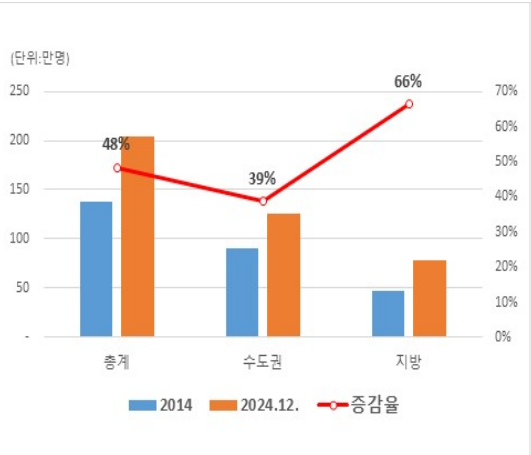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지자체 증가**

-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경북 등), 광역형 비자 도입 제안,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 **지역 주도형 이민정책 추진 움직임**

*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24.7.),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24.7.), 경기도 이민사회국('24.7.), 충북 외국인정책추진단('24.7.), 충남 인구전략국('24.10.) 신설 등

【 지역별 장기체류외국인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24년	구분	2014년	2024년
총계	**1,377,945**	**2,042,017**	**경기**	452,387	706,858
서울	382,387	413,317	**강원**	16,729	30,218
부산	43,791	63,290	**충북**	36,206	72,719
대구	28,267	42,249	**충남**	65,035	130,880
인천	68,677	132,766	**전북**	27,855	48,090
광주	19,179	32,732	**전남**	30,932	61,238
대전	18,202	29,629	**경북**	52,686	87,465
울산	30,923	34,168	**경남**	85,611	117,270
세종	3,188	7,627	**제주**	15,890	31,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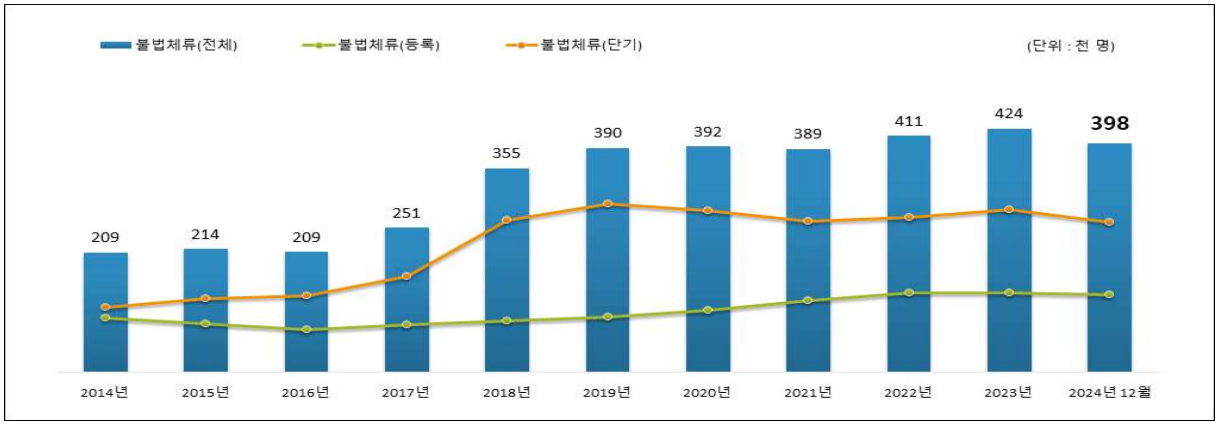
※ 2014년 대비 수도권의 장기체류외국인 증가율 39%(90.3만→125만)에 비해 지방은 66%(47.4만→78.9만)로 장기체류외국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불법체류 외국인 수 감소세 지속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2년 40만 명을 넘어서 '23년 말 기준으로 42만 명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 지속**

※ ('23.12.) 423,675명 → ('24.2.) 419,174명 → ('24.6.) 414,730명 → **('24.12) 397,522명**

【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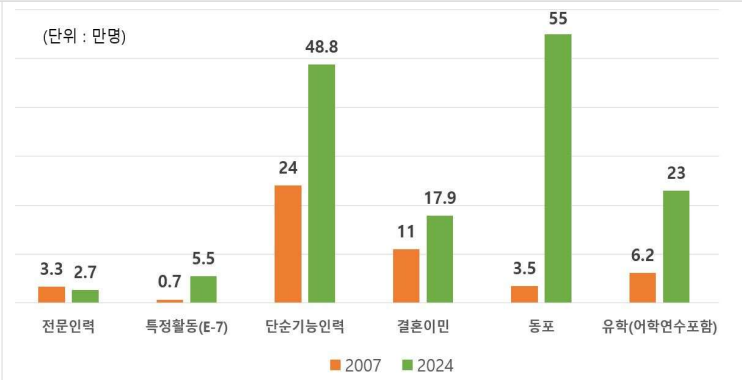
☐ 체류유형 다변화 및 정주형 이민자 증가

○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유학생, 난민 등 **체류유형의 다변화로 사회통합정책 수요 급증**

【정주형 체류외국인 증가】



【체류유형별 증가 현황】



○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갈등 현상 발생

- 시혜적 정책, 일자리 잠식 등 **국민의 반(反)이민정서가 존재**하고, 종교갈등, 이민 2세대 사회부적응 문제 등 **사회통합 중요성 증가**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 (‘24.10.)

-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

※ 첨단분야 해외인재 대상「Top-Tier」비자 신설,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지원 강화,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청소년 체류·자립 지원, 사회통합 정책 인프라 강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등

○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 확대 (’24.5.~)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 비자 대상 확대 및 전문인력(E-7) 도입 허용 분야* 확대

* 항공기 제조원(’24.5.), 요양보호사(’24.7.) 송전 전기원(’24.8.) 직종 추가 도입 허용

○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24.2.~)

- 숙련기능인력의 근무처 변경 요건(’24.2.) 및 불법체류경력자 자격변경 제한 요건(’24.5.)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에 쿼터 추천권 부여(’24.5.) 등

※ 숙련기능인력 전환실적 1,781명(’22년) → 12,035명(’23년) → 13,391명(’24.12. 기준)

○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신설 및 시범운영 (‘24.1.)

-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 시범운영

※ 워케이션 자격(F-1-D) 218명 체류 중(’24.12. 기준)

○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사업 실시 (’24.1.)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사업 실시

※ ’24년 66개 광역·기초지자체에 총 3,291명 배정 / 1,736명 추천(’24.12. 기준)

○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운영** ('24.4.~)

- 통합적·체계적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주관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협업 체계 구축

○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4.1.~)

- 불법 체류외국인 상시 단속체계 가동 및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서민 일자리 잠식·국민안전위협 분야 집중단속 실시

※ 정부합동단속 2회 실시 총 45,442명 적발, '24년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 ~ '25.1.30.) 운영하여 21,042명 출국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 제고** ('24.5.~)

- 2024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1차) 사업 완료

※ △단체 관광객 신청 편의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신청 시 입력 편의를 위한 화면 개선 △여권 판독 기능 개선 △공용어 중심의 다국어 확대(러시아어, 독일어)

○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시행** ('24.7.~)

- 지자체별 이민자 관련 지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이 효율적·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향 제시

※ '23년 9곳(광역 4, 기초5) 지자체 시범실시 → '24년 35곳(광역 13, 기초 22)으로 확대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교육 확대·강화** ('24.1.~)

- 조선업종 등 지역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대 실시

※ 102개 과정 2,664명 참여('23년), 286개 과정 8,866명 참여('24.12. 기준)

○ **난민인정 심사 시 화상면접 도입** ('24.5.)

- 근거리 통역인 부재 및 감염병 전염 예방을 위해 난민인정 심사에 화상 면접 방식 정식 도입

※ 아랍어 6건 등 총 22건 화상 면접 수행('24.10. 기준)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제고** (’24.1.~)

- 난민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청취 확대 및 이의신청 심의 진행경과 조회 시스템(Hi-Korea 홈페이지) 구축·운영

※ 의견진술 ’22년 127건 → ’23년 172건 → ’24년 9월말 198건(’22년 대비 약 56%↑), 조회시스템 이용 5,290건(’24. 1.~6.)

○ **인신매매 방지 노력 및 제도 개선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시민사회 단체 협력 강화 등 개선 노력으로 美 국무부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상 1등급 복귀 (’24.6.)

※ ’01년(최초) 3등급 → ’02년~’21년, 1등급 → ’22년~’23년, 2등급 → **’24년, 1등급**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지자체 개방** (’24. 10.~)

- 출입국관리공무원 대상 플랫폼 운영 개시 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이용 희망 지자체 공무원 대상 시범 개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 (’24.12.)

- 디지털 기반의 외국인 신분 확인 체계 확립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대상 **「Top-Tier 비자」신설**, **이공계 인재의 영주·국적 취득 확대** 등 우수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

○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 **「비자 제안제」**를 통해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형 비자」시범운영**

○ **사회통합교육 확대 등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 국내 출생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의 고교 졸업 후 체류 허용**, 장기체류외국인의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제공** 및 **입국 후 조기적응 지원**

○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불법체류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적정 도입 규모를 산정·공표**

□ **불법체류자 감축 노력 지속**

○ 상시 단속체계 유지 및 **정례적 정부합동단속 실시**,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다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일부 유료화 추진**

○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교육비용 일부를 부과**하여 이민자 교육 책임성 및 자립의식 강화

* 각 단계(100시간)당 10만원(교육원가의 20%) 부과, 사회적 약자 등 교육비용 감면대상 설정

□ **난민정책 제도 개선 및 외국인 인권보호**

○ 해외 입법사례 검토 등을 통해 난민심사 및 소송 수행 방식 등 **난민 심사 절차 개선**, 국제적 기준과 국익을 고려한 **처우 지원 제도 개선**

○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및 **인권 친화적 보호시설 확대 운영**으로 보호 외국인 기본권 보장 강화

□ **범정부 차원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추진 지속**

○ 인구감소, 지방소멸, 인력난 등 당면 사회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전담기구 신설 검토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1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식 운영 발표	법무부 개선추진단
1-1-1-4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1-3-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 '25년도 숙련기능인력 제도 운영 개시	법무부 체류관리과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사업(2차) 계획 수립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불체감축계획 수립	법무부 이민조사과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국경·체류·안전실무분과위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지정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개정 국적 및 병역 안내서 배포 ■ 온라인 국적설명회 개최	법무부 국적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사업(2차) 계획 수립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신조 감시정 주요 장비 구입을 위한 조기 발주 및 건조 용역 계약(조선소)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 대학연계과정 활성화	법무부 이민통합과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법무부 이민통합과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3차시 교육을 5차시로 확대 운영	법무부 이민통합과
4-1-2-1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 출국대기실 운영기관별 실무 매뉴얼 수립 현황 점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안 논의 협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및 소속기관 간담회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법무부 난민심의과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법무부 난민정책과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1-2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법무부 난민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발표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3-1-1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ISMP 추진	■ 예산 신청	법무부 이민정보과
5-4-2-2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 ODA 본사업 수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4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표준화 연계 확대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3-1-2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전담기관 설치	■ (가칭) 「지역이민특별법」 제정 입안 보고	법무부 개선추진단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 연구용역 자료 활용 및 관계기관(부처) 업무 협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개방 확대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K-ETA 고도화(2차) 사업 수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주한공관원 간담회 면담	법무부 이민조사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역량강화 교육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법무부 국적과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국적법령 개정 예정 ■ 온라인 국적설명회 개최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활용을 위한 키오스크 도입 관련 입찰 진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K-ETA 고도화(2차) 사업 수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신조 법무부 감시정 건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이민통합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중도입국자녀 신상정보 제공	법무부 이민통합과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위한 재외동포(F-4) 자격 활동범위 확대 추진	법무부 이민통합과
4-1-2-3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법무부 이민조사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및 소속기관 간담회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2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자료발간 등 제도개선 추진 실적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 제정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정보 순회교육	법무부 난민심의과
4-3-2-2	난민의 처우개선	■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법무부 난민정책과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 위원회 통합논의 회의 참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중앙-지방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중점연구과제 수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4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4-2-1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지자체별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현황 분석 시각화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K-ETA 고도화(2차) 사업 수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조사과장회의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국경·체류·안전실무분과위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역량강화 교육	■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25. 7월)	법무부 국적과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온라인 국적설명회 개최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제출을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 개발·구축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K-ETA 고도화(2차) 사업 수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신조 법무부 감시정 건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 CBT 중간평가 시범 운영	법무부 이민통합과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개설	법무부 이민통합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및 소속기관 간담회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담공무원 워크숍	법무부 난민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난민조사관 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법무부 난민심의과
4-3-2-1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정착현황 조사	법무부 난민정책과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중점연구과제 수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4-2-1	이민과 개발(Migration & Development)의 정책화	■ 이민과 개발 정책화 방안 마련 및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 민간수요 반영을 위한 '비자 제안제' 도입	법무부 체류관리과
1-1-1-5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지원	■ 관계부처 외국인행정 데이터 연계 확대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4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 플랫폼 구축	■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 플랫폼 구축	법무부 체류관리과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 지원센터 기능 확대	■ 사회통합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이민통합과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K-ETA 고도화(2차) 사업 수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주한공관원 간담회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온라인 국적설명회 개최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제출을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 개발·구축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K-ETA 고도화(2차) 사업 수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신조 법무부 감시정 건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중도입국자녀 신상정보 제공	법무부 이민통합과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 소관 부처 의견수렴 및 논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3-4-3-2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차별규정 폐지 방안 마련	법무부 이민통합과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법무부 이민조사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및 소속기관 간담회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정보 해외 교류・협력	법무부 난민심의과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국제회의 참석	법무부 난민정책과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및 교육 실적 보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4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1-1-1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등을 고려한 과학적 총량 관리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

- (인력공급 부족 규모)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직종별 인력부족 규모 분석·추정

- (외국인 유입 영향 분석)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영향, 불법 체류·이민정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도입 규모 예비 산출)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소관 부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비자 발급규모 산출

- (결정·공표) 관계부처 협의·전문가 자문을 거쳐 비자 발급규모 최종 결정·공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4~9.) 도입 규모 산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이철희 교수)

○ ('23. 8.) 연구용역 관련 학술포럼 개최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관

○ ('23. 10~11.) 제도 운영계획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 △외국인력 신규 도입분야 발굴 △숙련기능점수제 연간 쿼터 △우선도입분야 지정 등

○ ('23. 12.) 전문가 자문 및 최종 산정

※ 인구·경제 등 주요 분야 전문가 및 이민정책연구원 자문을 거쳐 신규 도입 분야 및 E74 취업비자 발급 규모 산정

○ ('24. 1.)「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시범운영(안) 발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추진절차

❶ 공급 부족 규모 분석 ▸ ❷ 외국인 유입 영향 분석 ▸ ❸ 도입 규모(총량) 일차적 산정 ▸ ❹ 의견수렴 (관계부처·전문가) ▸ ❺ 도입 규모 최종 산정

2. '24년도 추진 실적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정식 운영을 위한 고도화 추진

○ ('24. 5~12.) 제도 정식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계량분석 연구용역 실시

※ 수행기관 : 이민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최서리 박사)

○ ('24. 9.) 연구용역 관련 학술포럼 개최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및 이민정책연구원 공동주관

3. '25년도 추진계획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정식 운영

○ ('25. 1.) '25년 비자 발급규모 공표

○ ('25. 2~10.) 적정 취업비자 발급규모 산정 관련 정례 연구 실시

※ 실태조사 확대, 불법체류·범죄 위험도 분석모델 고도화 등

○ ('25.~) 제도 법제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 ('25. 12.) '26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안) 수립 및 발표

□ 소요예산 : 총 836백만 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0	836	836	0.0	
-국 비	▪ 일반회계	80	836	836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수립·공표 : 836백만 원

- 실태조사(246백만 원) + 총량 산출(105백만 원) + 통합데이터 풀, DB(485백만 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24년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24년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1회	1회	대외 발표
'24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25년도 비자 발급규모 산정 고도화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1건	1건	연구보고서
'25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25년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25년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1회		대외 발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219
담 당 자	5급 김명훈	이 메 일	mhkim2920@korea.kr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변화와 이민자 유입 영향 등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민자의 유입관리, 사회통합, 정착 및 정주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비자 체계 정비 추진

□ 과제 내용

○ 이민자 유입 및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비자 신규 도입

○ 산업 현장, 지역 수요 기반,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 등 맞춤형 비자 신설로 국익 및 지역 경제 발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선별적·체계적 비자제도 운영으로 국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력 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년~'17년)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조항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체계 정비

○ ('22. 9. / '22. 1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24. 1.)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사업 실시

○ ('24. 1.)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지침 등 정비

2. ’24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사업 실시(’24. 1.)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장기체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

□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24. 1.)

○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신설

3. ’25년도 추진계획

□ 민간수요 반영을 위한 ‘비자 제안제’ 도입 및 시범 운영

○ 경제·산업계 등 민간 및 관계부처의 비자 수요에 대한 정책 제안서 제출 및 검토절차 등 제도화 후 제도 시범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제도 신설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공문
’24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제도 신설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공문
’25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제안제 도입·시행	협의회 등 운영	1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1-1-3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24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행정정보 관리·연계를 체계화하고 분산된 정보의 융·복합으로 창출된 새로운 외국인 데이터를 활용, 보다 정밀한 국가 외국인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표준화된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안전한 외국인 신원확인 체계구축

○ **(외국인정보 연계)** 부처별로 외국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 자체 보유자료와 관계기관 간 공유정보, 공공데이터 등 제반 외국인 행정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21.7.)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2.5.)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완료 ('23.11.)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인프라 보강** (’24.5.~)

○ **(인프라보강)**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등 연계 서비스 확대 대비, 기존 노후화된 대외기관 연계 서버 및 장비(H/W)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스토리지(HW) 구입 등

○ **(개인정보보호)** 내부 개인정보 비식별화, 접근통제, 서버 보안 등을 위한 정보보안 소프트웨어(S/W) 도입 등

3. ’25년도 추진계획 (’24년 종료)

□ 종료사유

○ 종합플랫폼 구축(1차) 완료 및 해당 플랫폼 인프라 보강(2차)까지 완료하여 사업 종료, 해당 플랫폼 활용하여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예정

※ ‘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3년 플랫폼 구축(1차) ▸ ‘24년 인프라 보강(2차, 최종완료)

□ 소요예산 : **총 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079**	**492**	**0**	**△100.0**	
-국 비	▪ 일반회계	8,079	492	0	△10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해당없음)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보종합 플랫폼 구축	종합플랫폼 사업 완수	사업완수율 (%)	100%	100%	공문
’24	외국인정보종합 플랫폼 구축	인프라 보강	사업완수율 (%)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3
담 당 자	6급 김주현	이 메 일	juhyun34@korea.kr

1-1-1-4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된 반면, 외국인은 부처별 다른 표기 방식으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

□ 과제 내용

(가) ○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 정보를 기준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및 해당 근거 법령 마련

-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화된 기본인적정보를 요청기관에 종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안전한 외국인 동일인 확인 체계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기관 실무담당자 대상 1·2차 실무협의회 개최('22.9.20., 9.22.)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23.3.) 및 국회 제출('23.8.)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형사사법기관, 주요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법무부 (협업)

○ 추진절차 : 표준화 협의체 구성→ 출입국관리법상 법적 근거 마련→ 표준화 시범운영(종합플랫폼 활용) →표준화 연계 확대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기본인적정보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제22대 국회 의원입법(유상범 의원) 발의 ('24.7.)

○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1소위 회부 ('24.9.)

○ 국회 본회의 통과 ('24.11.), 개정안 공포 ('24.12.)

□ 관계기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연계 관련 업무 협의

○ 경찰청, 질병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시스템 연계 추진 ('24.상)

3. '25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후속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고 (1/4 분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4 분기)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연계 확대 지속 추진

○ 범정부 협의체 기관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등 연계기관 확대 (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마련 및 국회제출	완수율(%)	100%	100%	공문
'24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관계부처와 외국인기본인적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연계율(%)	100%	100%	공문
'25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관계부처와 외국인기본인적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연계율(%)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2
담 당 자	5급 송병희	이 메 일	izntbad1@korea.kr

1-1-1-5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앙부처・지자체의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외국인정책’ 추진 지원

□ 과제 내용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외국인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체계를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구축・운영 개시 (’24. 1.)

○ 2024년도 자체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내부 보고 (’24. 3.)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4. 5.~ ’24. 11.)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 활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신규 데이터 분석 수요 취합 (’24. 9.)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추진절차 : 빅데이터팀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 관계기관

2. ’24년도 추진 실적

□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지원 (’24. 1. ~)

○ 내・외부 기관에서 의뢰한 총 226건의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요청을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통해 처리 (’24. 1. ~ ’24. 12.)

○ 24년도 자체 분석과제로 △E-7-4 비자 운영현황 분석・시각화, △국민 해외출국 현황 분석・시각화, △외국인 차량등록 현황 분석 등 수행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 · 시각화 서비스 대국민 공개 (’24.3.)

○ ①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②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③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④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등 총 5종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4.5.)

○ 외부 기관의 데이터 분석・활용 선진사례, 법・제도 보완, 신규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추진 목표, 전략, 장단기 과제 등의 계획 수립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개방 및 지원 확대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추가개발 (1/4분기)

○ 광역지자체 외국인 전담부서 등 대상 플랫폼 개방 확대 (2/4분기)

□ 관계부처 외국인행정 데이터 연계 확대 추진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자(농어업경영체) 정보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행정 데이터 확보 추진 (4/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관계부처 분석의뢰 회신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분석의뢰 회신	회신 건 수	150건	226건	플랫폼
’25	관계부처 분석의뢰 회신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분석의뢰 회신	회신 건 수	180건*		플랫폼

* 매년(~’27)전년 대비 20% 상향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3
담 당 자	6급 김주현	이 메 일	juhyun34@korea.kr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증 심사를 제외한 신청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재외공관의 업무적체 해소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사증 접수량 대비 심사인력이 부족한 공관 또는 주재국 여건 상 민원인 대기가 곤란한 공관 등을 중심으로 비자신청센터 설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 9.) 비자신청센터 시범운영 개시 (광저우, 칭다오)

○ ('18. 9 ~ '19. 7.) 중국(3개소), 베트남(2개소), 인니(1개소) 비자신청센터 개소

○ ('19. 9.)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을 위한 법무부-IOM 간 MOU 체결

○ ('20. 3 ~ '21. 1.)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 개시

○ ('22. 9.)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을 위한 법무부-IOM 간 MOU 갱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교부(협조)

○ 추진절차 : 개소 지역 선정 → 센터 운영기관 선정 → 비자신청센터 개소

2. '24년도 추진 실적

□ 비자신청센터 신규 수요 검토

○ 전세계 대한민국 공관 대상 비자신청센터 설치 수요조사 실시('24. 6.)

○ 수요조사서 제출 공관의 비자신청 접수현황 등 설치 필요성 검토('24. 7.~)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

○ 중국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24. 9.)

3. '25년도 추진계획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관리('25~)

○ 비자신청센터 설치 필요성 지속 검토

○ 비자신청센터 신규 운영기관 지정, 기존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25. 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설	3개	7개	관련 문서
'24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규수요 검토	1회	1회	관련 문서
'25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설·연장	1개 이상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1-3-1	해외기술인재트랙 구축 ['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민 희망자의 자격증·경력·학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산업계에 필요한 해외 우수기술인재(IT, 인공지능(AI), 반도체 등)를 유치하는 트랙 마련

□ 과제 내용

○ 산업계에 필요한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거주(F-2) 비자 부여

-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동반 체류 지원

※ 첨단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자격증·경력·학력 등 점수제 평가를 통하여 검증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2. 점수제 우수인재(F-2-7) 관련 지침 등 정비

-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IT, 나노, 디지털전자 등 유망 산업 분야와 과학기술 연구분야 잠재적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내 정착 유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지침 등 정비

2. '24년도 추진 실적 ('23년 종료)

3. '25년도 추진계획 ('23년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	우수인재 확보 지원	제도개선	1회	1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1-3-2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24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비자제도 마련

□ 과제 내용

○ 유학생이 졸업 후 구인난 심각한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유학-취업-정주' 단계적 비자 승급 제도 마련

-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졸업생의 구직·인턴 기간을 확대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2. '24년도 추진 실적

○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24. 1. 11.)

※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 주요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24. 4. 8. ~ 19.)

-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요 대학 실태조사

○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발표('24. 9. 26.)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24. 하반기 예정)

3. ’25년도 추진계획(해당 없음)

□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 향후 졸업 유학생 취업 현황 모니터링 및 취업 가능 분야 검토 지속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추진전략 수립	1건	1건	관련 보도자료
’24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취업 연계트랙 신설	지침 개정	2건	2건	관련 보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1-3-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기능인력을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자체계 구축 필요

□ 과제 내용

○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경력·학력·연령·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7. 7.)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입안 보고

○ ('23. 9. 25.)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 ('24. 2. 1.) '24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 개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4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 개시('24. 2. 1.~ '24. 12. 20.)

2. '24년도 추진 실적

□ 과제 내용

○ '24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 개시

- 연간 쿼터 '23년도와 동일한 35,000명 규모로 운영

- 숙련기능인력 근무처 변경 요건 완화('24. 2.)

- 전환 제한 대상 중 불법체류 경력자 요건 완화('24. 5.)

- 중소벤처기업부에 쿼터 추천권 부여('24. 5.)

- 업종별·지역별 요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24. 4분기)

3. '25년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25년도 숙련기능인력 제도 운영 개시('25. 1분기)

○ 업종별·지역별 요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25. 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4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5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25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5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2-1-1	[국내체류] 우수인재 영주 · 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우수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KAIST 등 학계의 요구로 '21. 12월 시범 도입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 과제 내용

○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및 유입 촉진 등 활성화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대상자는 취업 등 조건 없이 총장추천서만으로 거주(F-2-7S) 자격 부여 △3년 후 점수 요건 충족* 시 영주(F-5-S1) 자격 부여 △연구실적 우수 시 특별귀화 가능

* 학력·연구경력·실적 등의 평가항목 중 90점 이상(총 배점 200점) 획득 필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카이스트-법무부" 우수인재와 소통 간담회 개최('21.10.)

○ 패스트트랙 제도 시범 시행('21.12.)

○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마련('22.12.) 및 제도 본격 시행('23.1.)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 예산

2. '24년도 추진 실적 ('23년 종료)

3. ’25년도 추진계획 (’23년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패스트트랙 제도 유입 촉진 및 홍보 활성화	설명회 개최	2회	2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2-1-3	[글로벌최상위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핵심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잠재적 우수 인재 발굴 등 핵심인재 선점 전력 마련

□ 과제 내용

○ 각 분야별(산업계, 벤처·창업계, 연구계) 집중 유치 대상(Top-Tier급)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활발한 취·창업, 학업을 전면 허용산업부,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외국인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첨단산업 우수인재를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 추진절차 : 관련 지침 등 정비

2. '24년도 추진 실적

□ 첨단 산업분야 고급인재를 위한 비자 신설 추진('24. 4분기)

○ 구체적 대상 선정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부 등 업무협의

3. '25년도 추진계획

□ 첨단 학술, 연구, 창업 등 분야별 해외인재 비자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속 ('25. 1~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	우수인재 확보 지원	제도개선	1회	1회	관련공문
'25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	우수인재 확보 지원	제도개선	1회	-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김종승	이 메 일	kjs5676@hanmail.net

1-2-1-4	[글로벌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신설

□ 과제 내용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 (활동범위) 비자 발급 요건 충족 시, 기존 허용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

※ 단, 단순노무활동 및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경우 등 제외

- (고소득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고소득자

-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종사 예정인 외국인(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월)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및 보도자료 배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보도자료 배포 → 시행

2. ’24년도 추진 실적 (’23년 종료과제)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23. 1월)

3. ’25년도 추진계획 (’23년 종료과제)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 신설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1회	1회	대외 발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1-6	가칭청년드림비자 신설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국내 문화 체험·취업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한(知韓)그룹 양성

□ 과제 내용

○ 가칭청년드림비자 신설

- (참가 대상)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반도체, 자동차 등) 중 시범실시 대상 국가 선정

- (체류 자격) 문화체험, 어학연수, 취업 활동 등이 가능한 체류자격 신설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4. 11.) 관심 표명 3개 지자체(경북, 경남, 전북) 대상으로 청년드림비자 제도 소개 및 건의사항 청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자체

○ 추진절차 : 시범 지자체 공모(법무부) → 참가자 연수·프로그램 설계(지자체) → 사업 지자체 및 참여 대상국 확정(법무부)

2. '24년도 추진 실적

□ '25년 신규과제

3. ’25년도 추진계획

□ 향후 추진 일정

○ (’25. 上) 참여 희망 지자체와 연수·취업 프로그램 마련 등 실무 논의

○ (’25. 下) 주한 외국공관 참여의사 타진 등 실무 논의 및 모집 공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청년드림비자 신설 추진	잠재력이 높은 해외 청년 대상 지한(知韓) 그룹 양성	참여 희망 지자체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업무 협의	2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안재필	이메일	anjp6854@korea.kr

1-2-2-1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 확대 공급 추진

□ 과제 내용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 (쿼터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
- (K-point E74 도입) 기존 점수제의 11개 이상 항목을 5개로 혁신적 간소화
- (한국어능력 강화) 스스로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어 소통력 강화
- (장기근속 우대) 동일 근무처 장기근속 가점부여로 숙련도 향상 스스로 노력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6. 28.)** 법무부장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3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 예정 발표('22년 : 2,000명 → '23년 : 35,000명)

○ **('23. 7.)** △관계부처 신속 협의체 △광역지자체 서면 실무 협의 △경제단체·연구기관 간담회를 통해 업종별 인력 부족 상황 및 건의사항 등 청취

○ **('23. 9. 25. ~ 12. 20.)**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 **('24. 2. 1.)** '24년도 K-point E74 운영 개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23년 종료과제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23. 9. 25.)

3. ’25년도 추진계획(’23년 종료과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2-2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근로자 공급부족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공급 방안 필요

□ 과제 내용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 신설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제조업, 뿌리산업, 건설업, 농어업, 조선업 분야 별도 쿼터 운영 중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 '23년도 숙련기능인력(E-7-4)연간 쿼터 확대 발표(2000명→5000명)

○ ('23. 9. 25.) 숙련기능인력(E-7-4)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

- (쿼터 확대) '22년 2,000명이었던 쿼터를 35,000명으로 확대

○ ('24. 2. 1.) '24년도 K-point E74 운영 개시

- (쿼터 규모) 전년도와 동일한 35,000명 규모로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4년도 K-point E74 운영 개시

2. '24년도 추진 실적

□ 과제 내용

○ 숙련기능인력 쿼터 전년도와 동일한 35,000명 규모로 운영

3. ’25년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25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 개시(’25. 1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4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5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25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5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2-3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비자제도 마련

□ 과제 내용

○ 유학생이 졸업 후 구인난 심각한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유학-취업-정주' 단계적 비자 승급 제도 마련

-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졸업생의 구직·인턴 기간을 확대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2. '24년도 추진 실적

○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24. 1. 11.)

※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 주요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24. 4. 8. ~ 19.)

-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요 대학 실태조사

○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발표('24. 9. 26.)

○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24, 시행 '25.1.1.)

3. ’25년도 추진계획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25. 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추진전략 수립	1건	1건	관련 보도자료
’24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취업 연계트랙 신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건	1건	개정공고
’25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지침 개정	1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안재필	이 메 일	anjp6854@korea.kr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저출생·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공급에 한계가 있는 요양보호,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 (요양보호사 부족 전망, 건보연구원) '25년(3천7백명)→ '26년(4만명)→ '27년(7만9천명)

□ 과제 내용

○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 도입 방안 추진

- 관계기관(복지부, KOICA)과 협업을 통해 해외 요양보호사 도입 방안 마련

○ 가사·육아 분야 외국인력 활용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가사인력 활용 방안 지속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 도입 검토

- '22. 12. 저고위,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발표

  ※ 추진과제에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포함

- '23. 6.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반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회의,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에 대한요양보호사 활용 방안 논의

○ 가사·육아 분야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 검토

- '24. 4. 대통령,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검토 지시

- '24. 6. 저고위,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대응 방안 발표'

  ※ 유학생,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등에 가사·육아 활동 허용 시범운영 등 포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

○ 추진절차 : 관계부처(요양보호 분야 : 복지부·외교부, 가사돌봄 분야 : 고용부·여가부 등)와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세부방안 논의 →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활용

2. '24년도 추진 실적

□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추진

○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확대

- 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하고 졸업 유학생(D-10)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허용

- '24. 6.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요양보호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동포(H-2)에게 재외동포(F-4)로 자격 변경 허용

- '24. 7.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비자(E-7) 발급

※ 법무부,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및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 개정)

※ 복지부, 재학 중인 유학생(D-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확대 방안 추진

- '24. 6.~8. 시범운영(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및 지자체 간담회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 '24. 9.~10. 시범운영 희망 파악을 위한 지자체 수요조사

- '24. 11. 세부운영(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별 개별 협의

3. ‘25년도 추진계획

□ 돌봄인력 도입 확대

○ ODA를 활용한 요양보호사 해외 도입 방안 마련

- 한국어능력, 보건 전문지식 등 자격을 갖춘 해외 요양보호사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복지부·외교부, KOICA)과 협력 추진

○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확대‘ 안정적 시범운영

-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범운영 실시

□ 소요예산 : **총 3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0	300	300%	
-국 비	▪일반회계	0	0	300	300%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관계부처 논의 등	2회	2회	회의실적
’24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확대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 확대를 위한 지침 개정	1회	1회	지침개정 실적
’25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확대	국내 체류외국인 활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실시	1회		조사 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인우, 6급 이혜미	이 메 일	kiw1206@korea.kr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어업 종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절근로 성실 참여 및 이탈 방지

□ 과제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절근로 참여 횟수, 기간 등 고려하여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한 장기 체류자격 인센티브 부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단기취업(C-4, 90일))

○ 2019. 12. 계절근로(E-8, 5개월) 체류자격 신설

○ 2022. 9.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 2023. 5.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상한(E-8, 5+3개월) 확대 추진 발표

○ 2023.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장기 체류자격 전환 요건 설정 → 관련 지침 개정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장기·숙련 근로자 비자 우대 제공 시범운영(안) 마련

○ 전자비자, 복수비자 등 비자발급 우대(편의)를 통해 성실·숙련근로자 근로 의욕 고취

3. ’25년도 추진계획

□ 성실·숙련 근로자 비자 우대 제공

○ 숙련성을 갖춘 근로자에게 전자비자 발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실 참여 유도 및 절차 간소화 추진

- 지자체 행정 부담 완화, 지자체 관리 능력 제고 유도를 위해 계절근로 관리 우수 지자체에 시범 적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계절근로자 성실 근로자의 장기 체류자격 전환 인센티브 부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성실 계절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제도 개선	1회	1회	관련 문서 등
’24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성실 계절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제도 개선	1회	1회	관련 문서 등
’25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성실 계절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제도 개선	1회		관련 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87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산업계의 내국인 구인난 심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춰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분야별 외국인력 도입의 탄력성 등 제고

□ 과제 내용

○ 외국인력 선발 방식 확대 및 요건 강화

- (국내) 유학생, 기타 연수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적극 활용

- (해외)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의 해외선발 요건 강화

※ 연령·학력·기능 등의 요건을 적용한 점수제 강화 등

○ 외국인력 도입 필요 분야 지속 발굴

○ 기타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비자 제도개선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8. 2022년도 비전문취업(E-9) 자격 도입규모 등 확대

○ 2022. 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정부 합동)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추진

○ 도입규모 및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24년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도입규모를 12만 명에서 16만 5천 명으로 확대

- 비전문취업(E-9) 자격 업종별 허용기준 확대

※ 비전문취업(E-9) 자격 서비스업 중 전국 한식업 및 외국식업(중식, 일식, 서양식 등) 중 업력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직종으로 허용 범위 확대(’24. 7.)

○ 허용업종 및 적용기업 확대

- 비전문취업(E-9) 자격 허용 대상에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 허용(’24. 10.)

○ 업종별 제도개선 등 기타 추진사항

- 단순노무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 제한 한시적 완화 방안 시행(’24. 4.)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 초청 시 고용 허용인원에서 해당 체류자격 이탈자 수 미공제(’24. 4. 1. ~ ’25. 3. 31.)

3. ’25년도 추진계획

□ 2025년도 1~4분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 출입국관리법령,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개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을 위한 비자정보와 부처별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산업체 구인난 해소 지원

□ 과제 내용

○ 비자 및 부처별 취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유학생이 졸업 후 변경 가능한 비자 정보 및 부처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에서 취업과 연계한 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부스 운영 등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 추진절차

- 부처별 취업지원제도 현황 파악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산업부 KOTRA 주관)' 상담부스 운영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부스 운영('24. 8.)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부스 운영(‘25. 3분기)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개편(‘25. 하)

□ 소요예산 : **총 36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68	100	
-국 비	▪ 일반회계			368	1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368백만원)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개편 ISMP = 368,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채용 박람회 비자 상담 지원	비자상담 부스 운영	2개	100%	관련 문서
’24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채용 박람회 비자 상담 지원	비자상담 부스 운영	2개	100%	관련 문서
’25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정보 제공 지원	유학생 채용박람회 비자상담 부스 운영	2개		관련 문서
			유학생정보시스템 개편 사업자 선정	1회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안재필	이 메 일	anjp6854@korea.kr

1-2-5-2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24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체류허가 혜택에 부합하는 투자이민 기준 등 조정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촉진을 위해 관련 체류허가 제도 조정

□ 과제 내용

○ 투자이민 투자금 도입기준 명확화 및 투자금 출처 심사 강화를 통해 건전한 투자이민제 정착

○ 우수인재 기술창업 요건 완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2.)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 ('13. 5.)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

○ ('21. 2.)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및 투자이민제도 개선방향 논의

○ ('23. 5. ~ 6.)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 변경(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및 기준금액 상향,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상향

○ ('23. 12.)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거주·영주 자격 부여 요건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정, 지침 개정

2. ’24년도 추진 실적

□ 투자이민협의회 규정(법무부 훈령 제1239호) 개정

○ 투자이민제 관련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비율 상향(’24. 11월)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개정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후 시행기간 내에 실적저조, 투기과열 등의 사유로 지정 해제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24. 11월)

□ 기술창업 관련 지침 개정

○ 우수인재에 대한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 완화 (’24. 11월)

3. ’25년도 추진계획 (’24년 종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투자이민 정책 제도개선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인의 유입 촉진	관련 지침 개정	2건	2건	관련 문서
’24	투자이민 정책 제도개선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인의 유입 촉진	관련 규정·지침 개선	2건	3건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3-1-1	지역특화형비자 정규사업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과제 내용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장기체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 필요직군,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을 추천

-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취업활동 제한 완화*

  * 현재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되어있는 단순 노무(53개 직업)를 허용

○ 시범사업 운영성과 분석 및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후 정규사업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6.)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특화비자 도입 국정핵심과제 세부과제로 선정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핵심과제 지역특화비자 신설 포함

○ ('22. 7.) 대통령 지시사항 지역특화비자 도입 지시

○ ('22. 10.~'23. 10.) 시범사업 실시

○ ('23. 12.)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 지자체 공모

○ ('24. 1.)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 희망 지자체 공모 → 사업 지자체 선정 및 인원배정 → 사업 시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2024년도 참여 지자체 및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정식 시행

○ ('24. 1.) 사업참여 신청한 인구감소지역 중 사업추진 필요성, 운영계획 적절성, 사회통합계획 등을 기준으로 사업지역 선정

※ (시범사업) '22.10~'23.10. 28개 지자체에 1,500명 배정 / 1,467명 추천(97.8%) → (정식사업) '24년 66개 지자체 3,291명 배정

○ ('24. 2., '24. 8.) 선정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추천절차 등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3. '25년도 추진계획

○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으로 지역특화형비자 대상지역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 다양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4년 사업 계획 수립	1회	1회	관련 공문
'24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5년 사업 계획 수립	1회		관련 공문
'25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6년 사업 지침 개정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364
담 당 자	5급 이재인	이 메 일	leeji804@korea.kr

1-3-1-2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전담기관 설치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특화, 광역 비자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 수요 증대

- 이민정책 전문조직, 예산 등이 부족한 지자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과제 내용

○ (지역기반 이민정책 강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기획·집행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 및 지역사회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등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역기반 이민정책 지원) 계절근로,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 유학생 유치, 외국인 정주화 등 주요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근거 및 이민정책 전문가 지자체 파견 등 지원방안 구체화

○ (공적지원 전문기관) 이민정책 관련 전문성과 조직,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이민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지원 전문기관 설립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설립방안 및 타당성 검토 → 연구용역 수행 → 관련 법령 제정 → 예산확보 → 설계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2. ’24년도 추진 실적

□ (’24. 7.~12.)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실시

※ 수행기관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권채리 교수)

□ (’24. 12.) (가칭)「지역이민특별법」 제정안 마련

3. ’25년도 추진계획

○ (’25. 上)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지역이민특별법」 제정 추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연구용역 실시	1회	1회	연구보고서
’25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가칭)「지역이민특별법」 제정 입안보고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364
담 당 자	5급 이재인	이 메 일	leeji804@korea.kr

1-3-1-5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

□ 과제 내용

○ **(추진 방향)** 현행 출입국관리법 체계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실시

○ **(대상 체류자격)** 유학(D-2), 특정활동(E-7)

○ **(기간)** 2년('25 ~ '26)

○ **(절차)**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의 요건을 마련하면, 광역지자체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및 쿼터 확정 등 시행 여부 결정

○ **(업무처리)** 광역지자체가 광역형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는 추천서와 기타 요건을 확인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4. 7. 25. 행안부 주관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 '24. 8. 13. 법무부차관 주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

○ '24. 9. 26.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과제로 '광역형 비자' 반영

○ '24. 12. 2.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법무부)광역형 비자 요건 마련 → (광역지자체)사업계획서 제출
→ (법무부)지자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위원회 상정
→ (위원회)광역형 비자 시행여부 등 결정

2. '24년도 추진 실적

□ '25년 신규과제

3. '25년도 추진계획

□ ('25. 3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도입으로 지역활력 제고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등 시범사업 실시	1회		관련 공문 및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364
담 당 자	5급 이재인	이 메 일	leeji804@korea.kr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이민정책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기반 이민정책 필요성 강화

○ 지자체 업무량 증가 대응,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한 정책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 과제 내용

○ 지자체 단위 이민정책 실행력 확보 및 지방 출입국관서와 연계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이민자 거주 지자체에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04.)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 지자체 의견제시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23.07.) "법무부-광역지자체 이민정책 협력·추진 세미나"에서 일부 지자체가 법무부 등 중앙부처의 협력 요청

○ ('23.10.)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국가정책수요 의견으로 제출 (법무부→행정안전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행정안전부(협업)

○ 추진절차 : 관계기관(지자체, 행안부 등) 의견 청취 →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및 안건 협의·논의 → 법적 근거 마련

2. ’24년도 추진 실적

□ 국가정책수요 의견 반영(‘24.1.)

○ 행정안전부의 ‘2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지자체 이민정책 강화” 내용으로 국가정책수요 의견 반영(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연중)

○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이민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이민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

※ 전남 인구청년이민국(‘24.2.), 전북 외국인국제정책과(’24.5.),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24.7.),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24.7.), 경기도 이민사회국(’24.7.), 충북 외국인정책추진단(‘24.7.), 충남 인구전략국(’24.10.) 신설 등

□ 정책연구용역 실시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

- 지역기반 이민정책 거버넌스(전담조직) 구축 방향 제시 및 중앙-지방 간 이민정책 협력 방안 제시

※ 수행기관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오정은 교수)

3. ’25년도 추진계획

□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방 간 이민정책 협력 및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방안 검토

□ 관계기관(지자체, 행안부 등) 실무자 협의 및 회의 개최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자 협의 지속(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관계기관 회의 개최 등 협의	1회	1회	결과보고서
‘24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연구용역 수행	1건	1건	연구보고서
‘25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관계기관 회의 개최 등 협의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민정책에 관한 현안 논의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안건 발굴 및 정책 논의 필요

□ 과제 내용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시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과제 안건 발굴과 의견을 제시할 기회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0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시 계절근로자 배정, 지역특화비자 운영 등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논의

* 국무총리 주재, 법무부 등 5개 부처 참석

○ ('22.09.) 운영세칙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22.11.)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신설 및 구성(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여가부, 농식품부, 경찰청,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이민정책에 관한 지역 수요 파악 → 협업 및 교류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 등 지자체 참여 회의 개최 → 안건 논의 및 정책화 가능성 검토

2. ’24년도 추진 실적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5.28.(화) 14:00~16:50,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주재), 4개 중앙부처(법무부, 행안부, 교육부, 농식품부) 및 15개 광역자치단체(과장급), 시도지사협의회 등 총 46명

○ 내용 : 6개 광역자치단체(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남) 제출 안건(18건)에 대한 소관부처 검토결과 발표 및 참석자 토론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8.13.(화) 14:00~16:00, 법무부 대회의실(7층)

○ 참석 : 법무부차관(주재),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등 법무부, 충북·충남·경북 부지사,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지자체 국장급

○ 내용 : 지자체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등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이행방안, 지자체 의견수렴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연석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8.23.(금) 14:00~17:20, 법무부 대회의실(7층)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국적·통합정책단장(주재), 14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과장급) 등 총 60명

○ 내용 : 이민정책 관련 주요 현안 과제(5건)에 대한 발표 후 참석부처 의견수렴 및 종합 토론

□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대표 참여 법제화 추진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지자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법사위소속 유상범의원 대표 발의(’24.9.27.)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정책 관련 현안 논의 및 의사결정 시 지자체 참여 활성화(연중)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지자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지역 이민정책 관련 논의를 위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지자체 참여 횟수	1	1	회의 결과보고서
’24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지자체 참여 횟수	2	3	회의 결과보고서
‘25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지자체 참여 횟수	2		회의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간 교류·협력 강화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

- 체류외국인 수의 지속 증가('10년 126만명 ↔ '24년 264만명)와 달리 지자체 공무원의 외국인정책(체류·사증·사회통합·귀화 등)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해소 필요

□ 과제 내용

○ (방문 교육)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관련 수요*가 지역마다 달라 지자체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연구원 등과 연계한 지역 이민정책 거버넌스 논의 등 협업 필요

*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관리, 주민과 갈등, 외국인 가사관리인, 우수인재(유학생) 유치 등

(비수도권)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등 지역소멸 대응, 외국인 유학생 정주화 방안 등

○ (정책 협업)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이민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4.09.) 법무부-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최초 개최

- '15년부터 광역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대상으로 연1회 1박2일 교육 실시

○ ('22.05.)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4회 실시(1회: 경기·강원권, 2회: 경상권, 3회: 전라권, 4회: 충청권)

○ ('23.09.)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5회 실시(1회: 수도권・강원, 2회: 경상권, 3회: 난민정책, 4회: 계절근로・지역특화, 5회: 충청・전라권)

※ 지자체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수요가 높은 주제별(계절근로 등) 워크숍을 전국 단위로 실시

○ ('24.12.)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6회 실시(1회: 서울시, 2회: 경북・강원권, 3회: 전북・전남권, 4회: 부산・경남권, 5회: 충청권, 6회: 경기・인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추진절차 : 법무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위탁운영업체 선정 → 계약 체결 → 위탁업체에서 권역별 장소 섭외 등 교육 준비 → 권역별 교육 실시(개최) → 지자체 외국인 관련 업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중앙부처 지자체 담당자 간 업무협력・교류 등 강화 → 확대 시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6개 권역 방문 개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총 609명 참석

회차	개최일자	개최장소	개최 권역	참석인원
제1회	6. 13.(1일)	서울특별시청	서울	104명
제2회	6. 27. ~ 28.(1박2일)	경북 문경시	강원, 대구, 경북	124명
제3회	9. 26. ~ 27.(1박2일)	전남 여수시	광주, 제주, 전북・전남	129명
제4회	10. 31. ~ 11. 1.(1박2일)	경남 밀양시	부산, 울산, 경남	79명
제5회	11. 21. ~ 22.(1박2일)	충북 증평군	대전, 세종, 충북・충남	87명
제6회	12. 4.(1일)	경기인재개발원	경기, 인천	86명

3. ’25년도 추진계획

□ 권역별 방문 개최 및 지자체 교육수요가 높은 출입국정책(사증・체류), 외국인력(계절근로・지역특화비자) 정책 등에 대한 발표・토론 강화

○ (교육컨텐츠 개선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간 소그룹 토론시간 등 확대, 빅데이터・통계 등을 활용한 지자체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자문・지원, 지역 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연구성과 공유 등

- (1분기) 「’25년도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사업 입찰 공고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
- (2분기) 권역별 개최(제1회~제2회), 서울, 강원권
- (3분기) 권역별 개최(제3회~제4회), 경상권, 전라권
- (4분기) 권역별 개최(제5회~제6회), 충청권, 경기・인천

□ 소요예산 : **충 3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8.3	48.3	38.3	△20.7	
-국 비	▪ 일반회계	48.3	48.3	38.3	△20.7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38,276천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진행 및 교재 발간 6,379천원 x 6회 = 38,276,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인원	270명	457명	참석자 수
'24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인원	297명	609명	참석자 수
'25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인원	327명		참석자 수

* 광역(17개) 및 기초지자체(228개) 참석자 수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10% 상향 조정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1
담 당 자	7급 윤동운	이 메 일	headrock999@korea.kr

1-3-2-4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앙부처-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통한 안정적인 계절근로 제도 운영

□ 과제 내용

○ 중앙부처・지자체・농어가・계절근로자 등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전담 업무 플랫폼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

○ 2017.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2022. 9.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 2023. 12.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확보

○ 2024. 8.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완료 및 '25년 구축 예산 확보(정부안 25억2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지자체 의견 수렴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2. '24년도 추진 실적

□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완료

※ '25년 구축 예산 확보(정부안 25억2백만원)

3. ’25년도 추진계획

□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 소요예산 : 총 2,502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10	2,502	2,174.5	
-국 비	▪ 일반회계	0	110	2,502	2,174.5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2,502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	110백만원	110백만원	관련 공문 등
’24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통합인력관리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회	1회	관련 공문 등
’25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87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자체의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통계·데이터 분석 수요에 대응

○ 중앙·지방 간 데이터 기반의 이민정책 협력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통한 분석 및 제공 지원

- (시각화 자료) GIS 지도를 통해, 행정구역별 국민 대비 외국인 거주 비율 등과 국적별·체류자격별·연령대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대시보드 제공

- (데이터셋) 지자체별 국적, 체류자격, 연령별 외국인의 수 등 기초 통계·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 지자체·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하여, 외국인력 수요예측 등 전문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공유 및 고도화 추진

□ 추진 경과

○ 법무부 지역특화비자 참여 지자체 대상 데이터분석 지원 개시('22.7.)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지자체 이용확대 검토 보고 ('24.6.)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24.9.)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20개 지자체 대상 시범운영 개시 ('24.1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추진절차 : 지자체 요청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분석지원

2. '24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데이터분석 지원

○ 광역 5개, 기초 5개 지자체별 외국인 거주현황 분석 제공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시범운영 개시 및 분석 지원

○ 지자체별 외국인 거주 현황 데이터 셋 (지자체 읍면동 단위, ①국적별·②체류자격별·③연령별 외국인 수), 시각화 대시보드 (소속 지자체 읍면동 단위, ①국민·외국인현황, ②체류 외국인 현황) 개발('24.상.)

○ 다도협 소속 지자체 공무인 대상 플랫폼 개방('24.10. ~ 12.)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이용 지자체 확대

○ 다도협 지자체 시범 개방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보완 (1/4분기)

○ 광역지자체 이민전담 부서 등으로 추가 개방 확대 검토 (2/4분기)

□ 지자체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현황('23~'24년) 분석·시각화

○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등을 타 지자체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시각화하여 하이코리아(hikorea.go.kr) 누리집 등재 (3/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100%	공문
'24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100%	공문
'25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3
담 당 자	6급 김주현	이 메 일	juhyun34@korea.kr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교육·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대외기관 및 이민자의 상담창구를 이민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단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사회통합정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단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7.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 설치

○ '11. ~ 현재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매년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2. '24년도 추진 실적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24. 4. 16. ~ 4.17.)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온라인 간담회 개최('24. 10.)

3. ‘25년도 추진계획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간담회) 개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개최횟수	1회	1회	결과보고서
’24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개최횟수	2회	2회	결과보고서
’25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개최횟수	2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24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 외국인주민 대상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요 서비스 제공자인 지자체 공무원에게 최신 정보(외국인관련 정책 등)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성 보장 필요

□ 과제 내용

○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자들의 직무 효율성 제고 및 지역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용 외국인업무 지침서」 제작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0. 행안부, 지자체(김포시, 시흥시 등)과 대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24. 1. 「지자체 공무원용 외국인업무 지침서」 책자 발간

○ '24. 3. 「지자체 공무원용 외국인업무 지침서」 공개본 제작(PDF)하여 법무부, 하이코리아 등 웹게시를 통한 대국민 공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지자체

2. '24년도 추진 실적

□ 「지자체 공무원용 외국인업무 지침서」 책자 발간 및 배포('24. 1.)

※ 전국 138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1,200권 배포

3. ‘25년도 추진계획

□ 해당없음 (과제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지자체공무원용 외국인업무지침서 발간	지자체공무원 직무전문성 강화	발간횟수	1회	1회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한 외래 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연중)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등 개선

※ 다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2개→8개)('23. 4.) ,단체 신청 가능 인원 확대('23. 5.), K-ETA 허가서 유효기간 확대('23. 7.), 청소년(17세 이하)·고령자(65세 이상) 의무 적용 대상 제외('23. 7.)

○ ('23. 5.~ 8.)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도 및 시스템 개선(상시)

- '25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계획 수립(1/4) 및 수행(2/4~4/4)

2. ’24년도 추진 실적

□ 이용자 편의 제고

○ 입국목적 기재란에 ‘관광(기업 인센티브)’ 항목 신설(’24. 3.)

- 기업이 직원에 포상 성격으로 제공하는 관광목적 신청자의 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 K-ETA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유형화 및 키워드 검색 기능 신설(’24. 5.)

○ 2024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1차) 사업 완료

- 단체관광객 신청 편의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 K-ETA 신청 시 입력 편의를 위한 화면 개선

- 여권 판독 기능 개선(OCR, NFC)

- 공용어 중심의 다국어 확대(러시아어, 독일어)

※ ’24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은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3-1-2)」 과제와 병합 추진함

3. ’25년도 추진계획

□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상시 검토 및 추진

□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3-1-2)」 과제와 병합 추진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수행(’25년)

- 사업 계획 수립(1/4) 및 수행(2/4~4/4)

※ 조달청 입찰 공고(’25. 4.) → 업체선정 및 사업수행 (’25. 5.~12.)

□ 소요예산 : 총 3억 5천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45	356	356	0.0	
-국 비	▪ 일반회계	245	356	356	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사항 이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24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25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수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73
담 당 자	7급 김은정	이 메 일	zamarin@korea.kr

1-4-1-4	단체전자비자 제도 확대 ['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단체관광 비자제도 개선

□ 과제 내용

○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신청 대상 범위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6. 3. 중국 단체전자사증 전면 시행

○ '19. 6.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업인센티브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대상 단체전자사증 시행

○ '23. 6.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행('23. 6.)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전파

2. '24년도 추진 실적 ('23년 종료)

□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 '23. 6. 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완료

3. '25년도 추진계획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단체전자비자 제도 확대	단체전자비자 제도개선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 당 자	5급 김종승	이 메 일	kjs5676@hanmail.net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동남아 단체전자비자 신청대상 범위 확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확대 등에 따른 정책 대상자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과제 내용

○ 방한 관광객 단체전자비자 신속 발급을 위한 현재 서울청 전자민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명칭변경 및 확대·개편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 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개소

○ ('16.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직제 반영

○ ('19.1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정식 직제 확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소요정원 요구서 제출 → 검토 및 부처협의(행안부) → 예산 협의 및 확정(기재부) → 예산 정부안 국회 심의·의결

2. '24년도 추진 실적 ('23년 종료)

□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3. '25년도 추진계획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신속한 단체전자사증 발급	명칭변경 및 인력 확충	직제 반영 여부	직제 반영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전화번호	02-2110-4012
담 당 자	5급 옥효재	이 메 일	hyojae12@korea.kr

1-4-2-1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K-컬처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K-컬처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 신설

□ 과제 내용

○ (가칭)K-컬처 비자 신설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0.)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입안

○ ('22. 12.) 국무총리실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지시(국무회의)

○ ('23. 3.) K-컬처 연습생 대상 생활환경 현장 점검 실시

○ ('23. 12.)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내 K-컬처 융합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일환으로 K-컬처 연수비자 지정

○ ('24. 3.) 유관 부처(문체부) 실무자 협의

○ ('24. 8.) 유관 부처(문체부)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 논의

○ ('24. 10.) 유관 부처 및 이해관계자(초청기관) 참석 간담회 예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문체부(협조)

○ 추진절차 : 법무부-문체부 간 협의를 거쳐 세부 초청대상 및 기준 수립 → 관련 지침 신설

2. ’24년도 추진 실적

□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

○ 관계 부처(문체부) 담당자 실무 회의 2회 진행 (’24. 3월, 8월)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이해관계자(초청기관) 참석 간담회 진행(’24. 10월)

3. ’25년도 추진계획

□ 체류자격 신설 추진

○ K-컬처 연수비자 체류자격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문체부)와의 업무 협조 및 이해관계자(초청기관)와의 업무협의(’25년 2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가칭)K-컬처 비자 신설 추진	K-컬처 영향력 확대 및 문화예술산업 발전 도모	협조부처와의 업무협의 등	2건	2건	관련 문서
’24	(가칭)K-컬처 비자 신설 추진	K-컬처 영향력 확대 및 문화예술산업 발전 도모	협조부처와의 업무협의 등	2건	2건	관련 문서
’25	(가칭)K-컬처 비자 신설 추진	K-컬처 영향력 확대 및 문화예술산업 발전 도모	협조부처와의 업무협의 등	2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안재필	이 메 일	anjp6854@korea.kr

1-4-2-2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24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 과제 내용

○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 수집 및 분석

○ 디지털노마드 비자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제정 및 시범운영 실시

○ 민원인 및 관광업계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사항 없음(신규 추진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신설 → 재외공관 및 소속기관 전달 → 제도 홍보 → 시범운영 실시

2. '24년도 추진 실적

□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 '24. 1.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자 제도 개선

□ 소요예산 : 비예산

3. ’25년도 추진계획 (’24년 종료)

※ ’24년도 비자 신설 및 시범운영 실시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지침 신설	1회	1회	관련 공문 등
’24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실시 및 제도개선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1건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시장 확대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비자제도 및 우수유치기관 지정 기준 등 개선

□ 과제 내용

○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 제출서류 생략 등 의료관광객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 의료관광 간담회 실시 등 관련 부처 및 업계 의견 수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 5. 의료관광 지침 제정 및 비자 신설

○ ‘15. 6.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관리기준 신설

○ ’20. 9. 보건복지부 지정 유치기관에 가점 부여 기준 도입

○ ’23. 8.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제도 개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재외공관 및 소속기관 전달

2. ’24년도 추진 실적

□ 의료관광 업계 간담회 실시(’24. 4.)

○ 의료관광 제도 운영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의료관광 업계 의견 청취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제도 개선('24. 8.)

○ (우수 유치기관 확대)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선정기준 완화*('24. 8.)

* 의료관광 사증 초청실적 50건 → 30건

3. '25년도 추진계획

□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및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확대

○ 베트남 국민 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재개

○ 동반 가능 간병인 허용인원 확대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4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관련지침 개정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22년말 41만 여명대 불법체류 외국인을 향후 5년 내(‘27년) 20만 명 대까지 감축 추진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정부합동 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하여 불법체류 단속 강화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으로 자진출국 적극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23~‘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외국인기관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협업)

2. ’24년도 추진 실적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45,442명 적발

- 정부합동단속 2회 실시(1차: 4.15~6.30, 2차: 9.30~11.30.)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23.9.1부터 ’24.2.29.까지 운영하여 총 24,957명 자진출국

- ’24년「특별자진출국 기간」운영(’24.9.30.~’25.1.31.)

※ 2차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시행

3. '25년도 추진계획

□ 상시 단속체계 유지

○ 자체 광역단속 체계 유지 및 테마별 집중단속 기간 운영으로 엄중하고 일관된 단속 실시

□ 범정부적 대처 차원의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확고한 단속 기조 표명(상·하반기)

□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적극 유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30,000	39,038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목표
'24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40,000	45,442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목표
'25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40,000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목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억제 정책 등에 관계부처와 대응하기 위해 불법체류율 등 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과제 내용

○ 불법체류율 단계별 대응 전략안을 수립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부처별 역할 마련

-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 누적 불법체류율, 연도별 불법체류 증가 규모 등 불법체류 현황에 따른 단계별 역할 정립

○ 국가별 불법체류 현황 공개,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국민과 관계부처의 관심 제고 및 해당국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고, 사증면제 일시중지를 위한 사전 예고 기능으로 활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율 감축 및 불법체류율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참석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체류율 등 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2. '24년도 추진 실적

○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관련 내용 논의 총 2회 (2. 16., 9. 10.)

- 불법체류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과 '24년 정부합동단속 시행 등 불법체류 감소 방안 논의

3. '25년도 추진계획

○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협의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3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세칙
'24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2회	'23년 유지
'25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24년 유지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신규발생 주요 원인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로 불법체류 신규 유입 차단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다발국가 대상 국가 대사관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 홍보 및 자진출국 적극 유도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신규발생 및 자진출국을 위한 주한공관원 협조체제 구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체류 다발국가 주한공관원 협조체제 구축

2. '24년도 추진 실적

○ 주한 외국 공관원 간담회 개최('24. 10. 4, 금)

○ '24. 10. 4.(금) 태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대사 및 영사 등 17명 참석

- 시행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등 자국민 불법체류 감소 정책에 대한 홍보 등 각국 공관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3. '25년도 추진계획

○ 자진출국 및 자국민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자진출국 적극 유도 등 주한 외국공관원 접촉을 통한 협조 요청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1회	특별자진출국 제도 시행
'24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1회	특별자진출국 제도 시행
'25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특별자진출 제도 시행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분야 단속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범죄 증대 우려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과제 내용

○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안전 위협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관계기관 상시 합동 단속 체계 구축

○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민원 빈발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단속지역 지정, 불법고용 분위기 억제 및 국민 치안 불안감 해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23~'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2. '24년도 추진 실적

○ 정부합동단속 2차례(1차 4.15.~6.30, 2차 9. 30.~11.30.) 실시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및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중점 단속 실시

- 불법체류 외국인 19,232명, 불법고용주 등 3,761명, 마약사범 26명, 도박사범 26명, 대포차 유통 25명, 테러연계 혐의자 1명,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38명 적발

○ ’24년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 불법체류 3,166명, 불법고용주 등 392명 적발, 특별단속지역 545회 순찰·단속

○ 서민 일자리 잠식・국민안전 위협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단속(8.5.~9.20.)

- 불법취업 2,143명, 불법고용주 등 456명, 대포차 운행 등 불법택시 영업 17명 적발

3. ’25년도 추진계획

○ 국민 안전 위협 불법체류 외국인 및 민생 침해 및 체류질서 문란 행위자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 범정부 단속체계 구축 및 연중 집중단속 실시

○ ‘25년 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방안 시행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360회	508회	18개 사무소 월 2회 이상
’24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360회	545회	18개 사무소 월 2회 이상
’25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360회	-	18개 사무소 월 2회 이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2-1-3-1	외국인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1. 과제의 개요

SNS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취업 알선 홍보·정보 제공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사이버정보수집·조사팀 활용 및 이민특수조사대 전문 사이버 범죄 수사 기능 및 동향조사 활동 강화

□ 목적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관련 정보수집 체계화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과제 내용

○ 인천공항청 사이버정보조사팀, 서울청(이민특수조사대)과 남부권(김해공항, 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 사이정보수집·조사팀 활용 SNS 등 사이버상 불법취업 알선 정보수집 강화 및 알선자 적발

○ 각 청(사무소) 관할 온·오프라인 외국인 커뮤니티 현황 파악 및 커뮤니티 대표자, 협조원 등과 협조관계 구축

○ 이민조사관 직위 정보수집 활동을 통한 정보관 역할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연중 사이버정보수집·조사팀 및 이민조사관 등 동향조사요원의 정보수집활동, 커뮤니티 현황 파악 및 협조원 구축 활동 지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취업 알선 정보수집 강화 및 체계화 → 알선자 적발·처벌

2. '24년도 추진실적

□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첩보 수집

○ 정첩보 3,694건 수집

○ 5,267명 적발(형사입건 499명, 강제퇴거 등 4,768명)

□ 외국인 커뮤니티 및 협조망 구축

3. '25년도 추진계획

□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첩보 수집(연중)

□ 온·오프라인 외국인 커뮤니티 및 협조망 구축 활동(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정보수집 체계화	정첩보수집/ 적발	달성도	2,000건/ 1,000명	3154건/ 2309명	ICRM 정첩보수집 및 기획조사 실적
'24	정보수집 체계화	정첩보수집/ 적발	달성도	2,000건/ 1,000명	3,694건/ 5,267명	ICRM 정첩보수집 및 기획조사 실적
'25	정보수집 체계화	정첩보수집/ 적발	달성도	2,000건/ 2,000명		ICRM 정첩보수집 및 기획조사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7
담 당 자	6급 연경덕	이 메 일	immi222@korea.kr

2-1-3-2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1. 과제의 개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송치 인력 확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등

□ 목적

○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불법고용·입국 알선 브로커, 허위초청·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등 외국인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 또한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송치 인력 확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불법입국 외국인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 증대

□ 과제 내용

○ 서울·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 인천공항청 조사과 소속 이민조사관을 기획조사 분야별 전문 조사관으로 양성

- SNS 분석 등 사이버 정보 분석·조사 담당

- 중국, 태국, 베트남 등 국가별 담당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관리 규정 마련

- 디지털 증거 수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증거 수집·분석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사이버·집합 교육 실시

○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대상 출입국사범 직접 수사·송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법무연수원 사이버 ‘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실시(연중)

○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대상 출입국사범 직접 수사·송치(연중)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관리 규정 마련(연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관리 규정 마련 →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2. ’24년도 추진 실적

□ 법무연수원 사이버·집합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 서울·부산청 특조대 지방 소규모 기관 필요시 송치 담당 직원 교육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사업 완료

3. ’25년도 추진계획

□ 법무연수원 사이버·집합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실시(연중)

□ 서울·부산청 특조대를 지방 소규모 기관 필요시 송치 담당 직원 교육(연중)

□ 이민조사관을 기획조사 분야별 전문 조사관으로 운영(연중)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관리 규정 마련(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특수조사 역량강화	디지털포렌식 센터 설치	사업시행 여부	1건	1건	사업시행 완료 보고서
'24	이민특수조사 역량강화	포렌식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행	사업시행 여부	1건	1건	사업시행 완료 보고서
'25	이민특수조사 역량강화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규정 마련	지침시행 여부	1건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규정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7
담 당 자	6급 연경덕	이 메 일	immi222@korea.kr

2-1-3-3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 동향조사 관련 규정에 사업장 등 출입 권한이 불명확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적 규정 필요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단속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 업무 효율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조사 규정 신설 추진

- 출입국관리법 기타 조항 개정 지연을 우려, 논란이 있는 사업장 출입·조사 근거 규정 신설 제외 지시(장관님 주재 실·국장 토론회)

○ '15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 등 출입 및 조사 규정 신설 추진

- '16. 2. 16. 법사위 소위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외하기로 결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규 신설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사업장 출입·조사 근거 신설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입법사례 검토

3. '25년도 추진계획

○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관련 규정 신설	관련 규정 신설 추진	1	-	관련 규정 신설
'24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관련 규정 신설	관련 규정 신설 추진	1	-	관련 규정 신설
'25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관련 규정 신설	관련 규정 신설 추진	1	-	관련 규정 신설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2-1-3-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증가세에 비하여 사범·보호·퇴거 인력 및 보호시설 수용 규모 부족으로 신속한 불법체류자 퇴거집행 곤란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소 정책 추진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인력 증원 필요

□ 과제 내용

○ 향후 5년('23~'27.)간 불법체류 단속 인력 총 500명(매년 100명) 사범·보호·퇴거 인력 총 300명(매년 100명) 증원 요청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행정안전부에 인원 증원 지속 요청

2. '24년도 추진 실적

○ '23년 하반기 수시직제로 단속인력 88명 증원 및 배치

- 광역단속팀 3곳(인천, 대전, 울산) 신설

- 광역단속팀 확대 운영 및 광역단속팀 미운영 기관 단속 역량 및 기획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증원 배치

3. '25년도 추진계획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에 따른 불법체류 단속 인력 총 100명 증원 요청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단속·사범·보호·퇴거 인력 증원	200명	88명	직제요구
'2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단속·사범·보호·퇴거 인력 증원	100	187명 요구	직제요구
'25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단속·사범·보호·퇴거 인력 증원	100		직제요구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2-2-1-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선

□ 목적

○ 국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 과제 내용

○ 기간제한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자에게 국내 영주의사가 없는 경우 영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개정 →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영주의사 없는 영주권자 취소 관련 해외사례 조사('24. 10.)

□ 소요예산 : 비예산

3. '25년도 추진계획

□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국민과 외국인이 신뢰하는 영주제도 마련	해외사례 조사	1회	1회	보고서
'2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국민과 외국인이 신뢰하는 영주제도 마련	현황 조사	1회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김종승	이 메 일	kjs5676@hanmail.net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귀화 신청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품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

○ 면접심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귀화 민간면접관의 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 필요

□ 과제 내용

○ (면접심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변별력 있는 귀화 면접심사 제도 운영

○ (귀화 민간면접관) 귀화 신청자의 기본 소양 평가를 담당하는 민간면접관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귀화 민간면접관 제도 도입('11년) 및 전국 12개 관서 확대 운영('15년)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보수교육 정례화('18년)

○ 귀화 면접심사 심사문항 연구용역 실시('21년)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4.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 예산

2. ’24년도 추진 실적

□ 귀화 민간면접관 신규 위촉(‘24년 1, 11월)

○ 임기만료 등에 따라 2회, 민간면접관 총 25명 추가 선발

※ 현재 민간면접관 총 49명 (’24. 9월 현재)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면접심사 실무, 갑질 예방, 청렴 교육 실시(‘24년 9, 10월)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개정(’24. 10월)

○ 귀화 민간면접관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무윤리 서약서’ 양식 신규 제정 및 동 서약서의 제출 의무화

3. ’25년도 추진계획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귀화 민간면접관의 면접관으로서의 전문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25년 2분기)

□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귀화 민간면접관 11명 선발 예정(‘25년 3분기)

□ 귀화 면접심사 실시

○ 우리 국민이 되기 위해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평가

□ 소요예산 : 총 59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96	596	596	0.0	
-국 비	▪ 일반회계	596	596	596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귀화민간면접관 면접심사비: 면접관 1인당 160,000원 × 3,725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귀화 면접심사 개선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연간 교육 실적	2회 (100%)	2회 (100%)	-
'24	귀화 면접심사 개선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연간 교육 실적	2회 (100%)	2회 (100%)	-
'25	귀화 면접심사 개선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연간 교육 실적	2회 (100%)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27
담 당 자	5급 김용국	이 메 일	mj001013@korea.kr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복잡하고 어려운 국적법령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도 증진 및 신뢰성 있고 예측가능한 국적 제도 시행 도모

□ 과제 내용

○ (국적법령 정비) 복잡하고 어려운 국적법령을 수요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비

○ (제도 홍보 강화)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병무청, 재외동포청)과 협조하여 홍보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12.)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23. 9.) "알기쉬운 국적신고제도(한·영)"리플릿 제작 및 배포

○ ('24. 4.)「국적법 시행규칙」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적법령 정비) 국적법령 개정 수요 파악 → 법령안 개정 입안보고
- (국적설명회 개최) 재외동포 대상 국적 설명회 계획 → 관계기관(병무청, 재외동포청 등) 협업 → 온·오프라인 국적설명회 개최
- (국적 제도 홍보 강화) 국적 설명자료 제작 → 관계기관 협업 → 홍보자료 배포

2. ’24년도 추진 실적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국적법령 개정 수요 조사 후 어려운 법령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정비

- 국적이탈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일체를 나열하고,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서식 간소화(총 8쪽, 작성 항목 7개 → 총 6쪽, 작성 항목 5개)

□ 재외동포대상 온·오프라인 국적설명회 개최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 제고

○ 국적제도 등을 제대로 안내하고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적제도 홍보 강화

- (온라인) 재외국민 대상 국적·병무 화상 설명회 실시(‘24. 4. 3.-일본 /5. 28.-시드니 등 /6. 28.-칠레 등 /9. 23.-이탈리아 등 /9. 25.-남아공 등)

- (오프라인) 일본 거주 재외동포 및 공관직원 대상 국적 설명회 개최 (‘24. 10. 28. ~ 10. 31.)

○ 국적 및 병역 안내서 제작 및 배포(병무청 협업)

- 병무청, 재외공관, 하이코리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국적 및 병역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

3. ’25년도 추진계획

□ 국적법령 정비

○ 국적법령(법무부 예규 포함) 개정 예정(‘25년 2/4분기)

- 민원 편의 증진 및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국적행정을 위해 국적법령(법무부 예규 포함) 개정

□ 국적 제도 홍보 강화

○ 온라인 국적설명회 참여

○ 재외공관을 통해 복수국적, 국적이탈 등 국적 제도 안내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홍보강화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 제고	국적업무 관련 설명자료 제작·배포	1회(50%)	1	관련 공문
			화상 설명회 실시	2회(50%)	2	
'24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국적 법령 개정 및 홍보물 배포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회(50%)	1	관련공문
			국적 관련 안내서 배포	1회(50%)	1	
'2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국적법령 개정 및 국적설명회 개최	국적법령 개정	1회(50%)	1	관련공문
			국적설명회 참여	1회(50%)	1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22
담 당 자	5급 강성진	이 메 일	ksjksj01@korea.kr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우려 등 고위험 외국인 유입 차단을 위한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를 확립

□ 과제 내용

○ 각종 출입국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입국자 사후 분석 강화를 통한 정밀 심사대상자 선별

○ 입국자 정보 활용을 위한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및 활용성 제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5.)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23. 5.~8.)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법무부 → 소속기관

- 전자입국신고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전자 입력기기 도입 사업 계획 수립(1/4) 및 수행(2/4~4/4)

※ 조달청 입찰 공고('25. 4.) → 업체 선정 및 계약('25. 5.) → 사업 수행('25. 5. ~ 12.)

2. ‘24년도 추진 실적

□ 입국 외국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구축

3. ‘25년도 추진계획

□ 전자입국신고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전자 입력기기 도입

○ 입국 심사장 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제출을 위한 전자 입력기기 시스템 구축

※ 전자 입력기기 도입 사업은 「2024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차)」사업에 포함되어 개발 예정

○ ‘25. 4. 조달청 입찰 공고

○ ‘25. 4. ~ 5. 업체 선정 및 계약

○ ‘25. 5. ~ 12. 사업 완료

□ 소요예산 : 총 35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5	356	318.8	
-국 비	▪ 일반회계		85	356	318.8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2-3-1-2)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고도화 예산에 포함

□ 산출내역

○ 전자입국신고서 전자 입력기기 도입 사업비 : 355,581,798원

- (개발 용역비) 25,581,798원 + (장비구입비)(H/W) 33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전자입국신고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산출물 (전자입국신고서 포함)	1	1	ISP 수립 산출보고서
'24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개발·구축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1	1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25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전자 입력기기 도입	전자 입력기기 도입 사업 수행	1	1	전자 입력기기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7
담 당 자	6급 오래균	이 메 일	lakyunoh@korea.kr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용자 편의 향상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수행

- 전자입국신고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자 입력기기 도입
-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 시스템 개선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상시스템 구축
- 공용어 중심의 다국어 서비스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 단체관광객 등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22. 12.)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 5.~8.)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25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1/4)
- '25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수행(2/4~4/4)

2. ’24년도 추진 실적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 단체관광객 신청 편의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 K-ETA 신청 시 입력 편의를 위한 화면 개선

○ 여권 판독 기능 개선(OCR, NFC)

○ 공용어 중심의 다국어 확대(러시아어, 독일어) 등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계획 수립

3. ’25년도 추진계획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수행

○ ‘25. 4. 조달청 입찰 공고

○ ‘25. 4. ~ 5. 업체 선정 및 계약

○ ‘25. 5. ~ 12.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수행

□ 소요예산 : 총 87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62	2,093	876	△58.1	
-국 비	▪ 일반회계	162	2,093	876	△58.1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2025년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비 : 8억 7천6백만원

- (개발 용역비) 1억 7천6백만원 + (장비구입비)(H/W, S/W) 7억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ISP)수립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산출물	1	1	ISP 수립 산출보고서
'24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25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 수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73
담 당 자	7급 김은정	이 메 일	zamarin@korea.kr

2-3-1-3	안전 위해(危害)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24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마약 등 중대범죄를 사유로 입국금지된 외국인 지속 증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사회적 파급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필요

※ '23. 12월 기준, 입국금지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6,124명이며, 유학생·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유입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도 지속 증가

□ 과제 내용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등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기간을 현행 기준보다 상향하여 입국규제 강화 추진

○ 강화된 입국규제로 국민안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여 마약 등 중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없음(신규 추진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입국규제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마약류 사범 입국규제 강화

○ '24년 상반기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 사회적 파급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등 중대범죄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입국금지기간 상향

□ 소요예산 : 비예산

3. ’25년도 추진계획

□ ’24년도에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25년도 추진계획 없이 종료함

○ 종료사유 : 성과목표인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24년 상반기에 개정·시행하여 목표 달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안전 위해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입국규제 강화 (지침 개정)	마약 등 중대범죄 입국금지기간 상향	1회	1회	개정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8
담 당 자	7급 김동현	이 메 일	just1478@korea.kr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운수업자가 제출한 입·출항 보고 등에 의존한 간접 심사방식에서 부두 접안 선박 및 내·외항 정박 선박의 승선검색 등 직접 심사방식을 확대하여 항만 보안 강화 기여

□ 과제 내용

○ 선박 등의 입·출항시 승선자의 출입국 적격 여부 확인, 법령 위반자의 승선 방지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법령상 임무 수행

○ 내·외항 정박 선박까지 승선검색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 감시정을 도입·운용('22. 4월~)하고 20년 이상 노후 감시정 대신 출입국업무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법무부 감시정 설계('24년) 및 건조('25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접안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업무 강화('20. 3월~)

- 전국 19개 항만출입국관서 중 입출항선박이 많은 주요 5개 사무소*(6개 항만)에 신규인력 33명을 배치('20. 3월~)하여, 승선검색 및 항만순찰 업무 상시화

* 부산출입국청, 인천출입국청, 울산출입국사무소, 여수출입국사무소, 광양출장소

○ 내·외항 정박 선박까지 승선검색 대상 선박 확대('22. 4월~)

- 세관 감시정 2척을 관리전환 받아 부산항과 인천항에 배치하여 내·외항 정박 선박까지 승선검색 활동 확대

□ 추진체계

○ 추진 주체 : 법무부

○ 추진 절차 : 조달청(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설계 및 건조용역 실시

2. '24년도 추진 실적

□ 선박검색 및 항만순찰 강화

○ 접안 및 내·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실시

□ 출입국 감시정 건조를 위한 설계용역 실시

○ 출입국업무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장치(DPFF) 장착 친환경 선박 설계

3. '25년도 추진계획

□ '25년 연내 신규 감시정 건조 추진

○ '25년 1분기, 장비선정위원회('24. 7. 19.)를 통해 선정된 주요 장비(엔진, 추진기)에 대해 관급공사 방식 추진

※ 주요 장비 (엔진, 추진기)의 주문·제작·운송 등에 10개월 이상 기간 소요

○ '25년 1분기 신규 감시정 건조 용역 실시(납품기한 : '25. 12. 31.)

□ 소요예산 : **총 4,100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28	4,100	1,698%	
-국 비	▪ 일반회계	-	228(설계)	4,100(건조)	1,698%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신규 감시정 설계	설계용역	이용률 (%)	100%	100%	중간보고
'25	신규 감시정 건조	건조용역	이용률 (%)	100%	100%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42
담 당 자	6급 남재혁	이 메 일	namjh123@korea.kr

3-1-1-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활용, 국익과 사회통합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예산 효율성 제고

□ 과제 내용

○ 시계열적 변화 추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3년주기)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공표 등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 추진

※ (국내 입법례) 「양성평등기본법」, 「가족친화법」, 「상생협력법」 등 다수 법률에 관련 지수의 산정과 공표, 환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2.	국내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 측정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완료 및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 ′24. 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정기 측정(3년 단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정기 측정 실시 (′24. 5. ~ ′24. 12.)

3. '25년도 추진계획

□ 해당없음 (3년 단위 계획)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정기조사 실시	연구용역	1회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개선방향 제시

□ 과제 내용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정책컨설팅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2.	국내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고 정책 평가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완료
○ '22. 12.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 '23. 5.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시범사업 수행
○ '24. 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컨설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컨설팅 실시('24. 5. ~ '24. 12.)

3. ‘25년도 추진계획

□ 해당없음 (3년 단위 계획)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정책컨설팅 시범실시	연구용역실시	연구용역	1회	1회	결과보고서
’24	정책컨설팅 실시	연구용역실시	연구용역	1회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는 정주형 체류자격 변경 혜택을 부여하여 이민자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정책 구현

□ 과제 내용

○ 외국인력, 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난민 등 국내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일정단계 이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 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혜택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1.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변경 시 이수자 가점 부여

○ '12. 4. 장기체류자(F-2-99) 체류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확대

○ '22. 10.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변경 시 3단계 수준 이상 요건 규정

○ '23. 8. K-point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변경 시 2단계 수준 이상 요건 규정

○ '24. 1. 일반숙련기능(E-7-3) 체류기간연장시 1단계 수준 이상 요건 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이민통합과, 체류관리과, 국적과 협업)

○ 추진절차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 확대 대상 및 혜택 부여 관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24. 1. 일반숙련기능(E-7-3) 체류기간연장시 1단계 수준 이상 요건 규정

3. '25년도 추진 계획

○ '25. 1. 외국인 근로자가 E74 자격변경을 위한 한국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양성 특별반 운영

○ '25. 1. 유학생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연계과정 확대 운영

○ '25. 2분기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변경 시 4단계 수준 이상 요건 규정

□ 소요예산 : 총 13,59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0,096	10,439	13,594	30.2	
-국 비	▪ 일반회계	10,096	10,439	13,594	30.2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소요예산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체 예산이며, (3-1-2-2), (3-1-2-3) 과제 예산을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지침 개정	1회	1회	결과 보고
'2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지침 개정	1회	1회	결과 보고
'2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지침 개정	1회		결과 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에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유료화)을 적용함으로써, 이민자에게 교육 참여의 책임성 부과 및 교육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완화, 학습 의욕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과제 내용

○ 그간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통한 비용부담체계 개선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비용을 부담

-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등)와 사회통합정책 핵심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감면대상 설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 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유료화

○ ’19. 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수수료 유료화

○ ’22. 5.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 ’22. 1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유료화 방안 추진 검토

○ ’23. 11. 유료화 법적근거 마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기획)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운영)

○ 추진절차 : 법령개정 → 법무부장관 고시→ 유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24. 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책정 협의 완료

○ '24. 7.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개최(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및 보도자료 배포

○ '24. 9.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법무부장관 고시)

○ '24.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보도자료 배포

3. '25년도 추진계획

○ '25.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보도자료 배포	1회	1회	보도자료
'24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보도자료 배포	1회	2회	보도자료
'25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운영지침 개정	1회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기회 및 비대면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평가와 교육 참여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과제 내용

○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장 확대 및 평가 종류 및 일정 다양화

- 현재 운영중인 광명, 대전 CBT센터 외에 평가 장소 추가 설치
- CBT 사전·종합 평가 외에 중간평가 추가, 주말 평가 시행

○ (교육) 참여자의 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화상교육 과정 확대

- 중앙거점운영기관 외 운영기관의 비대면 화상교육 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5. 사회통합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도입

○ ’19. 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민간위탁

○ ’22. 3.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 도입

○ ’23. 1. 중앙거점 외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도입(운영지침 개정)

○ ’23. 11. 대전 CBT 센터 추가 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평가)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수탁기관
- (교육)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 추진절차

- (평가) 법무부, 평가수탁기관 업무협의 → 서울·수도권 CBT 평가장 확보 및 개소
-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시달(법무부 → 운영기관)

2. '24년도 추진 실적

○ '24. 2. 대전 CBT 사전평가 주말평가 시범운영

○ '24. 7. 보도자료 배포(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

○ '24. 7. 대전 CBT 센터 사전평가 주말(토, 일) 확대·운영

○ '24. 10. 서울 CBT 센터 추가 개소

3. '25년도 추진계획

○ '25. 1. 대전 CBT 센터 사전평가 주말(토, 일) 운영

○ '25. 3분기 기존에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만 제공하던 CBT 평가를 중간평가까지 확대하여 시범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CBT 평가장 추가 개소 및 보도자료 배포	1회	1회	보도자료
'24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CBT 사전평가 주말 시행(시범운영)	4회	33회	결과보고서
'25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CBT 사전평가 주말 시행	52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다양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 단계에서 기초 법·질서와 필수 사회적응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기존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연예인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계절근로자와 산업현장에서 근무중인 외국인력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 계절근로자와 산업현장 외국인력의 교육 접근성 제고, 현장 근로자 공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장에 방문하는 맞춤형 조기적응프로그램 추진

- 기초법질서, 필수 생활정보 이외에 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교육 진행

○ 국내 장기 정주 가능성이 높은 재정착 난민에 대해서도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운영

- 출입국·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재정착난민 입국시기에 맞춰 전문강사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 7. 결혼이민자 대상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 '14. 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 기존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 예술·흥행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재정착난민까지 포함한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조기적응지원단(조기적응지원센터)

○ 추진절차 :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단(지원센터) 선정 → 이민자 교육 신청 → 교육 실시

2. '24년도 추진 실적

○ 재정착난민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2월)

○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연중)

○ 조선업 외국인력 대상 맞춤형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운영(2월. 9월)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8월)

3. '25년도 추진계획

□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범죄예방교육 추가(1시간)

※ 생활법률교육(경범죄・도로교통법 등)등 기존 교육에 중범죄(인신매매, 마약범죄, 강도, 절도, 성폭력, 보이스피싱 등)위주의 범죄예방교육 추가

○ 산업안전교육 추가(1시간)

□ 찾아가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운영

○ 학교 등에 찾아가는 형태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운영

□ 소요예산 : **총 1,919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059	964	**1,919**	**99.1**	
-국 비	▪ 일반회계	1,059	964	1,919	99.1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소요예산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전체 예산임

□ 산출내역 (총 1,919,075,000원)

내용	소요예산	내용	소요예산
강사료	1,449,000,000원	운영비	78,960,000원
전담인력	122,851,000원	교재비 등	268,264,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40,000명	42,374명	결과보고서
'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41,200명	41,048명	결과보고서
'25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44,000명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3-1-2-5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제공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장기 거주 목적으로 입국 예정인 외국인이 입국 전부터 한국어 및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여 원활한 조기 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해외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제공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입국 전 온라인 사회통합교육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사항 없음 ※ '25년 신규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현지 교육) 법무부 → 관계기관
- (온라인 교육)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및 조기적응지원단

○ 추진절차

- 관계기관 등 업무협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 교육 실시

2. '24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25년 신규 과제

3. '25년도 추진계획

○ '25. 上　　관계기관 업무 협의

○ '25. 下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시범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운영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운영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시범운영 실시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및 고용주·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이민정책 전문성 함양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해도 제고

□ 과제 내용

○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등 각 기관 소속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개설·운영

○ 고용주, 유관기관 관계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최초 운영

○ '12년 ~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매년(2회)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교육 계획 수립 → 수요 조사 → 강의 개설 → 교육 실시

2. '24년도 추진 실적

□ 공무원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실시(2회, 법무연수원)

3. ‘25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의 이해과정’ 교육과정 개설·운영

○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지자체·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고용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

※ ’25년 신규과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76명	결과보고서
’24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결과보고서
’25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박창현	이 메 일	pch512@korea.kr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 형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해외사례 : 호주 'Harmony day'(3.21), 캐나다 'Multiculturalism Day'(6.27), 싱가포르 'Racial Harmony Day'(7.21) 등

□ 과제 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사회통합 유공자 정부포상 및 '올해의 이민자상' 수여, 미담사례집 제작·배포

○ 세계인의 주간 기념행사 개최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이민자가 함께 어울리는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7.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 세계인의 날) 제정

○ '08. 5.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 '14. 4.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표창) 선정

※ '08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 (단, '14년도는 미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학,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단체 등

○ 추진절차 : 기념식(기념행사) 계획수립 → 기념식(기념행사) 개최 → 결과보고

2. '24년도 추진 실적

□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실시

○ 제17회 기념식 개최

- 일시·장소 : '24. 5. 20.(월),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 참석자 :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주한외교사절, 수상자 및 가족 등
- 주요 내용 : 정부포상, 장관님 등 축사, 미담사례발표, 주제영상 상영 등

○ 세계인의 날 기념 홍보 영상 제작

-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외국인 정책 중요성 부각

○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미담사례집 제작

-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담사례집 제작
- 재한외국인의 성공적인 정착사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재한외국인 봉사활동 등 미담사례 선정

○ 세계인 주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별 기념 행사 및 이민정책 포럼 개최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자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방 특성에 맞는 자체 기념행사 개최
- 법무부, 한국이민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다양성 시대의 이민과 지속가능발전」 및 「지역이민정책 현안과 도전 과제」 개최

3. ‘25년도 추진계획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5. 5. 20.)

- 기념일 취지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품격있고 내실있는 중앙 행사 진행 및 최신 이민정책 동향을 반영한 정책메시지 발표

-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유공자 정부포상, ‘올해의 이민자상’ 수여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범사례 발굴·홍보

- 수기, 사진 등 다양한 공모전 및 미담사례집 제작을 통해 내·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 지역사회 중심의 세계인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

- 세계인 주간에 맞추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념행사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외국인 관련 행사·축제를 연계하여 세계인의 날 인지도 확산

-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소요예산 : **총 31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11	310	310	0.0	
-국 비	▪ 일반회계	311	310	310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일반용역비 207백만원, 일반 수용비 80백만원, 사업추진비 23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17건	결과보고
'24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17건	결과보고
'25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 당 자	5급 박창현	이 메 일	pch512@korea.kr

3-2-1-3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및 이민자·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하락 추세에 따라, 외국인은 시혜적 정책 수혜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필요

※ 재한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의 비중 감소('14년 41.3% → '20년 28.7%)(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

□ 과제 내용

○ 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제고, 국민 ⇔ 이민자 간 교류·소통 증대

-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 사회공헌활동 정례화
- 이민자 멘토단, 이민자 네트워크,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그간 구축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 이민자 사회참여 다각화 추진

-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외국인봉사단체(비영리단체), 자원봉사포털(1365)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이민자 사회참여 기반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9. 7. 이민자 대상 멘토교육 시범 운영(16회)

○ '20. 6.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35명) 위촉

○ '20. 11.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규정 제정

○ '22. 2. 제2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14명) 선발

○ ‘22. 8.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규정 개정

○ ‘24. 3.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39명) 위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교육부(협업), 행정안전부(협업)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

○ 추진절차 : 협업 등 계획 검토 및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

2. ‘24년도 추진 실적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멘토교육 강사 활동

- 멘토단 총 233회 출강, 수강생 총 7,286명

○ 법무부 출입국제도 홍보 활동 및 관련 영상제작에 출연진으로 참여

3. ‘25년도 추진계획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멘토교육 강사 활동

- (연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교육 등 강사활동 연 2회 이상 실시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특강 실시

○ 기타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과 사회통합 중앙협의회·정부초청장학생동문회·자원봉사포털 간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2회	8.1회	결과보고
'24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2회	6회	결과보고
'25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2회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 당 자	5급 박창현	이 메 일	pch512@korea.kr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복지기준 불명확 및 체류 외국인의 고령화로 인해 체류자격에 따른 복지 기준의 설정 및 지원 방안 마련

□ 과제 내용

○ 체류자격별 복지 기준안 마련

- 복지 유형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의 사회보장 기준 연구

- '21.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의 복지수급 등 사회보장 혜택 연구

※ 「체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사회보장 기준 연구」연구용역

○ 기준 마련 관련 관계부처 논의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복지 제도 실태 등 파악 필요성 논의 (' 23.12.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

※ 글로벌인재 유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족 관련 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침(OECD 인재매력지표) → 부처별 소관 정책 현황, 실태 파악 필요성 제안(법무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복지부, 지자체 등 복지 소관 부처

○ 추진절차 :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적용 실태 파악, 복지 유형별 소관부처 논의를 거쳐 체류자격별(국내 생활 기반, 연령층, 기여도 등 고려) 복지 기준안 마련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복지 기준 정리 등

○ 사회보장 제도(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돌봄서비스 등) 적용 대상·기준 및 관련 법, 예산, 소관 부처(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등) 정리

3. '25년도 추진계획

□ 관계부처 논의

○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등 외국인 복지정책 소관부처 의견 수렴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안건 제출 등 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활용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관련 관계부처 논의	1회	1회	회의실적
'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공공부조 분야 외국인 복지 기준 정리	1건		복지 기준정리 보고서
'25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소관부처 의견수렴	1회		회의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도입국자녀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 지원

□ 과제 내용

○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 7. "다문화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협력을 위한 "법무부-교과부 업무협약 체결

○ ‘14. 7.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 실시

○ ‘14. 9. 중도입국 청소년 통합정책 현안 보고(BH 교육문화수석)

○ ‘15. 9. 결혼이민자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세부 약호(F-1-52)를 신설하여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통계 확보

○ ‘16. 12. 중도입국자녀가 만 21세까지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17. 1. 중도입국 청소년(만 7세~만 17세)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17. 1.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18. 7. 중도입국 청소년(만 6세)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18. 7.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22. 12.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자녀에 대한 체류관리 지침 제정

○ ’25. 1. 중도입국자녀가 만 21세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침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교육부

○ 추진절차 :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교육부)에 따른 중도입국 자녀 정보제공(법무부) → 정규 교육과정 참여(중도입국 청소년)

2. '24년도 추진 실적

○ 중도입국자녀 등의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교육부 협조 요청에 회신('24. 6.)

3. '25년도 추진계획

□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 교육부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 취학연령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청소년 정보 제공	1회	2회	결과회신
'24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청소년 정보 제공	1회	12회	결과회신
'25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청소년 정보 제공	1회		결과회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적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대상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격부여 확대

□ 과제 내용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 고시국가* 출신 동포 중 국가전문자격 취득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등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등 대상 확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지정 21개 국가

○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의 단계적 통합

- 중국 및 CIS(구소련) 6개국 출신 동포에게만 부여하는 방문취업(H-2) 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단계적 통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1. 재외동포 자격통합 및 동포 취업 범위 재설계 방안 연구용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 정식사업 실시('24. 1.)

○ 인구감소지역인 66개 기초자치단체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 변경

□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발표('24. 9.)

○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하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안 발표

3. '25년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회의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 체류 특성 분석을 통해 동포 자격 일원화 시 취업 범위 재설계('25. 上)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제도개선	1건	1건	보고서 등
'24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제도개선	1건	1건	보고서 등
'25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제도개선	1건	-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에 따른 구인난 해소 및 동포들의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범위 점진 확대

□ 과제 내용

○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 확대

-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취업(H-2) 활동 범위를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별표 1의2 29. 나. 방문취업 활동범위 적시 추가 및 활동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고시하는 방안 마련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범위 확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통해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직종 점진적 축소

○ 취업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서민일자리 보호 방안 마련

- 재외동포(F-4)에 대한 단순노무 분야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취업허가제 도입, 분담금을 통한 기금 마련 등 보완책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2. 방문취업(H-2) 서비스업 고용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2023. 5. 음식점업·숙박업 분야 6개 직종에 재외동포(F-4) 취업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방문취업(H-2) 활동범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24. 10.)

○ 구인난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 (제조업)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방문취업(H-2) 신규 허용
- (임업) 산림사업시행법인, 종교생산법인의 임업 단순종사원 직종 취업 허용
- (서비스업) 택배서비스업체, 항공기하역업체의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택배 상·하차 직종)에 취업 허용

3. '25년도 추진계획

□ 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동포 취업범위 확대 추진('25. 上)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4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4-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수도권에 밀집한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동포 및 배우자의 취업범위 확대

□ 과제 내용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자격 신설

-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참여 지자체로 이주할 경우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 및 취업 범위 확대

○ 동포 가족에 대한 체류 혜택 부여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을 가진 동포의 가족에게 장기체류자격 부여 및 취업 허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 선정

○ 2022. 10.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법무부, 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 지자체, 동포 유입 촉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 정식사업 실시(’24. 1. 26.)

○ 지역특화동포(F-4-R) 121명, 지역동포가족(F-3-2R) 24명 체류자격 변경(’24. 1~9월)

3. ’25년도 추진계획

□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1-3-1-1)과제와 통합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자 수	50명	70명	관련 통계 등
’2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자 수	100명	121명	관련 통계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364
담 당 자	5급 이재인	이 메 일	leeji804@korea.kr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급증과 더불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필요

□ 과제 내용

○ 법적 근거 마련

- 재외동포의 국내정착 및 사회 적응 지원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법무부 내규인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 중이나 동포단체 등은 법률에 직접 근거 마련을 요구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

- 일부 지역에 편중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수 확대

○ 정착 우수사례 발굴

- 국내 성공적으로 정착한 동포 사례를 발굴·홍보하는 한편, 성공 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1. 7.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7개→ 11개)

○ 2023. 6.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11개→ 16개)

* 16개 센터 중 1개는 ‘24년도 고용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24.1.1.부 폐쇄되어 현재 15개 센터 운영 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 요건 심사 후 지정

2. ’24년도 추진 실적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실시(’24. 5., ‘24. 11.)

○ 동포정책 주요 현안 설명, 운영사례 공유 및 동포정책 관련 의견 청취

3. ’25년도 추진계획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실시(연중)

○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자 협의회 구성 및 정례적 회의 개최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25. 상)

○ ‘25. 6.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만료에 따른 신규 및 재지정 시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추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포체류지원센터”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 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센터 지정 확대	5개	5개	관련 공문 등
‘24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 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간담회 개최	2회	2회	보고서 등
’25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 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간담회 개최	2회	-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4-2-2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행정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동포 특성을 반영한 안내서비스 제작

□ 과제 내용

○ 동포 맞춤형 체류제도 안내서 발간

- 동포 비자 및 체류제도, 출입국관리법령 주요 위반사례,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 동포 맞춤형 체류제도 안내서를 다국어로 제작·배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0. 안내서 제작

○ 2022. 10.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4개국어 제작·배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례 조사 및 의견조회 → 안내서 제작·배포

2. '24년도 추진 실적 ('23년 종료)

3. '25년도 추진계획 ('23년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 체류 안내 강화	출입국서비스 접근성 제고	업데이트 자료 배포 여부	1건	1건	홈페이지 업데이트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4-2-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특정 국가 동포를 대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사회 갈등 요인으로 기능함에 따라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 통합 추진

□ 과제 내용

○ 재외동포 인식 정립 및 동포정책 이해를 위한 홍보·언론대응

- 사업·행사 홍보가 아닌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역할 및 정책방향 홍보

※ 국내 동포 언론사,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동포지원단체, 동포밀집지역 지자체, 언론·SNS 등을 통한 홍보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대

- 재외동포재단의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과 연계하여 국내 체류 동포 및 국민 대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9. 방문취업(H-2) 동포 대상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동포지원단체, 관계부처

○ 추진절차 : 홍보사례 발굴→언론 대응, 법무부-타부처 협업 교육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성공적으로 정착한 동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4. 7.)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共存)'에 동포 인터뷰 게재

□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발표('24. 9.)

○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및 정착지원 강화 등 동포 정책방향 대국민 홍보

3. '25년도 추진계획

□ 재외동포 및 정책 홍보·언론대응,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협업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보도, 교육실시	2건	2건	관련 공문 등
'24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보도, 교육실시	2건	2건	관련 공문 등
'25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보도, 교육실시	2건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4-2-4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동포의 취업과 거주, 교육,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동포지원 정책 수립

□ 과제 내용

○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포의 취업 현황과 생활 실태, 자녀 교육실태, 동포 관련 정책 인식 및 향후 정주 계획 등 조사 시행

○ 동포지원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외국국적 동포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없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 **[참고]** 2017년부터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법무부 주관)를 통해 재외동포는 2년 단위(짝수년도)로 한국생활, 주거, 자녀교육, 한국어 능력 등 일부 항목 조사

3. ‘25년도 추진계획

□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실태조사 실시(’25.3. ~ 25.10.)

□ 소요예산 : 미정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동포 체류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연구용역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4-3-1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 범위 확대 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포로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

□ 과제 내용

○ 한국어 능력 수준과 체류자격 연계

- 한국어 등 기본소양을 갖춘 때만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을 허용하여 한국어 학습을 촉진, 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 유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지역동포영주(F-5-6R) 자격 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로 요건 강화('24. 3.)

3. '25년도 추진계획

□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기준 재정비 추진('25. 下)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에 따른 재외동포(F-4) 자격 1회 체류기간 차등 부여 기준을 상향하여 의사소통 능력 강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한국어 능력 강화	사회 통합 촉진	제도개선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한국어 능력 강화	사회 통합 촉진	제도개선	1건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4-3-2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 범위 확대 이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미래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지원

□ 과제 내용

○ 일정 연령 미만 아동 동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고시국가 미취학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확대

○ 동포 유학생 영주 신청요건 완화

- 국내 유학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 입양한인 2세대 등 동포 입증방법 확대

- 입양 동포 2세대 등 동포 입증이 곤란한 특수 사정의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동포입증 방법 관련 대안 제공

※ 호적 기록 미비, 소실, 오기 등 동포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고시국가와 마찬가지로 동포를 증명할 수 있는 국가별 공적서류(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등)로 입증 방안 마련

○ 동포 청소년 민족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여 동포 청소년의 한국어·한국문화 배움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발표(’24. 9.)

○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하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안 발표

3. ’25년도 추진계획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차별규정 폐지 방안 마련(‘25. 下)

○ 국적별 추가요건 없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로 아동·청소년 동포의 안정적 체류 및 미래 사회 인재 성장 지원

□ 동포 자녀 및 학부모를 위한 특성화고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 설명회 개최

○ 유관기관(교육청,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동포 밀집지역 내 학교 재학 동포 자녀 및 학부모 대상의 설명회 등 개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차세대 동포 국내체류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안정적 국내 체류	제도개선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차세대 동포 국내체류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안정적 국내 체류	제도개선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3-4-3-3	국내 정주 희망 동포를 위한 해외 홍보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장기체류 예정인 동포가 한국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입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국 전 홍보

○ 본국과의 생활・문화・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복수국적, 병역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 모국의 귀환 및 정착 유도

□ 과제 내용

○ 관계 기관(외교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국내·외 거주 재외동포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법·제도 설명 책자・리플릿 등 제작, 배포로 홍보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없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재외동포 대상 정착 지원 설명회 계획 → 관계기관(재외동포청 등) 협업 → 설명회 개최

2. '24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5년도 추진계획

□ 재외동포 대상 정착 지원 설명회 개최를 통한 국내 정착 유도

○ 국내에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동포가 입국 전부터 한국 적응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입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등 교육 실시

○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동포관련 제도 홍보 강화	동포관련 제도 홍보	설명회 개최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4-1-2-1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22. 8. 18.부 출국대기실 국가 운영 전환 후, 출국대기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 과제 내용

○ 인권친화적인 출국대기실 환경 조성

○ 송환대상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출국대기실 시설 개선 및 확장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8. 18. 출국대기실 국가 운영 전환(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 ‘23. 5. 15.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고시(법무부고시 2023-214)

○ ‘23. 10. 5.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인하대병원 간 업무협약 체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2. ‘24년도 추진 실적

○ 인천공항・김해공항 출국대기실 시설 확장

3. ‘25년도 추진계획

□ 출국대기실 환경개선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개선 결과실적	연 1회	1	보고 문서
'24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개선 결과실적	연 1건	2	보고 문서
'25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개선 결과실적	연 1건	1	보고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7
담 당 자	6급 오래균	이 메 일	lakyunoh@korea.kr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보호시설을 개방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이동권과 소통권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확대

□ 과제 내용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시설로 전환·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시설로 전환·운영('24.11.)

3. '25년도 추진계획

□ 화성외국인보호소 남성보호동 개방형 시설로 전환·운영(4/4분기)

○ 7월 중 전환을 위한 공사 착공, 12월 준공 예정

□ 소요예산 : 총 652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8,707	1,764	652	△63.0	
-국 비	▪ 일반회계	18,707	1,764	652	△63.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화성외국인보호소 남성보호동 개방형 시설 전환 652,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1건	2건	결과회신
'24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1건	1건	결과회신
'25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1건		결과회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9
담 당 자	5급 최연준	이 메 일	neojun3114@korea.kr

4-1-2-3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기간의 상한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대해 ‘23. 3.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과제 내용

○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신설 및 독립적 보호 통제 기구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3.)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 (‘24. 1.)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안

○ (‘24. 10.)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 →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안 시행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발족

2. ‘24년도 추진 실적

○ ‘24. 1.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안

○ ’24. 4. ~ 5.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 ‘24. 5. ~ 7. 규제심사

○ ’24. 7. ~ 9. 법제처 심사

○ ‘24. 9. ~ 10. 차관회의·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

3. ’25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25. 1분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5. 2분기)

□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 (‘25. 2분기)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발족(‘25. 6. 1.)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법령 정비를 통한 위헌성 해소	출입국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1건		관련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359
담 당 자	5급 곽은상	이 메 일	kwakes35@korea.kr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여 아동의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관리

□ 과제 내용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의무화 제도 도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관계부처 논의 등

- ('18. 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 ('18. 12. ~ '19. 7.)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이행추진자문단 구성, 운영
- ('20. 6. ~ 8.) 연구용역을 통한 해외사례 수집(태국, 베트남)
- ('21. 2.) 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안건 논의
- ('21. 3.) 제도 도입 관련 실무 회의(법무부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1. 4.)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안건 논의
- ('21. 4. ~ 10.) 법원행정처, 관련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의견 수렴

○ 법률안 발의

- ('22. 6. 28.)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권인숙 의원)
- ('23. 6. 15.)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소병철 의원)
  ※ 외국인아동의 출생통보제 등 추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대법원

○ 추진절차 : 법률안 통과 → 제도 세부사항 마련 → 시스템 등 구축 → 제도 시행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주관, 외국인정책과 협조

2. ‘24년도 추진 실적

□ 법적 기반 마련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논의 지원

- 법률안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여성아동인권과)

※ ’24. 5. 29.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폐기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24. 10. 4. 재발의) 논의 협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제도 도입 관련 국회 논의 지원	1회	1회	검토안(보고서), 회의록 등 논의실적
’24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제도 도입 관련 국회 논의 지원	1회	1회	검토안(보고서), 회의록 등 논의실적
‘25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재발의 법률안 논의 협조	1회		검토안(보고서), 회의록 등 논의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3648, 4110
담 당 자	5급 김도연, 6급 김인우	이 메 일	kdy927@korea.kr jikim433@korea.kr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활용을 통한 신속·정확한 피해자 발견과 보호

□ 과제 내용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

※ 업무처리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인신매매 방지 교육, 식별지표 활용 및 교육실적 제출 등을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

○ 식별지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직무 관련 공무원 실무교육 지속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4. 20.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23. 1. 1.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 ’23. 4. 4.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이하 “제1차 종합계획”] 」 수립·시행 (여성가족부 주관)

○ ’23. 9. 27. 「제1차 종합계획」 관련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시행 (여성가족부 주관)

○ ’24. 5. 1. 「제1차 종합계획」 관련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시행 (여성가족부 주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소속기관)

○ 추진절차 :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요청(여성가족부) → 종합(시행)계획 수립(법무부 본부) → 식별지표 활용(소속기관)

2. ’24년도 추진 실적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강화방안 시행 (’24. 2.)

○ ‘체류·단속·보호’ 등 업무단계별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별지표 활용 철저 및 성매매 혐의 외국인보호 시 식별지표 의무적 사용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외국어 번역 (’24. 6.)

○ ‘체류·단속·보호’ 등 업무단계별로 사용하는 국문본 식별지표를 영어·중국어·태국어로 번역하여 식별지표 활용성 강화

□ 여가부 제작 「식별지표 외국어 번역문」 배포 (’24. 8.)

○ 여가부 제작 12개 외국어* 번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소속기관 배포를 통한 지표 활용성 및 식별률 제고

*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우즈베크어·러시아어·네팔어·필리핀(따갈로그어)·인도네시아어·캄보디아(크메르어)·몽골어

□ 소속 기관별 자체 교육 (’24. 10. ~ ’24. 11.)

○ 여성가족부 제작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동영상 교재를 활용, 소속 기관별 체류·단속·사범·보호담당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

□ 소속기관 대상 간담회 (’24. 11.)

○ 수도권 소재 기관*의 인신매매 방지 업무수행 실태 점검, 관리자 및 체류·단속·사범·보호 실무 총괄 담당 대상 의견수렴 등 실시

* 서울/인천/수원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3. ’25년도 추진계획

□ 인신매매 방지 자체 직원교육 강화 (연 1회 → 분기 1회)

○ 인신매매 등 방지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인신매매방지법」에 규정된 매년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소속 기관별 분기 단위 1회로 강화

□ 소속기관 대상 간담회 (반기 1회)

○ 지표 활용 등 업무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 등 반기 단위 권역별* 기관 방문을 통한 업무관심도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경인1권역(청 단위), 경인2권역(사무소·보호소), 중부권, 남부권

□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최신화 (필요 시)

○ 「인신매매방지법령」 개정 및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 등을 반영하여 지침 최신화를 통한 업무 활용성 강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연 4회 이상	5회	관련 공문
		지침 제정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제정	1건	1건	관련 공문
’24.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연 4회 이상	4회	관련 공문
		식별지표 번역	번역 외국어 개수	3건	3건	번역 결과물
’25.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소속기관별 분기 1회		관련 공문
		소속기관 간담회	지표 활용현황 등 업무추진 점검 실적	반기 1회 (반기 당 2개 권역)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 당 자	6급 명보경	이 메 일	audqhrud@korea.kr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평가 및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등을 통해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인정 심사제도 구축

□ 과제 내용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난민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평가·관리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추진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난민전담공무원

- 연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난민(전문)통역인

- '20.~현재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연 4회)

- '21.~현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실시(연 1회)

- '22.~현재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연 2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추진절차

- 난민전담공무원 : 교육계획 수립, 사무소별 참석자 취합 →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과 협의를 통해 교육 컨텐츠 선정 및 제작(수정)

- 난민(전문)통역인 : (위탁사업)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통역평가) 평가계획 수립 → 평가 실시, (보수교육) 교육계획 수립 → 보수교육 실시

2. '24년도 추진 실적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연간 6회 이상 국제기구 관계자·대학교수·법률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 교육프로그램 주기적으로 운영

-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점기관 난민전담공무원 자체교육 실시(2회)

□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난민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균형있는 난민정책' 개발 및 난민심사 적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 외부 전문기관의 통역능력 선별시험, 능력별 맞춤형 교육, 최종 인증평가, 보수교육 등 인증 절차를 통과한 민간인 106명(25개 언어)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외부전문가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능력을 평가하여 소속기관 등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 실시

3. ’25년도 추진계획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연중)

○ 국제기구 관계자·대학교수·법률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는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주기적 운영(6회)을 통한 난민심사 역량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연중)

○ 통역인 인력풀(Pool) 확대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홍보 강화 및 지속 추진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연중)

○ 외부 전문가를 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공유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난민통역 품질 제고

○ 난민전문통역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사례 및 통역 노하우 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 추진

□ 소요예산 : 총 213.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13.6	213.6	213.6	0.0	
-국 비	▪ 일반회계	213.6	213.6	213.6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 교육 진행 및 교재 발간 등 15,600,000원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 난민통역 인증제 79,600,000원

- 난민통역인 교육 78,440,000원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 통역능력 평가 4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교육실적	10건	10건	보고서 등
'24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인증제 사업 및 교육실시 등	10건	10건	보고서 등
'25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인증제 사업 및 교육실시 등	10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61
담 당 자	5급 김정욱	이 메 일	kwjw123@korea.kr

4-3-1-2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입국항 난민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난민은 적극적으로 난민심사에 회부하는 한편, 남용적 난민신청 방지

□ 과제 내용

○ 출입국항 난민심사 담당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항만 난민심사 거점기관 지정 및 난민신청자 대기장소(시설)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 7월, 출입국항 난민심사 제도 도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 '24년도 추진 실적

□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조치

□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면담 등 심사진행 과정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자료 작성 및 배포

3. ’25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건부 입국허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 면담 등 심사진행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참고자료 작성 및 배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입국항 난민심사 체계 구축	자료 발간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	1건	1건	보고서
’25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입국항 난민심사 체계 구축	자료 발간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	1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61
담 당 자	5급 김정욱	이 메 일	kwjw123@korea.kr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의신청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신속하게 보호

□ 과제 내용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제고

-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청취 확대,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 실시, 이의신청 심의 진행 경과 조회시스템 구축·운영 등

○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 제고

-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품질 향상,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UNHCR 공동) 운영, 주제별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제정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3. 7. 난민위원회 구성(2013. 7. 1.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

○ 2020. 2. 난민위원회 심의 지원 등 전담부서 '난민심의과' 신설

○ 2022. 1.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신청 제도 도입

○ 2022. 10.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정·공개

○ 2023. 2.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

※ 난민위원 제척·회피 근거 신설(제12조의 2), 난민조사관의 직급·경력 및 교육 이수 의무 등 자격 요건 신설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시행계획 수립 → 과제 이행(난민위원회 개최, 교육, 제도개선 등) → 결과 보고

2. '24년도 추진 실적

□ 난민위원회 개최

○ 난민위원회(5회), 분과위원회(48회) 등 총 53회 개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 3,022건 심의(연중)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청취 확대(연중)

※ ('22) 127건 → ('23) 172건 → ('24. 9월말) 198건('22년 대비 약 56%⇑)

○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서 추가 발간·배포('24.9., 기존 6개 → 22개 언어)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 주제별 난민지위심사 안내매뉴얼(특정사회집단 구성원 편) 제정('24.4.)

○ 법무부-UNHCR 공동 난민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회, '24.8., 12.)

○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개최(6회, 연중)

3. '25년도 추진 계획

□ 난민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심의·의결을 위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개최(연중)

□ 이의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확대

○ 추가면접, 서면질의 등을 통한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제공 확대(연중)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난민조사관 필수교육 및 연구모임 개최(연중), 법무부-UNHCR 공동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연중) 등

□ 주제별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제정

○ 군복무·징집 사유, '체재중 난민'(Refugee Sur Place) 사유 등(연중)

□ 소요예산 : **총 3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8	38	38	0.0	
-국 비	▪ 일반회계	38	38	38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000원, 난민위원회 운영비 4,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심의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5건	법령, 규칙, 보고서 등
'24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심의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5건	법령, 규칙, 보고서 등
'25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심의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	법령, 규칙,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전화번호	02-2110-4031
담 당 자	5급 박병건	이 메 일	okkev813@korea.kr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정세 악화, 난민신청자 출신국 다변화(현 136개국) 등 추세에 대응하여 진정한 난민을 신속·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난민심사에 중요한 판단자료인 국가정황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과제 내용

○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 국가정황정보 전문 분석 자료집 발간
-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국내/국외) 신규 운영
-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자료를 전문 번역기관에 의뢰하여 국문 번역한 자료집 등 발간 지속 추진 등

○ 국가정황정보 관리·활용 체계 고도화

-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신규 구축 추진
- 1차 심사기관 난민심사 담당자 대상 국가정황정보 순회 교육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1. 7.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 채용(5명, 외국어·지역학 등 전문가)

○ 2023. 12.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담팀 신설(기존 각 분과 소속에서 독립)

○ 2024. 9.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 추가 채용(4명, 외국어·지역학 등 전문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 채용 → 전담팀 운영 → 평가・환류

2. ’24년도 추진 실적

□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기관 교류·협력 기반 마련

○ 호주(’24.6.), 일본(’24.8.), 오스트리아(’24.11.) 국가정황정보 전담기관과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 등 실시

□ 국가정황정보 전문 분석 자료집 등 발간

- 주제별 국가보고서 5건(이란, 미얀마, 러시아, 우간다 등) 발간(연중), 일일·월간·특이 난민동향 분석(연중)

□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번역·활용

○ 공신력 있는 해외 주요 국가·기관 등에서 발간한 해외 국가정황정보 보고서(약 40여 건)를 국문으로 번역·활용(’24. 12.)

□ 국가정황정보 순회교육 실시

○ 1차 심사기관 난민담당자 대상, 국가정황정보 조사·활용 기법 교육(’24. 5.~6.)

3. ’25년도 추진 계획

□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

○ 공신력 있는 주요 국가정황정보 출처를 자동 검색·수집하여 번역하고, 수집된 국가정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연중, 계속사업)

□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기관 교류·협력 강화

○ 북미, EU, 호주 등 주요 난민 수용 국가·지역 국가정황정보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연중)

□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UNHCR과 공동으로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교육 과정 운영(4/4 분기)

□ 해외 국가정황보고서 번역·감수 사업 지속 추진

○ 난민심사 및 소송 과정에서 빈번하게 인용하는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번역 자료집 발간(4/4 분기)

□ 소요예산 : **총 3,05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92	210	3,058	1,456.2	
-국 비	▪ 일반회계	192	210	3,058*	1,456.2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848,000,000원('25년분)

○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감수비 192,200,000원

○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기관 업무 협의 17,501,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5건	보고서 등
'2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5건	보고서 등
'25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전화번호	02-2110-4031
담 당 자	5급 박병건	이 메 일	okkev813@korea.kr

4-3-2-1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국내 정착 현황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내 정착에 관한 정책 개발 마련

□ 과제 내용

○ 국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체류실태, 사회 정착 및 통합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항목 및 지표 개발

○ 거주 지역별 표본 추출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설문지표를 활용한 실태조사

* 난민인정자 약 300명, 인도적체류자 약 500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등 경제적 자립도 분석(12. 9.)

3. ’25년도 추진계획

○ ’25. 9월　 난민인정자 기초생활 수급현황 자료 요청(복지부, 지자체)

○ ’25. 10월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소요예산 : 미배정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국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정책연구용역

- 미배정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국내 정착도 파악	연구 결과물	1건	1건	보고서
‘25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국내 정착도 파악	현황분석 보고서	1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4-3-2-2	난민 처우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난민 처우 지원 방안을 통해 국내 체류 난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 내용

○ 재정착난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현안 공유, 소통 강화, 협업방안 마련 등을 위한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 재정착난민 정착지 현장 방문, 멘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 구축・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4. ~ '22. 5. 매년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행사계획 수립, 부처별 의견 취합 → 행사 개최

2. '24년도 추진 실적

□ 난민의 처우 등 정보 접근성 향상

○ 비영어권 출신자 난민 등을 위해 난민 신청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소개 리플릿을 아랍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작・배포

□ 난민지원 체계 구축

○ 재정착난민의 안정적·효율적 지역 정착을 위해 정착지(부산시) 관계기관 및 멘토들과 간담회 등 민·관 협력관계 구축

○ 재정착난민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착난민실무협의체’ 개최('24.6.13.)

3. ’25년도 추진 계획

○ 난민처우협의회 개최(3분기)

○ 재정착난민 멘토 간담회 개최(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처우 개선	난민처우 개선	처우개선 등 추진 실적	2건	2건	보고서 등
’24	난민처우 개선	난민처우 개선	처우개선 등 추진 실적	2건	3건	보고서 등
’25	난민처우 개선	난민처우 개선	처우개선 등 추진 실적	2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글로벌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착 난민제도 운영

□ 과제 내용

○ (재정착난민 제도)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제공

- 수용 대상, 규모 등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 후, 수용계획 확정
- 서류심사, 현지 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수용 대상 선발 및 수용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초기 정착 지원 제공
- 지역사회 정착 후, 정착 지원 지속 및 정착 상황 모니터링

○ (학생난민 프로그램)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 후보자 선정 시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 진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재정착난민 제도

- ’14. 10.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5. 4.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1차 시범사업(’15년~’17년)으로 총 86명 수용
- ’18. 7.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2차 시범사업(’18년~’19년)으로 총 80명 수용
- ’20. 7.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 ’21. 3.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 ’22. 3.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 ’20년, ’21년 연도별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재정착 사업 순연
▪ 엔데믹 이후 ’22년 67명, ’23년 10명 입국

- ’24. 5.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23년 정규사업으로 전환 후 ’24년 7명 입국

○ 학생난민 프로그램

- ’22. 6. 「학생난민 민·관 후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2. 8.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 최종 선발 대상자 확정
- ’22. 7.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22. 12. 최종 대상자 입국
- ’23. 7.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24. 8. 난민 학력인증 관련 교육부 접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2. ’24년도 추진 실적

□ ’23년 해외난민 수용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24년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시의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안 마련

□ ’24년 재정착난민 수용사업 건강검진 절차 개선

○ 현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재정착난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공중보건 유지 도모

□ 재정착난민 국내 정착 지원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수용된 재정착난민 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 후, 생활 멘토링 사례관리 등 정착 지원 지속

○ 지역사회 정착 후 가족별 멘토링 및 사례관리 지속

□ 학생난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접촉

○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면담 등 진행

3. '25년도 추진 계획

□ 재정착난민 수용계획 수립 및 추진 (1분기)

○ 수용 대상, 규모, 사업국 등 '25년도 수용계획 수립

□ '25년도 재정착난민 수용사업 진행 (3~4분기)

○ '25년 수용계획 대상 서류심사, 신원 조회, 현지 면접, 건강검진 등 수용 절차 진행

□ 재정착난민 국내 정착지원 (3~4분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초기 정착지원

○ 지역사회 정착 후 가족별 멘토링 및 사례관리 지속

□ 소요예산 : 총 33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63	420	338	△19.5	
-국 비	▪ 일반회계	463	420	338	△19.5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재정착난민 국내정착교육비 59,576,000원

○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153,600,000원

○ 재정착난민 수용 위탁 100,000,000원

○ 재정착난민 선발 국외여비 24,79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추진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1건	보고서
'24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1건	보고서
'25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

□ 과제 내용

○ 난민관련 국제 협의체 참여

-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관련 논의, 재정착 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재정착·보충적 수용경로에 대한 협의(CRCP), 글로벌난민포럼(GRF) 등 난민 관련 국제회의 및 협의체 등

○ UNHCR, IOM 등 난민관련 국제기구와 교류 및 협력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과제 추진

○ '23.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UNHCR, IOM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2. '24년도 추진 실적

□ 난민 관련 국제회의 등 참석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7월)

○ 제75차 UNHCR 집행이사회 참석 (10월)

□ UNHCR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 유엔난민기구와 고위급 회의 개최 (4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보 고위급 회의

○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면담 (9월)

- 난민정책과장과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면담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면담 (9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면담

○ 법무부 장관과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간담회 개최 (11월)

- 법무부 장관과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면담

3. '25년도 추진 계획

□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상시)

○ UNHCR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교류 지속

- 난민심사관 전문교육 지원, 국가정황정보 수시 제공을 위한 교류

- 난민제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각국 정부와의 협력 지속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2건	보고서
'24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2건	보고서
'25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위기, 지방소멸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및 추진

□ 과제 내용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

- 인구감소, 지방소멸, 인력난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전담기구 신설 검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8.) 국민, 각계 전문가 대상 세미나, 토론회 등 공론화 실시

○ ('22. 11.) 법무부 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 ('23. 12.)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 수립·발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방안 검토 → 관계부처 협의

2. '24년도 추진 실적

□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24. 2.) 국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을 반영하여 「정부조직법」 발의 지원

※ '24. 2. 2.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국회 임기만료 폐기)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마련

○ ('24. 9.)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대비,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마련 및 발표

3. '25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방안 검토

○ ('25. 年中) 정부조직 개편 동향을 고려,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방안 검토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청 신설방안 마련	1건	1건	보고서
'24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1건	1건	법안 발의
'25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방안 검토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관련 검토	1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219
담 당 자	5급 김명훈	이 메 일	mhkim2920@korea.kr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비한 새로운 이민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제시

○ 외국인정책 관련 체계적·효율적 관리(중복, 사각의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증진 및 정책 조정 기능 마련

□ 과제 내용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기본법‘으로 개정

○ 부처별 외국인정책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 논의 및 연석회의 시행 등 타 위원회와 협력 강화

*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가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정책위원회 통합 논의

- (’15.12.) 경제관계장관회의 시 부처별 외국인정책 관련 위원회 통합 논의
- (’18.02.) 외국인정책위·다문화가족정책위 연석회의 개최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 심의·의결

- (‘18.05.) 부처 간 견해 차이로 통합 논의 중단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정책연구용역 실시

- (‘23.12.)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이민법제 개편방안」, 「이민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무조정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 추진절차 : 국조실 주관 회의 참석 및 통합(안) 마련 → 관계부처 의견 조정 → 위원회 통합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국조실 주관 "외국인력통합관리 실무 T/F" 참석('24.3.~)

○ 외국인정책 연계 및 의사결정 체계 합리화 방안 등 관계부처 논의

○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외국인정책 관련 심의기구 일원화 결정

※ 현행 3개 위원회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외국인·다문화가족·외국인력) 및 외국인정책협의체(의장:법무부장관) 설치

□ 위원회 일원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초안 마련('24.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관련 법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국조실 주관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참석('24.7.~)

○ 제1차, 제2차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및 실무회의 참석 및 대응

- 심의기구 일원화 관련 우리부 법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논의

※ (여가부) 다문화가족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 유지, (고용부) 외국인고용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 유지, 외국인력전문위 위임사항 확대 등 의견 제출

□ 이민정책 포럼 개최 ('24.12.)

○ 새로운 이민정책 기본방향으로서 지역 이민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등 법제화 추진 방향 모색

3. '25년도 추진계획

□ 국조실 주관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참석 및 대응

○ 외국인정책 관련 심의기구 일원화 방안(국조실) 대응

○ 국조실·법무부·여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 지속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비하여「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전면 개정 또는 '(가칭)이민정책 기본법' 제정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개정 등 정비	연구용역 실적	2	2	연구보고서
'24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개정 등 정비	관련 회의 참석 및 포럼 개최	2	2	결과보고서
'25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개정 등 정비	관계기관 회의 참석 등 논의	2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6 / 4113
담 당 자	6급 이은주, 6급 오명수	이 메 일	aabir097@korea.kr kyebaeg@korea.kr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심의·조정

○ 외국인정책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외국인정책의 기본원칙·방향·과제에 대한 정례적 논의

□ 과제 내용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 외국인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 이민자 비자, 체류, 쿼터, 인력수급 등 외국인 관련 현안 논의 및 지자체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 위원 부처(기재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

○ 추진절차 : 외국인정책 관련 안건 수요조사 → 관계부처 등 실무자 회의 개최 → 관계부처 대상 심의안건 의견 조회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

2. '24년도 추진 실적

□ 제9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24.2.)

○ 제8기 민간위원(8명) 임기만료('24.2.3.)에 따라 성별, 지역,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민간위원 재위촉(5명) 및 신규 위촉(3명)

□ 제28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33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일자 : ‘24.5.7. ~ 5.10.(서면회의) / ’24.4.26. ~ 5.2.(서면회의)

○ 내용 : 2023~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심의·확정

□ 제29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34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일자 : ‘24.10.16. ~ 10.22.(서면회의) / ’24.10.4. ~ 10.11.(서면회의)

○ 내용 : 202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안) 심의·확정

□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35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24.12. 예정)

○ 안건 :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개최일자	분과위원회	주요내용	비고
‘24.2.16	국경·체류·안전	‘24년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 시행방향 및 자진출국 유도 방안 논의	
‘24.5.28	중앙·지방협력	지역특화비자제도 등 6개 지자체 제출안건(18건) 검토 및 토론	
‘24.8.23	거주·통합·국적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방안 등 안건(5건) 논의 및 종합 토론	연석회의
‘24.8.23	중앙·지방협력		
‘24.9.10	국경·체류·안전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 시행 등 불법체류 감소방안 논의	
‘24.10.2.	거주·통합·국적	계절근로자 효율적 관리 방안 등 안건(4건) 논의 및 종합 토론	대면+화상회의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실무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전문인력유치지원, 거주·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협력) 정례적 개최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6	6	결과보고서
’24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6	10	결과보고서
‘25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6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5-1-2-2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 마련

□ 과제 내용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추가 및 배정인원 결정 등 안정적인 계절근로 인력 공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

○ 2017.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2022. 6.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시행

※ 5개 시·군, 5개소 선정,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190명

○ 2023. 1. 공공형 계절근로 정식운영

※ 19개 시·군, 19개소 선정,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990명

○ 2024. 4. 관계부처 협업 '농·어업 외국인력지원TF' 발족

※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로 구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간 협의 → 계절근로 인력 선발·도입·관리 등 운영

2. ’24년도 추진 실적

□ 관계부처 협업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 구성

3. ’25년도 추진계획

□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 지속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계절근로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5회	10회	관련문서 등
’24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관계부처 협업TF 구성	1회	1회	관련문서 등
’25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관계부처 협업TF 운영	1회		관련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87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신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다문화사회 전문가* 를 양성하여 고품질 이민행정 교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을 취득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 과제 내용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 양성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연 2회)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연 1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 1. 출입국관리법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 신설

○ '13. 1. 같은 법 시행규칙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 등 조항 신설

○ '14. 11.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마련

○ '20.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개정

○ '21. 9.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기관

○ 추진절차 : 교육수요 파악 → 교육과정 개설 및 실시 → 결과 보고

2. '24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24. 3. / '24. 9.)

□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24. 12.)

3. '25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양성 교육 실시

○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25. 3 / '25. 9.)

□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25. 12.)

☐ 소요예산 : 총 113백만 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13	113	113	0.0	
-국 비	▪ 일반회계	113	113	113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강사료 103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실시 횟수	3회	3회	계획, 결과보고
'24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실시 횟수	3회	3회	계획, 결과보고
'25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실시 횟수	3회		계획,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 당 자	5급 박창현	이 메 일	pch512@korea.kr

5-2-1-2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등을 통한 소수언어 구사자 인력풀(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 과제 내용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추진을 통한 소수언어 통역인 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난민(전문)통역인

- ’21.~현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실시(연 1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추진절차

- 난민(전문)통역인 : (위탁사업)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시행

○ 외부 전문기관의 통역능력 선별시험, 능력별 맞춤형 교육, 최종 인증평가, 보수교육 등 인증 절차를 통과한 민간인 106명(25개 언어)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 말라얄람어, 스와힐리어, 타갈로그어, 트위어 등 소수언어 구사자 5명 위촉

3. ’25년도 추진계획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연중)

○ 통역인 인력풀(Pool) 확대하기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 우대 혜택 등 검토

○ 통역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예산에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통역인 확대	인증제 사업 추진	1건	1건	보고서 등
’24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통역인 확대	인증제 사업 추진	1건	1건	보고서 등
’25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통역인 확대	인증제 사업 추진	1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61
담 당 자	5급 김정욱	이 메 일	kimjw123@korea.kr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을 통한 직무역량 제고 및 정책환경 대응력 강화

□ 과제 내용

○ 출입국관리직 전문 시험과목으로 「이민법(학)」 도입

※ '76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시 「국제법(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선정된 후 상당한 시간 경과 및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 12. ~ '19. 11.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협의

○ '19. 12. 「출입국관리직 전문시험 도입에 관한 연구」 실시

○ '21. 10. ~ '21. 12. 출입국관리직 전문 시험과목 도입에 관한 '국민여론 수렴',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공청회'

○ '22. 4. ~ '22. 12.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을 위한 법령·정책 연구」

○ '23. 12.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목 변경 권한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부여

○ '24. 4. 「이민법(개론)」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도입(안)에 대한 의견 마련 및 인사혁신처 제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인사혁신처, 관계 기관(전문가)

2. ’24년도 추진 실적

□ 「이민법(개론)」의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 선택과목 추가(안) 마련 (’24. 5.)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으로 「이민법(개론)」을 법령에 반영하고 향후 공개채용 과목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인사혁신처, 「이민법(개론)」의 선택과목 추가 확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24. 9.)

□ 「이민법(개론)」 세부과목 구성 방안 마련 (’24. 11.)

○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목으로 「이민법(개론)」 도입이 가능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9급 경력채용 시 「이민법(개론)」 시행을 위한 ‘세부과목 구성(안)’ 마련

※ 출제진 구성, 출제 방법 등 기술적인 방안은 ’25년도 경력경쟁 채용을 실시할 경우 시험 시행계획 준비 단계에서 출입국기획과와 공동으로 마련 예정

3. ’25년도 추진계획

□ 관계부처(인사혁신처) 업무협의 (연중)

○ 「이민법(개론)」이 출입국관리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업무협의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 제출 및 공유	결과 공유 및 활용	1건	1건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인사혁신처 업무협의	업무협의 실적	1건	1건	출장 결과보고서
’24.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목 반영	「이민법」 과목구성(안)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1건	1건	관련 보고서
’25.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 반영	업무협의 실적	연 1회		관련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 당 자	6급 명보경	이 메 일	auqhrud@korea.kr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출입국관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단위 이민정책 수요발굴·자문 및 이민 행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과제 내용

○ 이민행정 분야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 운영,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지원 등

- 지방 출입국관서와 시·도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가칭)지역 이민 주민위원회’ 신설 등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과제 추진 연혁 (경과)

○ (‘23. 9.)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안건 논의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 (‘23. 9.)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관한 국가정책수요 의견 제출 (법무부 →행정안전부)

- (‘23. 12.) ’2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지자체 이민정책 강화” 내용으로 국가정책수요 의견 반영(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자체

○ 추진절차 :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연구용역 수행 → ‘ (가칭)지역 이민 주민위원회’ 구축(안) 마련 → 지자체 협의 → ‘ (가칭)지역 이민 주민위원회’ 구성

2. ‘24년도 추진 실적

□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수행업체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4. 6. 17. ~ 12. 15.

- 연구용역 착수보고(‘24. 6. 25.), 중간보고(‘24. 9. 24.) 개최 및 매월 보고서 검토

3. ‘25년도 추진계획

□ 중앙-지방 거버넌스 구축 논의

-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방안 실무자급 논의*

*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법적 근거(재한외국인법, 지방자치법, 조례 등) 마련에 대한 논의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광역단위 이민협력 회의	1회	1회	개최 실적
’24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방안 연구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1건	1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5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방안 논의	중앙-지방 거버넌스 구축 논의	1회		회의 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을 통한 이민정책 개발

-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민간전문가, 지역연구원 등 연구계, 광역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이 협력하여 이민정책 연구 저변 확대

□ 과제 내용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 플랫폼인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포럼·간담회 개최 등으로 네트워크 연구 결과 정책화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 중앙-지방-연구계 합동 이민정책 협력·발전을 위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안 마련

- 광역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대상 ‘지역이민행정 연구 네트워크’ 참여 접수(‘23. 8. 9. ~ 18.)

- 광역지자체 12개, 지역연구원 11개,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완료

- 법무부-광역지자체 이민정책 협력·추진 정책세미나 개최(’23. 8.~9.)

-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 (출범식 개최, ’23. 11.)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총 46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단체

*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및 광역지자체(12개), 지역연구원(31개)

○ 추진절차 : 네트워크 구성 → 포럼 및 간담회 개최, 연구총서 발간 → 정책화(외국인정책위원회 중앙·지방실무분과위원회 상정)

2. '24년도 추진 실적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인구위기 시대,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과 도전과제' 주제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24. 6. 18,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논의('24. 9.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이민행정학회·이민정책학회)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워크숍 개최

- 중앙부처, 지자체, 이민정책연구원 및 지역연구원이 참석하여 외국인정책 발표, 질의응답 등 종합토론회 개최 (권역별 진행)

※ 서울(6.13), 대구·경북·강원(6.27~28), 광주·전북·전남·제주(9.26~27), 부산·울산·경남(10.31.~11.1.), 대전·세종·충북·충남(11.21~22), 경기·인천(12.4.) 등 총 6회 개최,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총 609명 참석

3. '25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 합동 연구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포럼·간담회 개최 및 참석 (연 1회 이상)

□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시 제안·건의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지역연구원 위촉, MOU 체결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이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포럼, 간담회 등 개최	1회	1회	개최 실적
'24	지역이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포럼, 간담회 등 개최	2회	4회	개최 실적
'25	지역이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포럼, 간담회 등 개최 및 참석	1회		개최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역 단위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추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및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2조 (기능)에 따라 이주·이민 관련 조사·연구·자문 및 교육훈련 수행

□ 과제 내용

○ (연구) 저출생·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는 국가·지역 단위 발전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의 수립·활용을 지원하는 종합·체계적 연구 수행

- 주무부처(법무부) 정책현안 및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증거기반의 연구과제 수행

○ (교육) 지방소멸 위기 및 외국인 주민 수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및 유관기관 종사자, 국민 등 대상의 이민정책 인식개선 목적 교육사업 수행

○ (협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외 이민정책 관련 전문 학술활동 지원 및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07.)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1958호)」 발효

○ ('09.12.) IOM이민정책연구원 개원(경기도 고양시)

○ ('14.07.)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조약 제2196호)」 개정

○ ('23.0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연구원 설립 및 국가 지원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민간경상 국고보조금, 단위사업: 국제이민협력-이민정책연구원 운영사업) 예산으로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인구구조변화·지역소멸 등에 대응하는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등 이민정책 연구·교육·협력사업 강화

○ (연구) "이민과 경제: 이민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등 중장기 중점과제 및 "취업이민제도 설계와 정주에 관한 연구" 등 기본과제 수행

※ 중점연구 2건, 기본연구 9건, 통계시리즈 1건, 정책연구 2건, 이슈·통계브리프 21건 등

○ (교육)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콘텐츠 "문화로 접근하는 이주시리즈" 등 제작·배포,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운영 등

○ (협력) 일본 재류관리청, 오사카공립대 등과 "한일 이민정책 변화와 이민정책동향" 간담회 개최, 현안 논의 등

□ 이민데이터센터, 교육센터 신설(확대)

○ 연구인력 증원(박사 2명, 석사 3명) 등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 현안연구 강화

- 이주·이민데이터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등

○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확대

- 이주배경, 문화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국민, 유관단체 종사자 등 대상의 교육과정 확대

3. ’25년도 추진계획

□ 중장기 국가·지역단위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중점·기본 연구과제 수행 및 지역 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협력 강화 등

○ (정책연구실·이민데이터센터 운영) 통계 DB 운영 및 증거기반의 다년도 중점·기본 연구과제 등 수행, 이민정책 현안 적시 대응

-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심층분석”, “국내 외국인유학생 유치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등 증거·데이터 기반의 중장기 중점 기본 연구과제 발굴·수행

○ (이민자 인식개선 교육)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운영 및 전문 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인력풀 관리 등

□ 소요예산 : **총 3,45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268	2,562	3,455	34.9	
-국 비	▪일반회계	2,268	2,562	3,455	34.9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603,316천원, ’24년 대비 동결)

○ 이민정책연구 507,000,000원

○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1,000,000원

○ 이민행정연구 국제협력 4,316,000원

○ 이민정책연구 전문저널 ‘이민연구’ 발간 7,000,000원

○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사업 84,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183점	228점	(A×10)+(B×7)+(C×5)+(D×3) ※ 연구유형별 A : (기본/수탁)연구보고서 B : 정책보고서/통계시리즈 C : 정책브리프/워킹페이퍼 D : 이슈/통계브리프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성지표)	80점	89.3점	$\frac{\sum_{k}^{K}(\sum_{i}^{I}\frac{score_i}{I})}{K}$ score: 외부평가점수(100점 만점) I : 연구성과물 1건당 외부 평가자 수 k : 평가대상 연구성과물의 수 ※ 연구성과물 외부평가점수 기준 평가대상: 연구, 정책보고서, 정책브리프, 워킹페이퍼 ※ 내부지침: 80점 이상 발간승인
'24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236점	297점	(S×20)+10(A×10)+(B×7)+(C×5)+(D×3) ※ 연구유형별 S : 중점연구보고서 A : (기본/수탁)연구보고서 B : 정책보고서/통계시리즈 C : 정책브리프/워킹페이퍼 D : 이슈/통계브리프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성지표)	80점	85.9점	$\frac{\sum_{k}^{K}(\sum_{i}^{I}\frac{score_i}{I})}{K}$ score: 외부평가점수(100점 만점) I : 연구성과물 1건당 외부 평가자 수 k : 평가대상 연구성과물의 수 ※ 연구성과물 외부평가점수 기준 평가대상: 연구, 정책보고서, 정책브리프, 워킹페이퍼 ※ 내부지침: 80점 이상 발간승인
'25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259점	-	상동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성지표)	80점	-	상동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1
담 당 자	7급 윤동운	이 메 일	headrock999@korea.kr

5-2-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법무부 이민정책 추진방향 설정, 정책·법령 개선 방향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설치

※ 2011년부터 운영된「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

□ 과제 내용

○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정책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2.) 이민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법무부훈령 제1406호)」

○ ('22. 11.) 위원 위촉식 및 제1회 회의 개최

※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22. 11. 25. ~ '24. 11. 24.)

○ ('23. 11.) 제2회 회의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장관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개최

2. ’24년도 추진 실적

□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24. 6.) 제3회 회의 개최

○ (‘24. 11.)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 이민정책위원회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3. ’25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및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회의 개최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회	1회	결과보고서
’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회	1회	결과보고서
’25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219
담 당 자	6급 명보경	이 메 일	auqhrud@korea.kr

5-3-1-1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출입국 민원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사증 신청부터 입국 후 국내 체류, 국적취득 등 전반 과정에서 단일 경로를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적시 제공이 가능한 비대면 기반으로 실현

□ 과제 내용

○ 전자민원 서비스 혁신

- 이민행정 관련 민원시스템을 연결하는 일원화된 민원 사이트를 통해 민원 통합신청과 접근 편의성 향상, 민원인 대면 방문 최소화

○ 지능형 모바일 대민 서비스

- 혁신적 모바일 기술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도입하여 대민 민원업무의 대부분을 모바일 기반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신청을 활성화

○ 효율적인 업무현장 지원

- 민원 업무 매뉴얼의 전자화 및 관리, 제출 서류의 전자화, 사회통합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온라인 상륙허가 서비스 확대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 지속성장 기반 확보

-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및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정보 인프라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및 전사 통합된 관점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1. 10. 과제 추진, 2022. 7. 과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사업」이 포함

○ ’23. 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도입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신청

○ ’23. 8. 24년도 예산 심의에서 제외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23. 9. 2023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

○ ’23. 10. 2023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확보 →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4분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부처 현장방문(1/4분기)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획재정부 주관 보고회의(3/4분기)

□ 예비타당성조사 철회(4/4분기)

3. ‘25년도 추진계획

□ 예산 신청(1/4분기)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24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통과 여부	통과	관련 문서
'25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구축	ISMP 예산 확보 추진	예산 확보	확보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9
담 당 자	7급 김순일	이 메 일	soonil52@korea.kr

5-3-1-2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시스템 노후화로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는 사회통합 정보망을 재구축하여, 신규 사회통합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 향후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비대면 화상교육,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온라인 평가 시스템, 결제 시스템 등 도입

○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정보망 개편

- 모바일 사회통합정보망 구축, 다국어 서비스 지원,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 전자민원으로의 전환 등 포털 전면 개편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3.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반영

○ ‘22. 7.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사업자

○ 추진절차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확보 →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25년도 추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과제번호 : 5-3-1-1)에 포함시켜 추진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94@korea.kr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24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실물 신분증의 신뢰성, 내구성, 보안성, 정보보호 취약성 등을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 외국인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이용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외국인 신분확인 체계를 확립하고 모바일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전자민원 활성화

□ 과제 내용

○ 공통 플랫폼 개선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수용 운영을 위한 기반 증설

○ 발급·카드관리·연계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의 발급 관리, NFC R/W 장비 도입, 공통 플랫폼 공동 이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등 구축

○ 민원 알림 서비스 구축

- 민원 알림 정보의 제공 및 국가 재난 상황의 외국인 대상 알림 강화를 통한 필요 정보 적시 전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0. 과제 추진, '22. 7. 과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23. 2. 기재부 예산 신청

- 시급성에 따라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도입)사업」으로 분리하여 기재부 예산 신청

○ ’23. 6.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23. 11.「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도입)사업」 예산 수용

○ ’23. 12.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안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완료(1/4분기)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2/4분기)

□ 시스템 구축 중간점검(3/4분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재외동포법 개정(4/4분기)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에 IC칩 내장 근거 마련 및 등록증 발급 수수료 인상

□ 사업 중간보고회 및 완료보고회(4/4분기)

3. ‘25년도 추진계획(해당사항 없음)

□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602			
-국 비	▪ 일반회계		4,602			종료('24)
	▪ 특별회계					
	▪ 기 금					
-기 타						

□ 산출내역

○ 장비 구입비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 4,602,000,000원

- (H/W, S/W장비 구매 = 2,235백만원) +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2,367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23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근거 마련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관련 문서
'24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율	100%	사업완료 보고서
'25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률	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관리시스템 통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9
담 당 자	7급 김순일	이 메 일	soonil52@korea.kr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비대면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도 국민과 같이 계좌개설 등의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제공하여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과제 내용

○ 법적 근거 마련

- 금융회사 등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요청 시 이에 대한 결과 회신 근거 마련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2. 「출입국관리법」 개정,

○ 2023. 5. 시스템 구축 완료,

○ 2023. 9. 서비스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해당사항 없음)

3. ‘25년도 추진계획(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7
담 당 자	6급 박원진	이 메 일	pike2062@korea.kr

5-3-2-1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입국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분석 자료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전략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 지원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해 수집된 외국인 입국자의 일자별 추이, 국적·연령대·성별·국내체류 예정지·여행목적·여행기간·출도착지 등 분석

○ 방한 외국인의 지역별 방문 현황 등을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고, 지자체·관광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추진 경과

○ 법무부-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분석 협력 MOU 체결('22.4.)

○ '우리 동네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시각화 자료 제공 ('22.4.)

○ '우리 동네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시각화 일시 중단 ('23.3.)

□ 추진체계

○ 추진 주체 : 한국관광공사, 법무부(MOU) → 지방자치단체, 주무 부처

○ 추진 절차 : 관광공사, 법무부 데이터 공유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제공

2. '24년도 추진 실적

○ '한국 방문의 해' (2023-2024),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일본 등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이 한시 면제됨에 따라 분석 일시 중단(분석 대상 축소)

3. ’25년도 추진계획

□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 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 추가 연장(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으로 인해 분석 일시 중단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일시중단	일시중단	
’24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일시중단	일시중단	
’25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일시중단	일시중단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3
담 당 자	6급 김주현	이 메 일	juhyun34@korea.kr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이주 관리와 이주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인 GCM 목표의 자발적 이행력 확보

□ 과제 내용

○ 관련법률·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국경 및 체류 관리, 이주자 인권보호 등 23개 GCM 목표의 주기적 점검 등 이행방안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6. 9. 유엔 총회, 「인간 이동의 국제협력을 위한 뉴욕 선언」을 통해 GCM 수립 약속

○ '18. 12. 유엔 총회, GCM 승인 결의 채택

○ '21. 3.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이행점검 회의 개최

※ '20년부터 4년 주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25년 2차 회의 예정)

○ '22. 1. ~ '22. 3.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 자발적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유엔 이주네트워크(UNNM)*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관계기관(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

* **UNNM**(**UN** **N**etwork on **M**igration)은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GCM 이행 지원 기구로, 국제이주기구(IOM)가 **사무국·조정자 역할**을 함

2. ’24년도 추진 실적

□ GCM 이행점검 대비 내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4. 11.)

○ ’25년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GCM 이행점검 회의」 대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소관부서 간 협의체 마련*

* 소관부서 실무자 대상 이민정책포럼 병행 개최(국내 GCM 전문가 초빙)

3. ’25년도 추진계획

□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GCM 이행점검 회의」 대응 철저 (’25. 2.)

○ 회의 자료 작성 및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등

※ 외교부와 공동 대응

□ 내부 협의체 지속 운영 (연중)

○ 협의체를 통해 그간 GCM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점검 대응력 강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대응(이행) 방안 마련	1건	1건	관련 보고서
’24.	GCM 자발적 이행점검 강화	이행실적 자체 점검 기반 마련	실적점검 협의체 구성·운영	1회 이상	1건	운영 실적 보고서
’25.	GCM 자발적 이행점검 강화	이행점검 회의 대응	협의체 운영 및 이행점검 회의 대비	1회 이상		관련 공문 및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 당 자	6급 명보경	이 메 일	audqhud@korea.kr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국의 국제이주 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 과제 내용

○ OECD 이주작업반 참여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여국으로 '국제이주전망 보고서' 기초 자료 제공 등 협력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23.) OECD 이주작업반 하위 전문가그룹인'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여 의사 사무국에 전달

- ('23.6.)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대한민국, OECD 이주작업반 집행부로 선출

- ('23.10.) OECD '2023년 OECD 이주 전문가그룹 연례회의' (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석

- ('23.11.)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제이주부 전문가 방문, 회의·토론회 등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매년 국제이주전망 보고서 작성 기초자료 (통계, 주요 정책 현황) 제출

2. ‘24년도 추진 실적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대한민국, 이주작업반 집행부로 활동)

-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프랑스 파리 OECD본부, ’24. 6. 18.~6. 23.)

○ 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여

- SOPEMI 회의 참석(프랑스 파리 OECD본부, ’24. 10. 8.~10. 13.)

- 국가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 등

○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협조

- OECD 경제국 구조미션단 실무 논의 (‘24. 3.)

- 통계 제공 등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 검토 및 의견 개진

※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간(‘24. 7.)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참석

- 제146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회의 참석(화상회의, ’24. 10. 15.~10. 17.)

○ OECD 이주 흐름 예측 TF (MAP : Migration Anticipation and Preparedness) 참여

- 화상회의 참석(‘24. 2. 28., 5. 16., 4. 5., 6. 28., 9. 5. 등 총 5회)

○ OECD 설문 답변서 제출

- 보건인력 이주 관련(OECD 이주작업반 제출, ‘24. 8.)

- 해외간섭 관련(외교부 제출,’24. 9.)

3. ‘25년도 추진계획

□ OECD 이주작업반 참여

○ 1~4분기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등

○ 2분기

-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4분기

- '2023년 OECD 이주 전문가그룹 연례회의' 참석

□ 소요예산 : **총 18.1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3	16.7	18.1	8.4	
-국 비	▪ 일반회계	13	16.7	18.1	8.4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국외여비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국외출장비

{일비(30$×7일) + 식비(81$×7일) + 숙박비(176$×6일) + 항공료 235만원}
× 2명 = 9,832,400원

○ OECD SOPEMI 참석 국외출장비

{일비(30$×5일) + 식비(81$×5일) + 숙박비(176$×4일) + 항공료 235만원}
× 2명 = 8,225,2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이주작업반, SOPEMI 참석	2회	2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4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이주작업반, SOPEMI 참석	2회	2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4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관련 회의 참석	2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4-1-3	UN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대테러 등 관련 정보공유 확대, 테러 분자의 입국 사전 차단 등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를 통한 대한민국 및 전 세계 테러 방지

□ 과제 내용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업무 공조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에 출입국관리공무원 파견 등 협력 방안 논의('23.~'2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UN대테러실(UNOCT) 상호 기관 간 인적교류 논의

○ 전문연구원(Fellowship) 또는 고용휴직 직위 신설 등 한국의 대테러·이민·국경관리 전문가를 파견 등 논의

3. '25년도 추진계획

□ 과제 종료('24.)

○ 해당 과제가 국제기구와의 업무 공조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5-4-1-4)”에 포함되어 이 과제에 포함

□ 소요예산 : 종료(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전화번호	02-2110-4022
담 당 자	6급 이황원	이 메 일	Qpavk12@korea.kr

5-4-1-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협력 강화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이민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워크숍 참석을 통해 해외 이민정책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출입국·이민 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주요 현안 발생 시 국제다자 협력체제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채널 구축

□ 과제 내용

○ 우리의 이민정책과 직접 연관성 있는 다자 국제회의에의 적극 참여

* OECD, GFMD, APEC, ICAO, IOM, UNHCR 등

○ 지역적 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적 현황 파악 및 위변조 동향, 국제 이주동향의 파악을 위해 지역 국제회의체 참여

* APT 이민청장회의, ANDEX 회의, 도쿄 출입국 포럼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ANDEX, APEC 등 글로벌 협력체 워크숍 및 세미나에 지속 참석

○ UNHCR, IOM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출입국·이민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교류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제회의 참가) : 국제회의 일정 사전 조사 또는 국내외 초청장 수신
- 주제에 따른 참석 여부 결정 – 회의 참석 – 결과 보고 – 결과 보고서 내부 공유
- (고위급 회의 개최) 정책수요 및 대상국가 선정 – 회의 의제 선정 – 회의 실시 – 결과 보고 – 보고서 내부 공유

2. '24년도 추진 실적

○ 몽골 이민청장 면담(1.19.)

-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공조 강화 논의

○ 제14차 국제이주개발포럼(GFMD) 총회(1.23.~1.25.)

- 이주와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 파악

○ IOM 사무총장 면담(2.29.)

- 법무부-IOM 간 국제이주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역할 논의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2.29~3.1., 8.14.~8.15.)

- 모바일 기업인 여행 카드(Mobile ABTC) 관련 정보교류 및 자료 수집

○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4.18.~4.19.)

- 양국 출입국·이민분야 상호협력 및 우호 관계 증진 논의

○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 장관 면담(5.8.)

- 양국 출입국·이민분야 상호협력 및 우호 관계 증진 논의

○ 한·베트남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5.20.~5.23.)

-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 양국 출입국·이민분야 상호협력 방안 논의

○ 2024 OECD 이주작업반 회의(6.19.~6.21.)

- OECD 회원국 이민정책에 대한 동향파악 및 회원국 간 교류 확대

○ 제2차 APT 이민청장 회의(8.14.~8.16.)

- 아세안 국가와 이민정책 분야 기술・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모색

○ 중국 이민 관리 협력 포럼(9.9.~9.11.)

- 출입국・이민분야 정보교류 및 참가국 간 우호 관계 증진 논의

○ 제75차 UNHCR 집행이사회(10.14.~10.18.)

- 강제 이주민, 비호 체계 등 난민 관련 주요 해외 이슈 및 국제정세 파악

○ OECD 이주 전문가그룹 연례회의(10.9.~10.11.)

- 노동이민, 가족이민, 유학생 등 회원국의 현 이주·통합 문제 공유

○ ICAO TRIP 심포지움(11.12.~11.17.)

- 세계 각국의 국경관리 동향과 모범사례, 기술적 매커니즘 파악

○ 몽골 이민청장 면담(11월 중)

- 양국 출입국・이민분야 상호협력 및 우호 관계 증진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 면담(12.9.~12.11.)

- 양국 출입국・이민분야 상호협력 및 우호 관계 증진

○ 도쿄 출입국 포럼(12.9.~12.11.)

- 아시아 및 주요 선진국 출입국 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출입국현안 논의

○ 제7차 국경관리 기술 협력회의(12.10.~12.14.)

- 해외 국경관리 최신 동향 파악 및 기술 체계에 대한 정보 교환

3. '25년도 추진계획

○ ICAO, UNHCR, IOM 등 이민관련 다자 국제회의 및 발리 프로세스와 같은 지역적 안보 워크숍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체제 구축

○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교류 대상 국가들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국가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 간 인구 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소요예산 : **총 219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18	219	219	0.0	
-국 비	▪ 일반회계	218	219	219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본부기본경비-국제회의 참석-여비

○ 국제이민협력-이민정책개발지원-여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4	22	결과보고서
'24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4	17	결과보고서
'25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4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02-2110-4018
담 당 자	7급 오정음	이 메 일	oje0622@korea.kr

5-4-2-1	이민과 개발(Migration&Develpoment)의 정책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ODA와 이민을 접목하여, ODA 수원국 국민, 한국과 수원국의 상호 발전(개발) 방안을 정책화

- 인재양성(송출국 국민) → 이주(유입국) → 귀환(송출국)의 순환이주를 통해 송출국과 송출국 국민, 유입국의 삼중이득 달성

□ 과제 내용

○ 법무부와 KOICA가 협력, 한국의 ODA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발굴

- 국내 이민자 수가 가장 많으면서 ODA 대상국인 동남아 지역에서 우선 시작 후 확대

※ <예> 해외 현지 직업훈련원의 우수 수료자에게 한국으로 취업·진학 기회 제공, 귀국 시 본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 '24년도 추진 실적

○ '이주-개발 넥서스 프로그램 실행방안 연구' 연구용역 실시(KOICA)

- 협력국(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을 대상으로 숙련·전문 인력 양성 및 귀환 자원 관련 연구용역

- '이주-개발 연계' 해외 전문인력 양성 관련회의 (법무부-KOICA-이민정책연구원, '24. 3, 7, 8월 등 3회 이상)

- 베트남 조선용접공 및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범사업 협의 등

3. ‘25년도 추진계획

○ 이민과 개발(M&D) 정책화 방안 마련

- 코이카 연구용역(숙련・전문인재 양성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 방안 마련

※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해외 보건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도입 방안 추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관련부처 논의 개시	부처간 회의 실시	1회	1회	회의 참석
’24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연구용역 시행	KOICA 연구용역 실시	1건	1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25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이민과 개발(M&D) 세부방안 협의	부처 및 관계기관 회의	2회		회의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4-2-2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공항공사·이민청 등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우수 이민행정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 출입국 기관과 우호적 관계 조성

□ 과제 내용

○ 한국의 우수 이민행정 프로그램 해외 현지화 및 이식

- Hi-Korea(외국인온라인민원종합안내), K-ETA(전자여행허가)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우수행정 프로그램을 현지화 및 이식, 현지 이민행정의 효율성 제고

○ 현지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게 출입국 연수 기회 제공

- 국내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출입국 공무원에게 행정 관련 연수 기회 제공, 각국 출입국공무원과의 교류 확대 및 행정능력 제고

□ 과제 추진 경과

○ '19.11 KOICA 요청, 미얀마 출입국 현대화 ODA 사업 현지 예비조사 참석 (2020년 미얀마 내부 상황으로 사업 중단)

○ '20. 2. 코로나19 발생으로 ODA 현지 사업 중단('22년 하반기 재개)

○ '23. 7. 몽골 출입국 담당 공무원 방한연수 강의 제공

○ '23. 9. DR콩고 출입국 담당 공무원 온라인연수 강의 제공

○ '23. 10~11.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2건(페루, 파라과이) 예비조사 실시

2. '24년도 추진 실적

□ 2025년 사업 타당성 심사에서 법무부 정부부처 제안사업 1건 통과, 페루 현지에 대한 ODA 기획조사 실시 및 예산 확정('23.10월~11월)

○ 페루 이민청 이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 페루 이민청의 이민행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바이오정보 데이터 표준화
- 페루 이민청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기획안 및 예산의 구체화
- 페루 이민청 방문 ('24. 10. 26.~11. 11.)

○ ODA 진행 사업 출입국분야 협력

- 몽골 출입국공무원 국내 연수 강의('24. 7.)
- IDB(Inter America Development Bank) 출입국공무원 국내 방문연수 강의('24. 2.)

3. '25년도 추진계획

□ ODA 사업 착수

○ 사업 기획 및 예산 구성이 완료된 페루 이민청 ODA사업의 시행 용역 발주 및 사업 착수('29년까지 현지 ODA 본사업 진행)

※ 용역 발주는 KOICA에서 전담하여 진행

□ 추가 사업 확대

○ 이민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출입국 관련 ODA 사업에 적극 협력

- 전문가 파견, 연수 강사 지원 등 요청사항 발생 시 적극 협조

○ ANDEX*등 주변국가를 상대로 역량강화 연수사업 등 지속 확대

- 'ANDEX 회원 개발도상국 문서감식 분야 역량강화'사업 추가 제출 예정

* Asian Network for Document Examination, IOM 아태지역사무소 산하의 협의체로 '24년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았음

□ 소요예산 : 타부처 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페루·파라과이 ODA 사업 추진	예비조사 시행	1건	2건	사업기획서
'24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ODA 사업 협력	ODA 진행 사업 출입국분야 협력	1회	2회	강의, 현장투어 등
			페루·파라과이 사업 진행 (선정시)	1건	1회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25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페루 ODA 사업 추진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 개선 사업 개시	1건		사업기획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6
담 당 자	4급 이한식	이 메 일	lions7@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383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384

Ⅲ. 과제별 시행계획 ····· 385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3-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 386

1-3-3-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 388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1-③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 390

행 정 안 전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3	100%	34	34	0.0%
1. 경 제	2	66.7%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1	33.3%	34	34	0.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외국인주민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주요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지자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외국인주민 위원 위촉·운영 현황 조사
- 지자체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전문성 제고 및 사회통합적 외국인주민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권역별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연간 4회) 추진
- 국민재난안전포털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및 Emergency Ready App 운영
  - 외국인 대상 국민행동 요령, 대사관 정보, 시설물 정보 등 77종의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앱을 통해 재난문자, 대사관 정보, 대피시설 등 36종의 재난안전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추진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3개	35	34	34	0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2개)					
1-3-3-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비예산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비예산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개)	35	34	34	0	
4-1-1-3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35	34	34	0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 23년 11월 기준 246만명으로 증가세

- 총인구 대비 4.8%로 2006년 외국인주민 수 조사 이래 최대 규모

※ (’15) 171만명→(’17) 186만명→(’19) 222만명→(’22) 226만명→(’23) 246만명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주민으로서 자립 등을 위한 정책 여건 필요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정책 사례 발굴・확산(경진대회 개최, ‘24.11.)

-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지역별・유형별 등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작성하여 지자체 시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24.10.)

- (지자체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주민 담당자 설명회(워크숍)를 통해 시책 사업, 통계 등 업무안내 및 중앙-지방 교류 활성화(권역별 6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거주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정책역량 제고 및 맞춤형 시책 확산 지원 필요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지자체 외국인주민 담당자 설명회(워크숍)를 통해 외국인정책 전문성 강화(권역별 4회)

○ 재난·재해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1	외국인주민 지여사회 정책 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현황 분석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4-1-1-3	재난·재해등에 관한 보편적 지원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편(영문사이트 구축)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3-3-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제도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결정 시, 외국인주민 참여기회 확대

□ 과제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에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 지역 내 자조모임, 나라별 모임 등의 대표들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의견 정책 반영

□ 과제 추진 연혁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통보 : '13. 6.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구축·운영 현황 조사 : 매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 운영지침 마련 → 자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24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현황 파악('24. 3.)

- 184개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운영

* 지원협의회 총 위원 2,078명 중 외국인주민 228명(11%) 참여, 자문회의 총 위원 175명 중 외국인주민 70명(40%) 참여('23.12.31. 기준)

- 조례에 근거한 지원협의회, 자문회의 외에도 대표자회의,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주민 참여기구 구성・운영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현황 파악('25. 3.)

- 지자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외국인주민 위원 위촉・운영 현황 조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42.8%	현황조사
'24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40%	현황조사
'25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현황조사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254
담 당 자	6급 임효진	이 메 일	baprincess@korea.kr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자체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

□ 과제 내용

○ 지자체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전문성 제고 및 사회통합적 외국인주민 시책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행정안전부

○ 추진절차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최 → 지방자치단체 참여

2. '24년도 추진 실적

□ 추진 실적

○ 지자체 공무원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지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제작·발간('24.1.)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추진(총 6회, 420여명 예상)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 계획

○ 지자체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 개최(연간 4회 예정)

☐ 소요 예산: 비예산　　※ 법무부 예산 소요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설명회 교육 이수자 수	200명	252명	결과보고
'2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설명회 교육 이수자 수	200명		결과보고
'25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설명회 교육 이수자 수	200명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254
담 당 자	6급 임효진	이 메 일	baprincess@korea.kr

4-1-1-3	재난 · 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안전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 및 영문 앱(Emergency Ready App) 운영

□ 과제 내용

○ 외국인 대상 국민행동요령, 대사관 정보, 시설물 정보 등 77종의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운영

○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재난문자(영어·중국어), 대사관, 대피시설 등 36종의 재난안전 정보를 외국어(영어 · 중국어 · 일본어)로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Emergency Ready App(영어/) 서비스 개시('14.3월)

○Emergency Ready App(중국어) 서비스 추가('17.1월)

○Emergency Ready App에 재난문자 영어, 중국어 제공('18.1월)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영문 서비스 실시('20.8월)

○Emergency Ready App(일본어) 서비스 개시('22.8.10)

○Emergency Ready App에 재난문자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제공('24.1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유지관리업체(유큐브)

○ 추진절차 : 사업발주 및 재난정보제공 → 유지관리 사업 관리 →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재난정보 현행화화

2. ‘24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Emergency Ready App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재난문자 확대

- 외국어 2종(영어, 중국어)에서 5종(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으로 확대

○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추진(‘24. 8월 계약)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외국인을 위한 영문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편

- APP을 통해 발송하는 외국어 재난문자 확대

□ 소요예산 : **총 3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5	34	34	0.0	
-국 비	▪ 일반회계	35	34	34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국민재난안전포털(영문) 유지관리 : 금33,996,000천원

- 309,055,000*10%*1.1=33,996,00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최근 5년 평균)	12,100건	19,053	앱 다운로드
'24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전년대비 2% 증가	12,342건	27,322	앱 다운로드
'25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전년대비 2% 증가	12,600건		앱 다운로드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정보센터 재난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44-205-5388
담 당 자	6급 차진호	이 메 일	cjh1288@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396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397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02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405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1-①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 405

1-4-1-② 크루즈 관광 활성화 ····· 409

1-4-1-⑤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412

1-4-2-③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414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3-2-2-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417

3-2-2-②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419

3-2-2-③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421

3-3-1-③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424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7	100%	28,520	24,861	△12.8%
1. 경 제	4	57%	27,090	23,101	△14.7%
2. 안 전					
3. 통 합	3	43%	1,430	1,760	23.1%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K-컬처 융합형 한국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지속 가능한 크루즈관광 성장 기반 구축**
- **타 문화 이해 증진 및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주요 사업내용

- K-컬처와 K-관광을 융합하여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 K-팝 콘서트 연계 관광상품 개발, 한류테마 관광코스 개발, 한류특집관 운영, 코리아그랜드세일 및 코리아 뷰티페스티벌 개최 등
-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의료관광 주요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 의료 및 웰니스관광 기반 조성, 의료·웰니스 행사 개최 및 홍보마케팅 전개 등
-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 해외 크루즈박람회 참가를 통한 외국 선사 등 대상 세일즈콜 실시,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등 행사 개최
- 문화다양성의 날(5.21.), 문화다양성 주간(5.21.~27.) 운영 및 기념행사 개최
-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심화) 개발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7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4)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8개	26,063	28,520	24,861	△12.8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4)	24,801	27,090	23,101	△14.7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8,000	11,000	8,800	△20.0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570	570	785	37.7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	-	-	비예산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6,231	15,520	13,516	△12.9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4)	1,262	1,430	1,760	23.1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189	150	-	△100.0	'26년 실시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504	500	500	-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500	620	1,100	77.4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69	160	160	-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K-컬쳐의 인기와 관심을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필요

※ 한국방문 고려요인은 ‘K-POP/한류스타 관련 공연장 및 드라마·영화 촬영지 등 한류콘텐츠 경험 32%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 2023년 기준 해외 한류동호회 회원 수 2억 2,497만 명(한국국제교류재단)

□ 크루즈관광 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필요

○ 최근 방한 크루즈 관광객 국가 다양화* 추세로, 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수요시장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 (’23년 크루즈 방한객) 일본 10.1만명, 필리핀 7.3만명, 인도네시아 4.2만명, 중국 4.1만명

○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동 및 기타 대내외 회의 개최・참가를 통한 크루즈 방한 유치 기반 강화 추진

□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정부 국정과제 핵심과제 신속 추진을 통한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시장 조기 회복 지원

□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성장 및 건강한 여행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의료・웰니스관광 사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지역별 의료・웰니스관광 융복합 거점 조성 필요

○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웰니스관광을 한국관광 대표 콘텐츠화하며,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마케팅 등 성장 지원 필요

- 외국인환자수 ‘19년도 49.7만 명 기준, 생산유발효과 약 5.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6조원, 소득유발효과 약 3조원, 고용유발효과 약 4.4만 명, 의료관광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가장 큰 관광테마 중 하나 * 산업연구원(’21)

※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규모는 (’19) 1,050 → (’20) 710 → (’21) 820 → (’23) 1,200 → (’25) 1,820억 달러로, ‘23년부터 연평균 49% 성장 전망 * 한국경제TV(’23)

□ 이주배경주민 증가 및 고령화 등 인구구성 다변화로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제고하여 타문화 이해도·포용도 증진 필요

○ 체류외국인 증가('23년 250만명, 전체 인구의 4.9%), 저출산·고령화 심화('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22년 합계출산율 0.78로 역대 최저치), 국제이주 증가 등으로 인구구성이 급변하면서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점차 다양화

○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

□ 저출생·고령화 심화(50년 후 한국 인구 3,600만 명, 2명 중 1명은 65세)로 생산 인구 감소,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116만 명('08)→300만 명 초과 예상('30), 158% 증가) 등 국내 인구 환경 변화 지속

○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체계를 적시에 수립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사회통합 추진

- 사회통합 1차 과제인 의사소통 해결을 통하여 통합촉진 기반 마련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K-컬쳐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 K-팝 연계 방한 관광 상품화 지원을 통한 외래객 유치(1.68만 명), K-드라마·영화 등 한류 테마 대표코스 발굴(누적111건) 및 여행상품운영지원(160명)

- 드라마IP 활용 체험형 전시 'K-drama 스포트라이트' 기획 및 운영(8~11월, 광화문, 1만 명 참여 기대)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재개정('24.1월) 및 상품개발·모객(105건, 총 3,779명)

- K-뷰티(메이크업, 헤어, 패션, 의료·웰니스) 활용 민간협력 관광이벤트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24.6.1~30.)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 크루즈 거점지사 활용 시장별 차별화된 방한 크루즈 유치 마케팅 기반 마련(뉴욕, 도쿄, 시드니, 상하이)

  · 해외 크루즈박람회 참가*를 통한 국내 크루즈업계 판로 개척

  * Seatrade Cruise Global('24.4.8.~4.11.)

- 2024 한국테마관광박람회 연계 크루즈박람회 개최(6.4, 부산)

- 관계 부처, 지자체 등 협력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 및 크루즈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K-컬처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23.5.8~/훈령 시행일로부터 2년(한시조직))

○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업계 경쟁력 강화

- 한국의료관광대전(해외 3회) 및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료·웰니스 부문, 국내 1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 및 다양한 방한 판촉마케팅 전개

- 의료관광비즈니스센터 및 유치업체 방한상품 지원제도 등 지속 운영

○ 웰니스관광 활성화 및 지역 웰니스·의료관광 거점 조성

- '우수웰니스관광지' 확대 선정('23년 64개 → ' 24년 77개) 및 지역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6개소) 지속 지원

- 융복합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8개사),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10월), 해외 B2B&C 마케팅(10여 건)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실시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행사 프로그램 추진 확대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국가통계 신규승인 완료('24.7월)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최

-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대상 연수 운영(4종) 및 <문화 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활용 연구교사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23년 1차 연도 결과물(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교재 개발 요구 조사 및 대표 표본 단원 만족도 조사 포함)

- 입문, 기초의 단계별 교재 개발 및 자문・감수 진행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K-컬처와 K-관광을 융합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 K-POP 콘서트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한류테마 대표코스 지속 발굴

○ K-팬덤 대상 한류관광 콘텐츠 정보 전달을 위해 VK특집관 연중운영

○ K-컬처 연계 민·관 협력형 쇼핑문화관광축제를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 수입 확대 촉진

○ K-메이크업, 헤어, 패션, 의료·웰니스에 높은 관심을 갖는 외래객 유치를 위한 민간협력 관광이벤트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

□ 지속 가능한 크루즈관광 성장 기반 구축

○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

○ 글로벌 크루즈 선사・업계 방한 초청 확대, 해외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한국크루즈관광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업계 판로 개척

□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세계인의 방한 동력이 된 K-컬처 적극 활용하여 한국 관광 전반 소개와 민관협력 프로모션 전개을 위한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23.5.8~/훈령 시행일로부터 2년(한시조직))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추진

○ 경쟁국 대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선제적 홍보마케팅 강화

○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박람회 개최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육성지원

○ 웰니스·의료관광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속 지원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 다양화에 따른 타 문화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5.21.~27.) 및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24년 2차 연도 결과물(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입문, 기초))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 심화 1, 2단계의 교재 개발 및 자문・감수 진행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7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K-팝 지원대상 콘서트 선정 ▪ VK 한류특집관 연중운영계획 수립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마케팅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중간평가·지원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 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개발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7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K-팝 콘서트 연계 상품화 및 홍보 ▪ VK 한류특집관 연중운영(콘텐츠 제작 및 DB 현행화)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 유관기관 협력 및 크루즈 박람회 개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 (~’ 25.5월)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 행사 개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 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개발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추진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K-팝 콘서트 연계 상품화 및 홍보 ▪ VK 한류특집관 연중운영(콘텐츠 제작 및 DB 현행화)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개발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추진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한류관광 성과 정리 및 개선 방안 도출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운영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결과 환류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한류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K-팝, 드라마 등 한류 대중문화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육성 및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과제 내용

○ **(K-팝 콘서트 연계)** 지자체·민간 주최 K-팝 콘서트 지원(2~5억 원, 공모 등 통해 4개 내외 선정), 콘서트 연계 방한상품화 및 한국관광 홍보

○ **(한류테마 대표관광코스)** K-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한류 팬 맞춤형 대표코스 발굴 및 여행 상품화 지원

- 온라인 업로드 가이드북 발간, 해외 현지 홍보, 온라인 여행사(OTA)

○ **(한류 특집관 운영)** Visit Korea 한류특집관 운영을 통한 한류콘텐츠 정보 안내 및 글로벌 팬덤대상 참여형 이벤트 추진

○ **(코리아그랜드세일)** 민·관 협력형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25.1월 예정)

- 항공, 숙박, 체험 등 방한 관광 프로모션 및 쇼핑기획전, 웰컴센터 운영, K-컬처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등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민간협력형 K-뷰티 이벤트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25.6월 예정)

- 외래객 대상 헤어, 뷰티, 패션, 의료·웰니스 등 K-뷰티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이벤트 등 진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22.12.1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K-팝 등 연계 한류관광 활성화)** 문체부→한국관광공사→(지자체)
- **(코리아그랜드세일)** 문체부→(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문체부→(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추진절차

- **(K-팝 등 연계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수행
- **(코리아그랜드세일)**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K-팝 콘서트(4개) 및 연계 방한관광 상품화 지원

○ 한류테마 대표코스 신규 발굴(10건) 및 기존 대표코스 개선(10건)

- 온라인 한류특집관 업로드를 통한 방한관광객 대상 홍보

○ 드라마IP 활용 체험형 전시 운영(8월~11월, 광화문, 1만명(예상))

- AR, VR, AI 등 신기술 접목 인터랙티브 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재개정('24.1월) 및 상품개발·모객(105건, 총 3,779명)

○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24.6.1.~30.)

3. '25년도 추진계획

○ **(K-팝 콘서트)** 지원 대상 콘서트 선정(~3월), 상품화 및 홍보(5~11월)

○ **(한류테마 관광코스)** 신규코스 10건 개발 및 여행상품 지원(5월~12월)

○ **(한류특집관운영)** VK 한류특집관 연중 운영 및 콘텐츠 확충(1월~12월)

○ **(코리아그랜드세일)** 항공, 숙박, 체험 등 방한 관광 프로모션 및 쇼핑 기획전 구성, 월컴센터 공간 조성, K-컬처 체험프로그램 기획 등(~1월)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분야별(메이크업, 헤어, 패션, 의료·웰니스) 민간 연계 체험·할인 프로모션 구성, 권역별 거점 공간 조성 등(~6월)

□ 소요예산 : **총 8,8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000	11,000	8,800	△20.0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8,000	11,000	8,800	△20.0	문체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한류관광 활성화: K-팝 관광 활성화(6,500백만원×1식)

K-드라마 관광 활성화(2,300백만원×1식)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0,000	21,240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24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2,000	22,390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25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4,200	-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	전화번호	044-203-3338 044-203-3351
담 당 자	주무관 류덕호 사무관 이주리	이 메 일	gaon38@korea.kr jurily1997@korea.kr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전화번호	044-203-2783 044-203-2782
담 당 자	주무관 김기강 사무관 김규영	이 메 일	nefu0220@korea.kr kgy0328@korea.kr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운·관광·레저가 결합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크루즈관광산업 육성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과제 내용

○ 항만·관광·출입국 인프라 개선 및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강화

- 항만 인근 복합관광시설·안내센터·대중교통 및 스마트 관광인프라 지원으로 크루즈 관광객 편의 제고

- 크루즈 개별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수용여건 개선 및 한국형 테마상품 개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크루즈발전협의회 해수부 공동 추진·개최(2016년~)

○ 크루즈 거점 지사 운영(2018년~, 4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추진절차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관광산업 기반조성

○ 국내 크루즈 주요 사업 및 주요 크루즈 선사 운항 계획 공유, 크루즈 관광 재개 후속 현안 논의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6.3, 7.11)

○ 2024 한국테마관광박람회 연계 크루즈박람회 개최(6.4, 서울)

- 18개 국가 58개사 참가(해외바이어), B2B상담 942건(전년대비 85% 증), 참가기관 예상 매출액 약 45억,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4.53/5점

○ 크루즈 거점지사 4개소 운영을 통한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뉴욕, 도쿄, 시드니, 상하이)

3. '25년도 추진계획

□ (연중)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연중)

□ (1분기)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 해외 크루즈박람회 참가를 통한 외국 선사 등 대상 세일즈콜 실시

□ (2분기)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제12회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등 행사 개최

□ (3,4분기) 크루즈 상품개발

○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 소요예산 : **총 78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70	570	785	37.7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관광기금)	570	570	785	37.7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515백만원

○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180백만원

○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9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당해년도 크루즈 관광객수-전년도 크루즈 관광객수) /전년도 체류자수	5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24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당해년도 크루즈 관광객수-전년도 크루즈 관광객수) /전년도 체류자수	5	집계 중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25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당해년도 크루즈 관광객수-전년도 크루즈 관광객수) /전년도 체류자수	5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 '20.2~'23.2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입항 금지기간이므로 23년도 실적 산출 불가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873 044-203-2885
담 당 자	주무관 정다희 사무관 이규원	이 메 일	dada6008@korea.kr reeku18@korea.kr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을 촉진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세계인의 방한 동력이 된 K-컬처 적극 활용하여 한국 관광 전반 소개와 민관협력 프로모션 전개를 위한 전담 추진부서 필요

□ 과제 내용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

- (소속 및 직제) 문체부 관광정책국 내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 (직제 성격 및 근거) 별도정원 조직으로 운영, 국무총리 훈령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근거 마련
- (규정 제정)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5.8)
- (기간) 훈령 시행일(5.8)로부터 2년(한시조직, 별도정원)

* 총리훈령 제정 시행일로부터 조직 운영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22.12.12)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관련 관광업계 간담회 개최('23.3.2)

○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23.5.8)

○ K-관광협력단 출범('23.5.23)

□ 추진체계

○ 해당없음

2. ’24년도 추진 실적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재개정(’24.1월) 및 상품개발·모객(105건, 총 3,779명)

○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24.1.11.~2.29.),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24.6.1.~30.)

3. ’25년도 추진계획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25.5월)

-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화,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등

□ 소요예산 : 해당없음(비예산)

□ 산출내역 : 해당없음(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방한관광객유치지원을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신설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회)	1	1	-
’24	방한관광객유치지원을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신설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회)	1	1	-
’25	방한관광객유치지원을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신설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회)	1	1	-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전화번호	044-203-2783 044-203-2782
담 당 자	주무관 김기강 사무관 김규영	이 메 일	nefu0220@korea.kr kgy0328@korea.kr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의료·웰니스 관광산업의 육성 및 홍보마케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관광 경험 제공,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 과제 내용

○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실시 및 국내 수용여건 개선, 유치업체 육성 등

○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콘텐츠 발굴 확대, 웰니스관광 체험지원 등

○ 지역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제12조의2)

○ 2010.~ 의료관광 육성 사업 추진, 2017.~ 웰니스관광 육성 사업 추진

○ 2014.~ 의료관광 클러스터 지원, 2018.~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지원,

○ 2023.~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개편하여 운영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 추진절차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추진

○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업계 경쟁력 강화

- 한국의료관광대전(해외 3회) 및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료・웰니스 부문, 국내 1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 및 다양한 방한 판촉마케팅 전개

- 의료관광비즈니스센터 및 유치업체 방한상품 지원제도 등 지속 운영

○ 웰니스관광 활성화 및 지역 웰니스・의료관광 거점 조성

- ‘우수웰니스관광지’ 확대 선정(‘23년 64개 → ’24년 77개) 및 지역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6개소) 지속 지원

- 융복합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8개사),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10월), 해외 B2B&C 마케팅(10여 건)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실시

3. ‘25년도 추진계획

□ (연중)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의료관광 주요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연중)

□ (1분기) 의료 및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중간평가 및 운영지원

○ 우수 웰니스관광지 발굴 및 선정

□ (2분기) 의료·웰니스관광 행사 개최

○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추진

□ (3분기)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 의료·웰니스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4분기)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웰니스관광 협의체 운영

□ 소요예산 : 총 13,51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6,231	15,520	13,516	△12.9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지특회계)	-	3,000	2,700	△10.0	
	▪ 기 금 (관광기금)	13,231	9,520	8,116	△14.7	
-지방비	▪ 광역시·도비	3,000	3,000	2,700	△10.0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방한 의료관광 유치 지원 4,288백만원

○ 웰니스관광산업 육성 3,828백만원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원(6개소) 5,4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27만명	60만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24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29만명	(집계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25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62만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887 044-203-2885
담 당 자	주무관 이예은 사무관 이규원	이 메 일	yenerge20@korea.kr reeku18@korea.kr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기반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10년)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4년)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과제 내용

○ 문화다양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년 주기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민의식, 문화향유 및 창조의 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실시

○ ('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실시

○ ('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시범실시

○ ('18년) 정책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실시

○ ('20년) 2020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22년) 2022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23년) 2023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24년) 2024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신규승인 완료 및 조사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전문연구기관

○ 추진절차 : 조달청 공공입찰 통한 용역기관 선정 → 계약체결 및 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2024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국가통계 신규승인 완료(7월) 및 조사실시

3. ‘25년도 추진계획 : 해당없음

□ 실태조사 법정 조사주기(2년)에 따라 ’25년 미실시 ※’26년도 조사예정

□ 소요예산 : ’25년 미편성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89	150	-	△100	
-국 비	▪일반회계	189	150	-	△100	문체부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추진	1	1	연구결과
‘24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추진	1	1	연구결과
‘25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미시행	미시행	-	-	-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15 044-203-2516
담 당 자	주무관 이다현 사무관 신나라	이 메 일	dahyun123@korea.kr nara1234@korea.kr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정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행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 과제 내용

○ 국제연합(UN)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행사 개최(1회)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공연, 전시, 강연, 포럼,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4.11.29.) 이후 매년 추진(~'15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 추진절차 : 위탁계약 체결(문체부·전담기관) → 용역기관 선정(전담기관) → 주간행사 추진(주최: 문체부, 주관: 전담기관) →대금 지급 및 결과보고(전담기관) →감사(문체부)

2. '24년도 추진 실적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주간행사 개최(5.21.~5.27.)

○ 2024 문화다양성 주간 다양성 콘서트, 전문가 정책포럼, 청년 문화다양성 토론회,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 전시·체험 프로그램, 참여형 캠페인 및 미디어 협력프로그램 등 운영(39만여명 참여/8.13.기준)

* 저명인사 10인이 추천하는 문화다양성 도서·음악·영화 추천 온라인 전시

3. ’25년도 추진계획

□ (1분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 (2분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 (3~4분기)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총 5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04	500	500	0.0	
-국 비	▪ 일반회계	504	500	500	0.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문화다양성 주간 대국민 캠페인 추진 5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지원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횟수	1	1	실적보고서
’24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지원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횟수	1	1	실적보고서
’25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지원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횟수	1	-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23 044-203-2516
담 당 자	주무관 손지은 사무관 신나라	이 메 일	sjn912@korea.kr nara1234@korea.kr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과제 내용

○ (교과연구 지원) 중·고교 문화다양성 교과서 활용지원 등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활동 지원

○ (전문인력 양성) 교원·문화기관종사자·콘텐츠제작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찾아가는 교육) 지자체 공무원·산업단지 관리자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지침서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 ('16년~'17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1기, 4개교),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18년~'19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2기, 4개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0년~'21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3기, 3개교), 교사연구회 1개교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2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4기, 2개교), 교사연구회 1개교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3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5기, 4개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4년) 문화다양성 연구교사 선정 및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전담기관

○ 추진절차 : 위탁계약 체결(문체부·전담기관) → 용역기관 선정(전담기관) → 교육 운영 → 대금 지급 및 결과보고(전담기관) →감사(문체부)

2. ‘24년도 추진 실적

□ 교과연구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4종) 운영

○ (교과연구 지원) 교과연구 교사 선정·지원(중·고교 교사 10인) 및 교과서 개정 집필 완료(중·고교 각 1종, ’22년도 교과과정 반영)

○ (전문인력 양성) 교원·문화기관종사자(지역문화재단 등)·문화콘텐츠제작자(감독·작가 등)·성인 대상 직무연관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과정 개발·운영(온·오프라인 연수)

3. ’25년도 추진계획

□ (1분기) 개정교과 활용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과정(신규) 추진계획 수립

□ (2-3분기)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 (4분기) 운영 결과 환류

□ 소요예산 : **총 1,1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00	620	1,100	77.4	
-국 비	▪ 일반회계	500	620	1,100	77.4	문체부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560백만원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40백만원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5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정도(점)	83.4	83.6	실적보고서
'24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정도(점)	84	사업 수행중 (~'24.12)	실적보고서
'25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정도(점)	84	-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15 044-203-2516
담 당 자	주무관 이다현 사무관 신나라	이 메 일	dahyun123@korea.kr nara1234@korea.kr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 증가, 구성 다변화에 따라 사회통합 1차 과제인 의사소통 해결을 통하여 통합촉진 기반* 마련

※ 한국어 취약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를 통하여 사회통합 연착륙을 도모

□ 과제 내용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한국어 표준교육과정(문체부 고시, '20.11.) 기반의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총론, 내용 체제,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활용 등)을 근거로 교재·학습 콘텐츠 등 개발 전략계획 수립

- 입국 전후별·체류 외국인 체류 경로 및 생애 주기 등 이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장기체류 목적의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내용 체계 구축

- '24년 2차 연도 결과물(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입문, 기초))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 심화 1, 2단계의 교재 개발 및 자문·감수 진행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추진계획(안)

'24년	'25년	'26년
•기초 연구, 만족도·요구 조사 등 •교재 모형 및 교수요목 설계 •대표 단원 제작 및 현장 적용 •입문, 기초 단계 집필	•전년도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심화 단계 교재 집필 •입문, 기초 단계 교재의 부속 자료 집필	•전년도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심화 단계 부속 자료 집필
※ 입문, 기초 단계 가본 제작	**※ 입문·기초 단계 교재 편집·제작, 심화 단계의 교재 가본, 입문과 기초 단계 부속 자료 제작**	**※ 결과물의 편집·제작 완료**

□ 과제추진 연혁(경과)

○ 2023.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록

○ 2023. 1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2024. 1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입문, 기초) 가본 개발

□ 추진체계

○ 추진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법무부(협업)→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입문, 기초) 개발

○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쓰일 교재 개발을 고려하여 구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안)

구분		단계	
입문		입국 준비 단계	
기초(초급)	기초 1	입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	생활 한국어 학습 단계
	기초 2		근로 현장 한국어 학습 단계
심화(중급)	심화 1	정착 이후 장기 체류를 위한 단계	직군별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
	심화 2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

3. ’25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계획

○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심화) 개발 계획 수립

○ 2/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심화) 개발 착수

○ 3/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심화) 개발 추진

○ 4/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심화) 완료

□ 소요예산 : 총 389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9	160	160	0.0	
-국 비	▪ 일반회계	69	160	160	0.0	문체부
	▪ 특별회계 (회계명)					
	▪ 기 금 (기금명)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재 개발 1식×160,000,000원

- 입문, 초급 단계 부속 자료 및 심화 교재 개발 등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 근거
'2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건수(종)	1	1	실적보고서
'24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 건수(종)	1	3	실적보고서
'25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 건수(종)	2	-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번호	02-2669-9742
담당자	연구관 구지민	이메일	gujm@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430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431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34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436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2]-②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436

1-2-[3]-② 농어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439

1-2-[3]-③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441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1]-③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443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1]-② 결혼이민자 영농정착 강화 ····· 446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5-1-[2]-②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449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6	100%	4,147	5,217	25.8%
1. 경 제	4	66.7%	3,430	4,500	31.2%
2. 안 전					
3. 통 합	1	16.7%	717	717	0.0%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1	16.7%			

추진 방향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및 제도 개선 추진**
- **결혼이민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주요 사업내용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부처 추천제 운영 및 제도 홍보
- 고용허가제를 통한 음식점업 외국인력 지속 도입 및 제도 안정화
  - 고용허가제 홍보 확대,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운영, 사업체 모니터링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유도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

  * '23년 19개소, 990명 → '24년 70개소, 2,550명 → '25년 90개소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부처 간 협력 강화
- 결혼이민여성 수준별 맞춤형 교육 및 청소년 등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교육 운영
  - 결혼이민여성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통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6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4)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6개	1,950.5	4,147	5,217	125.8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4)	617.5	3,430	4,500	131.2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	-	-	비예산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	-	-	비예산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	-	-	비예산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617.5	3,430	4,500	131.2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1)	1,333	717	717	-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333	717	717	-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1)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	-	-	비예산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농업분야 숙련 기능인력 부처 추천제 운영 효율화 및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대상 숙련 기능인력 제도 홍보 강화

○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취업 및 장기체류를 위해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숙련 기능인력 제도개선 추진 정책 마련 필요

□ 음식점업 구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 시범 활용은 높지 않은 상황

□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자녀세대의 성장에 따라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영역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

○ 영농의지가 있는 농촌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지원 정책 수립필요

* 국제결혼 비율(농림어업종사자 남성) : (’21) 8.7% →(‘22) 16.7% →(‘22) 21.67%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지역 내 이해도 증진을 통한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정책 수립 필요

*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구수/비율 : (’21) 39,725/22.8 →(‘22) 38,513/21.9 →(‘23) 40,025/22.8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 과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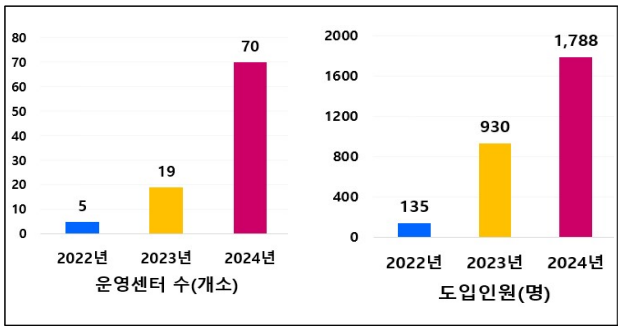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개소수를 ‘23년 19개에서 ‘24년 70개로 확대하여, 농촌의 단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

-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숙식·교통수단·4대보험 등 제공, 농가는 사설 인력중개보다 낮은 이용료로 일(日)단위로 노동력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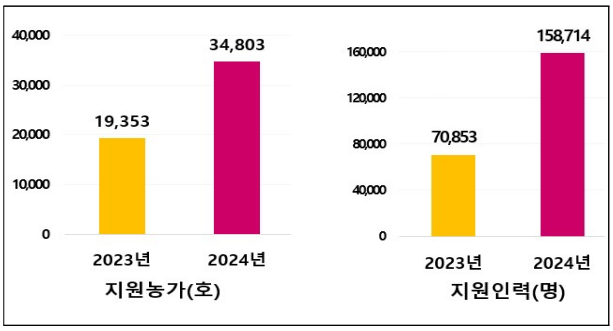
* 사설 인력중개의 경우 14~16만원 수준이나 농협은 10만원 내외로 이용료 책정

- ‘23년 19개소 930명 도입 19,353농가에 연인원* 70,853명 지원, ’24.7월 현재 49개 시군 70개소 1,788명 도입, 34,803농가 연인원 158,714명 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현황('22~'24) >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실적 >



○ 음식점업 단순 노무 외국인력 시범 도입 및 도입 요건을 완화하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24년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시범사업 추진

* (업종) 한식, (지역)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 5인 이상 5년 이상, ▲5인 미만 7년 이상

- 실태조사,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요건 중 업종·지역 확대 및 업력 요건 일부 완화

* (기존) 100개 지역 / 한식 / 5년~7년 이상 → (개선) 전국 / 한식+외국식 / 5년 이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 및 영농지식 수준에 따라 단계별(기초-심화과정) 운영하고, 전문 여성농업인 연계 맞춤형 1:1 농업교육 및 생활 상담 등 지원

-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가족의 가족구성원 간 이해도 향상,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농업농촌 가치 이해 교육 운영

- 청소년 전문교육기관(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과 협력하여 청년농업인과의 대화, 농업분야 진로탐색 과정 등을 운영하여 농업농촌 차세대 주역 양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농식품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외국인력 정책 및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결혼이민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지속 추진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5~’29)을 수립(’25.上)하여 농업 부문 인력공급 목표 및 정책과제 마련

* 농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숙련기능인력 공급확대, 외국인근로자 정주 및 근로환경 개선 등 포함

○ 고용허가제를 통한 음식점업 외국인력 지속 도입 및 제도 안정화

* 고용허가제 홍보, 사업주 사전교육 운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도 제고, 업체 모니터링을 통한 근무여건 자율개선 유도 등

○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24. 70개소→’25년 90개소)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및 정착지원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과 청소년 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과정 지속 운영

* 결혼이민여성 금융교육 등 신규 과정 마련, 멘토와 교류 지원, 쉬운 용어 사용·한국 생활 안내 등 반영하여 교육 교재 개편

* 다문화 청소년 대상 진로상담 및 교류 확대를 지원하는 청소년 과정 운영 등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방안 수립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25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관계부처 협의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 '25년 사업 담당자 설명회('25.1~2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 승인(~25.2월) ▪ 교육 운영 기관 선정 및 교육 대상자 모집(~25.3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5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25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홍보 및 교육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 '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상반기 현장 점검('25.5~6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지역별 업무 담당자 및 멘토 사전교육(~'25.4월) ▪ 농업 및 정착지원 교육과정 진행('25.4~10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5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5.5월) ▪ '25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25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홍보 및 교육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 현장 점검('25.6~9월) ▪ 교육 만족도 조사('25.9~10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5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25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홍보 및 교육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 '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하반기 현장 점검('25.10~11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완료 및 워크숍('25.11월) ▪ 교육결과 및 정산보고('25.12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5.12월) ▪ '25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H-2 등)를 점수제로 평가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국내 정주유도

□ 과제 내용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부처추천제 운영 및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제도 홍보 등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을 위해 농업·어업·제조업·뿌리산업·건설업·조선업 등 산업별 별도 쿼터 운영 중(법무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숙련기능인력 제도시행('17년)

○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19년)

* 농업쿼터 : ('19) 50명 → ('20) 50 → ('21) 50 → ('22) 150 → ('23) 1,600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K-point E74) 본격 시행('23.9월)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4.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등(협조)

○ 추진절차 : 쿼터배정(법무부) → 부처추천제 운영(각 부처)

2. ’24년도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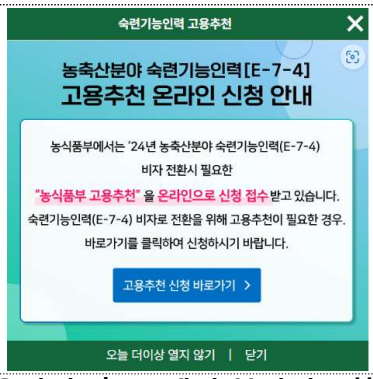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 운영(’24년 실적 : 455명)

○ ‘24년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운영방안 수립(2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온라인 홍보(분기별 1회)

<주요 홍보 실적>



농축산분야 추천 운영방안 공고(2월)



온라인 홍보 배너(분기별 1회)

□ 농업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추진(’24 신규)

○ 농협·농정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내·외국인 농업고용인력 지원

○ 농업 분야 인력 현황 및 특성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위한 조사 실시

3. ’25년도 추진계획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숙련기능인력 공급확대, 외국인근로자 정주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정책과제 마련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부처추천제 운영 및 제도 홍보

○ ‘25년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운영방안 수립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 농촌인력중개센터,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숙련기능인력 온라인 추천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100%)	구축 완료 (100%)	
'24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홍보실적(건)	4회 (분기별1회)	완료 (100%)	
'25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홍보실적(건)	4회 (분기별1회)	-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4
담 당 자	5급 이종화	이 메 일	sajanabi@korea.kr

1-2-3-2	농 · 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근로자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과제 내용

○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취업 및 장기체류 지원 강화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기준 완화, 계절근로자 경력 연계, 고용허가 대상국가 확대 등을 통한 장기체류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숙련기능인력 제도시행('17년)

○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19년)

* 농업쿼터 : ('19) 50명 → ('20) 50 → ('21) 50 → ('22) 150 → ('23) 1,600 → ('24) 1,600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4.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등(협조)

○ 추진절차 : 개선방안 검토(각 부처) → 체류제도 총괄(법무부)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 및 숙련기능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 지속 논의

○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정책제안,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 국조실 외국인력 합리적 관리 방안 등

3. ’25년도 추진계획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숙련기능인력 공급확대, 외국인근로자 정주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정책과제 마련

□ 농업분야 외국인력 장기체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지속 논의

* 계절근로-고용허가-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연계, 고용허가제 국가 확대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취업 및 장기체류를 위한 제도개선	농업분야 외국인 장기체류 방안 마련	장기체류 방안 마련	100%	100%	
’24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전환 확대	전년 대비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전환 인원 증가율	20%	20% (잠정)	농업 숙련기능인력 ’24년 전환인원/ ‘23년 전환인원
’25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전환 확대	전년 대비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전환 인원 증가율	20%	-	농업 숙련기능인력 ’25년 전환인원/ ‘24년 전환인원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4
담 당 자	5급 이종화	이 메 일	sajanabi@korea.kr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에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으로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과제 내용

○ ’25년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지속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추진 결정(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3.11.27.)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개선(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4.7.19.)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추진절차 : 개선방안 검토(부처 합동) → 차년도 E-9 도입운용계획 수립(외국인력정책위원회)신청접수 기간 공고(고용부) → 홍보(고용부·농식품부) 및 희망 사업주 사전교육(농식품부, 음식점 관련 협회)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부) → E-9 도입(고용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E-9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농식품부, 음식점 관련 협회)

2. ’24년도 추진 실적

□ 음식점업 단순노무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시범 도입

○ ’24년 2회차(4.22.~5.3.)부터 음식점업 고용허가 첫 신청

* (업종) 한식, (지역)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 5인 이상 5년 이상, ▲5인 미만 7년 이상

○ ’24년 3회차(8.5.~8.16.)부터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 실태조사,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요건 중 업종·지역 확대 및 업력 요건 일부 완화

  * (기존) 100개 지역 / 한식 / 5년~7년 이상 → (개선) 전국 / 한식+외국식 / 5년 이상

- 책임 있는 고용관리를 위해 음식점 사업주 대상 고용허가제 사전교육(’24.8월~)

- E-9 고용 음식점업 사업장의 고용 및 체류 실태 파악, 관련 정보 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24.9월~)

3. ’25년도 추진계획

□ 고용허가제를 통한 음식점업 외국인력 지속 도입 및 제도 안정화

○ 음식점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홍보 확대

○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을 운영하여 사전에 외국인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외국인력(E-9) 채용 중인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근무 여건 자율개선 유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해당 없음 (‘24 신규)					
’24	음식점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시범 추진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	-
’25	음식점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추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도입 안정화	고용허가 신청·도입을 위한 홍보 등 지원	지속 도입	-	-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전화번호	044-201-2170
담 당 자	5급 이미영	이 메 일	mylee2009@korea.kr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1. 과제 개요

□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과제 내용

○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日'단위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22: 시범 5개소→ '23: 19→ '24: 70→ '25p: 90))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5개소)

○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본사업 추진(19개소)

○ 202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70개소)

○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90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협업)→ 지자체, 농협중앙회

○ 추진절차

〈계획수립〉		〈사업신청〉		〈사업선정〉		〈사업시행〉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5월) ·사업 시행지침 통보 (전년도 10월)		·사업 신청 안내 ·사업자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전년도 10월)		·선정 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 (전년도 10월)		·확정예산 통보(1월) ·사업 점검(수시)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12월)

2. ‘24년도 추진 실적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시행(’23년 19개소, 990명 → ‘24년 70개소, 2,550명), 농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주체간 근무처 변경 허용(’24.1.) 등 계절근로자 체류 관련 제도 개선

<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요 >



3. ‘25년도 추진계획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시행(’24. 70개소→‘25년 90개소)

□ 사업담당자 이해 제고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25.1~2월)

□ 법무부 합동 현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25.상, 하반기)

□ 예산집행 적절성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 현장 점검(’25.상, 하반기 각 1회)

□ 소요예산 : **총 9,000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235	6,860	9,000	131.2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농특회계)	617.5	3,430	4,500	131.2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617.5	3,430	4,500	131.2	
-기 타						

□ 산출내역

○ (공공형 계절근로) 90개소×개소당 100백만원×국비 5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개소)	19개소	19개소	지자체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현황
'24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개소)	70개소	70개소	지자체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현황
'25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개소)	90개소	-	지자체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현황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1
담 당 자	5급 김동우	이 메 일	amurokdw@korea.kr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 과제 개요

□ 목적

○ 농촌 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육성 및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10~)

- 농업종사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단계별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현장실습, 농촌역사·문화 등을 교육

○ 1:1 맞춤형 농업교육('09~)

-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여성 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작물재배 실습 등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영농정착지원('09~)

-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배우자, 시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농촌·농업의 이해과정,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을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 1. 과제 추진

○ 2010. 1. 예산 및 교육인원 확대

○ 2019. 1. 청소년 과정 신규 운영

○ 2020. 1. 단계별 농업교육 세분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 →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영농정착 지원

○ 기초농업교육, 농기계 사용법,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 교육, 가공 실습 등 6차 산업교육 등을 통해 영농후계인력으로 육성(500명)

○ 결혼이민여성과 전문여성농업인을 1:1로 연계하여 작물재배 전과정, 마케팅 및 선진 재배농법 견학 등을 통해 전문 농업교육 제공(250명)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지역 내 이해증진 프로그램 및 농촌·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탐색·체험 교육(180명)

3. ‘25년도 추진계획

□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930명)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총 717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333	717	717	0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농특회계)	1,333	717	717	0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930명 교육 × 771천원 × 국비 10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교육 인원 확대	교육수료 인원(명)	1,984	2,200	농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서
'24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교육 인원	교육수료 인원(명)	930	930	농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서
'25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교육 인원	교육수료 인원(명)	930	-	농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전화번호	044-201-1568
담 당 자	5급 김문석	이 메 일	kms4492@korea.kr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1. 과제 개요

□ 목적

○ 농업 경영 형태는 규모화되는 반면,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지속되어 농업분야 근로인력 부족 문제 심화

- 농업분야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C-4, E-8)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과제 내용

○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분야 확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현장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지원(상시)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대상을 유학생 및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24.2.~)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내, 지자체 계절근로자 인력관리 업무 담당자용 시스템 구축·시행('24.6.~) 등

* 비수도권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지역에서 유학생 부모계절근로 초청제도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 추진절차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지침 마련 등 운영 총괄

- **(농식품부)**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협의→ 계절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기숙사), 농업고용인력전문기관(농협중앙회) 지정·애로사항 상담 등으로 농작업 적응 및 안정적 체류·정착 지원→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 **(지자체)** 계절근로자 도입, 교육, 관리 등 운영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24년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23: 35,604명→ '24: 61,248명)

☐ 단기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추진('24년 70개소)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내, 계절근로 시스템 구축·시행으로 계절근로제 운영 지자체 인력관리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

3. '25년도 추진계획

☐ '25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4.12월)

☐ '25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 '25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5.5월)

☐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필요사항 협의·추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강화	계절근로 배정인원 확대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34,614	34,614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현황
'24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강화	계절근로 배정인원 확대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45,631	61,248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현황
'25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강화	계절근로 배정인원 확대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현황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1
담 당 자	5급 김동우	이 메 일	amurokdw@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455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456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58

Ⅳ. 과제별 시행계획 ····· 459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1]-③ 첨단산업 글로벌 최상위 인재 확보 ····· 459

1-2-[2]-④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461

1-2-[4]-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464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3	100%	190	977	414.2%
1. 경 제	3	100%	190	977	414.2%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첨단산업 글로벌인재 확보**
- **뿌리산업 양성대학 교육 커리큘럼 개선 및 개발 추진**

주요 사업내용

- 첨단산업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법무부 협업)
  - 비자 발급절차 신속·간소화,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 입국 1년 경과 시 거주비자 전환 자격 부여 등 비자발급 편의 제고
- 뿌리산업 양성대학 선정·운영 및 외국인 기술 인력선발
  -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계획 협약체결
  - 뿌리산업 양성대학 점검 및 연차 평가
  -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생 대상 기량 검증* 실시

  * 면접·실습 평가를 통해 전문성, 숙련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품성 등 평가
-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국내기업 채용박람회 및 소규모 상담회 개최

  ※ '24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구인 기업 102개 사, 구직자 2,334명 참가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0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3개	160	190	977	514.2%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개)	160	190	977	514.2%	
1-2-1-3	첨단산업 글로벌 최상위 인재 확보			797	100	신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비예산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60	190	180	△5.3	

Ⅱ.'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저출생·고령화 지속과 AI 등 신산업·기술 발달로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인력부족 규모 확대

○ 생산연령인구는 '20년 기점으로 감소, '40년까지 836만명 감소 전망(통계청)

○ '24년 全 산업 부족인원은 36만명으로 '14년 부족인원(26만명) 대비 10만명 증가(고용부)

□ 특히 첨단산업은 선도기술 선점을 위한 핵심인재 확보가 필수이나 국내 양성만으로는 양적·시간적 한계 → 해외인재 유치를 통한 글로벌 인재 확보 속도전 대응 필요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뿌리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체계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관련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확대

- 기술수준, 학업, 어학, 품성 등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엄선하여 뿌리기업의 숙련 기술인력으로 활용

- (실적) 기량검증 신청자(졸업예정자) 159명, 기량검증 합격자 수 132명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8월)

- (실적) 구인기업 102개사(전년비 5.2%↑), 외국인 유학생 2,344명 참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첨단산업 글로벌인재 확보) 첨단산업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 비자 발급절차 신속 간소화,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 등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의 비자 발급 편의 제고(법무부 협의 등)

□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교육 커리큘럼 개선 및 개발 추진

○ 해당 대학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업 및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만족도 제고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지역 소재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의 구인·구직 수요 대응을 위해 권역별 소규모 상담회 2회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0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3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 K-Tech Pass 프로그램 (특별비자+정주지원) 신설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5년도 운영계획 협약 체결 ■ '25년도 상반기 기량검증 시행	산업부 뿌리산업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0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3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 K-Tech Pass 프로그램 (특별비자+정주지원) 신설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5년도 운영현황 중간점검	산업부 뿌리산업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0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5년도 하반기 기량검증 시행	산업부 뿌리산업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0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5년도 양성대학 연차평가	산업부 뿌리산업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지방 외국인유학생 취업 상담회 추진 (잠정)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1-3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첨단산업 분야 최상위 인재의 국내유치를 위해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

□ 과제 내용

○ 첨단산업분야 최상위 인재 대상 특별비자 발급 및 정주여건 개선

- 비자 발급절차 신속·간소화,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 입국 1년 경과시 거주비자(F-2)로 전환 자격부여 등 비자 발급 편의 제고

- 최상위 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소득세 감면(50%) 혜택 대상자에 포함 등 최상위 인재의 정주 애로사항 해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4. 9. 27.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계기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산업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서울보증보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협업)

○ 추진절차 :

- 요건을 충족하는 첨단산업분야 최상위 인재 대상 특별비자 발급 및 정주 혜택 제공

2. '24년도 추진 실적 : 없음 ('25년 신규)

3. ’25년도 추진계획

□ 첨단산업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 주요 내용 : 발급 절차 신속·간소화,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 입국 1년 경과시 거주비자(F-2)로 전환 자격 부여 등 비자 발급 편의 제고

□ 소요예산 : **총 79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0	797	100	신규
-국 비	▪일반회계			797	100	신규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인재유치 거점무역관 운영비, 온라인 구인 지원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	-	-	-	-	-
’24	-	-	-	-	-	-
’25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첨단산업 우수인재 유치	특별비자 신설	신설	-	관련 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국 산업일자리혁신과	전화번호	044-203-4227
담 당 자	5급 박성은	이 메 일	seongep16@korea.kr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뿌리기업에 숙련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성대학을 선정, 유학생을 양성하고 졸업 후 내국인 기피 업종인 뿌리산업에 인력 공급

□ 과제 내용

○ (대학 선정·운영)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경험이 우수한 대학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운영

○ (기술 인력 선발)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실시하여 기술인력 선발

※ 기량검증 : 면접·실습평가를 통해 전공 뿌리기술 분야의 전문성, 숙련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품성 등 평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4. 10. 양성대학 3개(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대학 선정

○ 2015. 10. 양성대학 5개(거제대, 군장대, 아주자동차대, 인하공전, 전주비전대) 대학 추가 선정

○ 2016. 9. 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 기량검증 지표 개발

- NCS 세분류,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 활용

○ 2017. 1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추가 선정

○ 2018. 1. 양성대학 2개(조선대, 인하공전) 선정 취소

○ 2019.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선정 취소

○ 2020. 1. 경기과학기술대학교(표면처리), 영남이공대학교 선정

○ 2022. 12. 선정평가위원회(경기과학기술대(금형, 용접), 서정대, 조선이공대)

○ 2023. 12.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부천대, 인하공전)

○ 2024. 2. 운영계획 협약(동원과기대, 충북보건과학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추진절차

- (양성대학) 양성대학 선정 → 협약 체결 → 양성대학 운영

- (기량검증) 기량검증 공고 → 외국인 유학생 신청 → 기량검증 실시 →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2. '24년도 추진 실적

□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유학생 양성

○ 기량검증 신청자(졸업예정자) 159명, 기량검증 합격자 수 132명

□ 외국인 유학생 기량검증 실시(2회)

○ 2024년 2월 졸업자 대상 7개교(거제대, 경기과기대, 계명문화대, 군장대, 아주자동차대, 영남이공대, 전주비전대) 기량검증 실시

○ 2024년 8월 졸업자 대상 7개교(거제대, 경기과기대, 계명문화대, 군장대, 아주자동차대, 영남이공대, 전주비전대) 기량검증 실시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연차평가 위원회 개최('24. 12.)

○ 뿌리산업 양성대학(학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해당학과의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한 종합 점검

3. ’25년도 추진계획

□ 2025년도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계획 협약 체결(1분기)

○ 2024년말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

□ 2025년 2월 졸업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1분기)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운영 대학 중간점검(2분기)

□ 2025년 8월 졸업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3분기)

□ 2025년도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연차평가(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2	선정대학 협약
’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2	선정대학 협약
’25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	선정대학 협약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공급망 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	전화번호	044-203-4907
담 당 자	6급 정서란	이 메 일	rani123@korea.kr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수요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로 우수인력의 재유출 방지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국내기업 채용박람회 및 소규모 상담회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01.07 : 해외전문인력유치사업 추진근거 마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2011.10.06~07 : KIAT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이관, 최초 개최

○ 2023.08.21~22 : KOTRA 해외취업·외투기업·외국인 유학생 3종 채용박람회를 Global Talent Fair로 통합 개최

○ 2024.08.27~28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외국인유학생 채용관 16회차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추진절차 : 참여기업 모집 → 외국인 유학생 모집 → 박람회 개최

2. '24년도 추진 실적

□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 일시/장소 : 2024.8.27.(화) ~ 28(수), 10:00 ~ 17:00 / COEX

○ 결과 : 구인기업 102개사(전년비 5.2%↑), 외국인 유학생 2,334명 참여

3. ’25년도 추진계획

□ (24년) 수도권 1회 → (25년) 수도권 1회, 지방 소규모 상담회 2회 확대

○ (수도권, 3분기)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와 합동으로 “Global Talent Fair”를 통합 개최하여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의 취업탐색 기회 극대화

○ (권역별) 지역 소재 기업·유학생 구인구직 수요 대응을 위해 권역별 소규모 상담회 2회 추진(24년중 대상지역·시기 확정 예정)

□ 소요예산 : **총 18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60	190	180	△5.3	
-국 비	▪일반회계	160	190	180	△5.3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장치, 운영비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횟수	1회	1회	개최횟수
’24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횟수	1회	1회	개최횟수
’25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횟수	1회	1회	개최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전화번호	044-203-4225
담 당 자	6급 백성혁	이 메 일	bsh9129@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469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470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71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472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472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476

보 건 복 지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1	100%	4,354	4,385	0.7%
1. 경 제	1	100%	4,354	4,385	0.7%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 확대 및 환자 권익·편의 증진

주요 사업내용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 확대 및 편의 증진 관련 정책 지속 시행

- (유치 채널 확대) 중동 국비 환자 확대 및 해외의료인 연수 다각화
- (유치기관 관리 강화) 4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 활성화
- (환자 권익·편의 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통역지원 강화

※ ('22년) 24.8만 명 → ('23년) 60.6만 명 외국인환자 유치(144.2% 증가)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1개	4,864	4,354	4,385	△0.7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1)	4,864	4,354	4,385	△0.7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864	4,354	4,385	△0.7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0)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비예산	종료('24)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확대·성장*에 따라, ’09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를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 (’20) 710억달러 → (’25) 1,820억달러(Glasgow Research & Consulting Report, ’22)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진료환경 개선, 관련 전문인력양성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원을 통해 ’23년 외국인환자 60만명 돌파 발표(4.29일)

○ **(외국인 건강보험피부양자 요건 강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약용 사례 방지**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전세계의 의료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중

-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 강화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환자 유치채널 확대 및 외국인 환자 권익·편의 증진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 발표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실시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제9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다양화 및 외국인 환자 권익·편의 증진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과제 내용

○ **(유치채널 확대)** 주요국 정부 간 협력 및 외국의료인 국내 연수를 통한 환자 유치채널 발굴·확대

○ **(환자 권익 및 편의 증진)** 외국인환자 권익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의료통역 지원 강화 등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 ('16.6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6.10월) 제1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 ('17.1월) 1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시행

○ ('18.10월)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 ('22.3월)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

○ ('22.6월) '2022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시행계획' 수립

○ ('22.12월)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4주기 기준 마련

○ ('23.5월) '2023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시행계획' 수립

○ ('23.9월) 제8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출연금, 민간위탁),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민간위탁)

○ 추진절차 : 사업계획보고(진흥원·개발원)→ 사업계획 승인(복지부)→ 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23년 외국인환자 60.6만명 유치

○ **(유치채널 확대)** 해외 의료인 국내 연수 다각화를 통해 대외에 한국 의료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의료인 대상 비대면 온라인 연수과정(Medical Korea Academy e-class) 운영('23년 총 48개국 378명, 교육과정 723건 수료)

○ **(유치기관 관리 강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인증*하여 의료 질 제고

* (인증기관) '22년 3주기 7개 기관 → '23년 4주기 13개 기관 인증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의 경우 법무부 우수유치기관 지정 우대

○ **(환자 권익 및 편의증진)**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실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 총 214명 응시, 66명 최종 합격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관련 정책 지속 시행**

○ **(유치채널 확대)** 중동 국비환자 확대 및 해외의료인 연수 다각화(연중, 3분기)

-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통한 16개 교육과정 운영(2분기)

○ **(유치기관 관리 강화)** 4주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활성화(3분기)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의 경우 법무부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심사면제)

○ **(환자 권익 및 편의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통역지원 강화(4분기)

- 2025년 제10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필기, 실기) 실시

□ 소요예산 : **총 4,38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안)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864	4,354	4,385	0.7	
-국 비	▪일반회계	4,864	4,354	4,385	0.7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2,489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지원 : 1,764백만원

○ 사업관리 기본경비 : 132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27만명	60만명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24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27만명	60.6만명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25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70만명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25.상반기)

5.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전화번호	044-202-2982
담 당 자	5급 김광수	이 메 일	516kks@korea.kr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주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료이용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다시 귀국**하는 **악용사례 발생**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외국인**의 **피부양자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 과제 내용

○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요건**에 **최소거주 기간**(6개월)을 **추가,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현행과 같이 즉시 가입**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 제3호**('24.4.3 시행)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거주요건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 발의 →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23.9.19) 및 **상임위 대안 통과**('23.9.21) → **국회 본회의 통과**('23.12.8) **및 공포**('24.1.2)

※ 송언석의원안('21.1.28. 발의), 주호영의원안('21.12.29. 발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추진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제도 시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4.4.19.)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1호, '24.5.8.)

-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국내 거주기간(6개월)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4.4.3.시행)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자격취득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정비**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개선 등 과제 완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개정 여부	개정	개정	
'24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제도 시행	시행	시행	시행	
'25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해당 없음 (과제 완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706, 2718
담 당 자	이관형 서기관, 문현진 주무관	이 메 일	(서)trytofly84@korea.kr (주)esther0221@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481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482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85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488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1-[2]-②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488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1-[3]-③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490

1-1-[3]-⑤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492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②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494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1]-①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496

3-3-[2]-①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499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1]-①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502

4-1-[1]-②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504

고 용 노 동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8	100%	1,971	2,022	2.6%
1. 경 제	3	37.5%			
2. 안 전	1	12.5%			
3. 통 합	2	25%	1,971	2,022	2.6%
4. 인 권	2	25%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 **합리적 고용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

주요 내용

- 산업현장 요구 인력 선발을 위해 송출국 현지 훈련 강화
  - 산업현장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직종별 전공 교과와 한국어 교과 과정 운영

  ※ 베트남 등 5개국 용접, 금형분야 등 기능인력 651명 훈련('24.12. 기준)
- 내국인 기피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신규허용 업종 확대
- 비자발급 시스템(법무부)과 고용허가제 EPS 시스템(고용부) 간 전산 연계 추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점검 및 노동환경 개선
  -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시 및 사업주 사전 계도 활동, 근로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수사 활성화,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숙소 실태조사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현장 맞춤형 훈련,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훈련,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경력설계 등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휴면보험금·임금 체불 보증보험 홍보 지속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8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2)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2)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잠정)	증감(%)	
합계	8개	1,408,113	1,321,081	1,185,381	△10.3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	-	-	-	-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	-	-	비예산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	-	-	비예산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	-	-	비예산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	-	-	-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	-	-	비예산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1,408,113	1,321,081	1,185,381	△10.3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1,406,127	1,319,110	1,183,359	△10.3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 예산 산정 불가 (전체예산)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1,986	1,971	2,022	2.6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2)	-	-	-	-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	-	-	비예산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	-	-	비예산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 청년·경단여성 노동시장 진입 부족 등 구조적 요인으로 현장의 구인난 지속

○ 인구구조 변화, 청년층 취업기피 등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 해달라는 현장 요구 증가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력(E-9)의 유연한 활용 필요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인력부족 장기추세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 등을 통해 인력난 완화

- 산업별 부족인력,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력(E-9) 도입규모 결정

  * E-9 도입규모(쿼터): (’22) 6.9만 → (’23) 12만 → (’24) 16.5만

- 관계부처, 지자체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규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확대 필요성 및 방안 검토

  * 음식점업 시범운영(’23.11. 한식, ’24.7. 외국식),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요건완화(본사 수도권 기업도 인정, ’24.10)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현장 안착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 ‘24년 상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1,501개소 점검(위반업체 322개소 적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실시(271개소)

- 사회적 이슈가 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장 일제 감독(107개소)하여 시정조치 22건, 고용제한·취소 5건 등 조치

○ 중앙(지방관서, 인력공단)-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상담, 교육훈련, 생활·주거지원 등 체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상담원을 배치(62명), 고충상담과 행정처리를 함께 지원, 훈련전문성을 보유한 산업인력공단 주도로 교육 일원화

- 지자체와 함께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 및 특화 사업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필요, 외국인 근로자·사업주 간 분쟁 지원 요구 증가

○ (개선방안)

- 사업장변경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균형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권익보호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개선 추진

* 사업장변경 분쟁 발생 시 노동관계 전문가(노무사) 현장 지원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 경기 전망, 인력 부족률, 외국인근로자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 직종별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노동 시장에 적시 공급하여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 최근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

□ 합리적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계속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우대 추진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창업 촉진 및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

○ 근로계약 체결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 및 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시 관련 부처와의 공유 활성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근로조건, 산업안전 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노동권 확보 및 법 준수 의식 제고

○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 외국인근로자 대상 상담·교육을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보호 강화

- 현지어 상담이 가능한 다국어상담원 배치, 전국적인 상담·교육장소 확대,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조기 적응 및 국내 정착 유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7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현행 선발체계(업종별 선발)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평가 요소를 추가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선발(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관계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지속 검토·추진 (연중 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고용부 EPS 시스템 전산 연계 추진(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연중계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휴먼 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실시 및 홍보(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현행 선발체계(업종별 선발)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평가 요소를 추가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선발(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관계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지속 검토·추진 (연중 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고용부 EPS 시스템 전산 연계 추진(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연중계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상반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휴먼 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실시 및 홍보(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7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현행 선발체계(업종별 선발)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평가 요소를 추가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선발(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관계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지속 검토·추진 (연중 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고용부 EPS 시스템 전산 연계 추진(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연중계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휴먼 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실시 및 홍보(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현행 선발체계(업종별 선발)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평가 요소를 추가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선발(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관계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지속 검토·추진 (연중 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고용부 EPS 시스템 전산 연계 추진(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연중계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하반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휴먼 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실시 및 홍보(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직종별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적시 공급하여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종의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송출국 현지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해 외국인력 선발

- 한국어 교과 및 전공 교과(용접 등)로 훈련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송출국에서 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국내 기업에 알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 베트남·우즈베키스탄 56명 훈련 실시

○ ('20) 베트남 23명 훈련 실시

○ ('22) 베트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281명 훈련 실시

○ ('23) 베트남 등 6개 국가* 621명 훈련 실시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훈련계획 수립 → 훈련생 모집 신청·선정 →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접수 → 훈련대상자 확정 → 훈련 실시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최종 합격자 선정 → 구직자명부 작성·관리 → 뿌리기업 우선 알선

2. ‘24년도 추진 실적

○ (‘24) 베트남 등 5개 국가* 용접, 금형 분야 등 기능인력 651명 훈련 실시

* 베트남, 네팔,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3. ‘25년도 추진계획

□ 현행 선발체계(업종별 선발)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평가 요소를 추가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선발

○ 산업현장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직종별 전공 교과와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교과 과정*으로 훈련 운영

* 송출국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취업교육(47시간) 과정을 포함하여 신속 도입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6개 국가 600명 이상 훈련 실시	5개 국가, 651명	내부 자료
’25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7개 국가 700명 이상 훈련 실시	-	내부 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	전화번호	044-202-7223
담 당 자	5급 이정석	이 메 일	matrix93@korea.kr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최근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

□ 과제 내용

○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E-9) 신규 허용방안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광업 및 물류터미널운영업 등 H-2 허용

○ ('22) 항공·육상화물취급업(택배업) 등 H-2 허용

○ ('23) 인력난 심화 업종 대상 E-9 고용 확대 및 H-2 네거티브 허용 방식 전환

○ ('24) 음식점업(외국식, 시범)에 E-9 추가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주관), 신규 허용 업종 관련 주무부처(협업)

○ 추진절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각 부처 차관) 상정·의결 → 외국인력 선발·도입

2. '24년도 추진 실적

□ '23년 E-9 신규 허용한 업종* 대상 고용허가 신청·발급('24~)

* **(음식점업·호텔콘도업)** 2회차(4.22.~5.3.) 접수, **(임업·광업)** 3회차(8.5.~8.16.) 접수

□ 음식점업 시범사업 요건 중 업종·지역 확대 및 업력 요건 완화를 통해 외국인력 활용 확대('24.7.)

* **(기존)** 100개 지역 / 한식 / 5~7년 이상 → **(개선)** 전국 / 한식+외국식 / 5년 이상

3. '25년도 추진계획

□ (공통)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지속 검토·추진

□ (음식점업·호텔콘도업) 관계부처(농식품부·문체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평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E-9 신규 업종 허용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25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	전화번호	044-202-7735
담 당 자	5급 김경은	이 메 일	eunkk33@korea.kr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부처(법무부·고용노동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의 입국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주 만족도 제고

□ 과제 내용

○ 사업현장의 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비자 발급시스템과 고용허가제 EPS 시스템간 추가 정보 연계를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비자 발급 시스템 연계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정책 결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사업 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비자 발급 시스템과 EPS 시스템 연계로 E-9 외국인력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가 고용예정인 외국인력의 비자발급일자를 미리 인지

- 산업현장에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숙소준비 등 외국인력 체류를 위한 준비기간 제공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노동부 EPS 시스템 간 전산 연계 추가 추진(비자 신청시 비자 신청 정보 공유) ⇨ 법무부와 협의 지속

- 비자 신청 시 인력공단에서 입국계획을 수립, 입국을 추진하여 신속하게 외국인력을 도입토록 하고, 사업장에서는 외국인력 체류 준비를 가능토록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전산 연계 추진	비자 신청시 신청 정보 연계	정보 연계 여부	정보 연계		내부자료
’25	전산 연계 추진	비자 신청시 신청 정보 연계	정보 연계 여부	정보 연계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2
담 당 자	5급 안성수	이 메 일	power827@korea.kr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근무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추진

□ 과제 내용

○ 근로계약 체결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 및 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시 관련 부처와의 공유 활성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 과제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추진절차 : 근로감독 필요 사업장을 선정하여 관할 관서별로 감독

2. '24년도 추진 실적

□ 취약분야 근로감독 및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24년내 실시 예정)하여 외국인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 실시

3. '25년도 추진계획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업종

□ **(세부 추진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임금체불 예방

○ **(기초노동질서 준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 분기 특정 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48개소)에서 동시에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현장 예방점검의 날」운영

- 사업주에 충분한 사전 계도기간 부여하여 사업주 자율적인 개선 유도를 통해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

○ **(수사 활성화)** 균등처우, 강제근로 등 근로조건 관련 위반 사항 발생시 시정 명령 및 수사 활성화 통해 외국인 권리구제 지원

□ **(추진일정)** 연중 실시

○ '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수립(1월) → 근로감독 추진(~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 강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1회	'24년내 실시예정	
'25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 강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1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528
담 당 자	5급 최충운	이 메 일	choi1974@korea.kr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창업 촉진 및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

□ 과제 내용

○ 결혼이민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적합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의 45%~85% 지원(5년간 300~500만원 한도)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 참여 시 훈련비 전액 지원(단, 취업률 40%미만 직종은 80% 지원)하고,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시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지원(1회는 자부담 면제, 2회부터는 자부담 부과)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8. 1. 과제 추진

○ 2018. 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계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 ①구직신청(훈련생, 고용센터) ⇨ ②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고용센터) ⇨ ③훈련상담(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 ④훈련과정 수강(훈련생, 훈련기관) ⇨ ⑤훈련비 등 지급(고용센터)

2. ‘24년도 추진 실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 787명에게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24.8월말 기준)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여 참여 독려

3. ‘25년도 추진계획

○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의 이·전직 등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훈련 수시 공급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 **(평생크레딧)**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및 심층 경력설계 지원

□ 소요예산 : **총 1,183,359백만원('25년 정부안 기준)**

구 분		'23년	'24년	'25년(정부안)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406,127	1,319,110	1,183,359	△10.3	
-국 비	▪일반회계	518,815	584,906	580,161	△0.8	고용노동부
	▪기 금 (고용보험)	887,312	734,204	603,198	△17.8	고용노동부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전체 예산으로 작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787명	전년수준
'25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전년수준

※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참여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이주청소년의 참여실적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목표 및 실적에서 제외(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 중 내일배움카드 훈련 실시인원으로 목표 및 실적 산정)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4-202-7318/7320
담 당 자	5급 박채원	이 메 일	parkchae14@korea.kr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히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효과적으로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 과제 추진 연혁

○ '11.7월, 경기 안산시에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

○ 추진절차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책 수립
○ 사업 목표 설정 및 예산 계획 승인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실적

○ 지속적인 비대면 선호 추세로 내방상담 감소 추세 지속, 반면 3자 통화 및 번역지원 상담은 증가 추세

(단위 : 건)

구 분	계	전화상담	3자통화	내방상담	번역지원
2024.8월	291,534	250,701	32,506	6,895	1,432
2023년	406,443	353,618	39,572	11,180	2,073

3. ‘25년도 추진계획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내방·전화상담 및 3자통역 서비스 제공(계속)

□ 소요예산 : **총 2,022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986	1,971	2,022	2.6	
-국 비	▪ 일반회계	1,986	1,971	2,022	2.6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상담센터 인건비

- 현지원상담원(52명*2,460,400원*12월)

- 분야별 전문상담원(5명*2,582,610원*12월)

- 시스템 및 통계관리원(2명*2,582,610원*12월)

○ 상담센터 운영비

- 건물관리비(7,000,000원*12월)

- 상담시스템 유지보수(6,000,000원*12월)

- 공공요금(5,000,000원*12월)

- 물품구입(750,000원*12월)

- 안내사업(100원*200,000장)

- 고용허가제 등 실태조사(2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실적(건)	42만건	-	전년 대비 5% 증가 (내부 자료)
'25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실적(건)	42만건	-	최근 3년 실적 평균 및 E-9 체류인원 고려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8
담 당 자	5급 유연희	이 메 일	coffeeradio@korea.kr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근로조건, 산업안전 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노동권 확보 및 법 준수 의식

□ 과제 내용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고용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산업안전부서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수칙 위반 여부 등 산업안전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4.8.부터 과제 추진 (매년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추진절차 :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방관서 별로 점검 실시

※ 계획수립- 자가진단(점검 대상 3배수) - 현장점검 - 위반사항 조치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고용사업장 총 1,501개소 점검(상반기, 하반기 1500개소 실시 중)

※ 상반기 점검사업장 1,501개소 중 322개소 위반업체 적발

3. ‘25년도 추진계획

□ (대상)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한 사업장 3,000개소

□ (추진내용) 외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계법 지도・점검

○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축산·어업을 집중점검(점검 물량의 40% 배정)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 및 고용허가제・기숙사 기준 위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점검

○ 주거 실태조사 병행 실시 → 주거시설 형태(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등),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 여부 등 확인

※ 「’21년 주거환경 개선 지침」 등에 따라 주거시설 제공 여부 등 실태조사

□ (추진일정) 상・하반기

○ ’ 25년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2월) → 지도점검 추진(3월~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00개소	1,501개소	점검 결과 (상반기)
’25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00개소	-	점검 결과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739
담 당 자	5급 김현민	이 메 일	kym0603@korea.kr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 과제 내용

○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경우 민원인 편의 제고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위해 재고용 시 별도 절차 없이 갱신되도록 자동 갱신 방안 추진

○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등록된 현지 계좌로 보험금을 송부하는 자동환급제 내실화

○ 휴면보험금의 경우 송출국 현지에서 EPS 센터를 통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 ('19) 베트남, 캄보디아 → ('20)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키르키스스탄,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동티모르, 몽골 → ('21) 네팔, 중국, 필리핀 → ('22) 중국 방문동포(H-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보험사업자

2. ‘24년도 추진 실적

○ ‘24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실적: 1,442건 지급 (’24.9월 기준)

○ 임금체불 보장보험 실적: 369건 지급 (‘24.8월 기준)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위해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홍보 지속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 취업교육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보증보험 홍보 지속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자동 환급 동의율	70%	-	내부자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제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건수)	전년도 대비 20% 향상	-	내부자료
‘25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자동 환급 동의율	75%	-	내부자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제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건수)	전년도 대비 5% 향상	-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2
담 당 자	5급 안성수	이 메 일	power827@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509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510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11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512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증진

3-2-[2]-①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512

3-3-[1]-②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515

3-3-[3]-③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518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2]- 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521

여 성 가 족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4	100%	76,859	77,124	0.3%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3	75%	64,664	64,184	△0.7%
4. 인 권	1	25%	12,195	12,940	6.1%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주요 내용

-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 홍보
-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영유아기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및 자녀 대상 학습 프로그램, 취학 전·초등 전 학년 대상 기초학습 지원, 청소년기 정서 상담 및 진로 설계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상담소(9개소) 운영을 통한 보호·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보호시설 입소자 만족도 조사,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장 점검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4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4개	60,368	76,859	77,124	0.3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3)	48,574	64,664	64,184	△0.7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482	462	510	10.4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5,841	18,110	19,001	4.9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32,251	46,092	44,673	△3.1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11,794	12,195	12,940	6.1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11,794	12,195	12,940	6.1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다문화가구는 40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23년 기준 119만여 명에 이르며 지속 증가 추세

-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학습·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수: (‘21) 289,529명 → (‘22) 299,440명 → (‘23) 308,402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별·편견 해소 도모

○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정착단계 및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미래 인재육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뿐 아니라 장기 정착기 직업훈련 등 지원 강화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 강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가족센터 등을 통해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3-3-3-3	학업 · 진로 · 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언어발달, 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 역량강화 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여가부 권익구조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3-2-1-1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 및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 대상 이해교육 실시

□ 과제 내용

○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연령별 맞춤형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연계

○ 이해교육 홍보 및 전문강사 관리, 효과성 조사 등 성과관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부터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추진절차 : 온라인 다문화배움터 운영 및 찾아가는 이해교육 운영



2. ’24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온·오프라인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실시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운영

- 학교,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 유관 교육기관에 교육자료 연계를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 저변 확대

3. ’25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풀 구축

○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 다문화인식개선 관련 홍보 등

□ 소요예산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82	462	510	10.4	
-국 비	▪ 일반회계	482	462	510	10.4	
	▪ 특별회계 (회계명)					
	▪ 기 금 (양성평등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278	312	전년(22년) 실적대비 3% 증가
24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321		전년(23년) 실적대비 3% 증
'25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330		24년 목표치(321) 대비 3% 증가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72,
담 당 자	5급 최선우	이 메 일	seonwoochoi@korea.kr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종합적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

□ 과제 내용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 21개소('0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07)38개소→('08)80개소→('09)100개소 → ('10)159개소 → ('11)200개소 → ('12)200개소 → ('14~)218개소 → ('20~)228개소 →('22)230개소→ ('23~24)231개소 → ('25)235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가족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사업지침) → 지자체(사업시행)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시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24년.9월말 기준) : 449,758건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24.9월말 기준) : 23,570명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운영

□ 추진일정

○ 가족사업안내 지침 교부(1월)

○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역량강화지원 사업 실적 점검(매월)

○ 사업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5. 하반기

□ 소요예산 : **총 19,001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5,841	18,110	19,001	4.9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 금 (양성평등기금)	7,594	8,792	9,174	4.3	
-지방비	▪ 광역시·도비	8,247	9,318	9,827	5.5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물량, 단가 등을 나타내며 원단위까지 표기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 국비 6,963백만원

- 400명 × 36,110천원 × 30~70% = 6,963백만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 국비 2,211백만원

- 231개소 × 20.1백만원 × 30~70% = 2,211백만원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보조율 : 30~7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 수(연인원)	60,951명	62,576명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24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 수(연인원)	62,779명		
'25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및 역량강화 지원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용자수(연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용자수(연인원)	478,061명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74
담 당 자	5급 선강희	이 메 일	zzzam1500@korea.kr

3-3-3-3	학업 · 진로 · 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글로벌 미래 인재로 육성

□ 과제 내용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및 청소년기 상담,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년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기초학습 지원 시작(78개소, 90개소)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14.7월~)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09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가족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사업지침) → 지자체(사업시행)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시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진로설계 지원 확대

- 기초학습 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24) 168개소

- 진로설계 지원 : (’22) 78개소 → (’23) 113개소 → (’24) 135개소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24.9월 기준, 누적 연인원) : 315,114명

○ 언어발달지원서비스('24.9월 기준, 누적 연인원) : 127,585명

3. '25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영유아기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및 자녀 대상 학습프로그램 지원

○ 취학 전·초등 전 학년 대상 기초학습 지원, 청소년기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 및 진로설계 등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 추진일정

○ 세부 운영계획 수립, 예산 교부 : '25. 1월 중

○ 홍보 및 참여자 발굴, 세부사업 추진 : '25. 2 ~ 연중

○ 사업설명회, 월별 실적 및 현장점검 : 연중

○ 사업결과(정산) 보고서 작성, 보고 : ~ '26. 2월

□ 소요예산 : **총 44,67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2,251	46,092	44,673	△3.1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 금 (양성평등기금)	15,382	22,087	21,432	△3.0	
-지방비	▪ 광역시·도비	16,869	24,005	23,241	△3.2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6,228백만원

○ 이중언어 학습 지원 : 4,579백만원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기초학습, 진로설계) : 10,625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명)	145,371명	145,371명	
'24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명)	254,399명		
'25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명)	254,399명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69 02-2100-6374
담 당 자	5급 전병길 5급 선강희	이 메 일	pass7102@korea.kr zzzam1500@korea.kr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지원, 주거 제공,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과제 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4.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시작(2개소)

○ 2009.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별도 사업 분리(복권기금 지원), 이주여성 쉼터 18개소,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지원

○ 20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신설(1개소)

○ 2013.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4개소 확대

○ 201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개소 확대(쉼터2, 그룹홈1)

○ 2015.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1개소 확대

○ 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개소 확대(쉼터1, 그룹홈1)

○ 201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 확대

○ 2019.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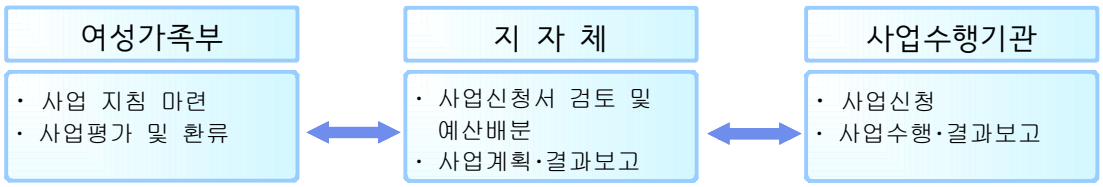
○ 2020.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4개소 확대

○ 2021.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추진절차



2. '24년도 추진 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

○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숙식제공 등 서비스 지원 지속 확대

* 보호시설 : ('22) 91,494건 → ('23) 129,474건
상 담 소 : ('22) 67,123건 → ('23) 66,830건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을 위해 임대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5백만원) 지원

* '24년부터 동반아동 신규 지원(인당 250만원)

3. '25년도 추진계획

□ 폭력피해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한 보호·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연중)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만족도 조사(3/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장점검(3/4분기)

□ 소요예산 : 총 7,891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1,794	12,195	12,940	6.1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 금 (양성평등기금)	7,350	7,609	7,891	3.7	
-지방비	▪ 광역시·도비	4,444	4,586	5,049	10.1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 6,445백만원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 1,446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포함) 지원 실적 (건)	신규	실적 보고서	최근 3년 실적의 가중평균 산출
'2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포함) 지원 실적 (건)	165,968	실적 보고서	최근 3년 실적의 가중평균 산출
'2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포함) 지원 실적 (건)	185,794	실적 보고서	최근 3년 실적의 가중평균 산출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582/6447
담 당 자	5급 한송이, 6급 현승환	이 메 일	flowertoto@korea.kr 0731hsh@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527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528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30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31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⑤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531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2-①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533

국 토 교 통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2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2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주요 사업내용

-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지원
  - 전문건설업체 담당자 대상으로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
  - 외국인 고용절차, 규정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도입 등 제도 안내

- 외국인 부동산거래 조사 지속 실시
  -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 세부계획 수립,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비(非)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 추진

※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530건), 토지거래 중 이상 거래(154건), 비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36건) 조사 실시('24년)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2개				00.0	'-'의 경우 '△'
소계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00.0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비예산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비예산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정책여건

○ 건설업 특성과 맞지 않는 **외국인력 규제***로 인하여 **불법인력**이 **양산**

* 과도한 잔여공기 규제, 이동제한 규제, 재입국특례 미적용 등 → 개선 완료(’22년~‘23년)

○ 규제 개선 등 합법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낮거나**, 단계적으로 **합법 외국인력**으로 **교체 중**인 상황으로 **과도기 상태**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설명회를 통해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정책여건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통한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기행위 적발 필요

- 110대 국정과제 중 7번 과제(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회복을 위한 주거안정실현)에 외국인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포함*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한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 추진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24년 주요과제 성과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23.11.14)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24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 주택거래(‘23.6~’24.5, 9,220건) 중 이상거래(530건)에 대한 조사 완료(~24.10)

○ 외국인 토지거래(‘23.1~’24.6, 3,649건) 중 이상거래(154건) 및 비주택거래(‘23.7~’24.6, 889건) 중 이상거래(36건)에 대한 조사 실시(~‘24.12)

☞ 외국인 주택, 토지 및 비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24.12월 예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따른 **제도 안내**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지속 실시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	국토부 건설산업과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불법성, 투기성 거래 조사 세부계획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주택 이상거래 기획 조사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非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설명회**를 통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건설사에 **외국인 고용 절차, 규정** 등 안내

-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사의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개선** : ‘22년 하반기 ~

년도	주요내용	비고
’22	ㅇ 노동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외국인력 합법 활용 및 관리 등, ’22.11. 4)	
’23	ㅇ 노동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외국인력 제도개선 및 합법 고용 등 ’23. 9.15) ㅇ 건설업 외국인력(E7-4 등) 정책 설명회(’23.11.14) ㅇ 국회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방안 토론회(’23.11.29)	
’24	ㅇ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및 활용방안 간담회(’24. 5 ~ ’24.10, 총 6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전문건설협회

○ **추진절차** : 전문건설협회 16개 시·도회 수요조사 → 설명회 일정 조율 및 계획수립 → 지역별 설명회 개최

2. ‘24년도 추진 실적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및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24. 5 ~ ’ 24.10, 총 6회)

3. ‘25년도 추진계획

□ 설명회 개최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25.2분기 개최 예정)

-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따른 제도 안내

☞ 전문건설업체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 소요예산 : 비예산(전문건설협회 자체 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6회	설명회 개최 횟수
’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6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6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6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7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6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8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6회	-	설명회 개최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90
담 당 자	5급 문선일	이 메 일	lineone@korea.kr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실시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과제 내용

○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추가 기획조사 실시, 토지·비(非)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동향분석 및 기획조사 병행 추진

○ 외국인 기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외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거주지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23.8.22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5. 과제 추진, '23.12.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토교통부, 법무부, 관세청 등(협업) → 한국부동산원

○ 추진절차 : 조사대상(부동산거래 신고 中 이상거래건) 선정 → 한국부동산원·국토부 기획조사 후 위반혐의건 관계기관* 조사의뢰 → 관계기관* 처분

* (관계기관)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주택거래(’23.6~’24.5, 9,220건) 중 이상거래(530건)에 대한 조사 완료(~24.10)

○ 외국인 토지거래(’23.1~’24.6, 3,649건) 중 이상거래(154건) 및 비주택거래(’23.7~’24.6, 889건) 중 이상거래(36건)에 대한 조사 실시(~’24.12)

☞ 외국인 주택, 토지 및 비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24.12월 예정)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 세부계획 수립(2분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분기), 非주택(오피스텔 등)·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투기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비주택, 외국인 토지 조사	2회	2회	보도자료
’24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투기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 조사, 외국인 토지· 비주택 조사	2회	2회 (예정)	보도자료 (’24.12월 예정)
’25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투기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 조사, 외국인 토지· 비주택 조사	2회	-	보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전화번호	044-201-3590
담 당 자	5급 이석유	이 메 일	stoneoil@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538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539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41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542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1-4-[1]-② 크루즈관광 활성화 ····· 542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②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546

2-3.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3-[2]-②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550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해 양 수 산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3	100%	7,816	11,971	53.2%
1. 경 제	1	33.3%	1,098	1,298	18.2%
2. 안 전	2	66.7%	6,718	10,673	58.9%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강화,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사업 등 추진**
-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 보안 인력 확보**

주요 사업내용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활동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 타 권역(유럽)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대만, 중국) 포트세일즈,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참석, 크루즈 체험단 운영 및 유튜브 홍보 등
-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예방 및 위법행위 점검
  -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추진(근로계약 체결현황, 인권침해 여부 등)
  -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 이행점검 협의회 운영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협중앙회) 운영 및 해결 지원
- 항만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 방지 등 항만 국경관리 강화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출입허가(금지)제도 정착 등 추진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 보안시설·장비 및 항만 보안인력 확보, 전국 항만 합동 보안 세미나 개최,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 점검 실시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3개	8,630	7,816	11,971	53.2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1)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1,140	1,098	1,298	18.2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비예산
2-3-2-2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7,490	6,718	10,673	58.9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전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감소를 완전히 회복하여 ‘19년 29.7백만명 → ’23년 31.7백만명 → ‘27년 39.4백만명까지 성장 예상

- 산업성장기에 외국적 크루즈선의 우리나라 기항을 늘리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크루즈수요 확대 등 추진 필요

○ 외국인선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선원 노동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 증가

* (고용현황) (‘20년) 26,775명 (’21년) 27,333명 (‘22년) 28,281명, (‘23년) 30,436명

-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및 이탈·불법체류 예방 필요

○ 테러 예방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 필요

- 테러위협 및 무단이탈 사고 등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하여 보안 시설장비 및 인력 확충 필요

-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확대 등 제도개선, 합동 해외 유치활동 등을 통해 436항차, 86만명의 크루즈 관광객 방한

* ‘23년 204항차 27만명 대비 ’24년 관광객은 약 200% 증가(예정)

○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2회) 및 민관 협의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확인(연중 수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24.7)

-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 항만시설 촬영 결과물을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허가없이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 금지 및 항만시설 내 비행승인 없이 드론 비행 금지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해 유치활동 강화,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연안크루즈 등 국내 크루즈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 실시로 근로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로 항만보안 최신 정보 공유 및 인력·시설·장비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도모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2025년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항만보안시설·장비·인력 확보	해수부 항만보안안전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Port-Sales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점검	해수부 항만보안안전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제1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Port-Sales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	해수부 항만보안안전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점검	해수부 항만보안안전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확대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모

□ 과제 내용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통해 크루즈산업을 미래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육성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 (국내 수요 확대) 크루즈 체험단 운영 및 방송·유튜브 등 매체 홍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8.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6. 3.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23. 1.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23. 7.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2024. 2. 2024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 2024. 6.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해부수・문체부 합동)

○ 2024. 7.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기항지(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참석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추진

※ (선사미팅) 중국지역 선사미팅(‘24.8)

(관계기관 공동 포트세일즈) 미국지역 포트세일즈(‘24.4), 일본지역 포트세일즈(‘24.5)

(국제행사 개최·참석)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24.7), Seatrade Cruise Asia 참석(’24.11)

(지역협의체 활동) 국제행사 간 ACC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발전 방안 논의

○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크루즈 체험단 운영(118명, ‘24.9)

3. ’25년도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추진(연중)

※ (선사미팅(잠정)) 유럽지역 선사미팅(‘25.下), 한국 기항지 팸투어(’25.11)

(관계기관 공동 포트세일즈(잠정)) 미국지역 포트세일즈(‘24.4), 대만지역 포트세일즈(‘25.5), 중국지역 포트세일즈(’25.6),

(국제행사 개최) 제1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25.7)

(지역협의체 활동)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연례회의 참석(’25.下, 잠정)

○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크루즈 체험단 운영(’25. 잠정) 및 유튜브 등 매체 홍보 진행(연중)

□ 소요예산 : **총1,29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140	1,098	1,298	18.2	
-국 비	▪ 일반회계	840	798	998	25.1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300	300	300	0.0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적 크루즈 유치(포트세일즈) : 600백만원

- 54.5백만원(행사장 임대, 홍보물 제작, 통역 등 행사진행비)×11개 지역=600백만원

○ 국내 저변 확대 : 248백만원

- 체험단(1인 2백만원×50%×148명) + 매체홍보(100백만원×1편)

○ 국제크루즈 행사지원 : 150백만원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식×150백만원(행사장 임차·조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비>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300백만원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식×300백만원(연사 초청, 컨퍼런스 운영 등 운영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6회	해외 Port-Sales
'24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6회	해외 Port-Sales
'25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해외 Port-Sales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전화번호	044-200-5277
담 당 자	5급 정가훈	이 메 일	glegoo159@korea.kr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선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 및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인권개선 필요

* (고용현황) ('20년) 26,775명 ('21년) 27,333명 ('22년) 28,281명, ('23년) 30,436명

□ 과제 내용

○ 외국인 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선사별 선원법령 및 선원근로계약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 근로환경 및 조건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사정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및 인권 개선대책" ('13.7월)을 마련

○ 동 개선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노사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대책 수립 시행('14.5, '15.6, '16.4, '17.4, '18.4, '19.4, '20.6, '20.12)

○ 외국인선원이 임금체불, 폭행 등 고충사항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국인콜센터' 및 수협중앙회 '외국인 고충상담센터' 운영(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13.1월~)

○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20.6월)" 수립 시행

○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20.12월)" 수립, 시행

○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입 공공화를 위한 한-인니 근해어선원 고용노동 협력 MoU 체결('21.5.31)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선장에게 선내 사망자의 시신인도 의무를 규정한 선원법 개정안 시행('21.7.16)

○ 외국인선원의 권리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의무화('23.1~)

○ 선원의 인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마련하여 발표('24.3.27)

* ①저축금 송금수수료 임금차감금지 등 임금기준 개선, ②이탈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송출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송출구조 개선, ③참치연승선 출항 후 1년 이내 기항지 입항 등 항해기간 단축, ④최소휴식시간(일 10시간, 최소 6시간) 보장, ⑤여권 개별보관함 설치 등 신분증 보관방식 개선, ⑥인터넷 사용시간 보장 등 통신환경 개선

○ 외국인선원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든 외국인 선원의 합리적 고용·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시행('24.7.12.)

* ①외국인선원 도입규모를 정부가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②외국인선원제도 법적근거 마련, ③외국인선원 고용신고·추천 시 첨부서류 변경(노조의견서→선사 확인서), ④복지기금·선원관리비 투명성 강화, ⑤송출입체계 공공성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조, 수협중앙회 → 선주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조사반 편성(해양수산부) → 실태조사(노사정 합동) → 결과에 대한 조치(해양수산부)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선원 인권개선 조치를 인정받아 美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등급이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상향(2→1등급)

* 우리나라는 20년간('02~'21) 1등급을 유지하다가 **'22~'23년 2등급**으로 하락

** (1등급) 한국, 미국, 영국, 대만, 호주 등, (2등급)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태국 등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수립(’24.3.27.) 및 이행실적 확인

○ 원양어선 인권개선방안 수립 전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원양어선 승선 점검*을 실시하여 미측에 우리 측 노력과 현장 이행상황 설명(3.6.)

* (일시/장소) ’24.3.6. 13:00~17:00 / 부산 감천항 신라파이어니어호(원양어선)

○ “원양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민사회, 업계와 민관 이행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24.5~)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이행점검 회의(6.27./9.30.)

□ 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2회)

○ 인권침해의 지표가 되는 신분증 대리보관, 과다송출료 및 이탈보증금을 중심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점검을 시행(’24.4월~7월/’24.10월~12월)

□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사의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 및 상환을 독려하여 선원의 생계안정 지원(설, 추석)

□ 선원의 인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 ①선내 괴롭힘 금지(1.25.~), ②선원에게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유족보상·행방불명보상 지급 제한(7.24.~), ③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도입, ④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9.26. 국회 본회의 가결)

□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개정

○ (**개정내용**) 선원근로감독 시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 활용(2.1.~), 신분증 대리보관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3.14.~)

□ 선원근로감독관 정기 직무교육을 통해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인신매매 관련 지식 함양 등 실시(’24.4.22.~4.26./부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3. ’25년도 추진계획

□ 2025년도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상반기, 하반기)

□ 원양어선 등 외국인 선원 인권 개선 추진

○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 이행점검 협의회 운영(분기별)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및 해결 지원(계속)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협중앙회)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2회	2회	실태조사 계획 수립
’24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2회	2회	실태조사 계획 수립
’25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2회		실태조사 계획 수립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743
담 당 자	5급 김행숙	이 메 일	ysbada22@korea.kr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IS 테러 위협, 항만보안 사고 증가 등에 따라 국경관리 차원에서 항만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 방지 도모

□ 과제 내용

○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등의 밀입국 방지를 위하여 항만보안 시설 · 장비 확충,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출입허가(금지)제도 정착 등 추진

※ 참고사항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6. 2.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와 합동으로 '항만보안 강화방안' 수립

○ 2016. 1~12. CCTV,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 · 장비 확충

○ 2016. 11.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 2017. 1~12. CCTV,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 · 장비 확충 및 보안시설·장비 기준 등 보완

○ 2017. 1~12. 무단이탈 사고 선박에 대하여 입항 금지 등 제재조치* 이행

* 무단이탈 1회 선박은 6개월 / 2회는 1년 / 3회는 영구 입항금지('16.11.10~)

○ 2017. 10. 제주항 무사증 이탈자 방지를 위한 차량형 X-Ray 검색기 도입(3대)

○ 2018. 5. 제2차 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시행

○ 2019. 4.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정

○ 2020.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보안감독관 운영 근거 마련 등

○ 2022. 2.「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등 제정(3건)

* 검색장비 성능인증, 시험기관, 운영 및 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 2022. 8.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개정

* 보안사고 조치결과에 따른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 지정 근거 마련

○ 2023. 12.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개정

○ 2024. 7.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

○ 2024. 8.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증 인식률 제고방안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수부, 해경청

○ 추진절차 : 부처별 협업을 통한 업무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24.7)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24.7)

-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 항만시설 촬영 결과물을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허가없이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 금지 및 항만시설 내 비행승인 없이 드론 비행 금지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증 인식률 제고방안 마련('24.8.)

○ RFID를 이용한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증(인원, 차량) 인식률 개선을 위해 장비 점검·진단 및 전수조사, 신형 출입증 교체 등 인식률 제고방안 마련

□ '24년도 항만보안 예산(67.2억원*) 및 차년도 예산(106.7억원) 확보 추진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3,246백만원,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982백만원, 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2,440백만원, 항만보안 합동보안훈련 등 50백만원

□ 검역관련 의무 위반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 허가(금지)제 적용(연중)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8개 관계기관 합동 제정)에 따른 조치 시행

3. '25년도 추진계획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1분기)

-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 항만 경비초소 신축 등 항만시설 보안장비·시설 신설(81.8억원)

- 보안구역 확대운영 등을 위한 항만보안인력 증원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4분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국 항만시설(214개)의 보안책임자 및 보안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보안세미나 개최로 항만보안 최신 정보의 공유 및 인력·시설·장비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 개별 항만시설소유자의 합동훈련 준비·시행 부담 경감 및 항만보안관계기관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항만보안 현장과 정책·제도의 상호 개선 기대

□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 점검 실시(2분기, 4분기)

* 항만시설, 여객선 등에 대한 테러대응태세 점검 및 취약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관계부처(법무부, 국정원, 국방부, 경찰, 해경, 관세청 등) 합동점검 지속 실시(반기별)

□ 소요예산 : **총 10,67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490	6,718	10,673	58.9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7,490	6,718	10,673	58.9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항만보안시설·장비 신설: 8,183백만원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7,767백만원
-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54백만원
- (항만 경비초소 신축) 162백만원

○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2,440백만원

- (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61백만원
- (항만보안 시설장비 유지보수) 1,515백만원
- (항만보안리스크 평가 프로그램) 64백만원

○ 항만보안 역량강화: 50백만원

- (전국항만 합동보안세미나 개최) 30백만원
- (청원경찰 통합채용 필기시험 출제 운영) 2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회	1회	'23년 예산 확보
'24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회	1회	'24년 예산 확보
'25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회		'25년 정부 예산안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전화번호	044-200-5778
담 당 자	5급 조민수	이 메 일	anrnr80@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557

Ⅱ.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58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1-2-1-⑤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558

1-2-1-⑥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 561

1-2-5-①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 563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3	100%	9,700	12,705	31.0%
1. 경 제	3	100%	9,700	12,705	31.0%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스타트업 유입 지원**
- **인바운드 창업지원체계 구축**

주요 사업내용

- 베트남 SW 인재를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국내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으로 취업 매칭 지원
  - 소프트웨어 분야 해외 우수인력 발굴
  - 해외인력의 국내 취업을 위한 한국기업 문화, 이력서 작성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 채용박람회 개최 등 스타트업과 해외인력 간 매칭 지원
- 외국인 창업자 발굴부터 국내 정착 및 성장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해외 창업팀 선발 및 정착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우수 해외 인재의 창·취업 및 국내 거주·정착 등 원스톱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을 K-스카우터로 지정,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중기부→법무부)
-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 활용체계 구축(관계부처 협업)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3개	6,000	9,700	12,705	31.0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개)	6,000	9,700	12,705	31.0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1,600	1,600	0.0	'24년 신규
1-2-1-6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	-	3,005	100	'25년 신규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6,000	8,100	8,100	0.0	

Ⅱ.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스타트업의 구인난 해소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 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 내용

○ 베트남 SW 인재를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으로 취업매칭 지원

- (취업역량 강화) 국내 스타트업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작성법, 한국 비즈니스 매너 등 취업 교육 지원
- (취업 매칭 지원) 국내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이력서 작성을 지원하고, 매칭 행사를 개최하여 취업 연계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6월, 사업추진을 위해 베트남 과기부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인력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 체결

○ ‘23.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신규과제로 포함

○ ‘23.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로 포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추진절차 :

참여자 모집	취업 역량 강화	취업 연계
■ 구인 스타트업 ■ 해외 SW 인력	■ 한국어, 한국기업 문화 교육 ■ 이력서 작성법 등	■ 이력서 첨삭, 모의면접 ■ 취업연계 행사

2. ’24년도 추진 실적

□ 베트남 SW 인력(200명)을 발굴・육성하고, 현지 채용박람회(7월, 11월) 및 국내 채용상담회(10월)를 개최하여 맞춤형 취업 매칭 지원

3. ’25년도 추진계획

□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

○ (참여자 모집) 소프트웨어 분야 해외 우수 인력 발굴(’ 25.1분기~)

○ (취업역량 강화) 해외인력의 국내 취업을 위한 한국 기업 문화, 이력서 작성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25.2~3분기)

○ (취업매칭)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해외 인력 간 맞춤형 매칭 지원(’ 25.4분기)

□ 소요예산 : 총 1,6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	1,600	1,600	0.0	중기부
-국 비	▪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중진기금*)		1,600	1,600	-	중기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	-	-	-	-
	▪ 시·군·구비	-	-	-	-	-
-기 타		-	-	-	-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산출내역

○ 1,600백만원 = (물량) 200명 × (단가) 8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연계	스타트업 취업 교육 수료율	수료율 (%) = 수료인원/선발인원	70%	72.5%	국내 유사사업의 교육수료율 기준으로 목표 설정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23년 수료율 72%)
'2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연계	스타트업 취업 교육 수료율	수료율 (%) = 수료인원/선발인원	70%	-	'24년 실적 기준

* '24.10월 기준

5.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청년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954
담 당 자	7급 강혜진	이 메 일	khjkr@korea.kr

1-2-1-6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신규)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인력공급 및 中企 경쟁력 강화

□ 과제 내용

○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내 우수 유학생의 유치 및 양성부터 취업까지 全단계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수요조사 → 유학생 취업역량 강화 → 구인·구직 매칭지원 → 고용추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모 → 사업추진

2. '25년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수요조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외국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조사 실시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운영)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 촉진

○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전문가 양성

○ (외국인 유학생 취업매칭 플랫폼) 중소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 및 구직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매칭 플랫폼' 구축

○ (외국 전문인력 취업비자 전환 지원)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E-7-1 비자 취득을 위한 취업 추천 지원

□ 소요예산 : 3,00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	-	3,005	100.0	
- 국 비	▪ 일반회계	-	-	3,005	100.0	

□ 산출내역

○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수요조사 실시(150백만원)

○ 유학생 취업매칭 플랫폼 고도화(727백만원)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운영(1,500백만원)

○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300백만원)

○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328백만원)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지원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과정 교육 수료율	수료율 (%) = 수료인원/선발인원	70	-	’25년 실적 기준

4.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450
담 당 자	5급 한재국	이 메 일	bule3740@korea.kr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인바운드 창업지원체계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 정착 및 성장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촉진

□ 과제 내용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해외 창업팀을 선발하여 국내정착 및 성장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외국인 창업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해외 우수 인재의 창·취업 및 국내 거주·정착 등 원스톱 지원

○ (K-스카우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 등을 K-스카우터로 지정하여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추천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혁신성·사업성만 평가하여 신속발급하는 특별비자를 도입하여 해외 스타트업 적극 유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16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24.7월말 개소), K-스카우터('24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24.1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추진절차

- (그랜드챌린지) 모집공고 → 평가·선정 → 보육 → 데모데이 → 후속지원
- (K-스카우터) K-스카우터 선정 → 해외 스타트업 발굴·추천 → 국내정착 지원

2. ’24년도 추진 실적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국내 AC의 보육을 받은 외국인 창업팀(40개팀) 대상 데모데이를 열어 후속지원 20개팀 선발 및 상위 5개팀 시상

□ 글로벌스타트업센터

○ ‘24.7.31일 센터 개소(서울 역삼동, 약 150평), 외국인 창업 원스톱 상담 창구,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사무공간 및 네트워킹 제공 등

□ K-스카우터

○ 민간운영사 2개(공모) 및 해외진출거점 9개소*를 K-스카우터로 지정,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스타트업 발굴·추천(연말까지 20개사 목표)

※ 해외진출거점 : KSC 5개소(싱가포르, 시애틀, 파리, 하노이, 도쿄),
KVIC 4개소(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런던, 상하이)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 학력·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 추천을 통해 법무부가 최종발급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절차 >

① 신청	→	② 요건 검토	→	③ 평가	→	④ 추천	→	⑤ 최종발급
추천 신청서 사업 계획서		증빙서류, 신청자격 등		사업성·혁신성 평가		중기부		법무부
K-스타트업 포털		창진원		민간평가위원회				

3. ’25년도 추진계획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25. 1/4분기) ‘25년 참가팀 모집 공고 및 홍보(4월~)

○ (’25. 2/4분기) ‘25년 참가팀 신청·접수(4월~5월)

○ ('25. 3/4분기~4/4분기)

- 서류평가, 해외오디션 등 통해 지원 기업 선정(6월~7월)

- 국내 입국한 창업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8월~12월)

- 참가팀 정착도 평가 및 데모데이 통해 Top20 선정(12월)

○ ('26. 1/4분기~2/4분기) '25년 참가팀 후속지원 실시(~5월)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 원스톱 상담창구, 정착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외국인 창업자 커뮤니티 활성화 등 외국인 창업 종합지원

□ K-스카우터

○ K-스카우터 공모 및 지정(상반기) → 창업생태계 홍보 및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추천 (~12월)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 민간평가위원회 정기 개최(매월) 및 특별비자 추천(중기부→법무부)

□ 소요예산 : 총 8,1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000	8,100	8,100	0.0	
-국 비	▪일반회계	6,000	8,100	8,100	0.0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4,500백만원 = 113백만원 × 40개사

(글로벌스타트업센터) 3,000백만원 = ’25년 센터 운영 3,000백만원

(K-스카우터) 600백만원 = 150백만원 × 4개사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건수	20	27	법인 설립 수
’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건수	20	-	법인 설립 수
’25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건수	20	-	법인 설립 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관 글로벌창업팀	전화번호	044-204-7682
담 당 자	5급 김택선	이 메 일	1025kts@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570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571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73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575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2]-②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575

3-3-[2]-③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578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4-1-[1]-④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581

방송통신위원회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3	100%	1,775	1,595	△10.1%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2	66.7%	1,775	1,595	△10.1%
4. 인 권	1	33.3%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추진**
-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지속 추진**
-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주한외국인 관련 기관 교육 협력 체계 구축,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강사단 선발 및 육성, 다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주한외국인 관련 단체 대상 교육 콘텐츠 보급, 유관단체 및 외국인 대학생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FM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내 거주·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 정보 등 제공

  - 시사/보도 프로그램, 교양/정보 프로그램, 음악/오락 프로그램, 제주 특화 프로그램 등 제작·방송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 외국인과 이민자 등에 대한 편견 강화하거나 차별적 내용의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위반사례 공유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2)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3개	1,775	1,775	1,595	△180(△10.1)	'-'의 경우 '△'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1,775	1,775	1,595	△180(△10.1)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			비예산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1,775	1,775	1,595	△180(△10.1)	
소계	4.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			비예산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결혼이민자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 지원 필요

○ 결혼이민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93.1%로 전년(90.2%) 대비 2.9%p 소폭 상승하였으며, 여전히 일반 국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

- 새로운 유형의 통신서비스 금융사기에 취약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추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4. 03.)’

- 국내 입국 외국인 노동자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외국인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

□ 국내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정보와 뉴스·재난속보 등 현장정보 및 K-Pop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 외국인·이민자 관련 인권침해 및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편견,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필요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 노동자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319명, 23회)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콘텐츠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 예방법과 주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정보 제공

○ 주한외국인 대상 정보제공을 위한 다국어 7종(한국어·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정규·특집 등 라디오 프로그램 제공

○ 국내거주 및 방문 외국인 대상 시사/보도, 교양/정보, 음악/오락, 특집 등 17개 프로그램 4,317편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송

○ 재난속보 및 재난 대비 캠페인 등 재난방송으로 국내 외국인의 안전을 지원하는 공익 서비스 수행

* 재난수신 온라인 시스템 요청 자연 및 사회재난 관련 속보 24시간 수행 (총 627건), 재난 시 행동요령 스팟 방송(총 2,969회), 재난 시 행동요령 안내 스팟 제작(12편)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5회)를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지원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추진

○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및 대학생 등 주한 외국인 대상 교육 지속 실시

○ 주한외국인에게 취약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정보를 다국어 교육 콘텐츠로 제공하여 교육 실시

□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지속 추진

○ FM라디오 방송(정규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거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뉴스·생활정보 등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및 인권·문화 존중의식 제고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통해 외국인·이민자·타 문화 등에 대한 편견, 차별적 방송에 대한 위반사례 공유 및 심의규정 안내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계획 수립 및 강사단 육성	방통위 디지털이용자 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다국어 교육책자 제작 및 보급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디지털이용자 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디지털이용자 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불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이용환경 개선

□ 과제 내용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3년 : 주한외국인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및 이동 상담 실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글로벌센터 연계)

○ 2014년 : 방송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전용 매장 확대 유도

○ 2015년 : 방송통신사업자 고객센터 외국어 상담원 확대 유도

○ 2016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2017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다국어 책자 제작·보급

○ 2018년 : 다문화 이주여성 및 아이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이용자 도전 골든벨' 개최

○ 2019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2020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2021년 : 주한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교재 및 전자책 개발・보급

○ 2022년 : 주한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교재 및 전자책 개발・보급

○ 2023년 : 다문화가정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대면 교육 확대

○ 2024년 : 다국어 교육 교재 언어 종류 확대(6종→7종) 제작 및 보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추진절차 : 계획 수립(방통위)→ 추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24년도 추진 실적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 노동자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319명, 23회)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콘텐츠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 예방법과 주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정보 제공

○ 주한외국인 대상 정보제공을 위한 다국어 7종(한국어·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3. '25년도 추진계획

□ (1분기)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계획 수립

○ 주한외국인 관련 기관 교육 협력 체계 구축

○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강사단 선발 및 육성

□ (2~4분기) 주한외국인 대상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주한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 주한외국인 관련 단체 대상 교육 콘텐츠 보급

○ 유관단체 및 외국인 대학생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명)	실적	산출근거
’18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확대 유도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교육제공	통신서비스 교육대상자	500	502	o 교육 수료 인원
’19				500	508	
’20				1,100	1,275	
’21				1,600	1,565	
’22				1,600	1,792	
’23				1,300	1,691	
’24. 8월말				1,300	319	
’25				1,300	-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번호	02-2110-1527
담 당 자	5급 김상엽	이 메 일	sykim0625@korea.kr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방송권역 내 거주 및 방문 외국인을 주 청취 대상으로 뉴스와 날씨 등 각종 생활정보, 관광정보 및 한국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송권역 해당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과제 내용

○ FM라디오 방송(정규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거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 정보 등을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국무조정실 주재 「영어 라디오방송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02년 11월) 결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운영주체로 확정하고 '03년 제주에서 FM 영어방송을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통신위원회(예산 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과제 수행주체)

○ 추진절차 : 사업자(국제방송교류재단) 예산 교부 → 사업수행

2. '24년도 추진 실적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

○ 한국정보 제공(뉴스, 생활정보 등), 한류문화 확산(K-Pop,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및 재난속보 등의 프로그램 4,317편 제작·방송

3. ’25년도 추진계획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계속)

○ 시사/보도 프로그램, 교양/정보 프로그램, 음악/오락 프로그램, 제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950편을 제작·방송하여 1일 24시간 방송

< 아리랑국제라디오방송(영어FM) 분기별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 >

[단위 : 편]

추진시기	시사/보도	교양/정보	음악/오락	제주 특화	특집	비고
1분기	257	182	456	91	-	24시간 방송
2분기	258	183	456	91	-	
3분기	258	183	457	92	-	
4분기	257	182	456	91	-	
연간 전체	1,030	730	1,825	365	0	3,950

□ 소요예산 : 총 1,59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775	1,775	1,595	△10.1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 금 (방송통신발전기금)	1,775	1,775	1,595	△10.1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정규 프로그램 제작 : 1,414백만원

- 시사/보도 프로그램 : 544백만원(529천원×1,029편)

- 교양/정보 프로그램 : 199백만원(272천원×730편)

- 음악/오락 프로그램 : 524백만원(287천원×1,825편)

- 제주 특화 프로그램 : 147백만원(403천원×365편)

○ 제작지원비 : 181백만원(저작권료, 음반자료 구입, 청취행태조사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75.9%	75.8%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4,317	4,317	프로그램 제작실적
'24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75.7%	조사중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4,317	조사중	프로그램 제작실적
'25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75.8%	예정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3,950*	예정	프로그램 제작실적

* '24년대비 '25년 예산액이 180백만원 감소하여 제작편수 하향조정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번호	02-2110-1427
담 당 자	5급 김병수	이 메 일	st54179@korea.kr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과제 내용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를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의 방송심의 기능 수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추진절차 : 방송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 방송사 심의책임자 ·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심의규정 및 현안 설명 및 논의(5회)

3. '25년도 추진계획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계속)

○ 외국인과 이민자 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의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발생시 적시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25회	대면회의 (5회) 및 수시 방송심의 결과 안내	사안 발생시 수시 회의 개최 및 결과 안내 등
'25		방송사 협력 강화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및 심의 사례 교육	25회	-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265
담 당 자	5급 이형희	이 메 일	hhlee73@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통계청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586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587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89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590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5-3-2-②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590

통 계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1	100%	2,590	2,585	△0.2%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1	100%	2,590	2,585	△0.2%

추진 방향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 강화

주요 사업내용

- 국내 상주 외국인 규모, 인구학적 특성, 지역분포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표
  - 2024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등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 이민자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한국에서의 고용 상태 및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작성 및 공표
  - 2025년「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실시 및 결과 공표
- 외국인 국제이동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다문화 인구의 인구동태(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공표
  - 2024년「국제인구이동통계」결과 공표
  - 2024년「다문화 인구동태통계」결과 공표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1개	2,453	2,590	2,585	△0.2	'-'의 경우 '△'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	2,453	2,590	2,585	△0.2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2,453	2,590	2,585	△0.2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와 구성 다양화

-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60년만인 2007년 100만명, 2016년 200만명, 2019년 250만명을 돌파하였음

- 코로나19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2020년부터 감소하다가 증가하여 2023년은 약 251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를 차지함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단기, 유학·일반연수, 취업, 결혼이민·영주, 재외동포 등) 및 국적(중국, 동남아, 미국 등)의 다양화 및 다변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현황>

	’0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체류외국인 (만명)	106.6	126.1	139.5	144.5	157.6	179.8	190.0	204.9	218.0	236.8	252.5	203.6	195.7	224.6	250.8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	2.2	2.5	2.7	2.8	3.1	3.5	3.7	4.0	4.2	4.6	4.9	3.9	3.8	4.4	4.9

주) 자료출처: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법무부), * 주민등록인구(각 연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인구 대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통계 수요 증가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결과에 기초해 전체 인구를 국적 유형별로 분리해서 추계한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 결과 공표(’24.4.)

○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결과를 반영하여 장래인구추계(시도편)(2022~2052년) 결과 공표(’24.5.)

○ 국제이동 규모 및 이동자 특성 파악을 위한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24.7.)

○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총조사 공표(’24.7.)

- 상주 외국인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모집단 정보 제공

○ 외국인과 귀화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혼인·이혼·출생·사망에 관한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24.11.)

○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체류실태 및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24.5.~6.) 및 결과 공표(’24.12.)

-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대한 기획보도 실시(’24.4.)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 강화

○ 행정자료 활용 인구총조사를 통해 국내 상주외국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통계 및 모집단 매년 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 및 공표

○ 국제인구이동통계 및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생산 및 공표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준비(1~3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기획보도(3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5~6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7월)	통계청 인구추계팀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4년 인구총조사 전수조사 결과 공표(7월)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내검 및 집계(7~11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4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공표(11월)	통계청 인구동향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공표(12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상주외국인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외국인 고용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등을 생산하여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법무부,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관련 외국인 통계의 지속적인 개선·개발 추진 및 통계의 정확성·활용도 제고

□ 과제 내용

○ 국내 상주 외국인 규모, 인구학적 특성, 지역분포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표

○ 이민자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한국에서의 고용 상태 및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작성 및 공표

※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의미

○ 외국인 국제이동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다문화인구의 인구동태(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작성 및 공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인구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검토('08.12.)

○ 2010년 기준 등록센서스 방식의 총조사 결과 시산('12.12.)

○ 2015년 등록센서스 도입방법 및 제공항목 결정('13.12.)

○ 2011~2013년 등록센서스 시산 및 품질점검('14.10.)

○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작성(11월 1일 기준) 및 결과공표(익년 7월)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외국인 고용조사를 외국인 종합통계로 확대 발전 가능성 검토('14.2.~15.4.)

○ 법무부·통계청 공동 실시 협의('15.6.~'16.1.)

○ 조사항목 개발, 표본 추출 등 시험조사 준비('16.2~8.)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시험조사 실시('16.9.)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본계획 수립('16.12.)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매년 5~6월) 및 결과 공표(매년 12월)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 실시(매년 3월*) * '24년은 4월 실시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출입국심사 및 출입국신고서 자료를 기초로 국제인구이동통계 최초 작성('00년)

○ 국가통계 승인('04년)(승인번호 제101064호)

○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13년)

○ 국제인구이동통계 연간 공표(매년 7월)

< 장래인구추계 >

○ 국가통계 승인('94년)(승인번호 제101033호)

○ 전국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최초 발간('96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최초 발간('98년)

○ 다문화인구추계 작성방법 개발('18년)

○ 전국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96년 이후 매5년 → '23년 이후 매2~3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98년 이후 매5년 → '24년 이후 매2~3년)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개발 추진('10~'11년)

○ '08~'1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혼인, 이혼, 출생, 사망) 최초 공표('11.11.)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고서 외국어 견본 제작 배부('13.8.)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연간으로 공표(매년 11월)

□ 추진체계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추진주체 : 통계청

○ 추진절차 : 총조사 실시계획 수립 → 행정자료 입수방안 협의(통계청 및 자료제공기관) → 행정자료(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입수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 → 결과분석 및 공표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추진주체 : 통계청(법무부 공동)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준비(통계청) → 조사지침 교육(통계청) → 현장조사 실시(지방통계청, 사무소) → 자료처리 및 결과 집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추진주체 : 개인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통계청

○ 추진절차 : 출입국 심사(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료전송(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유통시스템)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 장래인구추계 >

○ 추진주체 : 개인 →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통계청

○ 추진절차 : 자료수집(통계청) → 자료분석 및 추계모형 적용(통계청) → 추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

○ 추진주체 : 개인 →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통계청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준비(통계청) → 조사지침 교육(통계청) → 신고서 접수 및 자료 입력(지자체) → 가족관계등록 정보입수(대법원)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2. '24년도 추진 실적

< 인구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 24.7.)

○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및 모집단 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기획보도(' 24.4.)

□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공표(' 24.12.)

○ 국내 상주 외국인과 귀화허가자(5년 이내)의 기본항목,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영주·귀화허가자 및 재외동포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국제인구이동통계 >

□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 24.7.)

○ 외국인 입·출국자의 이동 규모 파악, 입국자 성·연령·국적·체류자격별 특성 분석

< 장래인구추계 >

□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내・외국인 인구추계(’ 24.4.),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4.5.) 결과 공표

○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를 전망한 결과 공표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 24.11.)

○ 다문화 인구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작성 및 공표

3. ’25년도 추진계획

< 인구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2024년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25.7.)

○ 2024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등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25.7.)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실시(’ 25.5.~6.) 및 결과 공표(’ 25.12., ’ 26.3.)

○ (조사부문)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능력,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비전문취업, 유학생 등

< 국제인구이동통계 >

□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

○ 2024년 월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제공(매월)

○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25.7.)

<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

□ 2024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 25.11.)

□ 소요예산 : **총 2,58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453	2,590	2,585	△0.2	
-국 비	▪ 일반회계	2,453	2,590	2,585	△0.2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인구총조사 >

○ 인건비 : 701백만원

○ 운영비 : 77백만원

○ 여비 : 2백만원

○ 업무추진비 : 6백만원

○ 민간이전 : 79백만원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일용임금 : 342백만원

○ 운영비 : 1,281백만원

○ 국내여비 : 38백만원

○ 사업추진비 : 8백만원

○ 민간이전 : 39백만원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운영비 : 3백만원

< 장래인구추계 >

○ 운영비 : 8백만원

<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

○ 운영비 : 1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통계결과 공표	5회		보도자료
'24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통계결과 공표	6회		보도자료
'25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통계결과 공표	4회		보도자료

5. 담당자

< 인구총조사 >

소관부서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전화번호	042-481-3756
담 당 자	5급 김민주	이 메 일	minju1101@korea.kr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소관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전화번호	042-481-2339
담 당 자	5급 김성규	이 메 일	daan755@korea.kr

< 국제인구이동통계, 장래인구추계 >

소관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추계팀	전화번호	042-481-2261
담 당 자	5급 전민엽	이 메 일	mathjeon11@korea.kr

<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

소관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전화번호	042-481-2258
담 당 자	5급 강현영	이 메 일	gusdud12@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경 찰 청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601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602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605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606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④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606

2-1-[2]-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609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2]-②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 611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1]-②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614

경 찰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4	100%	1,220	1,449	18.8%
1. 경 제					
2. 안 전	3	75%	387	387	0%
3. 통 합					
4. 인 권	1	25%	833	1,062	27.5%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및 범죄예방 활동 전개**
-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보호 지원**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관리,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
  - '범죄예방 강화구역' 신규·해제 검토,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취약지역 중심 순찰 활동 강화
-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예방 공동노력 지속
  - 민생 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등 법무부 주관 정부합동단속 참여, 지자체 협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 지속 등
-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 추진
  - 체류외국인 등 대상 범죄예방 교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외국인 협력단체 재정비
-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교육자료 제작, 「청소년 경찰학교」 활용한 학부모 교육 활성화, 다문화 위기 청소년 발견 시 학교전담경찰관(SPO) 1:1 면담·멘토링 실시, 가족지원센터 연계 통역·상담 지원 등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4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3)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4개	974	1,220	1,449	18.8	'-'의 경우 '△'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3)	387	387	387	0.0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94	94	94	-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	-	비예산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293	293	293	-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587	833	1,062	27.5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587	833	1,062	27.5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규제 해제로 인해 **체류 외국인 수는 과거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40만 명을 상회**

※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연도별 현황

구분(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3년 9월	'24년 9월
체류자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2,514,159	2,689,317
불법체류	390,281	392,196	388,700	411,270	423,675	429,630	408,722

○ 학령기(7세~18세)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학생 비율은 88.6%* 수준으로 11.4% 가량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 범죄·비행 노출 우려**

* ('22년) △학령기 다문화가족 청소년 190,359명 △다문화학생 168,645명 <2023 청소년백서>

- 최근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다문화 청소년 비중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다문화 청소년 범죄도 지속 증가할 것을 전망**

* <외국인 검거인원(비율%)> 29,450명'21년(2.36%) → 30,954명'22년(2.47%) → 33,052명'23년(2.64%)

□ 전망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입·유치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순찰·환경개선·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전개**

- 외사안전구역(30개소)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편입, △취약시간대 가시적 순찰 강화 △CPTED사업 △범죄예방교실 등 예방활동 집중

-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감안, △범죄예방교육(34,993명)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53개 단체 1.55억원) 등 치안 관심도 제고 노력

○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4·9월 2회에 걸쳐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 **다문화 청소년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학교폭력 예방**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 담당 SPO 지정, △범죄예방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연계, 보호·지원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안산단원·상록署의 경우 다문화가족 담당 SPO 지정

-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학생·보호자를 위해 「학교폭력·소년범죄예방 표준교육자료(PPT 12종)」 번역 추진

※ 다문화 비중이 높은 베트남어('24.12월)을 시작으로 중국어·영어 등 순차적 번역 추진

□ **개선방안**

○ CPTED사업·자율방범대 등 예방활동 특성 상 단일 부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 등 다기관 협의체를 통한 협업 노력 필요**

○ 최근 청소년들이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며 청소년 범죄예방교육의 중요성은 높아져가나,

-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자료는 부재하여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 內 교육에 한계 발생

- **범죄예방·안전 관련 교육자료·홍보물 제작 時 외국어 번역본 제작 필요**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방교육·자율방범대 협업 등을 통해 **홍보·교육 활성화**

□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노력 지속**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치안정책 논의 ▵지자체 CPTED사업 등 지역사회 치안 협업 활성화

□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교육자료 번역본 순차적 제작 추진 및「청소년경찰학교」활용, 학부모 대상 교육 활성화

○ 다문화 위기청소년 발견 시 SPO 1:1 면담·멘토링 실시, 필요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연계하여 청소년·보호자 통역·상담 등 지원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심 예방 활동 전개(연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등 공동체치안활동(연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지원(연중)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심 예방 활동 전개(연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정부합동단속 참여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등 공동체치안활동(연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지원(연중)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심 예방 활동 전개(연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등 공동체치안활동(연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지원(연중)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심 예방 활동 전개(연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정부합동단속 참여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등 공동체치안활동(연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지원(연중)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의 공동체 치안 강화・기초질서 확립・불법행위 방지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과제 내용

○ 외국인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설정,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관리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하여 주요 치안 현안 논의 및 대책 마련

□ 과제 추진 경과 및 주체

○ (추진 경과) '13. 8월부터 운영 /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 주체) 경찰청 주관 / 유관기관・외국인단체・지역주민 등과 협업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

○ (CPTED) 지자체와 협업하여 △방범시설 설치・유지보수 △가로경관 개선 등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

▸ **(경기남부 안산단원)** 외국인 1인가구 밀집한 다문화거리 일대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조도 개선 등 CPTED 사업 추진(4.5억원)	
▸ **(광주 광산)** 외국인의 음주소란 등 무질서 행위 잦은 어린이 공원 3개소에 로고젝터・안내판 등 설치하고 홍보 캠페인도 병행(1천만)	

○ **(순찰 강화)** 주요 취약장소·시간대 위주로 기동순찰대 및 내·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인력 활용하여 가시적 순찰

○ **(범죄예방교육)**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준법 의식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서울 동대문) 관내 대학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112신고 요령 △피싱사기·성범죄 등 예방법 △마약예방·체류자격 등 교육

○ **(기타 특수시책)** 외국인 관련 치안요인에 따라 △기초질서 단속 △홍보·캠페인 △취약시간대 순찰·거점배치 강화 등 관서별 종합치안활동 추진

▸ **(서울 구로)** 외국인 인력시장 및 주거타운이 형성된 지역 대상으로 △기초질서·교통 위반행위 단속 △주요시간대 집중순찰 △지자체 협업하여 외국어 가이드 제작·배포 등 추진

▸ **(서울 용산)** 이태원 일대 관리를 위해 △주말 인접관서에서 경계지역 거점배치 △區 교통 행정과 합동 단속 △미군·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안전펜스 설치 등 종합대책 수립·추진

3. '25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연중)

○ 관서별로 △등록외국인 수 △외국인 관련 범죄·112신고 발생 추세 △방범시설 현황 △유관기관 의견 등을 종합 분석, 강화구역 신규·해제 검토

- 예방역량 집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행정동 단위 → 구역 단위로 지정

- △지자체와 협업하여 CPTED사업 추진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 등 인력 활용하여 순찰강화 △홍보·캠페인 등 종합적인 예방활동 전개

○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한 유관기관·외국인단체·이주민대표 間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내 외국인 문제해결

▸ **(구성)** 경찰서장 또는 범죄예방기능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국인 주민과 유관기관(지자체, 고용노동청 등)을 필수 참여(외부위원 40% 이상)시켜 운영

▸ **(운영방식)** 반기별, 외국인 관련 현안 있을 시 수시로 개최

※ ① CPTED·합동순찰 등 유관기관 협력방안 ②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범죄예방 교육 ③ 내·외국인 합동행사 지원 ④ 외국인 관련 동향 파악 등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주요 범죄동향·무질서행위 및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합동으로 예방·대응대책 모색

□ 소요예산 : 총 9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4	94	94	0.0	
-국 비	▪일반회계	94	94	94	0.0	
	▪특별회계					
	▪기 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 28개소×839천원×4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외사안전구역 운영	운영 개소	28	30	현재 운영개소
'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외사안전구역 운영	운영 개소	20	30	현재 운영개소
'25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범죄예방 강화구역(외국인) 운영	운영 개소	24		현재 운영개소

※ 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면 재정비 예정으로, 예방역량을 집중하고 관리 내실화 도모할 계획이기에 목표치 하향 설정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2846
담 당 자	경감 정명준	이 메 일	jmj0804@police.go.kr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에 적극 참여, 체류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유통 등 각종 범죄 첩보 입수 및 단속

□ 과제 내용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5개 부처) 참여를 통해, 유흥·마시지 업소, 배달대행 등 민생침해 분야 및 테러 혐의, 대포차 운행,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외국인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류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합동단속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3년 과제 신설, 총 3회 단속 참여하여 20,947명 적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추진절차 : 단속 계획수립 및 실시(법무부) → 각 부처 인력 지원 → 합동단속

2. '24년도 추진 실적

○ 법무부 주관 단속에 참여하여 1~2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참여 현황 >

	'18	'19	'22	'23	'24년 1차
실시 횟수	2회	6회	1회	3회	4.15~6.30
경찰지원 인원(명)	160	865	120	360	120
총 적발 인원(명)	16,218	2,806	3,865	20,947	10,756

* '24년 제2차 단속 진행 중(9. 30.~11.30)

3. ’25년도 추진계획

□ 정책 여건

○ 외국인 피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4.9% 증가(24,621 → 25,828명), 마약류 등 조직적·체계적 범죄는 지속 증가하다 올해 감소 전환

※ (외국인 마약사범) ’20: 1,466명 ⇨ ’21: 1,673명 ⇨ ’22: 1,757명 ⇨ ’23: 2,187명

□ 추진 계획

○ 제1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2/4분기)**

-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 병행)

○ 제2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4/4분기)**

- 제1차 단속 결과 분석 후 4/4분기에도 단속 참여, 체류 외국인 범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력 제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참여	참여 횟수	3회	3회	
’24		참여	참여 횟수	2회	2회	
’25		참여	참여 횟수	참여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전화번호	02-3150-2043
담 당 자	경감 김태현	이 메 일	todokim@police.go.kr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체류 외국인·유학생들이 언어·문화적 차이와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크고, 신고 및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음

- 외국인들이 쉽게 노출되는 범죄유형에 대해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방법을 교육해 국내 법질서 준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

○ 국내 외국인 유입 증가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구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 경찰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 추진

□ 과제 내용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외국인 시설·기관과 협업, 외국인이 접하기 쉬운 범죄·대응법에 관한 범죄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함께,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합동순찰·범죄예방활동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실시

□ 과제 추진 경과 및 주체

○ **(추진 경과)** 그간 별도 과제 없었고, '24년에 신규 과제로 선정

○ **(추진 주체)** 경찰 주관, 외국인 관련 기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협업 추진

2. '24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등 외국인 관련 기관의 교육 요청에 따라 총 34,993명 교육 실시 완료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전국 총 53개 단체·1,198명의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경찰청은 1.55억원 상당의 안전장비 등을 지원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 계획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등 외국인 관련 기관과 협업해 경찰관이 출강, 범죄예방 교실 연중 실시하고,

- 경찰서 CPO 중심으로 정보(외사협력관)·교통(외국인 운전면허교실)·여청(피해자보호) 기능과 협조, 외국인 네트워크 정보 공유 및 유형별 지원 기관 연계로 외국인 범죄예방 업무 활성화 추진

○ **(외국인 협력단체 재정비)** 활동·교육이 저조하거나 봉사활동 外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대원은 즉시 해산/해촉을 추진하고,

- 지속적으로 활동 의사가 있는 단체나 대원은 동일 지역 내 내국인 단체와 통합 및 가입을 적극 유도

□ 소요예산 : 총293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93	293	293	00.0	
-국 비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138	138	138	00.0	경찰청
	▪외국인 협력 단체 지원	155	155	155	00.0	경찰청

□ 산출내역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 운영비(교육·홍보 물품 구입) 및 강사료·통역비 등(137천원×259개 경찰서×4회)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활동장비·근무복 155백만원(형광조끼 50천원+신호봉20천원+전자호루라기30천원+활동모20천원+근무복80천원×775개)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범죄예방교육	교육인원	2,600명	34,993명	법무부 등 외국인 관련 기관에서의 교육 요청 인원
'25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범죄예방교육	교육인원	49,000명		'24년 교육인원*×40%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협력단체 활성화	단체 활동 실적	월 2회	월 6회	자율방범대 월평균 활동
'25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협력단체 활성화	단체 활동 실적	월 8회		자율방범대 월평균 활동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2866
담 당 자	경사 김민규	이 메 일	jeja2001@police.go.kr

4-2-1-2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보호·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통한 협업 지원 필요

□ 과제 내용

○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초·중생 대상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안내 등 학교폭력 예방·대응활동 전개 중

○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많은 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예방활동 및 선도·보호 지원

□ 과제 추진 경과

○ **(교육부·여가부)** '06년부터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한국사회 정착 지원

* △언어 미숙 △가정폭력·학대 피해 등 한국사회 부적응 다문화가족 대상

- '12년 「청소년보호지원법(제18조·제30조)」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복지 지원 근거 마련

○ **(경찰청)** 수사기능과 협업, 다문화 청소년 수사 시 법령*에 따른 보호·지원

* △통역지원(경찰수사규칙 제91조③) △변호인지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⑩)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도박·마약·딥페이크 등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소년범죄 유형 중심 특별예방교육 실시 및 위기청소년 면담·관리

*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은 안산단원('22년)·안산상록署('23년) 다문화청소년 전담 SPO 지정

□ 추진주체 및 추진절차

○ **(추진주체)** △ 교육부(교육정책·지원) △ 여성가족부(가정생활·상담·복지지원) △ 경찰청(범죄예방·위기청소년 선도·보호)

○ **(추진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연락망 구축 → 다문화 위기청소년 발굴 → SPO와 1:1 면담 및 멘토링 → 전문기관 연계·지원

※ SPO가 청소년·학부모와 면담 時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협조 요청

2. '24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다문화 학생·학부모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직접 학교 방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도박·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유형에 대한 사례 중심 특별예방교육 실시

※ '24.9월 기준 230만명 대상 총 16,932회 범죄예방교육 실시

-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해 旣 제작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 표준교육자료(PPT 12종)」 번역 추진

※ 다문화 비중이 높은 베트남어('24.12월)을 시작으로 중국어·영어 등 순차적 번역 추진

○ **다문화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前日 사건 전수점검·첩보수집 등을 통해 학교폭력·소년비행 조기 감지, 필요시 SPO 면담(3개월간 週1회) 또는 선도제도·전문기관 연계 등 사례관리

-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주요 외국어(7개 국어)로 번역한 홍보물 제작·배포

* △ 18세 미만 아동 △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 치매환자

3. ’25년도 추진계획

○ **(추진전망)**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12세 이하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73.0%를 차지하는 등 지속 증가 예상

▸ **(다문화가족 자녀)** 266,626명[’20년] → 289,529명[’21년] → 299,440명[’22년] <2023, 행안부>
※ (’22년) △6세이하 36.4% △7~12세 36.6% △13~15세 17.2% △16~18세 9.8%
▸ **(다문화 학생)** 147,378명[’20년] → 160,058명[’21년] → 168,645명[’22년] <2023, 교육부>

- 최근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다문화 청소년 비중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다문화 청소년 범죄도 지속 증가할 것을 전망

* <외국인 검거인원(비율%)> 29,450명[’21년](2.36%) → 30,954명[’22년](2.47%) → 33,052명[’23년](2.64%)

□ 주요 추진계획

○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

- 다문화 가족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해 旣 제작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 표준교육자료(PPT 12종)」 중국어 등 번역본 지속 제작 추진

※ 신종유형 범죄 확산 時 예방교육用 소책자 제작,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수시 공유 예정

- 전국 56개 경찰관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경찰학교」 활용, 학부모 대상 신종 유형 중심 범죄예방교육 운영 활성화

○ **다문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 다문화 위기청소년 발견 시 SPO 1:1 면담·멘토링 실시, 필요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연계하여 청소년·보호자 통역·상담 등 지원

□ 소요예산 : **총 1,062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87	833	1,062	27.5	
-국 비	▪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예방	525	525	571	46	
	▪ 위기청소년 선도 및 SPO 활동지원	62	308	491	183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예방교육횟수(회)	15,678	15,832	3년 평균 교육 횟수
'24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예방교육횟수(회)	16,148	16,932 (9월기준)	'23년 목표치 3% 상승
'25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예방교육횟수(회)	16,633	-	'24년 목표치 3% 상승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전화번호	02-3150-1385
담 당 자	경감 김 학 수	이 메 일	youthcop@police.go.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해양경찰청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621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622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625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626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2]-②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 626

해 양 경 찰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1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안전한 해양 국경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강화**
-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주요 사업내용

- 밀입국·밀수 등 해양 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참여
- 「테마형 국제범죄」 단속강화 계획 수립·시행으로 권역·시기에 맞는 국제범죄 유형을 분석, 주요 범죄테마 선정을 통한 중점 단속
  - 상·하반기 치안수요에 따른 테마별 지방청 특별단속 시행
- 전략적 해양 경비, 밀입국 등 국경범죄 취약개소 파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신고체계 활성화 등 세부전략 수립 및 이행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1개				00.0	'-'의 경우 '△'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0	0	0	00.0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0	0	비예산
2-3-2-2	항만국경 관리 내실화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기술발전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신안보 위협 치안수요 증가

○ 현대 기술의 발달로 교통수단 및 통신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기반하여 범죄의 수단·목적·방법 등도 하나의 국가에만 제한되지 않고 수 개의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등 국경 범죄의 양상도 다변화 되는 추세이며,

- 특히, 각 국가별 경제적 불평등, 실업률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한 취업 목적 또는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목적 등 사유로 제3국으로의 출국을 위한 밀입국·밀항 등 범죄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 출입국자 및 불법체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체류 외국인(명)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불법체류 외국인(명)	392,196	388,700	411,270	423,675
불법체류율(%)	19.3	19.8	18.3	16.9

○ 2023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507,58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51,325,329명) 대비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후 점차 늘어나며, 전년 대비 11.8%가 증가

- 불법체류 비율은 22년 18.3%에서 23년 기준 16.9%로 다소 감소

□ 외국인 선원 국내고용 관련 문제점 쟁점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외국인 선원 현황	26,331명	26,775명	27,333명	28,281명	30,436명

○ 국내 외국인 선원은 2023년 기준 30,436명으로 전년도 28,281명 대비 2,155명(7.6%) 증가하여 외국인 선원의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

○ 이처럼 국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원들의 업무 난이도 및 고임금 갈망으로 인한 불법 이탈 현상으로 이를 기인한 불법체류 등 2차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 상존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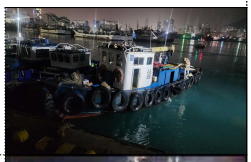
□ ’24년 주요과제 성과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범죄단속 강화

- 다변화하는 국경범죄 대응 및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범죄정보 활동,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를 통한 국민 생명·재산 보호

< 주요 범죄 검거 사례 >

❖ ’24.2.10 22:00경 부산 남형제도 남동방 8해리에서 러시아 어획물 운반선에서 킹크랩 등 수산물 70상자를 환적 후 부산항으로 밀수시도 중 검거하고 주변국(일·중·러) 대상 밀수 선박 정보공유



❖ ’24.1.25 23:31경 여수→베트남으로 향하는 매각선박에 밀항을 시도한다는 신고접수 후 검문검색을 통해 밀항시도자 1명(A급 수배자, 6,60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 및 운반책 등 검거



❖ ’24.3.15 21:00경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진도항을 출항하여 중국 대련으로 밀항을 시도 중 검문검색으로 밀항시도자 1명(강남 150억원대 전세사기범 피의자)과 운반책 등 총 3명을 검거



❖ ’24.5.23. 20:15경 제주↔목포 운항 여객선에 적재된 5톤 화물차에 숨어 제주 도외 이탈을 시도하는 베트남인 5명 긴급체포 및 국내 운반책 등 관련자 2명 등 총 7명 검거



❖ ’24.5.14 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시도 제보 관련, 6.22. 21:00경 제주 무사증 입국 후 제주도 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 3명과 국내 운반책 1명 등 총 4명 검거



○ 범정부 단속 참여를 통한 안전한 이민 사회 구현

- 범정부 차원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법무부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 추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등 국경범죄 단속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 단속**(1차)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검거* 및 단속 기간 중 마약류 투약 사범 도외이탈 사범 등 검거

√ 5개 권역별 **단속전담반(80명) 구성,** 불법체류 등 **출입국문란사범 총 184명 검거**



▲ 불법체류자 정부합동 특별단속





▲ 합동단속 기간 중 외국인 마약류 사범 검거

○ 국경범죄에 효과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공조강화

- 해상 밀입국·밀항·밀수 등 국경침해범죄 행위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및 대국민 신고 안내를 위한 해양 국제범죄 홍보활동 시행

▌전국 주요 항·포구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국경범죄 취약요소를 최소화하고, 범죄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유지 등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노력



▲ 유관기관(軍 부대 등) 전국 항포구에 대한 합동점검·분석 활동

▌국경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등 신종 밀입국·밀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단속활동 추진

○ 국경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훈련 추진

□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협력

○ 국제범죄 연관성이 높은 주변국(일·중·러 등) 범죄정보 공유 강화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공조 활성화를 통해 범죄예방 및 대응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상반기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외사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상반기 테마·수요별 국제범죄 집중단속	외사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하반기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외사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하반기 테마·수요별 국제범죄 집중단속	외사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3-2-2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상을 통한 불법 밀입국, 밀항, 밀수 등 주요 국경침해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차단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 국경관리』를 위해 노력

□ 과제 내용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테마형 국제범죄」 단속강화 계획 수립·시행으로 권역·시기에 맞는 국제범죄 유형을 분석, 주요 범죄테마 선정을 통한 중점 단속

○ 전략적 해양 경비, 밀입국 등 국경범죄 취약개소 파악,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대국민 신고체계 활성화 등 세부 전략 수립 및 이행

최근 주요 국제범죄 수법

❙ **(밀수)** 중국*에서 국내로 **수출용 국내 담배 밀수**(360만갑, 170억원) 적발(`21.12월) * 한국(수출) → 베트남 → 중국 → 한국(밀수, 컨테이너화물)	
❙ **(밀입국)**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부터 **소형 고속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보령으로 **집단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 검거(`23. 10월)	
❙ **(밀 항)** 국내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외국으로 도주할 목적으로, **베트남 수출 중고선박에 몰래 승선하여 밀항 시도** 중 검거(`24. 1월)	

□ 과제 추진 연혁: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 추진절차 : 직접수행

2. '25년도 추진계획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각 지방청 주관 치안수요에 따른 테마별 특별단속 시행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 참여

□ 소요예산 : 비예산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안전한 해상 국경 관리	해양국경수호	지방청 별 외국인(대상) 범죄 특별단속 횟수(회)	8회	10회	실적 보고서 및 시행 공문
'24	안전한 해상 국경 관리	해양국경수호	지방청 별 외국인(대상) 범죄 특별단속 횟수(회)	8회	10회	실적 보고서 및 시행 공문
'25	안전한 해상 국경 관리	해양국경수호	지방청 별 외국인(대상) 범죄 특별단속 시행(회)			

4.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 외사과	전화번호	032-835-2269
담 당 자	경사 신민섭	이 메 일	backsb37@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국세청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631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632

Ⅲ. 과제별 시행계획 ····· 634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1-[2]-③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감독 및 정보 공유 ····· 635

2-2-[1]-②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 637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국 세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2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2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외국인 세금 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주요 사업내용

- 불법 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추진(법무부 업무협의)

※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1]요구 법적근거, [2]자료종류 및 범위, [3]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 후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여부 적극 검토

- 출국정지 제도 강화를 통한 징수권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 하향을 위해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세금 체납에 대한 행정제재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문 제작·배포
-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향*하는 법령 개정 추진

* (현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 계약기간 상관없이 20%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2개				00.0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2-1-2-3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감독 및 정보공유					비예산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비예산

Ⅱ.'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체류관리 강화 요구 증대

○ (불법체류자 수 증가) 단속인력 부족, 제한적인 집행수단 등으로 불법체류자 증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2023.12월 기준 그 수가 42만 명에 도달(체류외국인 전체의 17%)

○ (체류질서 강화 요청) 반이민정서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청이 증가

□ 외국인의 세금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의 국내 발생 소득과 재산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 · 징수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출국할 경우 재입국 가능성이 낮아 체납 세금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 외국인 체납 세금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정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외국인 체납자의 출국정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추진

○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을 하향(5천만원→3천만원)하고 출국정지 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함으로써 출국정지 관련 제도 강화 추진하였으나, 법령개정에 반영되지 않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체납액 기준금액 하향 · 출국정지 기간 확대를 통한 출국정지 강화는 법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므로, 주관부처에 개정 필요성을 강조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이민 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우리 청은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1]요구 법적근거, [2]자료종류 및 범위, [3]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 후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여부 적극 검토

□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 외국인 체납자의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출국정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 국세를 체납할 경우 진행되는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를 안내함으로써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

○ 외국인 체납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 (현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 계약기간 상관 없이 20%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시스템 마련	■ 법령개정안 제출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청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해당 없음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시스템 마련	■ 외국어 안내문 제작·배포	국세청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3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공유	▪ 법무부와 업무협의 계획	국세청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2-3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사회질서 위해(危害)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및 질서 있고 정교한 체류관리 체계 구축으로 불법체류 환경억제

□ 과제 내용

○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 외국인의 불법체류 정보수집 체계화

□ 과제 추진 연혁

○ 2022년 과제 설정, 2023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세청

○ 추진절차 : 추후 법무부와 업무협의 추진 예정

2. '24년도 추진 실적

□ 추진 실적 없음

3. '25년도 추진 계획

□ 우리 청은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1]요구 법적근거, [2]자료종류 및 범위, [3]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 후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여부 적극 검토 예정

○ 그러나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경우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국세청에 없으며 고용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거짓 비용계상,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 따라 관련 세무조사 등을 통한 국세부과를 할 수 있음

- (25.4분기)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한 신고자료를 국세청과 법무부가 공유하는 것만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익은 추후 법무부와 국세청 소관부서의 업무협의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 후 추진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 산출내역

○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가 아님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감독 및 정보공유	유관기관 업무협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실적	1회	1회	회의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전화번호	044-204-3342
담 당 자	5급 전정영	이 메 일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외국인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은 체납 발생 후 출국할 경우 사실상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불가하므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 ·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과제 내용

○ 적시에 출국정지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으로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 세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하고 출국정지 등 행정제재를 함을 알림으로써 세금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안내문 제작·배포

○ 외국인 체납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년 과제 생성, 2023년 전산연계시스템 개발 검토(불가),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세금체납에 대한 제재 강화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세청(→기획재정부 법령개정 요청)

○ 추진절차 : 법령개정안 제출, 안내문 제작(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배포)

2. '24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출국정지 제도 강화를 통한 징수권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

○ 출국정지 기준금액 하향 및 출국정지 기간 확대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법령개정안 등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출국정지는 출국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3. ’25년도 추진계획

□ 출국정지 제도 강화를 통한 징수권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 (25.1분기)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 하향을 위해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25.3분기) 체납할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및 출국정지 등 행정제재를 안내하여 체납세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문 제작·배포

○ 외국인 체납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 추진

* (현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 계약기간 상관 없이 2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체납세금 방지 시스템 마련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 개최 실적	1회	1회	회의보고서
’24	외국인 체납세금 방지 시스템 마련	법령개정 추진	법령개정안 제출 및 법령개정 건의	각1회	1회	법령개정안
’25	외국인 체납세금 방지 시스템 마련	법령개정 추진	법령개정안 제출 안내문 배포	1회		법령개정안

5. 담당자

소관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전화번호	044-204-3017, 3027
담 당 자	5급 박성준, 5급 성기원	이 메 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질병관리청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642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643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645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646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①-④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646

질 병 관 리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1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입국심사와 검역절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주요 사업내용

- 국경관리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질 향상
  - 출입국 정보 운영 협의회 개최(분기별) 등 CIQ 기관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주기적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전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모니터링 및 방역조치 협의 등
-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운영 근거 법제화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1개	-	-	-	-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	-	-	-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	-	-	비예산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엠폭스, 마버그열 등 **위험도 높은 해외감염병이 지속 발생 중**으로 **입국심사와 검역절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필요**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국경관리 정보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정보 운영 협의회 구성**(’ 24.7월)

- **승객정보 품질 향상** 및 **상호 공유 활성화** 등 **CIQ기관 간 협력 강화**

○ **주기적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통한 **안정적 국경 관리**

- 범부처 유관기관 간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 · 모니터링**으로 **안정적 국경 관리** 추진(3회 개최*)

* 제124차(’24.1.17.), 제125차(’24.3.27.), 제126차(’24.4.25.)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경관리 정보체계)** 항공사는 인천공항 CIQ Portal(관세청 운영)을 통해 **CIQ기관에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실제 제출률 미흡**

* 「검역법」 제29조의4, 「관세법」 제137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국내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개선방안) 승객 정보 제공 향상**을 위한 **CIQ기관 간 공동 대응 필요**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유기적 방역대응의 중요성**과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제도화**를 통한 **법적 대응 기반 마련**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국경관리 정보체계) CIQ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승객예약자료 정보 제공률 향상 및 국경관리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해외유입 상황평가협의체 운영 근거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 국경관리 도모 및 효율적 팬데믹 대응 기반 마련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출입국 정보 운영 협의회 참여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출입국 정보 운영 협의회 참여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개최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출입국 정보 운영 협의회 참여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출입국 정보 운영 협의회 참여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개최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유기적 연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입국심사와 검역절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 과제 내용

○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한 **공항만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입국자 정보공유 활성화** 및 **질 향상**
- **비상시 신속한 협업**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0.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법무부 방역 행정 **응원 시행**(격리통지서 교부 및 입국자 정보 지자체 제공 등)

○ 2020.7.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한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체 운영 시작

○ 2022.4.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법무부 방역 행정응원 종료

○ 2023.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내 세부추진과제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질병관리청, 법무부, 관세청, 국토부 등

○ **추진절차** : 방역상황에 따른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2. '24년도 추진 실적

○ **국경관리 정보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정보 운영 협의회 구성**(' 24.7월)

- **승객정보 품질 향상** 및 **상호 공유 활성화** 등 CIQ기관 간 **협력 강화**

○ **주기적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통한 안정적 국경 관리**

- 범부처 유관기관 간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 · 모니터링**으로 **안정적 국경 관리** 추진(3회 개최*)

* 제124차('24.1.17.), 제125차('24.3.27.), 제126차('24.4.25.)

3. '25년도 추진계획

□ CIQ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경관리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질 향상

○ **분기별 출입국 정보 운영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승객예약자료 정보 제공률 향상** 및 **CIQ기관 공동 대응 방안** 등 마련(분기 1회 개최)

□ 주기적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운영 근거 법제화

○ **반기별 관계부처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 · 모니터링 및 방역조치 협의**(반기 1회 개최)

○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운영 근거·기능 법제화**('25년 법령 개정 완료)

□ 소요예산 : 해당 없음

□ 산출내역 :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율(%)	100%	100%	법무부 참여율 (13회 전수 참여)
'2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율(%)	100%	100%	법무부 참여율 (4회 전수 참여)
'25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율(%)	100%	100%	법무부 참여율

5. 담당자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전화번호	043-719-9209
담 당 자	5급 김승혁, 7급 김승호	이 메 일	ink4586@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재외동포청

목 차

Ⅰ. 2025년 시행계획 총괄 ····· 651

Ⅱ. 2025년 시행계획 개요 ····· 652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656

Ⅳ.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658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1]-⑥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658

2-2-[1]-⑦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660

2-2-[1]-⑧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 662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3-4-[2]-③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664

3-4-[2]-④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669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재 외 동 포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4년	2025년	증 감 률
계	5	100%	227	1,349	494%
1. 경 제					
2. 안 전	3	60%			
3. 통 합	2	40%	227	1,349	494%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국내 체류 동포 지원 확대**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및 이해도 제고**

주요 사업내용

- 국적제도 관련 재외동포의 애로사항 최소화
  - 국적·병역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서비스(온·오프라인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제공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심의 과정에 재외동포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적심의위원회 참여
-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대 실시('24년 20회 → '25년 24회)
  - 재외동포 이주 역사의 배경 등 국내 교과서 수록 추진
- 국내 체류 동포 지원사업 추진
  - 동포 다수 거주지역,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수행, 동포 교육 대상별(청소년·성인·고령층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내 체류 동포 현황 실태조사 시행, 국내 동포 정착지원 안내서 제작·배포 등

Ⅰ.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5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3)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2)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5개	-	227	1,349	494	-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3)	-	-	-	-	-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	-	-	비예산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	-	-	비예산
2-2-1-8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	-	-	-	비예산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	227	1,349	494	-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227	253	11.5	-
3-4-2-3	- 교과서 수록, 학술포럼 등 인식 개선	-	193	218	12.9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34	35	2.9	-
3-4-2-4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	1,096	-	신규

Ⅱ. ’25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

○ 저출생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 역동성 저하

* 생산연령 인구(15세-64세) 전년대비 : (’21년)△14만1천명, (’23년)△27만7천명

- 우수한 재외동포 인력을 유치 및 경제활동 인구 유입 필요성 증대

☐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재외동포들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청

○ 현행 제도(국적이탈기간 등) 미숙지로 인한 동포들의 애로사항* 발생

* 국적이탈 기간 도과하여 거주국에서 직업 선택의 불이익 발생 등

○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

○ 한국의 선진국 진입 및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모국 귀환 재외동포의 규모가 증가* 추세

* 2021년 78만명 → 2022년 80만명 → 2023년 85만명 → 2024년 8월 86만명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정책적 지원사업 필요

☐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책 공감대 확보 필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

※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23년)

구 분	점 수		증 감
	2022년도(A)	2023년도(B)	(B-A)
전 체	59.4	**59.2**	△0.2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의식(25%)*	65.0	**64.6**	△0.4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25%)**	54.5	**54.7**	0.2
재외동포의 한국사회 기여도(25%)***	56.3	**56.6**	0.3
재외동포정책 관련 기본 방향(25%)****	61.9	**60.7**	△1.2

* 해외 이민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
** 재외동포에 대한 한민족 동질감 여부,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 / 친근감 정도 등
*** 재외동포가 한국의 발전(독립운동, 이미지개선, 기업 해외진출) 등에 기여하는 정도
**** 현재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정도 등

2. ’24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4년 주요과제 성과

○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 **(홍보 활동 강화)** 국적제도 미숙지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실시

· 국외 거주 동포 대상 현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3회),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실시(6회), 재외공관에 안내문 등 자료 배포 완료

* 재외동포청이 직접 재외동포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찾아가 국적·병역·가족관계 등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제공
(화상 상담회(4회) : ’24.4., ’24.5., ’24.6., ’24.9. 대면 상담회(2회) : ’24.4., ’24.8.,)

- **(유연한 제도 운영)**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심의하는 국적심의위원회에 참여, 재외동포의 입장을 대변하고 허가제의 유연한 적용 도모

※ 재외동포청은 국적심의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지정됨(’24.7.20.)

- **(복수국적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근거 마련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24.10.)

○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의 기초 마련

- **(국내 교과서 수록 추진)**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23.11.～’24.2.)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재편되는 국정 교과서(초등 도덕, 국어)에 ‘재외동포’ 내용 수록 방안 연구
** 국내교과서 관계자(경인교대 교수진, 서울교대 교수진 등) 간담회(2.23.), 교육부 관계자(차관, 교육콘텐츠 정책과장 등) 면담(3.27.) 등 실시

- **(이해교육 실시)** 총 15개교 대상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20회 실시하여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종합 교육 만족도 : 90.8점(강사만족도 90.8점, 강의만족도 90.8점)

-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추진)**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개최('24.12.예정)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 기회 마련

- **(재외동포 정책 홍보)** 재외동포 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24.2.)하여 재외동포청 유투브 등 다양한 홍보 활동 및 행사에 활용

- **(모국 기여 사례 홍보)** 세계한인의날(10.5.) 및 세계한인주간(10.3.~9.) 계기,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활용한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사례 소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적제도 관련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는 등 **재외동포의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므로 홍보 활동 강화 필요

○ 모국 귀환 등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 동포들의 정착 지원 등 **정책적 지원 수요 증가**

- 안정적인 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교육 제공, 국내 동포 관련 민간 단체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현재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 친근감 등이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국내 인식 및 이해도를 적극 개선

3. '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국적제도 관련 재외동포의 애로사항 최소화**

○ 재외동포의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국적·병역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서비스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통합 민원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재외공관의 홍보·교육 활동 강화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절차 간소화, 신속한 심사 진행** 등을 위하여 **국적심의위원회에 지속 참여**하고 제도의 유연한 적용 노력

○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수국적 제도 개선방안 모색**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동포사회에서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시기상조, 국가재정 악용 등을 사유로 제도 개선 미실시

☐ **국내 체류 동포 지원 확대**

○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25년도 신규사업)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사전 정착 준비부터 지속적인 관리까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예정

○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국내 체류 동포의 권익신장 및 네트워킹 강화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및 이해도 제고**

○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 실시**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대 실시('24년 27회 → '25년 30회)

- 국내 교과서 수록 추진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 이주역사의 배경, 모국 발전 기여 사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 제고

○ 더불어,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와 우리 국민의 지지 확보**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병역 설명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4-2-3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교과서 수록 등 인식 개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추진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상반기 수요 조사 실시 및 교육 일정 수립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4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재외동포 정착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 프로그램 연구용역 실시 ■ 민간단체 보조사업 공모 및 심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병역 설명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8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상시)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4-2-3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교과서 수록 등 인식 개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재외동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상반기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및 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4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자체 보조사업 중간 성과 점검 ■ 동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 민간단체 보조사업 시행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병역 설명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8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상시)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4-2-3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교과서 수록 등 인식 개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재외동포 정책 홍보 및 콘텐츠 개발(SNS 홍보 등) ■ 하반기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교육 일정 수립 및 실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4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동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 민간단체 보조사업 성과 중간 점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병역 설명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8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상시)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4-2-3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교과서 수록 등 인식 개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재외동포 이해 확산을 위한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개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전문가 업무협의 및 결과 보고 실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4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사업별 결과 보고 및 평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제도 이해 제고를 통한 재외동포 피해 최소화

□ 과제 내용

○ 안내자료 배포, 재외공관 안내 강화 등 복수국적제도 홍보 활동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24.1.3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병역 제도 설명, 재외공관 등을 통한 홍보

2. '24년도 추진 실적

□ 국적제도 전반 홍보·설명 활동 강화를 통한 복수국적 이해 제고

○ 국외 거주 동포에게 현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 독일(4.24.~4.26.), 미국(5.22.~5.24.), 베트남(8.7.)

○ 재외공관에 국적·병역제도 관련 자료* 배포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안내문(2월), 국외병역자원 관리 업무 매뉴얼(3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 및 절차 안내(3월), 「국적 및 병역 안내서」(7월), 2000년생 병역의무자 대상 국외 여행 허가 신청 안내(9월) 등

3. ’25년도 추진계획

□ 국적·병역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강화

○ 재외동포 거주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온·오프라인)를 활용하여 국적·병역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제공

○ 국적제도 등 재외동포 주요 정책을 언론·SNS 등을 통해 홍보

○ 재외공관에 국적·병역 제도 홍보 강화 요청(공문 발송 등)

- 국적·병역 안내서 등 관련 자료 배포 및 영사 대상 교육 실시(분기별)

- 순회영사 활동중 국적·병역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독려(상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이해 제고를 통한 피해 방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3회	3회	관련 문서
			국적·병역 제도 안내서 배포 등 재외공관 홍보 독려	4회	4회	관련 문서
’25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이해 제고를 통한 피해 방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8회	-	관련 문서
			국적·병역 제도 안내서 배포 등 재외공관 홍보 독려	4회	-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전화번호	032-585-3180 02-6399-7165
담 당 자	5급 김연우, 5급 정현자, 5급 박진석	이 메 일	kimw327@korea.kr dkaldo@korea.kr guten0700@korea.kr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재외동포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지원

□ 과제 내용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등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적심의위원회에 의견 적극 개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24.1.30.)

○ 국적심의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재외동포청 위촉('24.7.2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재외동포청·법무부 협의

2. '24년도 추진 실적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허가 사항의 유연한 적용 및 재외동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국적심의위원회 참여

○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책국장)이 국적심의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동포들의 입장 대변 가능

○ 2024년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동포 구제를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유연한 적용 등 의견 적극 개진

※ 법무부의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24.7.20.)

3. ’25년도 추진계획

□ 연중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예정

○ 국적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의 유연한 적용 등 의견 적극 개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재외동포 구제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4회	3회	관련 문서
’25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재외동포 구제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4회*	-	관련 문서

* ’24.10.기준 2회 참석, ’24.12. 참석 예정

* ’24년도 기준으로 작성(’25년 국적심의위원회 실제 개최 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0
담 당 자	5급 장경호	이 메 일	elysion@korea.kr

2-2-1-8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피해 최소화

□ 과제 내용

○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관계부처(법무부)와 협업을 통한 복수국적제도 개선 방안 모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24.1.30.)

○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완료('24.1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제도 개선 검토 및 관계기관 협업

2. '24년도 추진 실적

□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완료('24.10월)

○ 하향 연령별 유입 규모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복수국적 제도 개선(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필요성 관련 관계부처 인식 제고

* 법무부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24.11.)

3. ’25년도 추진계획

□ 연구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 협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연구용역(’24.10.),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법무부, ’24.11.)

□ 설명・홍보 활동을 상시 추진하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피해 최소화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2회	2회	관련 문서
’25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피해 최소화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3회	-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0
담 당 자	5급 장경호	이 메 일	elysion@korea.kr

3-4-2-3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과의 유대감 및 사회 통합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내국민의 지지 확보

○ 국내 학생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및 재외동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국내 교과서상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 (연구용역 실시)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학습 성취기준에 재외동포 교육내용이 포함되기 위한 연구용역 시행

- (간담회, 세미나 등) 관련 교육기관, 교과서 집필진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대학교 및 초·중·고교 재학 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재외동포 역사·모국발전 기여 사례 강의

- (교육시기) 상반기 3~8월, 하반기 9월~12월

- (교육방법) 재외동포 관련 강사 파견 및 특강 시행

- (강사선정) 청 강사 풀에서 선정 또는 대학 측 추천강사 섭외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재외동포 학술포럼 또는 간담회 개최 등

-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재외동포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학회, 연구소 등 관련기관·단체와 공동개최 고려

○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 조사, 재외동포 정책 만족도 조사 시행 등

- (내국인 인식조사)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들의 '인식', '호감 및 친근감 정도', 재외동포의 '한국사회 기여도', '재외동포 정책 기본 방향' 등

※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한 변화 추이 파악, 정책 시사점 도출

- (정책 만족도 조사) 재외동포, 우리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5년 주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종합 만족도 및 인지도 등을 조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24.1.3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유관기관(교육부, 국내 대학 등), 전문가 단체

○ 추진절차

- (교과서 수록) 관계기관과 협업 추진

- (이해교육) 수요조사 실시 → 파견 강사 매칭 및 일정 수립 → 이해교육 및 이해 교육 전문가 업무 협의 실시 → 결과 보고

- (학술 포럼, 내국민 대상 조사 등) 용역 수행기관 선정 → 계약 체결 → 용역·행사 실시 → 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

2. '24년도 추진 실적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추진

○ 「국내 교과과정 내 재외동포 관련 수록 현황조사」 연구용역* 실시('23.11.~'24.2.),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재편되는 국정 교과서(초등 도덕, 국어)에 '재외동포' 내용 수록 방안 연구

** 국내교과서 관계자(경인교대 교수진, 서울교대 교수진 등) 간담회(2.23.), 교육부 관계자(차관, 교육콘텐츠 정책과장 등) 면담(3.27.) 등 실시

○ 국내 교과서 내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관련 교육부에 협조 요청('24.3.) 및 지속 협의

□ 총 15개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20회 실시

* 대학교(5개), 고등학교(4개교), 중학교(3개교), 초등학교(3개교)

□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 지속

○ 재외동포 정책 홍보동영상 제작('24.2.)

○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홍보 동영상 제작('24.5.)

○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사례 승강장 광고 게시('24.9.~11.)

○ 언론 보도자료 홍보 106건('24.1.~10.) 및 언론사 광고 23회 실시

○ 해군순항훈련 연계 홍보(방문국 대상 동포청 홍보 리플릿 배포) 등

○ 동포청 SNS(유투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 운영 및 월간 웹진 발간 중

3. '25년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교과서 수록 추진(연중)

○ (연중추진) △국내 교과서내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한 방안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이해확산 추진 등 △차기 개정 교육과정 및 학습 성취기준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한 관련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지속 협의 및 설명회 등 개최

○ (1분기) 국내 교과서 내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한 추가 연구 용역 추진 및 교육부 지속 협의

○ (2분기) 교과서 관계기관, 출판사 등 관련 전문가 대상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교육 및 설명회 등 추진

□ 수요조사를 통한「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추진

○ (1분기) 상반기 수요조사 시행 및 교육일정 수립

○ (2분기) 상반기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및 하반기 수요조사 시행

○ (3분기) 하반기 교육일정 수립 및 재외동포 이해교육 시행

○ (4분기) 재외동포 이해교육 전문가 업무협의 및 결과 보고 실시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학술포럼 또는 간담회 개최, 홍보 활동 등

○ (1분기)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또는 전문가 간담회 추진 일정 수립

○ (2분기) 재외동포 정책 등 홍보 콘텐츠 개발

○ (3분기) 학술 세미나 또는 전문가 간담회 실시

○ (4분기) ▵재외동포 정책 만족도 조사 시행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개선 조사 ▵재외동포의 이해를 위한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개최

□ 소요예산 : **총 253백만원**

○ 교과서 수록,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등 149백만원, 현안 주제에 관한 학술 세미나 등 47백만원,「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35백만원, 만족도 및 내국인 인식개선 조사 22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27	253	11.5	
-국 비	▪ 일반회계		227	253	11.5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및 세미나 196백만

○ 재외동포 정책 만족도 조사 및 내국인 인식개선 조사 22백만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사 출장비 및 전문가 업무협의 35백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정책학술포럼 개최/ 홍보콘텐츠 개발/ 만족도 조사 실시	각 1회	1회/ 2회	관련 문서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및 재외동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기반 마련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적	20	20	관련 문서
'25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교과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정책학술포럼 개최/ 만족도 및 인식개선 조사 실시	각 1회	-	관련 문서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및 재외동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기반 마련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적	24	-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과	전화번호	032-585-3155, 3157
담 당 자	4급 이희경, 6급 장현석	이 메 일	hklee23@korea.kr hsjang23@korea.kr

3-4-2-4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주·정착 지원 및 권익 신장 도모

□ 과제 내용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진

- 동포 다수 거주지역,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수행(지자체 보조)

○ 대상별 맞춤형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 대상(청소년·성인·고령층 등)에 따라 세분화된 국내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별 운영

<프로그램 예시>

-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교육, 정체성 함양 및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학업집중 프로그램, 진로 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성인 대상**) 실용 한국어, 생활 교육(임대차 계약, 금융 교육, 세금 납부 등),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 노동자 권리 및 산업안전 교육 등
- (**노년층 대상**)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화, 노년 인생 설계 컨설팅 등

○ 국내 소재 동포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 국내 체류 동포 정주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 동포집단 지역별·특성별 동포 현황 및 생활 환경,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연구용역) 추진

○ 국내동포 정착지원 안내서* 제작·배포(재외공관·지자체)

* 재외동포 관련 필수 법령, 생활정보, 안전교육 등 내용 수록

- 국내 체류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 수록

2. ’24년도 추진 실적

□ 동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자체 보조사업 등 신규사업 ’25년 예산(정부안) 확보(1,096백만원)

□ 지자체 대상 지자체 보조사업 설명회 개최(’24.10.31.)

□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실시(’24.11월~)

□ 관계기관(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등) 협의(’24.11~12월)

□ 국내동포 정착지원 안내서 제작(7~11월)・온라인 배포(12월)

3. ’25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추진계획

○ (1분기) ▵ 재외동포 정착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맞춤형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 실시) ▵ 민간단체 보조사업 공모・심의

○ (2분기) ▵ 재외동포 정착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중간 성과 점검 및 지자체 간담회 ▵ 맞춤형 적응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지자체・유관기관 / 약 6주간 실시), ▵ 민간단체 보조사업 시행

○ (3분기) ▵ 맞춤형 적응 교육프로그램 지자체별 시행 ▵ 사업별 점검・관리,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 개선사항 발굴

○ (4분기) 사업별 결과 보고 및 평가

□ 소요예산 : 총 1,09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096		
-국 비	▪ 일반회계			1,096		신규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1,045백만원)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690백만원) : 69백만원x20개 지자체x보조율 50%

- 동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355백만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205백만원(205백만원 x 1회)

·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150백만원(25백만원 x 3개 프로그램 x 2개 기관)

○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51백만원) : 14개 단체 x 3.6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관계부처·기관 등과의 협의 횟수*	3회	-	개최 횟수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8,3180
담 당 자	4급 김가이, 5급 장경호	이 메 일	kkasey0728@korea.kr elysion@korea.kr